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4년도 이행상황 요약

2025. 9.

국 가 인 권 정 책 협 의 회

목 차

Ⅰ. 2024년도 이행상황 총괄 ····· 1

Ⅱ. 분야별 2024년도 주요 이행상황 ····· 3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12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24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38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43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47

Ⅰ 2024년도 이행상황 총괄

○ **(현황)** 271개 과제 중 완료 12개, 추진중 258개(일부완료 6개), 지연 1개

< 제4차 NAP 2024년도 분야별 이행상황 현황(개) >

분 야	계	완료	추진중	일부완료	지연
계	271	12	258	6	1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46	-	46	-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84	5	79	1	-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79	3	76	1	-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0	2	18	3	-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11	-	10	-	1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31	2	29	1	-

○ **(완료)**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고용부) 등 12개 과제

	과제번호	과 제 명	부 처	완료연도
1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고용부	'23년
2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고용부	'24년
3	Ⅱ-3-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복지부	'23년
4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복지부	'24년
5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여가부	'23년
6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부	'23년
7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고용부	'23년
8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법무부	'24년
9	Ⅳ-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기정통부	'24년
10	Ⅳ-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24년
11	Ⅵ-2-(2)-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교육부	'23년
12	Ⅵ-2-(5)-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여가부	'23년

○ **(일부완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여가부) 등 6개 과제

연번	과제번호	과 제 명	완료부처
1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여가부
2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법무부
3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과기부·방통위
4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문체부
5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교육부
6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여가부

○ **(추진지연)**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지연

Ⅱ 분야별 주요 이행상황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총 괄

○ (개요) 생명 존중,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보장,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기본적 자유 보장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생명권】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추진중
2	Ⅰ-1-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중
【신체의 자유】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추진중
4	Ⅰ-2-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추진중
5	Ⅰ-2-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추진중
6	Ⅰ-2-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추진중
7	Ⅰ-2-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추진중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추진중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추진중
10	Ⅰ-2-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추진중
11	Ⅰ-2-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추진중
12	Ⅰ-2-⑩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추진중
13	Ⅰ-2-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추진중
14	Ⅰ-2-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15	Ⅰ-2-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16	Ⅰ-2-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중
【안전권】			
17	Ⅰ-3-①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18	Ⅰ-3-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추진중
19	Ⅰ-3-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추진중
20	Ⅰ-3-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추진중
21	Ⅰ-3-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22	Ⅰ-4-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추진중
【표현의 자유】			
23	Ⅰ-5-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추진중
24	Ⅰ-5-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추진중
【결사.집회의 자유】			
25	Ⅰ-6-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추진중
26	Ⅰ-6-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추진중
27	Ⅰ-6-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추진중
【사생활의 자유】			
28	Ⅰ-7-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추진중
29	Ⅰ-7-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추진중
30	Ⅰ-7-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중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추진중
32	Ⅰ-7-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추진중
【거주.이전의 자유】			
33	Ⅰ-8-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34	Ⅰ-8-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인격권】			
35	Ⅰ-9-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추진중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36	Ⅰ-10-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추진중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 보호	추진중
38	Ⅰ-10-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추진중
39	Ⅰ-10-④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중
40	Ⅰ-10-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추진중
41	Ⅰ-10-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추진중
42	Ⅰ-10-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추진중
【참정권】			
43	Ⅰ-11-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중
44	Ⅰ-11-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5	Ⅰ-11-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6	Ⅰ-11-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46개 과제 모두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생명권

【교육부·복지부】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교 내 상담 등으로 발견된 관심군 72천명을 학교 내·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하였고, 자살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학교 자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운영 등 자살·자해 예방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지원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 관심군 84.6%, 자살위험군 86.3%

○ (복지부) 국가·공공기관·학교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24.7.), 대국민 자살예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오픈('24.6.)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게 치료·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23년 84개소에서 '24년 9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 치료비를 지원하고(1인당 최대 1백만원),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24.9.10.), 같생('같이 살자') 서포터즈 박람회 개최('24.9.12.)등 캠페인·홍보 활동 전개

신체의 자유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강화

○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고('24. 7.),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담

인력을 교육·배치하였으며('24. 6·7·11·12월), 범죄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1인 50→70만원), 지원기간 연장(최대 6→12개월), 장례비 인상(최대 400→500만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신설 및 퇴소자립지원금 상향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고('24. 12.),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 지원 내용을 종합 점검하여 지원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24. 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종사자 등 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24. 7.), 다링안심캠페인('24. 6. 15.),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4. 11. 27.)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활동을 전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스토킹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24. 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 이송 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4. 4.)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528명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 경기남부·광주해바라기센터에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배치, 2024년 신규 진술조력인 14명 양성·배치, 여주·평택·부천 등 5개 지역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7명 추가배치 등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채용·배치

※ 2024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 37,605건

【경찰청】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등 산재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규정을 편재한 「수사인권 매뉴얼」 제작·배포('24. 1.), '수사인권매뉴얼', '장애인전담 조사과정' 등 사이버 컨텐츠 제작, 수사단계별 준수사항 안내서 배포 등 경찰수사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등」 수사서류 5종에 대한 외국어 번역(8개)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4,876명에서 9,542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본청 주관 하 권역별 및 시·도청 인권취약 요소를 교차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시행하며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하는 등 인권취약 요소 진단 실시

【법무부】 구금·보호시설·불법체류외국인 처우 개선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 완료(1인실 36개 및 3인실 38개, '24. 7.),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시설 착공('24. 12.),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공사 입찰('24. 12.)

○ 대구교도소를 이전 개청하여('24. 5.) 수용정원 270명을, 영월·춘천·청주여자교도소 유휴부지에 수용동을 증축하여 수용정원 81명을 확보하는 등 351명의 신규 수용공간 확대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과 수형자 사회적 처우**를 확대하고, 산업기사·기능장·기사 훈련과정 확대('23년 24개 과정 → '24년 31개 과정), IT·용접·지게차 등 취업유망직종 신설·운영, 14개 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 도입(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 등 직업훈련과정 내실화

* 가족만남의 집 이용실적 '23년 895명 → '24년 1,662명 (86% 증)
가족사랑캠프 이용실적 '23년 56명 → '24년 251명 (348% 증)
가족만남의 시간(구 가족접견) 이용실적 '23년 2,588명 → '24년 3,199명 (24% 증)

** 귀휴 실적 '23년 1,057명 → '24년 1,397명 (32% 증)
사회견학·봉사활동 실적 '23년 305명 → '24년 896명 (194% 증)

○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보호기간 연장, 보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였고('25. 2. 국회 본회의 통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24. 10.)

안전권

【행안부·여가부】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행안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안내를 위하여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법률·금융·통신 등 피해지원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24. 11. 국회제출), 재난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였으며('24. 4.),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시범 운영* 및 재난 피해 근로자·사업장 일상 회복 지원 확대**

* 5회 : 충남 서천 시장 화재(1.24.~3.20.), 경기 화성 공장 화재(6.24.~11.5.), 인천 서구 공장 화재(10.23.~11.8.), 경기 안성·용인·이천 대설 피해(12.3.~12.31.), 전남 무안 여객기 사고(12.29.~'25.1.19.)

** 6종(실업급여, 자금융자, 병·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고용·산재보험, 현장안내)

○ (여가부)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통합·확대** 운영하여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취약가족·위기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

* 가족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 '23년 98개소 → '24년 온가족보듬 수행센터 220개소

사생활의 자유

【방통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온라인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회의의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등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온라인서비스 이용과정상 피해 상담에 더하여 디지털폭력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 9., 의원안)

【법무부】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정보조회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24. 1.)

거주 · 이전의 자유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류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24. 1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4. 12.) 정류장 연석높이를 높여 휠체어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고 역사 내 점자안내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4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예산을 확대하여(148,085백만원) 저상버스 3,339대 도입을 지원하고, 총 63개 지자체에 공공형 택시를 도입(목표 61개 지자체 대비 초과달성)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권익위】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다수기관이 관련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집단민원 318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하여 최근 5년 중 집단민원 해결 건수 최대 달성

* (주요사례) △안마도 유기 사슴 민원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중재하여 합동 대책 마련, △검단 택지개발지구 암반 제거 공법 절충안 제시로 주민 안전 확보 등

【국방부】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장

○ '국방 1365 상담·신고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상담·신고 등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24. 12.),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자료 시달, 전 장병·군무원 대상 특별교육

추진('24. 9.)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민·관 협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다각적 예방·대응 활동을 시행하고*('24. 8.~), 「'2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24. 4.~12.)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맞춤형 컨설팅」('24. 4. ~ '25. 2.)을 실시하는 등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활동 전개

* 군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예방('25.1.까지 여군 40명 대상 보호지원 중), 군 내부망 개인사진정보 비활성화 및 민간전문가 자문 활성화 등

참정권

【인사처】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장애인 등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치 초과 달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개선('24. 10.), 부처별 2025년 통합인사 시행계획 수립·점검('24. 12.) 등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23년 11.7% → '23년 12.9%,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23년 28.4% → '23년 30.8%

○ 국가직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장애인 155명을(7급 37명, 9급 118명),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을 통해 장애인 38명을 선발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136명 선발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추진으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자 선발(16명) 및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추진으로 우수 인재 공직 등용(425명)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인권정책자문단 자문의견)

생명권

○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학업에 대한 경쟁 과열 방지 대책 및 학벌 위주 사회로부터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의 경쟁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기적 심리상담 및 대응정책 필요(교육부)

신체의 자유

○ 진술조력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진술조력인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며, 서울지역 상근진술조력인의 추가 증원을 고려하고, 업무량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술조력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할 필요(법무부)

○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를 높게 설정하며, 형사절차 내 권리보호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신청 대리나 생활지원 제도 접근 등 적극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예산 지원을 마련할 필요(법무부)

○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 신축·이전·증축이 필요하고, 불구속·가석방 확대,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사회 내 처우 등 구금정책 개선 필요(법무부)

○ 불법체류외국이라는 명칭은 출국으로 해소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단순 위반자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므로 명칭 개선 필요(법무부)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총 괄

○ (개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시간 근로 개선 등 노동권, ▲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 상병제도 도입·운용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 등에 관한 정책과제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노동권】			
1	Ⅱ-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추진중
2	Ⅱ-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3	Ⅱ-1-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추진중
4	Ⅱ-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추진중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중
6	Ⅱ-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추진중
7	Ⅱ-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추진중
8	Ⅱ-1-⑧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추진중
9	Ⅱ-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추진중
10	Ⅱ-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추진중
11	Ⅱ-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12	Ⅱ-1-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추진중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일부완료**
14	Ⅱ-1-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추진중
15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완료('23.)**
16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과제완료('24.)**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추진중
18	Ⅱ-1-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추진중
19	Ⅱ-1-⑲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중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추진중
21	Ⅱ-2-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22	Ⅱ-2-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추진중
23	Ⅱ-2-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추진중
24	Ⅱ-2-⑤	물환경 위해관리 체계 강화	추진중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추진중
27	Ⅱ-2-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8	Ⅱ-2-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9	Ⅱ-2-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중
30	Ⅱ-2-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추진중
31	Ⅱ-2-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추진중
32	Ⅱ-2-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추진중
33	Ⅱ-2-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추진중
34	Ⅱ-2-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추진중
35	Ⅱ-2-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추진중
36	Ⅱ-2-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추진중
37	Ⅱ-2-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추진중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38	Ⅱ-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추진중
39	Ⅱ-3-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추진중
40	Ⅱ-3-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추진중
41	Ⅱ-3-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추진중
42	Ⅱ-3-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추진중
43	Ⅱ-3-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추진중
44	Ⅱ-3-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45	Ⅱ-3-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추진중
46	Ⅱ-3-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추진중
47	Ⅱ-3-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추진중
48	Ⅱ-3-⑪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추진중
49	Ⅱ-3-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추진중
50	Ⅱ-3-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추진중
51	Ⅱ-3-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중
52	Ⅱ-3-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추진중
53	Ⅱ-3-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추진중
54	Ⅱ-3-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추진중
55	Ⅱ-3-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추진중
56	Ⅱ-3-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추진중
57	Ⅱ-3-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추진중
58	Ⅱ-3-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완료('23.)**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9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과제완료('24.)**
60	Ⅱ-3-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중
61	Ⅱ-3-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추진중
【교육을 받을 권리】			
62	Ⅱ-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추진중
63	Ⅱ-4-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추진중
64	Ⅱ-4-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추진중
65	Ⅱ-4-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추진중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6	Ⅱ-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중
67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과제완료('23.)**
68	Ⅱ-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69	Ⅱ-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1	Ⅱ-5-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추진중
72	Ⅱ-5-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추진중
73	Ⅱ-5-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추진중
74	Ⅱ-5-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추진중
75	Ⅱ-5-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추진중
76	Ⅱ-5-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중
77	Ⅱ-5-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추진중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78	Ⅱ-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중
79	Ⅱ-6-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중
80	Ⅱ-6-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중
81	Ⅱ-6-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추진중
82	Ⅱ-6-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추진중
83	Ⅱ-6-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추진중
84	Ⅱ-6-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84개 과제 중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고용부),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복지부) 등 5개 과제는 완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1개 과제는 일부완료(여가부), 그 외 78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노동권

【고용부】 청년 맞춤형 근로지원

○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으로 53개 대학교 재학생 16.2만명*(목표 15만명 대비 초과)에게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통합 플랫폼을 시범 오픈하여('24. 12.) 청년 4.9만명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구직단념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다양화**, 취업(성공)인센티브(50만원) 신설, 편의점·택배박스 등 생활 밀착형 홍보 등을 실시하여 72개 지자체 청년 9,812명 지원('24. 12. 기준)

* ▲빌드업 프로젝트 102,034명 참여 → 82,701명에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점프업 프로젝트 60,384명 참여 → 41,165명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기존) 단기·장기 프로그램 → (개선)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고용부】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수도권 훈련 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건립하고('24년말 완료, '25년 상반기 개원),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 유도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컨설팅을 확대하였으며('23년 5개소 → '24년 20개소),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평가지표에 '정규직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을 추가하고('24. 9.), 기업의 장애인 고용 온라인 지원 포털(consulting.esingo.or.kr) 구축,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23년 666천명 → '24년 710천명)

【고용부】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완료)

○ 「근로기준법」을 개정('24.10.)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체불사업주 제재조치 확대·강화

【여가부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여가부)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정·배포하고('24. 1.),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를 위하여 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제출 기한 단축(3개월→1개월) 및 사건 통보 의무 미 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하였으며('24.4.), 중대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3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였고, 18,127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 제고*

* 고위직 참여율 94.4%(전년 대비 1.2%p 상승), 종사자 참여율 93.7%(전년 대비 0.4%p 상승)

○ (유관부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직원 교육, 조직 내 성폭력 실태 조사 등 실시

- (법무부) 부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소속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지도점검, 고충사건 처리절차 모의훈련 등
- (문체부) 부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개정, '24년 콘텐츠산업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신고상담센터 예방교육 강화('23년 183천명 → '24년 212천명) 등
- (복지부) 의료현장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활동*, 보건의료기관 온·오프라인 인권교육·집단프로그램** 강화 등

* 법무·노무 자문 '23년 1,800건 → '24년 2,205건 (22.5% 증)

* '23년 82개소 4,402명 → '24년 109개소 15,203명 (각각 32.9%, 245.3% 증)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고용부·복지부】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고용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월보수 기준을 확대하고('23년 260만원 → '24년 270만원), 현장 방문 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신규 및 주요 사업장의 지원 신청을

촉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상자 발굴 노력으로 신규 가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23년 97만명 → '24년 111만명) 예산 집행 100% 달성

○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월 최대 45,000원 → 46,350원)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기준소득(260만원 미만 → 270만원 미만)을 각각 확대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시행('24.9.)하여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지원기간을 '24년에서 '31년까지 7년 연장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여('24.12. 개정, '25.7. 시행)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현장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 추진하여 가입률을 '23년 72.4%에서 '24년 78.7%로 제고*

* 지원인원: ('22년) 38,842명 → ('23년) 153,803명 → ('24년) 203,790명
지원규모: ('22년) 4,778백만원 → ('23년) 38,211백만원 → ('24년) 39,947백만원

【국토부】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권 강화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24.10.) 공공임대 공급, 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홍보하고 이주지원 확대('23년 1만호 → '24년 1.2만호 이주 지원)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노후도 요건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 접도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24.3.,9.,11.), 노후 주거지역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지원(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 등 200개소 3,882억원)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24.8.)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을 신설, '24년 하반기에 5곳 1,234호를 선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연 1천호 → 3천호)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24.1.)

* 신혼가구 94,227건, 청년가구 169,741건 등 총 347,887건

○ 저소득층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을 확대**

* '23년 기준중위소득 47% → '24년 기준중위소득 48% (3인가구 기준 208.4 → 226.3만원/월)

** 월평균 급여액 '23.12. 18.1만원 → '24.12. 19.2만원

○ 다가구주택 등 임대차 시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24.11.),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동 시행령 개정('24.12.)

건강권 및 보건 · 환경에 대한 권리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대전·진주·서부산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능보강사업 국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23년 1,136억원 → '24년 1,408억원, 272억원 증), 대학병원 파견의료인력을 증원하고('22년 55명 → '24년 80명), 지역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제 채용을 지원하였으며(34개소에 80명),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총 14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협력 인프라를 확보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중환자실 등 기반시설 확충 예산을 편성하였으며('25년 국비 812억원),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고('24.10.), 전국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월례간담회(6회), 대표자회의(4회) 등 협력체계 논의 지속

【식약처】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전 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하고('23년 9천회, 692천명 → '24년 32천회, 2,283천명), 대학 캠페인·부스·특강 53회, 17개 시·도 캠페인 활동 162회 등 올바른 인식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메타버스 VR 콘텐츠 5종, 마약류 중독·오남용 교육극(1천회, 206천명) 등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활용하고,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증제를 시행하고 교육과정 세분화·확대**

* 뉴스 1천건, 교육영상 26건 등 정보 제공

** 20~36시간 온라인 교육 → 130~220시간 이론·현장교육

○ 마약류 사용자 및 가족을 위한 재활 거점시설인 '함께한걸음센터' 14개소를 신설하고('23년 3개소 → '24년 17개소), 약물별(대마·향정 등)·대상별(청소년·가족 등)로 세분화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으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구축하고('24년 4,502건 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중독 수준별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연 4회 개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 성분에 대해 처방 전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처방 이탈 의사 1,114명의 정보제공, 추적관찰, 전문가 검토 후 마약류 취급금지 조치를 사전 통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사전 알리미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를 통해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6대 광역시 및 부천시 약국 중심으로 잔여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복지부】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완료)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요양·돌봄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 3.)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4.3)하여 사전 동의 없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가능 대상을 초·중학교 청소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2년 44개소에서 '24년 59개소로 확충하였으며, 검정고시 대비반, 학습 멘토단, 원격강의 수강권, 대입 설명회('23년 52회 → '24년 70회)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자는 '23년 11,382명에서 '24년 11,667명으로 증가하였고, 학업복귀·사회진입 비율은 '23년 46.2%에서 '24년 47.0%로, 이용 만족도는 93.6점에서 93.8점으로 상승

문화 · 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문체부·과기부】 장애인·노인·문화소외계층의 스포츠·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유형별·생애주기별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지원을 다각화하여 생활체육교실 699개소, 동호인클럽 301개소, 통합체육교실 98개소를 지원하고,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24.6.)을 개최하여 1,190명이 참가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857명)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19~69세 대상, 월 11만원)을 지원하고(2만명 이용),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11개소 지정 및 누적 99개소 건립 지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17개소 운영, 장애인 스포츠용 휠체어 20대 보급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23년 33.9% → '24년 35.2%

○ (노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 활동 지원 '어르신 문화누림 사업'을 수행하고(총 56개 프로그램, 1,339명 참여), '제9회 실버문화페스티벌'(9.27.~29.)을 개최하였으며(22천명 관람),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10회),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공연(128회) 등 실시

○ (소외계층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도서벽지,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대상 '나눔과학교실'을 확대 운영하여('23년 46천회 144천명 → '24년 38천회 173천명) 수혜자의 과학기술 관심도가 향상되었고(77.3점 → 81.3점), 온라인·찾아가는 과학문화바우처 수혜자를 확대하였으며('23년 31천명 → '24년 68천명, 220.8% 증), 찾아가는 과학관 '두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5개 권역 9,703명 관람, 만족도 93.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등으로(11만원→ 13만원) 발급자 3만명, 자동재충전 14만명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치봄영화를 127편 제작, 743회 상영하여 32,185명이 관람하였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형 동시관람 장비(AR글라스·이어폰 등) 5천여 대를 구축하여 69회의 시범상영회를 개최, 2천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제25회 가치봄영화제 개최를 지원하여 33편 상영, 870명 관람, 만족도 98.7%를 달성하였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411개소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134개 공공도서관에 다문화 이해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국 600개 도서관에 큰글자책 16천권 보급 등 실시

가족 상활에 관한 권리

【교육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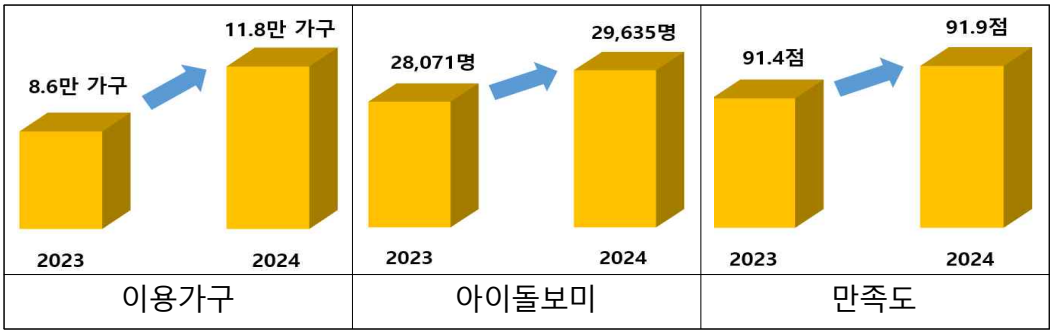
○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사업을 실시하여 제공기관은 '23년 1천개반에서 '24년 2천개반으로 두 배 확대, 이용 아동 수는 28천명에서 32천명으로 13.3% 증가, 이용자 만족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1.1% 향상

○ (부모교육)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육아쉼표' 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2개소, 어린이집 87개소가 참여, 만족도 96.4점을 기록하였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을 온·오프라인 실시하여 이수

인원이 ’23년 167천명에서 ’24년 178천명으로 증가(만족도 95.5점)

【여가부】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소득 구간별 5~10%p 상향,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구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이용요금 90% 지원 등 정부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수당 인상(5%), 교통비 지급지역 확대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23년 228개소 → ’24년 231개소),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 소지자를 위한 단축교육과정(40시간) 신설 등 인력 수급을 다변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아이돌보미가 각각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아래 참고)



【여가부】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센터를 확대하고(’23년 18개소 → ’24년 49개소), 양육비 이행지원 전문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켰으며(’24.9.),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근거 마련,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명단공개 관련 소명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등 내용의 「양육비이행법」을 개정(’24.10.16. 개정, ’25.7.1. 시행)하는 등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강화(양육비 이행률 ’23년 42.8% → ’24년 45.3%)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인권정책자문단 자문의견)

노동권

○ 여성혐오와 관련된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모성보호 사각지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검토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고용부)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관련하여 유자녀 외국인 노동자의 양육 환경 등 확인이 필요하고, 단속 중심이 아닌 노동자 면담·익명 제보 기반 점검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며, 신고 이력이 없거나 열악한 숙소 조건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집중 점검 필요(고용부)

건강권 및 보건 · 환경에 대한 권리

○ 지역거점 공공병원 구축이 필요하고,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병 증가 관련 공공 의료인력 및 재활 치료 전문 의료기관 확충 및 기간 확대, 의료수가 적정성 필요(복지부)

○ 구금시설 의무관 연봉 인상 및 화상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구금시설내 정신질환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적음(법무부)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총 괄

○ (개요) ▲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 여성,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과 재외동포, ▲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평등 증진】	
1	Ⅲ-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추진중
2	Ⅲ-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추진중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추진중
4	Ⅲ-1-④	성별 대표성 제고	추진중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추진중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추진중
7	Ⅲ-1-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추진중
		【여성】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추진중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추진중
10	Ⅲ-2-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추진중
11	Ⅲ-2-④	모·부성권 강화	추진중
12	Ⅲ-2-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추진중
		【아동·청소년】	
14	Ⅲ-3-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추진중
15	Ⅲ-3-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추진중
16	Ⅲ-3-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추진중
17	Ⅲ-3-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추진중
18	Ⅲ-3-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추진중
19	Ⅲ-3-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추진중
20	Ⅲ-3-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21	Ⅲ-3-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추진중
22	Ⅲ-3-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중
23	Ⅲ-3-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중
24	Ⅲ-3-⑪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일부완료**
26	Ⅲ-3-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추진중
27	Ⅲ-3-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추진중
29	Ⅲ-3-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추진중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추진중
31	Ⅲ-3-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추진중
32	Ⅲ-3-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추진중
【장애인】			
33	Ⅲ-4-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34	Ⅲ-4-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중
35	Ⅲ-4-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중
36	Ⅲ-4-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추진중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추진중
38	Ⅲ-4-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추진중
39	Ⅲ-4-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0	Ⅲ-4-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추진중
41	Ⅲ-4-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중
42	Ⅲ-4-⑩	장애인 고용 개선	추진중
43	Ⅲ-4-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추진중
44	Ⅲ-4-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추진중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추진중
【노인】			
46	Ⅲ-5-①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7	Ⅲ-5-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8	Ⅲ-5-③	노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9	Ⅲ-5-④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추진중
50	Ⅲ-5-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추진중
51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완료('23.)**
52	Ⅲ-5-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추진중
53	Ⅲ-5-⑧	농지연금 활성화	추진중
【외국인과 재외동포】			
54	Ⅲ-6-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추진중
55	Ⅲ-6-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56	Ⅲ-6-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7	Ⅲ-6-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추진중
58	Ⅲ-6-⑤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추진중
59	Ⅲ-6-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추진중
60	Ⅲ-6-⑦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중
61	Ⅲ-6-⑧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추진중
62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완료('23.)**
63	Ⅲ-6-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64	Ⅲ-6-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추진중
65	Ⅲ-6-⑫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66	Ⅲ-6-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추진중
67	Ⅲ-6-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추진중
68	Ⅲ-6-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추진중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추진중
70	Ⅲ-6-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추진중
71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완료('24.)**
72	Ⅲ-6-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추진중
73	Ⅲ-6-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추진중
74	Ⅲ-6-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중
		【북한이탈주민】	
75	Ⅲ-7-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추진중
76	Ⅲ-7-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중
77	Ⅲ-7-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중
78	Ⅲ-7-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79개 과제 중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법무부) 등 3개 과제 완료,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1개 과제 일부완료(복지부), 그 외 75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평등 증진

【여가부】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중앙부처 20개 기관 51개 사업 대상 부처별 성별영향평가(정책개선 반영률 84.7%), 지자체 일자리·도서관사업 대상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시범실시), STEM 분야 인재개발, 유해약물관리 등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각 실시하였고, 성별통계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여 '22년 신규 승인 국가통계 47종 중 15종에 대해 성별 구분 개선안 제안(9종 수용) 및 '23년 신규 승인 통계 43종에 대해 22종에 개선안 마련

※ '22년 국가·지역 성평등지수 측정('24.6.발표) : 65.7점 (전년 65.5점 대비 0.2점 상승)

【문체부·방통위】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 (문체부)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비하 방지 교육자료를 배포하고(19,943부),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하여 가짜뉴스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중학생 5,936명), 자체 개발 AI 리터러시 콘텐츠 및 KT 협업을 통하여 초·중학생 14,614명에게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교·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156개) 및 '찾아가는 교사연수'(53회)를 운영하였으며,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보도실천법, 장애 관련 보도 특강 등 온라인 연수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355명 수료), 인권 및 양성평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습·경력기자 대상 전문연수 운영(401명 수료)

* 종합교육연수원 최고 등급 평가 및 교육부 장관상 수상

○ (방통위) 인권침해, 문화 차별·비하, 혐오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15건 실시(법정제재 3건, 행정지도 12건)

※ 총 제재 건수 : '19년 54건 → '24년 15건으로 지속 감소

여 성

【여가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여가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131개 과제)하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5개소,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사업을 확대하여 기초지원시설 미설치 사각지대 및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매매 집결지 상담소를 운영하여 집결지 축소(’04년 35개소 → ’24년 12개소) 및 사회복귀 인원을 증대하였으며(’21년 1,543명 → ’24년 1,570명), 해바라기센터를 39개소에서 40개소로 확충하고, 미성년 피해자 퇴소자립 지원 및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상담부터 구조까지 단계별 체계를 구축하여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급이 ’23년 2등급에서 ’24년 1등급으로 상향

○ (경찰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경찰청 법정교육으로 지정하여 전체 경찰관의 96.6%가 이수하였고, 심화과정으로 ‘인신매매방지법의 이해 및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요령’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탑재, 식별 현황을 관리

【고용부】 모·부성권 강화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22년 953개소 → ’24년 2,229개소),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3. 12.)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 제도)로 개편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25.2.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 ’24년 부모함께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사용자 수 : 51,761명(’23년 대비 2.16배 증가)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공공부문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을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에 배포하여 2,545개 기관이 '자체 스토킹 예방지침'을 수립하였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전국 상담기관에 보완 배포하였으며,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8회, 1,443명 수료), 법무부 등 6개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 교육(61회, 1,249명 참여)을 각 실시하고,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 실시*

* 긴급주거지원 이용 실적 : '23년 60건 → '24년 272건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용 실적 : '23년 916건 → '24년 1,281건

아동 · 청소년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영유아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긍정양육 129원칙', 공익광고, SNS 캠페인, 카드뉴스, 리플릿(35만부)·책자(1.5만부) 배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e아동 행복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 112천명의 가정 방문 후 28천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154건을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하였고,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 판단 후 예방적 개입이 가능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24.4.~)하여 총 354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의료비, 양육코칭 등을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 7개소), 전담의료기관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수혜가정을 확대하고('22년 1,000가정 → '24년 2,400가정),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85명을 배치하고 대응인력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5,258명 수료),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협업 강화('24년 시군구 정보연계협의체 총 2,428회 개최)

【복지부】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 아동분야 사업안내 개정 통한 가정형 보호 우선 추진 및 위탁부모 양육 부담 해소, 고위험군 일반가정위탁(조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대구, 30가정)을 통한 양육 질 제고 및 위탁부모 소진 방지, 가정형 보호 확립을 위해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6대 과제에서 제시한 목표치('24년 37%) 조기 달성('23년 38.1%→'25년 43.7%),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영상 홍보 결과 '24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 금상 수상,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및 힐링프로그램 통한 위탁부모 공로 포상 및 소진 방지 등 가정위탁 활성화 및 위탁부모 양육부담 해소, 소진 방지 등 추진,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연구용역 실시 후 입양의 날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 발표

【문체부】 학생 선수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스포츠윤리교육 이수 인원을 확대하고('23년 16.2만명 → '24년 20.9만명), 성폭력·도핑 방지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제주 지역 고등학교 운동부 전수 점검 및 전국체전 간 대면상담, 장애체육인 인권 실태조사(5,060명) 등 현장 중심 인권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실적이 증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정서심리·체육활동 등 총 32건, 약 4,950만원 상당의 지원 제공

* 신고 : 851건 (전년대비 35.1% 증)
사건처리 : 757건 (전년대비 24.3% 증)
평균 처리기간 : '23년 145일 → '24년 99일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24.3.)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3,622개소) 대상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이수율 87.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심리·자살예방·인성 등 소양 교육(275회, 1,620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1,883회, 211명) 실시*

* 우울(7.3점↓), 스트레스(6.5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
참가자 만족도 : 평균 4.7점(5점 만점)

【법무부·경찰청】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 (법무부) 학교·검찰·법원 등이 의뢰한 초기비행 청소년 5,488명에게 비행예방교육을, 보호자 3,873명에게 보호자 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지역사회 상담전문가 개별상담 3,352건 및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209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제22대 국회 「소년법」 개정안(의원안) 검토의견 제출

○ (경찰청) 소년범 선도제도 전문가 참여제 연계 17,157명(13.5%↑),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결정 8,889명(78.0%↑), 선도프로그램 연계 31,665명(5.0%↑) 등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도박·마약 등 중독 성범죄 치유 선도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과 협업한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 확대(244개소→268개소)를 통해 재범방지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우범소년 송치 대상자 선정 시 법률전문가 심의 절차 도입

※ 소년범 재범률 : '23년 25.7% → '24년 23.0% (2.7%p 감)

장애인

【복지부】 장애인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성장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23년 97,469명 → '24년 103,523명)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연간 제공시간을 확대하는(960시간 → 1,080시간) 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23년 11,961명 → '24년 13,142명) 예산집행률을 개선하였으며(70.1% → 88.2%),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이용자는 '24년 1,230명, 가족휴식지원은 14,217명,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26,512명으로 확대

【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24. 6., 2,340명 대상), 관련 지침 마련, 선정기준 개발, 모니터링

연구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단가 인상('23년 15,570원 → '24년 16,150원),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자 확대('23년 115,000명 → '24년 123,715명)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91.8점에서 93.2점으로 상승하였고,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24.9. 시행)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30개 지자체에서 319호 주택을 공급하고 전담인력 128명을 배치하여 자립 만족도가 상승하였고('23년 79.8점 → '24년 86.5점), 국토교통부(LH)와 협업하여 주택 연 2회 공급, 입소위기 재가장애인까지 지원 대상 확대, 대상자 자택을 활용한 주거 유지형 서비스 모델 도입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4단계 시범사업을 개시('24.2.)하여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한 주간·월간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24. 12. 현재 등록 주치의 703명, 등록 장애인 7,115명 참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전국 47천개 이상의 의료·복지·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보건 관리 프로그램을 8,148명에게, 정기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56,617명에게 제공

노 인

【고용부】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 2.4만명에게 23만 건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중 6천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고,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과 병행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24.2.)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구직촉진수당 총 6,590억 원 지원, 중장년 특화 민간위탁기관 23개소를

통한 고령층 맞춤형 지원 강화, 유관기관 협업 취약계층 선제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참여자가 전년 대비 1.9만명 증가한 31.8만명으로 확대

【복지부】 노인 건강권 보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24.9., 등록의사 3천명, 등록환자 73만명 참여), 저소득 노인의 개안수술 본인부담금을 비급여 항목 포함 지원하여 5,300명 8,327안을 수술하였고('23년: 4,706명 7,020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여 2,346명 3,235건을 수술('23년: 1,555명 2,192건)

【농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 '24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 27,705건으로 목표(26,480건) 대비 104.6%, 신규 가입 건수 3,115건으로 목표(2,405건) 대비 129.5% 달성하였고,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직불형 연금상품*을 출시('24.3.)하여 94건(87.9ha)이 가입하는 등 상품을 다양화하였으며, 평균 월지급금을 '23년 103만원에서 '24년 110만 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연평균 생활자금 약 1,300만 원이 부족한 고령·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전

*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농지연금, 임대료를 동시 수령



* **고령농 생활부족액**(13백만원)
= 농가소비(30백만원) - 농가순소득(17백만원)
※ '23년 농가경제조사 70세 이상 농가기준

** **연평균 농지연금 지급액**(13백만원)
= 농지연금 평균 월지급액 108만원
('23년말 기준 누적가입자)×12개월

외국인과 재외동포

【고용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강화(완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개정 의결('23.7.) 및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23.11.)으로 지역 시세 및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및 근로자 부담액 명시
숙소비 산정 : 공동거주 시 1/n 원칙, 가설건축물은 지역 최저 월세 미만 기준 적용
숙식비 징수 : 근로자 동의 하 사전 공제
냉난방비·전기요금 : 실제 사용량 기준 사후 정산 등

【여가부등】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 (여가부) 노동력 착취 분야 식별지표를 개정·고시하고('24.12.), 피해자를 생계·의료·법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며('24.4.), EBS·유튜브·카드뉴스 등 홍보를 전개하고, 법정 의무 교육(264,856명 이수), 지자체 공무원 및 이주민 지원단체 대상 워크숍(2회) 실시 등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노력하여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등급이 '23년 2등급에서 '24년 1등급으로 상향

○ (해수부) 선원근로감독관 대상 정기 직무교육('24.4.),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 송출국(인니) 정부와 지속 협력,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2,304천원, 한국인 선원의 90%) 등

○ (대검찰청) 일선청에 구조금 지원 대상 발굴 지시('24.9.),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사건관리회의 적극 활용 지시('24.6.),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간담회 개최('24.9.), 일선청과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간 연계 활성화 방안 시행('24.10.), 피해자 생계비 지원금 상한 및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24.12.), '인신매매등 사범 검사 수사범죄 사건표' 개발 등

○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탑재·운영한 결과 ’24년 총 61명의 피해자가 식별되었고,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신규 제작해 KICS에 탑재하여 피해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에게 교부

○ (해경청) 인신매매 방지교육 및 수사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해양경찰교육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피해자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피해상담사 3급’ 자격 취득 과정을 신규 개설(26명 자격증 취득)

【법무부】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완료)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 보유 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24. 9.)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 연중 「북한이탈주민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정비(10회)하여 탈북민 자녀 초·중·고 입학금 면제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등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하였으며,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 현황 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민 정착 세대별 기본금을 증액(1인 1,000만원 → 1,500만원), 무연고 청소년에게 월 20만원 가산금 지급, 근로 지속 시 새출발 장려금 지급 등 제도 개선

연번	구분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1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5.21.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국가기념일 제정
2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7.9.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연장 근거 마련 정착지원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신변보호 재실시 근거 마련 남북통합문화센터 위탁근거 마련
3	부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7.30.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 서식 반영
4	행정규칙	정착지원협의회 운영예규	10.3.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효율화 예규개정 - 교육 및 일자리 소위, 중앙지방 소위
5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0.26.	교육지원 대상을 탈북민의 자녀로 확대
6	부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1.1.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신설
7	행정규칙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예규	11.1.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신설
8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2.20.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률 근거 마련 해외탈북민 입국지원, 양육 현황 조사 등
9	행정규칙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예규	12.17.	정착기본금 1,500만원으로 인상(25.1.1. 시행)
10	내규	보호결정 세부기준	-	국내 거주요건 3년 기준 명확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 및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방문객 '23년 67천명 → '24년 79천명), 남북 생애나눔대화(65회), 남북청소년합창단, 자원봉사단 정례 운영, 탈북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도서 6건, 시각예술 12건, 공연 3건) 등 문화교류와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24.1월부터 운영하여 고위험군 1,200여 명에 대한 집중관리 및 상담(66,349건)을 통해 긴급생계비 658건, 의료비 927건 등 다각적 지원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경찰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유관기관 협의체」를 분기별 운영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인권정책자문단 자문의견)

평등 증진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된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계획 수립 필요(법무부)

여 성

○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관련 건강 증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책 추진 필요(복지부)

아동 · 청소년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양적, 질적 제고 노력 강화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운영 예산 삭감의 적절성 검토 필요(복지부)

○ 우범소년 송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하달하고, 경찰의 조사, 선도, 사건송치 등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 있음(법무부, 경찰청)

장애인

○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이동권, 사법접근성 보장 관련 체계적 이행 계획, 예산 편성, 법적 제도 정비를 포함한 총체적 접근 필요(복지부)

노 인

○ 요양보호사, 간병인, 방문간호사, 지역보지관 등 현장 접촉자 중심의 의무적 학대 의심신고 시스템 강화, 노인 학대 가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심리치료 연계 프로그램 제도화, 처벌 외 접근금지 등을 포함하는 종합 보호 명령 체계 도입, 가족갈등조정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마련 등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복지부)

외국인과 재외동포

○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및 관련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검토 필요(여가부)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총 괄

○ (개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의 향유를 증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및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보장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1	Ⅳ-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제완료('24.)**
2	Ⅳ-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제완료('24.)**
3	Ⅳ-1-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추진중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추진중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일부완료**
6	Ⅳ-1-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추진중
7	Ⅳ-1-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추진중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일부완료**
9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일부완료**
10	Ⅳ-2-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추진중
11	Ⅳ-2-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추진중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추진중
13	Ⅳ-3-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추진중
14	Ⅳ-3-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추진중
15	Ⅳ-3-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추진중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추진중
17	Ⅳ-4-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추진중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추진중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추진중
20	Ⅳ-4-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등 2개 과제 완료,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등 3개 과제 일부완료, 그 외 16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과기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및 범정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완료)

○ 「디지털 권리장전」('23.9.)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24.5.)하고, 후속 조치로 AI 안전·윤리, 디지털 접근성,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등을 주제로 공론화를 진행('24.6.~12.)하였으며, 부처 합동 정책연구 수행, 25개 부처 171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성과 점검 및 대국민 인식조사(3,000명 대상)를 실시하고,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3법 및 「노인복지법」, 「자율주행차법」 개정 등 디지털 법·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캐나다(UBC, 토론토大), 영국(Demos, 옥스퍼드大)과 협력하여 AI 규범 및 디지털 권리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과기부등】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과기부)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파견교육, 체험존 등을 통하여 실생활 활용, 금융피싱 예방, 생성형 AI 윤리 등을 교육하였고('24년 54.5만명 교육, 만족도 평균 97점), 금융사기 예방·가족소통 등 실생활 중심 맞춤형 교육을 강화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 '23년 76.9% → '24년 77.5%

○ (문체부)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체험관 개관('24.3.), 융합콘텐츠 개발·구축('24.3.~) 등

○ (해수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시행(선박 110척 대상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1,252건 제공),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운영('24.11.)

【과기부】 디지털 교육 강화

○ 5대권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거점 실무형 디지털 인재 7,370명(목표 5,846명 대비 126.1% 초과 달성)과 3D프린팅 공정 이해 및 핵심 공정별 심화 기술 473명을(목표 436명 대비 8%p 초과 달성) 양성하고, 청년창업·스타트업 기술지원(702건) 등 실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신기술 교육 및 SW개발·테스트·창업 등을 위한 AI·SW 거점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과기부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과기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제공·활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4건을 발굴하고,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195명 참여)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

○ (행안부) 다양한 부분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묶음정보 34종을 확대하고('23년 105종 → '24년 139종) 자동차 사고 보상청구, 실손보험 청구 등 국민 수요가 많은 민간분야 서비스를 개시

※ '24년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량 누적 4억7천만건 돌파

○ (개인정보위) 의료·통신분야 등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을 발굴·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1차 구축('24. 12월)

【방통위】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24. 1.) 개인식별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연계정보 오·남용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법무부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법무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24. 12. 공포),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조배숙 의원안, '24.11. 발의), 미국·일본 등 주요 공조국 정기 협의체 및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 등 실무회의('24~'25년)를 통해 국제 사법공조를 강화하고, 동남아 사법공조 네트워크(SEAJust) 연례총회('24.8, 라오스)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 협력 확대

○ (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24.11.),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24.10.),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 삭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23년 27.6만건 → '24년 33.2만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삭제지원 핫라인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24.7.)

○ (대검찰청)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전담 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무협의회,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협력 강화 논의 및 전담검사 전문 역량 강화 도모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방심위·여가부 등에 84,231건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 보호 연계('23년 대비 47.9% 증)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민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24. 6., 12.), 「전기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 대리 디지털성범죄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을 확대

【법무부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법무부)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모든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행('24.1.)

○ (경찰청) 사이버수사 전문지식을 갖춘 예방강사 105명을 선발, 활용하여 사이버사기·도박·성폭력 분야 등 총 2,363회, 411천명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사이버경찰 '누리캅스' 769명을 운용하여 도박·자살유발 등 온라인 유해정보 총 186,224건을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인권정책자문단 자문의견)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이용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률 제정 전에라도 현행 법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임시적 보호조치 마련 필요(방통위)

○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처벌법 개정 필요성 검토와 개정 추진 계획 필요(법무부)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총 괄

○ (개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추진중
1	Ⅴ-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추진중
2	Ⅴ-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추진중
3	Ⅴ-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추진중
4	Ⅴ-1-(1)-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5	Ⅴ-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추진중
6	Ⅴ-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추진중
7	Ⅴ-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추진중
		(2) 고충처리	
8	Ⅴ-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추진중
9	Ⅴ-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추진중
10	Ⅴ-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추진중
11	Ⅴ-1-(2)-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지연**

○ **(이행상황 요약)**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수립 등 10개 과제 추진중,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추진지연

□ 주요 이행 실적

인권 경영의 제도화

【조달청】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창업 초기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하고('24.8.),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24.12.) 저리자금·계약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규모 지속 확대*

* 여성기업('23년 63,561억원→'24년 67,332억원), 장애인기업(12,243억원→12,331억원), 사회적기업(5,864억원→6,201억원).

【산자부】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2~'24)」에 따라 영세기업 인증 지원 확대('23년 557개 → '24년 599개), 시험·검사방법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제품 선도학교(30개교) 및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77개교)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성과목표를 288% 초과달성하였으며(목표 6,710명 대비 실적 15,296명), 어린이보호장치 충돌시험장비 구축('24.12.) 및 안전기준 개정('24.12.)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

고충처리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 피해신청자 7,983명 중 5,828명에 대하여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1,875억원을 지급하고('24.12.기준, 누적),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요양급여)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 소요기간을 단축하였으며('23년 35일 → '24년 23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방안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24.11.),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관련 법률*을 개정('24.3.)·시행('25.1.)

* 「환경분쟁조정법」,「환경보건법」,「석면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산자부·국토부】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운용

○ (산자부)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리콜 제품의 재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사업자별 전담 점검자를 지정, 1,598건의 리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 헬프데스크를 통하여 1,468건을 상담하는 등 사업자의 리콜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소비자단체를 통해 리콜 제품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352건의 재유통 리콜의심제품 판매를 차단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사업을 통하여 265,513개 매장에서(전년 대비 17,035개 매장 증가) 시스템 운용

○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착수 기준을 도입하여 해외에서 결함 조사 착수 시 우리나라에서도 결함 조사를 즉시 착수하도록 하였고('24. 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24.12.)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5. 1분기 완료)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인권정책자문단 자문의견)

인권 경영의 제도화

○ 인권 경영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유럽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지침' 등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과 균형을 맞출 논의가 필요하고, 각 부처의 활동을 조정하고 의제화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법무부)

○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입찰 시 특정 환경·인권 기준을 포함하거나 특정 인권 침해 기업에 관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접근법 검토 필요(조달청)

고충처리

○ OECD 한국연락사무소(NCP)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에 노력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기존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정하여 공개하는 등 노력 필요(산업부)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총 괄

○ (개요)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저변 확장을 통해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	VI-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추진중
2	VI-1-(1)-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추진중
3	VI-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일부완료**
4	VI-1-(1)-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중
5	VI-1-(1)-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추진중
		(2)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추진중
6	VI-1-(2)-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추진중
7	VI-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추진중
8	VI-1-(2)-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추진중
9	VI-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중
10	VI-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추진중
		(3)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중
11	VI-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추진중
12	VI-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중
13	VI-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추진중
14	VI-1-(3)-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추진중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5	VI-2-(1)-①4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추진중
16	VI-2-(1)-②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중
		(2) 학교 교육	추진중
17	VI-2-(2)-①	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추진중
18	VI-2-(2)-②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추진중
19	VI-2-(2)-③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0	VI-2-(2)-④	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과제완료('23.)**
		(3)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가 교육	추진중
21	VI-2-(3)-①	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2	VI-2-(3)-②	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3	VI-2-(3)-③	③ 군 장병 인권교육	추진중
24	VI-2-(3)-④	④ 변호사 인권교육	추진중
25	VI-2-(3)-⑤	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추진중
26	VI-2-(3)-⑥	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중
		(4)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	추진중
27	VI-2-(4)-①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중
		(5) 인식 개선	추진중
28	VI-2-(5)-①	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29	VI-2-(5)-②	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30	VI-2-(5)-③	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과제완료('23.)**
31	VI-2-(5)-④	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추진중

○ **(이행상황 요약)**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교육부) 등 2개 과제 완료,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1개 과제 일부완료(여가부), 28개 과제 추진중

□ 주요 이행 실적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교육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초·중등 교원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688명(중앙 68명, 지방 620명)을 선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13개 대학(원)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455명 수강) 운영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국내 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24.9.),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24.10.) 등 세계시민교육 주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네팔·모로코 등 국가별 맞춤형 교육과정·교재 개발을 지원

【외교부】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 유엔 총회·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미얀마 등 주요국 인권 관련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18개국 대상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제57차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관련하여 공동발언을 주도하고(2차) 부대행사를 개최(1회)하며 「신기술과 인권 관련 인권이사회 역량 강화」 제하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주도 이슈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12.10.)하고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공동서약그룹 약식회견을 주도(1회)·동참(10회)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회의를 지속 개최

【외교부】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정상급 인사 36명이 참여하였고, 시민사회가 참여한 토론·워크숍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여성·난민 등 취약계층 관련 국제기구 재정 기여를 확대하고(여성평화기금 180만불 출연, UNHCR 기여금 총 5,289만불 증액),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5.~'27.) 등 국제인권기구 선출 및 자문기구 진출 확대(총 9개 위원회·위원국 진출)

【행안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제4차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 및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및 동 시행령 개정

('24.7.31 시행)으로 모집자정보 사전공개, 전용계좌 의무화, 기부 목적 사업 범위 확대 등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

【외교부등】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 (외교부) 정상급·장차관급 협의를 통해 12개국 이상과 북한인권 공동 메시지를 발신하고,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국과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제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하여 서면질의·권고를 모두 수행하는 등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보리 내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24.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시 북한 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인권과 평화·안보문제간 연계성을 강조

○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2년차로 국제협력·문화예술·콘텐츠 등 5개 분야 19개 단체에 총 18억 원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토크콘서트 4회 개최로 MZ세대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미국·EU 등과 고위급 면담·정책설명회 및 국제포럼(워싱턴DC·제네바) 등을 통해 대외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인권보고서」 국·영문 발간 및 설명회를 병행하여 국제사회 인식 제고 추진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문답서) 이관자료 분석, 인명카드 및 사건카드 작성 기준 정비(매뉴얼 개정, 규정집 개정) 등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분석 및 보존·관리하고,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24.4.) 및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북한 UPR('24.11.)에 참석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다수부처】 국민·공무원·소수자 등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통일부) 공무원·교원 등 전 국민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및 이러닝 콘텐츠 신규 3종 개발, 장·단기 교육과정 내 '북한 인권 실상 영화 관람',

전문가 특강 등 인권교육 확대, 유튜브 시리즈(남북 MZ 소통, 통일책방 등) 7편 제작·홍보로 북한인권 인식 확산 기반 마련

○ (법무부) 국제인권 정보 확산을 위하여 「2024 국제인권조약집」,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제5차 국가보고서」 등 책자 2종 발간('23.12.), '세계 인권의 날' 특집 포함 뉴스레터 6종 제작·배포('24.6., 12.)



○ (교육부) 교원 연수 과정에 '학생인권 존중' 등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국 유·초·중·고 및 학부모 대상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실시율을 각각 94.4%, 78.5% 달성하였으며, 민간 협력 교육 자료(팝업북 2,490권) 보급

○ (법원행정처) 법관 대상 연수·세미나에 경력별 연수 Ⅰ~Ⅳ(393명),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66명),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64명), 법정언행컨설팅(171명),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27명) 등 법관 대상 인권 교육 실시

○ (인사혁신처) '25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24.11.) 시 전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을 안내하고 국무원 교육훈련기관(31개)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를 평가

○ (통일부·법무부·경찰청)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대상 교육(총 3기, 73명), 교정·보호·출입·검찰 인권감수성 훈련(19회, 516명), 내부 인권강사 역량 강화(5회, 100명) 및 외부 강사 초빙 교육(39회, 1,838명), 검사·수사관 맞춤형 인권프로그램(13회, 155명) 등 실시하고, 「'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24.2.)에 인권교육을 적극 편성하고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와 인권강사양성 공동운영,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참여 등 협력·지원체계 구축

○ (국방부) 지휘관·간부 대상(144명), 부대 인권교관(606명), 군 인권업무 종사자(310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이버교육(128,386명), 찾아가는 인권교육(168회), 교재·교안·동영상 등 맞춤형 콘텐츠 배포

○ (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대상 23개 교육과정 운영(5,328명 수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예방 교육 실시(1,895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연 2회),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상 아동 인권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아동권리 향상에 대한 대국민 아동권리포럼 개최(162명 참석)

○ (여가부)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지원, 인권보호 방안 등 교육, 북한이탈주민(18회, 296명) 및 장애 아동·청소년(600회, 1,375명)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학생·청년·일반국민·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웹드라마, 인포그래픽, 이러닝 6종) 및 장애인·외국인 대상 배리어프리·다국어 자막 콘텐츠 개발·보급

○ (통일부) 탈북민 대상 양성평등·인권교육(여성인권, 성범죄 예방, 가족 생애설계, 자유민주주의 이해, 준법교육, 인권 이해, 법률피해 구제사례 등) 실시(19시간), 준법교육 확대(2시간 → 4시간), 관련 기본교재 「사회생활」을 자유민주주의·생활법률·가정생활 내용 중심으로 개편·발간(’24.7.)

○ (고용부) ’24년 입국 E-9, H-2 외국인근로자 대상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 실시(83천명)

□ 주요 보완 · 개선 필요사항(인권정책자문단 자문의견)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 · 외 협력

○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유보조항 철회 등 국제조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 지속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필요(법무부등)

○ 국가보고서 제출·심의가 완료되었더라도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추진완료” 기준을 일관성 있게 설정할 필요(법무부)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인권정책기본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행정규칙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법무부)

○ 범부처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TF 구성 등 고려 필요(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4년도 이행상황

2025. 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목 차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1

□ 이행상황 총괄 ····· 3

□ 과제별 이행상황 ····· 5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75

□ 이행상황 총괄 ····· 77

□ 과제별 이행상황 ····· 80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215

□ 이행상황 총괄 ····· 217

□ 과제별 이행상황 ····· 220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346

□ 이행상황 총괄 ····· 348

□ 과제별 이행상황 ····· 349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390

□ 이행상황 총괄 ····· 392

□ 과제별 이행상황 ····· 393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414

□ 이행상황 총괄 ····· 416

□ 과제별 이행상황 ····· 418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4.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5. 표현의 자유

6. 결사・집회의 자유

7. 사생활의 자유

8. 거주・이전의 자유

9. 인격권

10.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11. 참정권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46	0	46	0	-
1. 생명권	2	-	2	-	-
2. 신체의 자유	14	-	14	-	-
3. 안전권	5	-	5	-	-
4.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1	-	1	-	-
5. 표현의 자유	2	-	2	-	-
6. 결사·집회의 자유	3	-	3	-	-
7. 사생활의 자유	5	-	5	-	-
8. 거주·이전의 자유	2	-	2	-	-
9. 인격권	1	-	1	-	-
10.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7	-	7	-	-
11. 참정권	4	-	4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생명권】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추진중
2	Ⅰ-1-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추진중
【신체의 자유】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추진중
4	Ⅰ-2-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추진중
5	Ⅰ-2-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추진중
6	Ⅰ-2-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추진중
7	Ⅰ-2-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추진중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추진중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추진중
10	Ⅰ-2-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추진중
11	Ⅰ-2-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추진중
12	Ⅰ-2-⑩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추진중
13	Ⅰ-2-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추진중
14	Ⅰ-2-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15	Ⅰ-2-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16	Ⅰ-2-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안전권】			
17	Ⅰ-3-①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18	Ⅰ-3-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추진중
19	Ⅰ-3-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추진중
20	Ⅰ-3-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추진중
21	Ⅰ-3-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추진중
【사상・양심 및 종교의자유】			
22	Ⅰ-4-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추진중
【표현의 자유】			
23	Ⅰ-5-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추진중
24	Ⅰ-5-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추진중
【결사・집회의 자유】			
25	Ⅰ-6-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추진중
26	Ⅰ-6-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추진중
27	Ⅰ-6-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추진중
【사생활의 자유】			
28	Ⅰ-7-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추진중
29	Ⅰ-7-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추진중
30	Ⅰ-7-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추진중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추진중
32	Ⅰ-7-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추진중
【거주・이전의 자유】			
33	Ⅰ-8-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34	Ⅰ-8-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추진중
【인격권】			
35	Ⅰ-9-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추진중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36	Ⅰ-10-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추진중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 보호	추진중
38	Ⅰ-10-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추진중
39	Ⅰ-10-④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중
40	Ⅰ-10-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추진중
41	Ⅰ-10-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추진중
42	Ⅰ-10-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추진중
【참정권】			
43	Ⅰ-11-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중
44	Ⅰ-11-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5	Ⅰ-11-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46	Ⅰ-11-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Ⅰ-1-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국내외적 요구와 추세를 고려하여 사형제도 개폐 검토			
	주요내용	○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형 폐지 및 관련 법률안 국회 논의 지원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 6080),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안(정부안, 25236), 가석방 요건 강화 관련 「형법」 개정안(권칠승, 407)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인 검토 지속 예정

2	Ⅰ-1-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사회정서성장지원과
과제목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주요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지원	1,054	1,054	-	-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위탁+교육청)	7,290	10,000	2,710	37
▪ 정신건강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교육청)	6,675	8,000	1,325	20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 개편에 따른 후속 지원(위탁)	300	-	순감	순감
▪ 자살위기 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운영	2,250	2,419	169	7.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내실화 운영
-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24.4월, 초1·초4·중1·고1 1,658,715명 조사 참여)
-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학교 내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관심군 중 72,300명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관심군: ('24년) 84.6% / 자살위험군: ('24) 86.3%

○ 종합적·선제적 학생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 2024년 사회정서지원정책 추진방향(2월)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문자상담서비스 운영(연중)
- 자살을 암시하는 유해 매체(음원, 드라마, 영화 등)를 발굴하여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접근 사전 차단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
- 학교 자살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 및 뉴스레터 발행
- 학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 학부모 인식개선 도모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청 학부모 교육 실시
- 마음건강 증진 문화 확산 기여를 위한 초중고 마음챙김 동아리 실시
-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운영 -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 치료 지원 실시 ○ 종합적·선제적 학생 자살예방을 지원사업 운영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운영('18.9월~'24.12월 누적 총 481,389건) -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유해저작물 2,956개 청소년 접근 차단 신고 ○ 학생 자살·자해예방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지원 - 학생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자해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돕기 위한 뉴스레터 발행(20종) - 학생 자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학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생명지킴이 전문교원 양성 8회, 정신건강 연수 4회, 원격 연수 4개 과정 등)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6차시) -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증진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24. 275개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로 정신건강지원 필요한 학생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 및 위기문자 상담망 지속 운영 ○ 학생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지원

3	Ⅰ-1-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자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자살 예방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주요내용	○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민관 협력 캠페인, 홍보를 통한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50,817	56,184	5,367	1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
- 지역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보고서 및 다빈도 장소 분석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배포

○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자살예방법 개정, '24.7.12.시행)를 통해 교육 실효성 제고 및 범사회적 생명존중문화 확산 도모
- (교육 기반 마련) 강사양성, 대국민 자살예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시스템 오픈 ('24.6.12.), 자살예방교육 대상자별 안내서 배포('24. 7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배포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자살시도자 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23. 84개소 → '24. 90개소)
- (유족 지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22.7.~, 9개 시도), 자조 모임 운영 및 홍보, 동료 지원 활동가 양성,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학업 및 생활 지원금을 통한 위기 해소
- (자살 사후대응)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 지원('24. 40기관 1,157명) 및 자살 사후대응 헬프라인(T.1899-4567)운영('24. 총 460건)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지원) 민관(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공동자금 조성하여 자살시도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백만원)

○ **민·관 협력 캠페인, 홍보를 통한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전통매체 홍보사업) 공익광고 및 생활밀착형 스팟 활용 홍보 콘텐츠 송출, 포스터 제작 배포 등
- (뉴미디어 홍보사업) SNS채널 운영,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 자살예방 웹진 제작 발행
- (오프라인 홍보사업)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24.9.10.),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 개최('24.9.12.) 등
- (정부·민간기관 간 협업) 생명지킴데이(LG트윈스 협업), 자살예방 관련 네이버 블로그씨 질문 및 핫토픽 노출(네이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주)숲),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코레일), 치킨박스에 생명존중 캠페인 문구 삽입(보드람치킨), 지면 홍보(교차로), 생명존중 캠페인(포토이즘), '마음구조 109'키링 제작(니울)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근거 기반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을 통한 전 사회적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 확산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근거 기반 자살 예방 대책 지속 추진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속 확대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신규 지역 확대('25.7. ~ 12개시도)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조건(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전국 응급의료기관) 확대('25.2Q ~)
○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및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요내용	○ '영장전담검사제 운영', '인권보호부 운영'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통제의 적정성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개정 형사법 시행에 따른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사법통제 방안 시행
- 개정 형사법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강제수사의 오·남용 우려가 증대된 점 등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시정사건 처리지침」 등 대검예규를 '21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엄정한 사법통제를 위한 업무체계 유지 및 운영
- 각종 영장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검찰청)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영장 업무의 적정성 제고

○ 일선청 사법통제 업무 지원 및 사법통제 우수사례 체계적 수집·활용
- 사법통제 담당 검사들 상대로 실무 관련 자료 제공하고,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일선청 사법통제 업무 지원
- 분기별로 일선청의 사법통제 우수사례를 취합·관리하고, 일선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사례를 선별하여 전파하는 등 사법통제 업무의 통일성·적정성 제고

○ 사법통제 우수사례 및 우수부서 선정
- 제도 개선 우수사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교양 우수사례,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 사례 등 일선의 사법통제 우수사례 적극 선정·포상하여 사례 발굴 독려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개정 형사법에 따른 사법통제 관련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시행하고, 일선 청에 사법통제 관련 착안사항 전파하는 등 사법통제 역량 강화하여 사법통제 적정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개정 형사법에 따른 사법통제 관련 업무체계 지속 점검 및 제도개선
○ 개정 형사법 관련 일선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일선과의 소통 강화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정책기획과
과제목표	○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 - 피의자 기소 및 구속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검찰권 행사 통제			
주요내용	○ 부당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 ○ 전국 고·지검(지청포함)에 검찰시민위원회 각각 설치·운영(2025. 2. 기준 총 66개) - 심의대상에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추가 [지검(2014. 9.), 고검(2015. 6.)] - 2018. 9. 지검 시민위 정례화(매월 1회 이상), 연 1회 우수 시민위원 포상 등으로 제도 활성화 도모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024년 총 852건의 심의 중 **공소제기·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안건은 총 765건(약 89.8%),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 안건은 총 23건(약 2.7%) 심의

개최 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구속취소	영장청구	재청구	항고	기타
428	852	191	574	1	21	1	30	34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구속영장 청구 등 인신구속 관련 형사 절차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검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2021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건수가 저조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방역 상황 안정화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독려로 개최횟수가 급증하였으며 이후 안정적인 개최실적 유지. 다만, 위원 수당 외에는 별도로 운영 경비 관련 예산이 없는 실정으로 위원회 추진 비용 등 다양한 예산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최실적(회)	375	178	261	409	428
심의건수(건)	701	347	520	898	852
집행액(천원)	821,965	247,640	364,650	708,265	600,840

향후추진계획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지속 점검
○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

3	Ⅰ-2-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1과
	과제목표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위법하고 부당한 인신구속방지 ○ 불법체포·구속,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침해 방지 ○ '수사지휘 전담검사제'운영으로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지휘의 적정성 제고 ○ 전국 8개 검찰청에 설치한'인권보호부'운영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인신구속 등 차단 노력 지속 ○ 인신구속 관련 형사절차에'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속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독직폭행·가혹 행위를 엄단하여 인권침해 방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실시 - 구속기간 경과 여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등의 감찰사항 확인 - 구속영장신청부, 긴급체포원부, 체포영장원부, 현행범체포원부, 유치장접견부 등 신병 관련 부책구비 여부 및 관련 부책 상태 확인 -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직접 점검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상대로 면담 실시 - 피체포자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구속영장 기각 시 피의자 석방 여부, 체포된 자에 대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의 적법·적정 처리 확인 -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시 불법 구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체포·구속 장소 감찰 : ('20.) 2,354회,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1.) 2,104회,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2.) 유선 실시,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3.) 3,185회 실시,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4.) 3,078회 실시,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 ○ 사법결창관 신청 체포·구속영장 엄격 심사 - 체포영장 기각(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 ('20.) 5,277, 14.3%→('21.) 5,650, 17.75%→('22.) 6,389, 19.4%→('23.) 8,167, 21.3%→('24.) 9,302, 22.8% - 구속영장 기각(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 ('20.) 5,260, 18%→('21.) 6,172, 22.8%→('22.) 6,389, 23.1%→('23.) 8,142, 25.0%→('24.) 8,630, 24.7%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 기소건수(건) : ('20.) 4→('21.) 9→('22.) 2→('23.) 4→('24.) 3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엄단 및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침해 방지 - 각종 영장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검찰청)가 설치('24. 7. 기준)되어 위법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영장 업무의 적정성 제고 -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66개청에 설치되어(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고, 위원회를 정례화(매월 1회)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 ○ 특사경의 체포·구속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및 통제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구속 방지 ○ 유치장 감찰을 통해 각종 영장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선 또는 대면을 이용하여 질의하는 등 업무관련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체포·구속 장소 감찰과 엄격한 영장심사를 통해 부당한 인신구속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수사관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접수창고를 마련함과 아울러, 검찰의 인권옹호 임무 및 처리절차 홍보

4	Ⅰ-2-②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지속 실시 ○ 연도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행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체류 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추진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88,606	95,545	5,939	6.7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099	21,442	343	1.6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2,500	3,450	950	38.0
▪ 범죄피해구조금	10,015	9,573	△442	△4.4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46	5,540	2,094	60.8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1,632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9,413	2,059	5.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560	13,495	935	7.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 지원 내용을 종합 점검하여 지원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 마련('24. 6.)
- 피해자 지원 인력의 원스톱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 전담기관 및 검사·검찰수사관·경찰관 등에 대한 집합 통합교육 실시('24. 6., 11.)
-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24. 7.)
-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 지원의 체계적 설계 및 연계·사례관리 등 Case Manager 역할을 담당할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24. 7.)
- 법무부·검·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부처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24년 성과 및 '25년 계획 공유,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발전 방향 모색 등 원스톱 지원체계 협의체 제10차 회의 실시('24. 12.)
- 범죄·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안내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 및 배포('24. 12.)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24. 7., 기본교육 및 연수교육)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교육부·행안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5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24. 1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를 통한 직접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25년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기준에 맞춰 생계비를 인상(1인 50→70만원), 지원기간을 연장(최대 6→12개월)하고 장례비도 현실화(최대 400→500만원)하였으며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퇴소자립수당 신설 및 퇴소자립지원금 상향 등 직접지원 사업비 3,704백만원 증액('24. 12.)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범죄피해 유형·치료 효과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스마일센터 백서'로 발간하여 전국 센터에 공유함으로써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24. 5.) -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통합사례자문회의('24. 6.~10.) 및 전문역량 개발교육 실시(연중), 제9회 학술심포지엄 개최('24. 11.)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의 전문성을 강화 - 신분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 시·공간의 제약으로 심리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등을 위해 비대면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유튜브) 배포('24. 7.)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다링안심캠페인 실시('24. 6. 15.,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최, 약 1,000여 명 참여) -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실시('24. 11. 27., 대구 아이엠뱅크 제2본점 개최, 약 400여 명 참여)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24. 9. 20.) 및 시행 예정('25. 3. 21.)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 보유 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해당 구조금 지급 -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지급 -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신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상세 수립,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킴 ○ 범죄피해자 생계비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등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함 ○ 다링안심캠페인 및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와 범죄피해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국민적 관심을 제고함 ○ 결혼이민자 및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 등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기관간 업무 표준화·효율화 및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향후추진계획	○ 지역별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광역 단위 원스톱 솔루션 센터 추가 개소 및 유관기관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등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심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지원 유형별 등 각 단계별로 체계화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마련 ○ 학술심포지엄 개최, 권역별 간담회 및 종사자 역량개발교육 등 지속적인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매해 다링안심캠페인(상반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하반기)를 개최하여 전국민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및 실무매뉴얼 정비, 범죄피해구조금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조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5	Ⅰ-2-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장애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기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범죄피해자 외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강화 및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등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 -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리 확대 추진 ○ 진술조력인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 추진 -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프로그램, 업무매뉴얼 정비 - 진술조력인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1,632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560	13,495	935	7.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채용·배치
- 2024년 신규 진술조력인 14명 양성 및 자격부여('24. 8.)
-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및 배치('24.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24. 4. 광주해바라기센터)
- 원스톱솔루션센터 상근 진술조력인 신규 배치를 통한 배치기관 다양화 시도('24. 7.)

○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추진
- 상근 진술조력인 월별 사례관리회의 실시(매월)
- 2024년 1차·2차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24. 11.)

○ 진술조력인 제도개선 추진
- 진술조력인 업무 매뉴얼 개정('24. 1.~3., '17년 이후 최초 개정)
- 진술조력인의 효과적 관리·감독을 위한 법령 정비 : 법무부령 개정('24. 4.) 및 훈령 제정('24. 5.)
-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개선 T/F' 구성·운영('24. 2., '24. 10.)
-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연구용역 실시('24. 4.~1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24. 1.)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반영하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4. 4.)
- 관련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사유 확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강화 및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 총 528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24. 9. ~ 11.)
- 반기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24. 5., '24. 11.)
- 여주, 평택, 부천 등 5개 지역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총 7명 추가 배치('24. 1. ~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

  * 2024년 진술조력인 지원 실적: 4,517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스토킹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7명 추가 배치하는 등 제도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

  * '24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 37,605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속하고 효율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비수도권 지역 배치 필요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24.12.)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13	4	2	-	1	1	-	1	2	-	1	1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현황('24.12.)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3	8	4	3	2	2	2	0	12	2	0	1	2	1	1	2	1

향후추진계획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채용 및 배치('25.)
-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편된 교육과정 실시('25.)
- 상근 진술조력인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추진('25.)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현실화를 위한 예산 935백만원 증액하여 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 수준으로 보수 인상('25.)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 추진('2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강화 및 조문 정비를 위해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5. 3.)

6	Ⅰ-2-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수사인권담당관실
	과제목표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 변호인 참여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한 규칙 및 지침 마련			
	주요내용	○ 헌법상 변호인조력권 강화를 위해 피고인과 구속 피의자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침 및 규칙 마련하여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 21대 국회 회기 종료 후 진행사항 없음 ○ **변호인 참여권** - '23. 3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경찰청훈령)」상 제32조 변호인 메모 보장, 제33조 변호사 및 의뢰인 간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제34조 변호인에 대한 수사등 진행상황 통지를 규정하여 제정·시행함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인 참여권** -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명문화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계획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 추후 국회 법안 재추진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속 대응 예정

7	Ⅰ-2-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수사인권담당관실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으로 경찰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 보장 실현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 및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 내실화 및 관련 교육 활성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강화)**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법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보장 내실화 추진

▸ **<수사서류 외국어 번역 확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등 수사서류 5종에 대한 8개 외국어 번역 추진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내실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4,876명'23년→9,542명'24년으로 확대(+4,876명) 및 본청주관 현장점검 실시로 제도 점검 및 제도보완 추진

▸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서울변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실효성 있는 편의지원 등 협의

▸ **<장애인 특장차량 배치>** 서울시 등과 협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체포·구속시 원활한 호송 및 안전확보를 위한 장애인 특장차량 관리전환 및 현장배치(서울혜화서·서울용산서 각 배치)

○ **(경찰수사 인권보호 교육 강화)** 경찰 수사과정상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인권 매뉴얼」 제작·배포 및 사이버컨텐츠 제작 등으로 교육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 **<수사인권매뉴얼 제작·배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과 산재된 수사절차 상 인권보호 규정에 대한 현장경찰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사이버컨텐츠 확대>** ▵수사인권매뉴얼(1~5차시) ▵장애인전담 조사과정(1~4차시) 신규 교육 컨텐츠 확대 및 기존 사이버 컨텐츠 ▵교육자료 배포(3.30.) 및 카드뉴스 게재 등 교육·홍보 강화

▸ **<기타>** ▵수사단계별 준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기관교육 지정·운영(장애인전담 조사과정-131,462명 이수)

○ **(인권취약 요소 진단)**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인권진단 실시

▸ **<자체·권역별 인권진단>** 본청 주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권역별 및 시도청 교차진단

▸ **<개선안 도출·시행>** 진단결과 분석 및 현장간담회를 통한 개선안 도출·시행

▸ **<이행실태 점검·환류>** 개선안 시행여부 등 지속 점검, 인권진단 이행력 확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개시부터 송치까지 수사과정 전반의 인권 최우선 환경조성

➡ **치안고객만족도(수사분야) 및 사법경찰평가 점수 상승, 경찰수사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경찰의 인권보호 준수 노력을 높게 평가**



<치안고객만족도>



<사법경찰평가>

향후추진계획

○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법적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보장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인권진단)**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진술녹음 ▵변호인 참여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활성화 등 수사과정 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이행여부를 수사 인권진단을 통하여 점검·진단·평가

- 진단결과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미흡사례에 대한 개선안 도출·시행, 우수사례 전국 공유 등 환류 강화

※ 진단방법 : ①자체진단 → ② 시도경찰청 교차진단 → ③경찰청 주관 권역별 진단

○ **(교육·홍보)** 수사인권 분야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수사인권보호에 대한 대내·외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4과
	과제목표	○ 성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강화 및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여성폭력 및 아동 학대 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 전국 주요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 매뉴얼 철저 준수 및 적시 개정 - 전문가 초청 강연, 유관기관 현장방문 간담회 등 관련기관 협업시스템 강화를 통한 능동적·효과적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여성·아동 및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신설** ○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및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 강화 도모 ○ 전국 검찰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전국 검찰청 인신매매등 수사 및 재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범죄 전담검사 지정·운영을 통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및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실시 등 2차 피해 예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등 2차 피해 방지 노력 지속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인권기획담당관실
	과제목표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주요내용	○ 피해자 심리안정·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하도록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성 확보 ○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귀가 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신변보호 제도 지속 운영 -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즉각 입소 가능한 총 4개의 보호시설 운영 중 - 보복 우려 발생 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신속 지원 - 일선 청 정보보고 등을 통해 신변보호 필요 피해자 발견 시, 해당 청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신변보호 지원 검토 독려 ○ 전국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 법정 출석 시 경호인력·차량 등 지원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선 청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매월 1회 가해자의 가석방 및 출소 여부 조회하여 피해자에게 통지 시행 - 가해자 출소 등 수형정보 통지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방안 마련 및 일선 청 전파('24. 1.) ○ 피해자 재판절차 참여권, 변호인 조력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장 열람·등사 허용 적극 검토 - 피해자의 증거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시행('24. 5.) ○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작성(특히, 성범죄 피해자) 적극 활용 및 각 청마다 신원관리카드 담당 검사 지정하여 철저하게 보안 관리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관련 지침 개정, 일선 청 업무지시 등을 통해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 보복 우려 사건 피해자 대상 안전가옥 등 이용 적극 독려 ○ 이전비 등 신속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기 운영 중인 안전가옥 외, 피해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형태의 안전가옥 제공방안 검토 추진 ○ 일선 검찰청, 유관기관, 타 관공서 등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또는 피해자지원제도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여 신변보호 제도 홍보 지속 추진

8	Ⅰ-2-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 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

주요내용

○ 현장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 대상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확행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피해자 임시숙소	1,148	845	△303	△2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현장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경찰청 법정교육으로 지정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했으며, 이에 2024년 전체 경찰관 중 95.1%가 교육을 이수

(교육 내용) △2차 피해의 개념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죄종별 유의사항

○ **범죄피해자 대상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확행**
- 범죄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공통 안내서 외에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별도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여 안내 확행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범죄피해자 대상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2024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0,755건 실시('22년 29,372건 → '23년 30,750건 → '24년 30,755건)]
- 특히, 2024년에는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사업 156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직원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특정범죄 피해자 대상 별도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운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고도화 등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향후추진계획

○ **2차 피해 예방교육 지속 시행**
-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하여 교육자료 개선 등을 통해 교육효과 증진

○ **범죄피해자 안내서 개선**
- 법령의 제·개정이 잦은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 등의 변동에 맞춰 안내서 개선·신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 재피해 위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전조치 시행 및 민간경호 전국 확대 실시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수사인권담당관실
	과제목표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 수립			
	주요내용	○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국민 중심 책임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 - 수사과정 인권취약요소 진단 체계 구축 - 사건처리기간 관리 및 수사 인권 교육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수사정보 유출 방지)** 경찰 수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수사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체계적 방지 시스템 구축

▸ **<사건보안 강화>** KICS 문서 작성 및 열람·출력 시 워터마크 표시 등 보안 강화
▸ **<단속·처벌 강화>** 정보유출 단속 체계 구축 및 비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강화
▸ **<교육·홍보 강화>** 자정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경각심 조성 등 비위예방 체계 구축

○ **(수사인권진단)**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수사과정 인권진단 실시

▸ **<절차 준수사항 점검>** 법령·규칙 등 수사 주요 절차사항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 및 이행여부 등 실태 점검
▸ **<인권위 권고 재발방지 조치>** 수사부서 대상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 이행계획 및 재발 방지조치 교육 이행 여부 등 점검
▸ **<수사부서 시설 진단>** 조사실·통합수사 당직실 및 유치장 등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사고요소 사전 진단

○ **(사건처리기간 관리)**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균 사건처리기간을 관리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경찰수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 향상

▸ '18년 ~ '22년 5년간 사건 처리기간이 상당히 증가(38.4%)하여 사건처리기간 관리 시행
▸ '24년 사건처리 기간 56.2일로 다소 감소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평균 사건처리기간	48.9	50.4	55.6	64.2	67.7	63	56.2

○ **(사전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수사감찰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 수사부서에 대한 현장점검 · 감찰정보 활동 등 예방기능 강화

▸ **<장기 요구요청사건 점검>** 검찰 요구요청 사건 중 1년이상 경과 사건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장기요구요청사건 : '23.9월 4,526건' → '24.9월 2,353건(-2,173건, 48%↓)
▸ **<책임수사 확립 특별점검>** △통합수사팀 운영 현황 △중간관리자 책임수사 여부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 실태 △경찰 구제제도 변경 지침 이행 여부 등 책임수사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분석		
	추진성과	△수사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수사인권 진단 실시 △평균 사건처리기간 감소 △사전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등을 통한 책임 수사체계 구축

향후추진계획

○ **(수사경찰 청렴·반부패 제도 강화)** △장기 미처리 사건 △압수물 관리실태 점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 중심,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활동 정립

○ **(인권진단)** △체포·구속 △유치장 △피의자 조사 등 주요 수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취약요소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 사전진단·점검 추진

○ **(교육·홍보)** 기관위탁·합동교육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한 이해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 '숏폼' 등 교육 콘텐츠 다양화, 핵심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수사인권 교육 추진

9	Ⅰ-2-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	과·팀명	경찰민원과
과제목표	○ 경찰 수사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경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보호			
주요내용	○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적극 처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24	1,600	276	20.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수사 과정에서 권리 미고지, 진행상황 및 결과 미통지 등 수사절차 위반, 불친절·폭언 등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 고충민원 해결

※ '24년 경찰수사 관련 고충민원 721건을 처리하고, 고소인 진술녹음 및 수사 거부, 보완 수사 지연, 신고사건 진행상황 미통지 등 105건 인용(인용률 14.6%)

결과분석

추진성과	○ 총 721건의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적극 처리(계속)

10	Ⅰ-2-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소년보호과·수용팀

과제목표

○ 소년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보호소년 등 인권 보호

주요내용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및 강당, 식당 조리실 리모델링 완료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 전담 시설 조성
○ 위탁소년 생활관 소규모화 시설 조성(광주소년원)
○ 여성소년원 과밀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기능조정(청주·안양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춘천소년원 교육관 등 재건축	9,710	5,427	△4,283	△44.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여위탁전담시설 조성	3,800	2,800	△1,000 (2024이월)	△26.3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238	1,331	1,093	559.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및 강당, 식당 조리실 리모델링 완료
- 1인실 36개, 3인실 38개로 생활실 소규모화('21. ~ '24 . 7.)
- 강당, 학생식당 조리실 등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완료('24. 7. ~ '24 . 10.)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22. 12. 착공 ~ '25. 6. 완공 예정)
- '24년 재건축 공정률 70% 달성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시설 조성
- 석면철거 및 내진보강 공사 완료 및 본공사 착공('24. 12.)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설계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24. 12.)

○ 여성소년원 교육 과정 개편 및 기능 조정
- 여성 특수 단기 교육 과정(8호) 이관 : 청주원 → 대전원('24. 11.)
- 안양소년원 직업능력개발과정(제과제빵, 피부미용) 이관 : 안양원 → 청주원('24. 12.)

○ 여성소년원 생활실 조성 및 신설 직종 학과장 조성
- 안양소년원 생활관 호실 추가 조성(안양소년원 2인 생활실 2개 증설)('24. 12.)
- 청주소년원 신설직종 학과장 조성(뷰티메디컬반 조성)('24.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개별처우 기반 강화(보호소년 150명) ○ 춘천소년원 청사동, 교육동, 식당동 등 관리동 공사 원활히 진행 ○ 여성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및 기능 조정을 통한 과밀 해소 - ’24. 9. 말 안양원 : 정원 80명 / 수용인원 164명(205%) - ’24. 12. 말 안양원 : 정원 80명 / 수용인원 115명(143%)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소년보호기관 리모델링·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용공간 확보로 친인권적 보호행정 구현

구분	증·개축	신설
기관명	• 서울심 여위탁전담시설 리모델링(’23.~’25.) 사업비 : 37.8억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24.~’27.) 사업비 : 110억 • 청주소년원 생활실 추가 조성(3인 생활실 2실, 2인실 1실, 1인실 3실) 사업비 : 3억9천	안양소년원 증축(예정)

○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한 증·개축 사업 지속 추진

10	Ⅰ-2-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복지과
과제목표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사업 추진			
주요내용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현대화 -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충 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	74,027	92,061	18,034	24.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교정시설 1개 기관 개청
- '24. 5.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

○ 3개 기관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축
- 영월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년 대비 351명 분의 신규 수용공간 확대 -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수용정원 270명 확대 - 수용동 증·개축을 통해 수용정원 81명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전년 대비 신규 수용공간 351명 분을 확대했으나 같은 기간 일평균수용인원은 11,116명이 증가하여 과밀 수용 해소 성과가 미미해보임

향후추진계획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개축 등 수용공간 확충 사업 지속 추진
- 신축(6개 기관) : 화성여자·태백·남원(교), 경기북부·대전·광주(구)
- 이전·현대화(7개 기관) : 안양·전주·원주·창원·대전·부산(교), 부산(구)
- 수용동 증축(5개 기관) : 울산(구), 진주·군산·순천(교), 논산(지소)

11	Ⅰ-2-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과제목표

○ 수용자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지원 및 안정적 교육 인프라 구축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수용자 처우 확대를 통해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
○ 수형자에 대한 전문기술 습득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재범 예방

주요내용

[사회복귀과]

○ 집중인성교육 실효성 강화
- 교정교육 전문강사 자격 인정시험 도입 및 실시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및 사회적 처우 확대
- 가족만남의 집·가족만남의 시간·가족사랑캠프 등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확대 시행
- 농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형자 봉사활동 실시

[직업훈련과]

○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변화 및 취업 전망에 맞춰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 신설 및 고급 과정 확대

-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 도입 및 시행으로 지식기반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훈련·교육 시행 및 학업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관련예산

[사회복귀과]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정교화	11,920	11,457	△463	3.9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4,164	4,399	235	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사회복귀과]

○ 집중인성교육 효과성 향상을 위한 내부 인적자원 확대 추진
– 교정교육 전문강사 자격 인정시험 도입 및 실시('24년 누적 양성자 수 49명)

○ 집중인성교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정 신설 및 연구추진
– 교정본부–백석대 업무협약 체결 및 집중인성교육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24년)
– 생활 속 실천형 인성교육의 일환인 감사쓰기 공모전 개최('24년 누적 참여자 10,151명)

○ 수용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문학 교육 추진
– ㈜모네상스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모네상스 인문학 콘텐츠 교화방송 송출('24. 7.)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실시 확대

– 수용생활에 따른 가족해체를 막고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실시 확대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23년 실적	'24년 실적	증감율
가족만남의 집(명)	895	1,662	+ 85.7%
가족사랑캠프(명)	56	251	+ 348.2.%
가족만남의 시간(舊가족접견, 명)	2,588	3,199	+ 23.6%
가족만남의 날(명)*	0	0	-

* 가족만남의 날과 같은 대규모 가족 단위 프로그램 대신 소규모 가족 단위 프로그램 지향

○ 사회적 처우 확대

-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 처우 확대 시행

사회적 처우	'23년 이행실적	'24년 이행실적	증감율
귀휴(명)	1,057	1,397	+ 32.2%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명)*	305	896	+ 193.8%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및 사회적 처우 실적은 소망(교) 포함 실적

[직업훈련과]

○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내실화

- 전국 36개 교정기관 92개 직종 248개 훈련과정에서 수형자 5,987명이 직업훈련을 받는 성과를 내었으며,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향상(산업기사)·고급(기능장, 기사) 훈련과정* 확대 시행('23년 24개 -> '24년 31개 과정)

  * 사무자동화, 전산응용기설계, 정보처리, 건축목재시공, 실내건축 등 기술 숙련자 양성을 위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가능한 고급 훈련 과정 확대

-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첨단 IT직종*, 용접, 지게차 운전, 바리스타, 청소, 웹툰 등 다양한 취업유망 직종 신설 및 운영

  * IT직종 직업훈련 : 3D프린팅 기계설계, 웹툰, 웹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설비, 전자캐드

○ 직업훈련과정 학업연계를 위한 학점은행제 시행

- 산업기사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제도 도입 및 시행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화성직훈(교) 등 9개 기관이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받고 14개 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 도입

결과분석	추진성과	[사회복귀과]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및 사회적 처우 실적 확대 ○ 수용자의 인성교육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내·외부 역량 강화 [직업훈련과] ○ 직업훈련 수료한 수형자 대상으로 기능사, 산업기사 등 각종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격증 시험 응시 기회 제공하여 수형자 3,515명(기능장 1명, 산업기사 141명, 기능사 3,373명) 전문 자격증 취득 ○ 직업훈련생 「2024년도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 수형자 다수 입상 -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장애인 대회 포함)에 화성직훈(교) 등 14개 기관 직업훈련생 105명 참가하여 58명 입상(금 20, 은15, 동 10, 우수 1, 장려 12) - 「2024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장애인 대회 포함)에 총 25명 참가하여 23명 입상(금 3, 은 5, 동 3, 우수 2, 장려 10) ○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수형자 168명 대상으로 시행 - 산업기사 자격취득과 동시에 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점 저축 및 향후 학력 인정·학위 취득 기회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사회복귀과] ○ 여성 및 소년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수용자는 증가하는 한편, 담당 교육인력의 부족으로 교육 효과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향후추진계획	[사회복귀과] ○ 산학협력 등 공동연구 결과 활용, 집중인성교육 등 수용자 교육 운영 개선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및 사회적 처우 지속 확대 ○ 수형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신 개별 가족 위주 프로그램 적극적 운영 [직업훈련과] ○ 다양하고 효율적인 취업역량강화 직업훈련 정책 지속 추진 - 훈련받은 기술을 전문화하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연계하는 과정 추진 검토* * 「직업훈련→교도작업 연계 기술숙련→취업」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운영 - 인력부족 산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 교정기관 노인·여성수형자 수용인원 증가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방안 검토

12	Ⅰ-2-⑩	보호 · 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소년보호과·수용팀
과제목표	○ 소년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개방처우,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권 처우 강화			
주요내용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 시설 조성 ○ 위탁소년 생활관 소규모화 시설 조성(광주소년원) ○ 교육과정 개편 및 생활실 호실 증설을 통한 여성소년원 과밀수용 해소 ○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 점검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 수행 ○ 소년원 내 작은 도서관 조성 ○ 개방처우 활성화 및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춘천소년원 교육관 등 재건축	9,710	5,427	△4,283	△44.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여위탁전담시설 조성	3,800	2,800	△1,000 (2024이월)	△26.3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238	1,331	1,093	559.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서울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리모델링 완료('21. ~ '24 . 7.)
- 1인실 36개, 3인실 38개로 생활실 소규모화하여 보호소년 인권처우 및 개별처우

○ 춘천소년원 교육실, 강당, 학생식당 등 노후에 따른 재건축('22. 12. 착공 ~ '25. 6. 완공 예정)
- '24년 재건축 공정률 70% 달성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위탁소년전담시설 조성
- 석면철거 및 내진보강 공사 완료 후 본공사 착공('24. 12.)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 증축 설계용역 발주 및 및 입찰공고('24. 12.)

○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 점검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 수행(서울소년원 등 11개 기관)

○ 소년원내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한 보호소년 등 독서활동 증진
- 대구소년원(24.11. 개관), 서울심사원('24.12. 개관)

○ 개방처우 활성화 및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보호소년 인권처우 강화
- 개방처우(체험학습 등) 운영(서울소년원 등 10개 소년원 122회 839명 실시)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9개 기관 49사례 101명 참여)
-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6개 기관 1,294명)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개별처우 기반 강화(보호소년 150명)
○ 춘천소년원 청사동, 교육동, 식당동 등 관리동 공사 원활히 진행
○ 소년원 내 도서관 조성 : 보호소년등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독서습관 형성
○ 개방처우 활성화 : 보호소년등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활성화 : 보호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을 통한 긍정적 행동 변화 유도
○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확대 : 보호소년의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기회 확대</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해당 없음</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소년보호기관 리모델링·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생활관 소규모화 확보로 친인권적 보호행정 구현
<table>
<tr><th>구분</th><th>증·개축</th><th>신설</th></tr>
<tr><td>기관명</td><td>• 서울심 여위탁전담시설 리모델링('23.~'25.) 사업비 : 37.8억
• 광주소년원 위탁생활관('24.~'27.) 사업비 : 110억
• 청주소년원 생활실 추가 조성(3인 생활실 2실, 2인실 1실, 1인실 3실) 사업비 : 3억9천</td><td>안양소년원 증축(예정)</td></tr>
</table>
○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한 증·개축 사업 지속 발굴
○ '25년도 전국 소년보호기관 수용실태 점검으로 인권친화적인 보호행정 지속 감독 강화
○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한 보호소년 등 독서활동 증진
- '25년 소년원 도서관 조성 추진
○ 일과시간 이후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한 스터디카페형 공부방 조성
○ 소년원 학생의 안정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기능 강화</td></tr>
</table>

13	Ⅰ-2-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치료처우과
과제목표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한 약물 투여 부작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			
주요내용	○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검사 실시 ○ 성충동 약물치료 전담 보호관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집행협의체(보호관찰관, 의료진, 심리치료사 등) 운영을 통한 치료경과, 부작용 방지 등 효율적 집행 방안 모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충동약물치료 심리치료비용 등 (심리치료, 약물투여,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106	10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부작용 등 예방을 위한 검사 철저
- 검증된 치료약물 사용 및 정기·수시 검사로 부작용 최소화
  · (치료약물 고시) 3년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조회한 후 치료약물 목록 고시
  · (부작용 등 검사) 약물투여 시 부작용 검사로 피치료자 특이사항 수시 점검
  * '24년 집행인원 44명 대상 총 103회 정기·수시 검사 실시

○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 범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도·감독 및 약물치료 집행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이해(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성폭력 사범 지도감독 과정('24. 7. 9. ~ 12. 법무연수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피치료자 부작용 예방 - 담당 의사·심리치료사 등 의료진 면담을 통해 피치료자 신체·심리적 변화 파악 및 정기·수시 검사로 부작용 사전 예방 ○ 성폭력사범 치료 및 재범 방지 - 성도착증세 완화 등 성폭력사범 치료 및 재범 방지('24. 재범자 0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치료명령 집행 현황 수시 점검
- 법무부에서 소속기관 치료명령 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약물투여, 심리치료, 부작용 검사 등 약물치료 집행 절차 관리·감독 강화

○ 치료명령 임시해제 활용
- 집행개시 6개월 후 치료경과 및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해제 신청 적극 활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14	Ⅰ-2-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시 인권 보호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주요내용	○ 사업장 및 주거지 등 진입·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철저 이행으로 단속 담당 직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단속을 통한 출국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자진출국 유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단속 시「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연중)
- 사전답사,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 수립, 단속 전 인권교육 실시 등
- 외국인 등 방문 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 개시*

* '22. 8. 1.「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개정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영상촬영 등 채증활동 실시(연중)
-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 시 영상녹화 실시 및 영상 관리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배치
- '24년 광역단속팀 3곳(인천, 대전, 울산) 추가 신설 및 인력보강 배치

* '23년 하반기 수시직제로 불법체류 단속인력 총 88명 증원

○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 등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
- '24년 총 46,299명 자진출국
- 불법체류 자진출국자에 대한 범칙금과 입국규제 면제 혜택의 특별 자진출국제도 2회 운영(△1차 '23. 9. 11. ~ '24. 2. 29. △2차 '24. 9. 30. ~ 11. 30, '25. 1.까지 연장 운영)

* 1차: '24. 1.~2. 약 7,500명, 2차: '24. 9. ~ '24. 12. 약 16,00명 자진출국

- 자진출국 유도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주한공관원과 간담회 등 실시(12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단속 시「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특별자진출국 제도 운영 등 자진출국 유도 강화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로 전환 ('23. 10월 43만 명 → '24. 1월 42만 명 → 6월 41만 명→ 9월 40만 명→ 12월 39만 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필요 * 단속인원 1인당 약 1,019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담당('24. 12월말 기준)

향후추진계획

○ 단속 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상시 교육 실시
- 외국인 등 방문 조사 시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 개시

○ 악성 불법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적극 유도
-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 외국공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외국인 고용업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홍보 강화

15	Ⅰ-2-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조사과
과제목표	○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청주외국인보호소('2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24.) 추진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등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1,763	652	△1,111	△6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시설 공사('24. 7. 1. ~ '24. 10. 15.) 정상 추진 완료
- 개방형 시설로 정식 운영 ('24. 11. 1. ~)

○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5.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 이의신청 등 심의하도록 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보호외국인 보호 생활 만족도 증가
- 기존 쇠창살 제거 및 운동장 상시 개방 등으로 자유로운 이동 가능
- 휴대전화 전용 공간에서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 가능

○ 보호 업무 담당 직원의 만족도 증가
- 보호외국인의 자유로운 이동, 쾌적한 실내 환경, 외부와의 소통 기회 증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로 보호실 내 문제 발생 빈도가 감소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상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수사무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으로 보호외국인 적정 수용인원이 일반형 보호실 대비 최대 18명 상당 자연 감소 발생

구분	보호 인원
일반형 보호실	224명(남 152명, 여 72명)
개방형 보호실	206명(남 146명, 여 60명)

향후추진계획

○ 화성보호소 남자보호동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
- 공사기간 조리실 바닥공사 및 전기실 변압기 교체 공사 실시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에 따른 '25. 5월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16	Ⅰ-2-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주요내용	○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인신보호법」개정 추진 - 법 개정후,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등을 지원하는 인신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신보호법 개정안 검토(계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개정 방향 모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의견 ○ 인신보호관 인력 대비 과다한 전국 수용시설과 수용인원

향후추진계획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신보호법」개정 방향 재검토 ○ 법률 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17	Ⅰ-3-①-㉮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 · 팀명	사회재난대응총괄과
	과제목표	○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 -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현장 컨설팅 추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주요내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많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현장 관계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은 관련 예산 삭감('24년~)으로 추진이 어려워 위기상황 매뉴얼 제작·배포 및 훈련실태 점검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역량 강화 유도			

'24년 이행실적	○ 신종 위험유형 추가 등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개정·배포(2월) ○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요청(6월, 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배포 및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훈련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관계인의 위기상황 대응역량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요청, 현황 관리(6월, 12월) ○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실적 평가(재난관리평가) 실시(12월) ○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관계인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 표창 추진(12월)

17	Ⅰ-3-①-㉮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 · 팀명	관광산업정책과 스포츠산업과
과제목표	○ 문화·체육 분야 시설, 서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주요내용	○ 하절기·동절기 안전관리실태 점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과 등록야영장 정보망에서의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스포츠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경영 문화 확산 -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및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4,117	4,261	144	3.5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안전민박 활성화)	877	748	△129	△14.7
(안전캠핑 기반조성)	700	665	△35	△5.0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1,258	1,258	-	-

(체육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4,403	4,263	△140	△3.1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1,850	1,665	△185	△10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2,553	2,598	45	1.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1) **(유원시설)** 상·하반기·동절기 안전관리 실태점검(1,141개소),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안전교육 시행*, 중소유원시설업체 기술지원(200개소), 유원시설 안전정보망을 통한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 안전관리자 안전교육(6회, 336명), 종합·일반유원시설 사업주 교육(4회, 149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1회, 14명),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연중 상시)

2) **(야영장)**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사업주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3,214명 수료), 지자체 야영장 담당 공무원 교육 진행(65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차박 관리·감독 지속

3) **(관광숙박시설)** 주기적인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설 연휴 계기 1월 350개소, 집중안전점검 4~6월 553개소 등) 및 종사자 대상 위생·안전교육 실시(연중) 등을 통한 숙박시설 위생 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시스템 운용

- (안전관리 취약체육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고시」에 따른 200개 시설 상·하반기 점검
-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 103개 국가체육시설 상 · 하반기 점검
-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886개소 안전점검 실시

	2)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 (스포츠안전 교육운영)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직무역량교육 운영(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관계자, 심판, 선수), 생활체육인 스포츠안전 소양교실 운영,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운영지원 등 69,125명 교육 수료 -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안전점검/안전요원 매칭), 스포츠행사 안전 관련 매뉴얼 제작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유원시설·숙박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및 미등록야영장 현장점검 등을 통한 안전한 캠핑산업 활성화 도모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 안전관리 취약체육시설 상·하반기 200회 점검, 민관합동 체육시설 886개소 점검 등 - 스포츠 안전 교육 수료 69,125명 / 스포츠행사 안전 관련 매뉴얼 제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1) **(유원시설)** 지속적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상·하반기·동절기 등),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유원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에 취약한 중소규모 유원시설 대상 안전관리 기술지원('25.3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개선(계속)

* '22년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반영하여 전기장치 분야 검사기준 현행화

2) **(야영장업)**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실시(연 3회), 미등록야영장 현장점검 실시, 사업주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25.8월~), 지자체 야영장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3) **(관광숙박시설)** 주기적인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및 호텔업 종사자 대상 위생·안전교육 추진,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한 위생·안전 평가항목 추가 등 관리 강화, 불법숙박 근절 홍보 강화, 민박업 합법운영 점검 및 사업자 대상 안전·위생 교육 실시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시스템 운용**

- (안전관리 취약체육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지정 고시」에 따른 350개 시설 상·하반기 점검
-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 107개 국가체육시설 상 · 하반기 점검
- (민관합동 체육시설 안전점검) 550개소 안전점검 실시

2)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 (스포츠안전 교육운영) 체육행사 안전관리 안전교육, 직무역량교육 운영(행사운영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관계자, 심판, 선수),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운영지원 등 83,435명 교육 실시 예정

18	Ⅰ-3-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시설안전과 교통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국토교통 분야 SOC(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21.~'25.) 및 연도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실시

* 도로, 철도, 항공 등 사회기반 시설

○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강화

- 졸음운전 예방, 차량 안전성 강화 및 운수업체 점검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주요내용

○ 내진설계대상 총 28,212개소 중 27,978개소 내진성능 확보(99.1%)

- 도로, 철도, 항공 등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추진 中

○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강화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차량단속 상시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업체(50대 이상) 전수·불시점검

- 3.5톤 이하 화물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24.~'27.)하고, 비상자동제어장치(AEBS)장착 의무화('23.)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48,170	48,347	177	0.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12월말 기준) 기존 공공시설물(도로, 철도, 항공) 14개소 내진성능* 확보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SOC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추진

* 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② 내진성능평가결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진한 내진보강공사가 준공된 경우
③ 내진성능 확보 실적 기준 변경(행안부)에 따라, 최신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공사는 제외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24년 휴게시설 추가 설치(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3개소 등)

○ 차량 중심 상시 현장 단속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업체 전수·불시점검

- 관계기관 합동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총 10회, 189대 단속, 181건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 '24년 1,303개 운수업체 점검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토록 정상 추진 중

-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99.0%로 정상 추진 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내진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에 지속 예산, 시간 소요 中

○ '24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96명으로 전년 대비 0.2%('23년 595명) 증가

향후추진계획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SOC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 관리 -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지속 추진, 내진성능 확보율 100%로 목표로 지속 관리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확충('25년 졸음쉼터 8개소, 화물차 라운지 5개소 신설 예정) ○ 운수회사 교통수단안전점검 추진(지속) ○ 3.5톤 이하 화물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맞춰 기존 양산차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 AEBS 의무장착 순차 확대 적용

19	Ⅰ-3-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공공융합기술정책과
과제목표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 문제(치안, 안전) 해결			
주요내용	○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생태계 확대 -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시스템, 아동 학대 영상분석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플랫폼, AI기반 위·변조 영상판독시스템 등 19개 기존 선정과제 관리·지원('24) - 계속 과제 현장 적용 지원('24 ~ '25) - 폴리스랩3.0 기획 및 신규과제 발굴('24) 및 추진('25) ○ 부처·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까지 수요 발굴 대상을 확대·강화하여 다양한 현안에 긴급대응 연구 착수, 연구개발 성과 활용도 제고 - 기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실증·확산 지원(~'24), 후속 신규 사업(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2단계)) 추진('25~)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4,353	3,100	△1,253	△28.8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	936	936	순증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461	-	△461	순감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2,225	2,225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폴리스랩2.0) 계속과제 19개 대상 진도 점검 등 실증 중심의 과제 관리 및 신규사업 기획 추진
- (계속과제 진도관리) 실증을 위해 연구진-실증관서(또는 경찰청 협력국·관) 간 연계를 추진하고, 추진 실적 점검 및 기술적 보완·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상시회의 및 연차컨설팅 운영
- (폴리스랩3.0) 지속적인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및 신규 후보과제 발굴

○ (긴급대응연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형 긴급대응연구 지속 추진
- 기 선정과제 계속지원 및 최종평가를 통한 우수성과 발굴* · 확산** 추진

* 최종평가 결과 8과제(매우우수, 우수)등급 획득(식중독균 신속검출, 산불 진화차량, 대심도 무선백홀 등)

** 「'24년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및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동시 선정(전기차 화재 진압)
- 기존 사업 일몰('24년)에 따른 후속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2,225백만원('25년~'29년)

결과분석

추진성과	○ (폴리스랩2.0) 19개 실증관서 운영(과제별 1개 경찰관서 이상, 중복 가능)을 통해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치안 현장 의견 수렴 및 과제 종료 후 도입 방안 논의 - 과제별 개발 솔루션의 평균 국민 만족도 74.0, 평균 경찰 만족도 73.3 확인 - ('23년 종료과제) 3개 시제품(겹친지문 분리 시스템, 중형방패, 대형방패)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 및 치안 현장 보급 추진*

		* 지문 추출 소프트웨어(4개, '24.11.), 대형방패(2,300대, '24.10.) 및 중형방패(4,682대, '24.6.) 치안현장 보급 ○ (긴급대응연구) 국민생활안전·재난 이슈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이슈별 대국민 소통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 도모 - (연구개발성과 관련)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추진*으로 관련 문제 해결, 재발 방지 추진 * 24년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이슈 관련 17개 과제(계속 17) 지원 - (대국민 소통 관련)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국민생활과학 토크라운지 및 포럼개최를 통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으로 국민생활안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과학적 팩트 전달 ※ 24년 국민생활과학자문단 Youtube 채널 구독자 수 약 7천명 보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폴리스랩2.0) 수요처 실증(과제별 1개 경찰관서 이상)과 의견 수렴을 통한 고도화를 거쳐 최종 시제품을 창출하고, 혁신제품 지정 등 종료 과제*의 현장 도입 적극 추진 및 신규 폴리스랩3.0 운영 * 총 19개 과제 중 '24년 10개, '25년 9개 순차 종료 - 치안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선정 추진('25.7) ○ (긴급대응연구) 1단계 사업일몰(~'24년)에 따른 성과 확산 도모 및 2단계 후속사업('25년~'29년) 안정적 추진 - (성과확산 관련) 수요기관의 예산을 활용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기술공유를 통한 보급·확산, 제도개선 통한 지속 가능 활용방안 마련 - (후속사업 추진) 정기/수시 수요조사를 통한 매년 10과제 내외의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문제 대응 관련 현안 발굴 및 연구개발과제 지속 선정·지원 예정

20	Ⅰ-3-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지진방재관리과
과제목표	○ 지진·지진해일 대응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및 국민들이 일상에서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주요내용	○ 지진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유지 ○ 행안부 상황실·지진부서·협업부서, 관계부처의 합동훈련을 통한 유기적 대응체계 역량 제고 ○ 국민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형 홍보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1,050	1,050	-	-
(지진방재 광고 및 홍보물 제작)	550	550	-	-
(지진 안전 캠페인)	250	250	-	-
(지진교재 제작 및 맞춤형 교육)	250	2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중대본 1회 가동 등 규모 2.0 이상 국내지진 총 87회 대응(상황관리, 보고서 작성 등)
- 전북 부안 지진(6.12. 규모4.8, 최대진도Ⅴ), 지진계기 위기 경보 발령 및 상황판단회의 또는 중대본 1차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 등 성공적 대응
- 국내 지진 발생 위기징후 감시·분석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10회)

○ 지진 대응부서·기관별 임무·역할 숙달 훈련 추진(10회)

○ 지진안전 숏폼 영상 공모전 실시(281건 접수), 수상작 18점 선정 및 시상식 개최

○ 국민참여형 지진안전주간(10. 14.~10. 20.) 운영, 어린이 안전체험관 홍보부스 운영(서울, 대구, 전북), 공공기관 지진 대피 훈련 오피스어택 4회, TV·라디오·SNS 등 국민행동요령 매체송출 등 실시

○ 특수학교·농산어촌지역충북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지진교육 실시(4~10월, 85개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북 부안 지진(6.12. 규모4.8, 최대진도Ⅴ), 지진계기 위기 경보 발령 및 상황판단회의 또는 중대본 1차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처상황 점검 등 성공적 대응 ○ 일본 이시카와현(1.1 규모7.6), 자체비상대응반 운영, 동해안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상황 점검(2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진·지진해일 발생 등 복합재난에 대한 전파·대피·주민보호 등 역량 검증을 통한 지진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국민 참여를 통한 지진안전 체감도 및 행동요령 인지도 향상

○ 안전취약계층 및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대상 맞춤형 지진교육에 따른 지진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Ⅰ-3-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수습지원과
	과제목표	○ 재난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원스톱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 기관·분야별 분산된 피해자 지원내용 통합안내 등 맞춤 지원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정례적 소통 협력 추진 등			
	관련예산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안내를 위해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피해지원 기관* 직원을 지역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확대(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 법률, 금융, 통신 등 피해지원 업무 실시기관

※ (추진경과) 개정안 마련('24.7월) → 입법예고('24.8.5.~9.19.) → 국회제출('24.11.22.)

○ 재난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 피해자 요구사항 종합관리 및 민원, 치료, 장례, 심리, 법률, 구호, 협업지원 등

※ (추진경과)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24.4월) → 지자체 의견조회('24.5월) → 법제처 검토·협의('24.6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시범운영 ※ (5회) 충남 서천 시장 화재(1.24.~3.20.), 경기 화성 공장 화재(6.24.~11.5.), 인천 서구 공장 화재(10.23.~11.8.), 경기 안성·용인·이천 대설 피해(12.3.~12.31.), 전남 무안 여객기 사고(12.29.~'25.1.19.) ○ 외국인 재난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수습지원 가이드(통·번역 지원, 재산조회 절차) 마련 ○ 재난피해자 가족(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편의 지원방안(출결 인정요건 확대) 마련 ○ 재난 피해 근로자 및 사업장 일상 회복 지원 확대* * 6종(실업급여, 자금융자, 병·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고용·산재보험, 현장안내) ○ 재난피해자 유가족 전용 통지서 양식(경찰청) 신설 ※ 재난피해자 유가족을 포함한 변사사건 유족 전용 '불입건 결정 통지서' 양식 별도 신설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참고 자치법규(안) 배포 및 지자체 조례 개정 관리

※ 법제처 사전검토 완료 이후 참고 조례(안) 배포 예정('25. 상반기)

21	Ⅰ-3-⑤-㉮	재난 · 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위기 임신·출산 등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주요내용

○ 위기·취약가족 지원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전국적 확대 추진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5,197	△934	△0.6
(가족센터 운영-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22,466	23,203	737	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확대 운영하여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취약·위기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온가족보듬 사업: 가족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확대 ('23년 98개소 → '24년 온가족보듬 수행센터 220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기·취약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취약·위기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원하는 온가족보듬사업 수행 센터 확대

22	Ⅰ-4-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주요내용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 「국가보안법」 위반 신중 의율 교육 지속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최근 5년 간 입건 및 기소 건수 * 2020년 32명 입건, 5명 기소 → 2021년 35명 입건, 20명 기소 → 2022년 24명 입건, 2명 기소 → 2023년 50명 입건, 12명 기소 → 2024년 38명 입건, 6명 기소(신수 기준) ○ 국가보안법위반 총 81명(신수 38명, 구수 43명) 중 3명 기소유예 처분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 실시(상반기 검사 63명, 하반기 검사 20명) * 공안분야 검사 타켓 교육 등을 통한 국가보안법위반 의율 신중 교육 지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법적용 지속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 적용되고 있음을 인정(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해당 부분 : 이러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은 법적용 및 집행의 과정에서 이미 정착되어, 2022. 12. 15.자 법무부 의견서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는 2015년 29건, 2016년 26건, 2017년 25건이었으나, 2018년 5건(전부무죄 11건), 2019년 13건(전부무죄 6건), 2020년 7건(전부무죄 12건), 2021년 5건(전부무죄 1건)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단 1건의 유죄판결만이 선고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무죄로 선고된 사건의 수도 적지 않다.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인 국가보안법의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으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23	Ⅰ-5-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과제목표	○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및 전용 콘텐츠의 제작 보급과 자막·수어 변환 기술개발 및 고도화 등을 통한 미디어 접근권 향상			
주요내용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교육 콘텐츠(초·중·고교)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영유아·학령기·성인기)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수어로 변환하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인터넷 등 신규 미디어접근권 향상 ○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 홍보 영상 제작·송출, 베리어프리* 공모전 개최 및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20,176	21,870	1,694	8.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필수지정·고시의무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 지원(59개사)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운영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4,000여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58편)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플랫폼(다모아, damoa.or.kr), 전국 특수학교, 육아방송 송출 등을 통해 제공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폐쇄자막 조정 등 특화기능이 답재된 맞춤형 TV 보급('23년 2만대 → '24년 3.2만대)
- 맞춤형 TV 사용자 이용 실태 좌담회 및 장애인단체·전문가 대상 성능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기능* 탑재 *(24년 신규 기능) 색각이상자를 위한 적·녹·청색, 흑백 필터 설정

○ (청각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향상)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을 개발·고도화(시범서비스 운영)
- 청각장애인 대상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지상파·종편 등 채널 6개사, SKB 등 플랫폼 3개사)

○ (장애인방송 인식개선 홍보 강화)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관련 홍보영상 제작·보급,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舊 베리어프리 공모전)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장애인방송에 대한 기술 개발,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별도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까지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TV 보급률 50% 달성 목표
○ 지역 장애인방송 활성화 사업을 통한 장애인방송 제작인력 양성 추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등

24	Ⅰ-5-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제목표	○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 온라인상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삭제·임시조치될 경우 정보게재자에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등 삭제·임시조치 후속절차 마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삭제·임시조치의 적절성 여부 검토, 당사자·이용자·사업자 간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담당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온라인상 악성댓글, 명예훼손 등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해 현행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상휘의원 대표발의, '24.9.24.) - (임시조치 제도개선)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이의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이관 및 직권조정절차 개시, 임시조치 기간 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삭제 조치 등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분쟁조정 외 삭제·임시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도 담당 -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담 등을 하는 상담센터가 디지털폭력까지 원스톱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연령별·계층별 체계적인 디지털 윤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 전국 초·중·고교 교육 강화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교육 의무화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임시조치 제도개선 등 디지털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계속)

25	Ⅰ-6-①	아동 ·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청소년정책과
과제목표	○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기반 강화			
주요내용	○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참여 보장 ○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멘토링 등 지원 ○ 공모전, 온라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을 통한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일반회계) (청소년특별회의)	321	32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
-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
  * 지속가능 역량·리더십 역량 및 디지털 역량을 주제로 총 24개 정책과제 발굴·제안 22개 과제 수용

○ 다양한 참여창구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의사반영 확대
-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24.6월~'24.7월) 및 대한민국청소년 대토론회('24.5월) 개최
-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포탈' 정책제안 게시판 상시 운영('2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의 부처 최종 수용률 91.7% 달성(총 24개 정책과제 중 22개 수용) ○ 지역사회 특화 참여 활동사례 확산 및 온라인 참여포탈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ywith) 페이지뷰: ('23년) 347,598건 → ('24년) 511,986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청소년참여 활동 격차 발생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및 참여위원회 연합회의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중앙단위 청소년정책과정 참여 연계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활동 우수사례 선정·배포
-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파악

○ 청소년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퍼실리테이터 배치 등 참여 활동 지원

26	Ⅰ-6-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질병관리청	과·팀명	감염병정책과 위기관리총괄과
	과제목표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감염병예방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내 '사회대응 체계 정비' 과제 이행('24.11.)

-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개발('24.3.)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분석('24.11.) 연구 수행하여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기반 마련

○ 감염병예방법 정부안 마련 및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24.11.)

- 감염병환자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인권 보호와 양립가능한 방역 근거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 방향 마련 ○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의원발의('25.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집회·시위 제한 조치는 여러 사람 간의 물리적·공간적 거리 확보를 통한 감염병 전파 차단 목적이므로 타 집합의 종류와 구분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 - 이에 따라, 기본권 보장 취지가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기본원칙 개정안을 마련 중

향후추진계획

○ 기본권 보장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27년)

- 쟁점 논의 상황에 따른 개정안 분리발의 검토

27	Ⅰ-6-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치안정보국, 경비국)	과・팀명	치안정보상황과, 경비과
	과제목표	○ 시간 또는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을 경우 집회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어 각각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			
	주요내용	○ (대화경찰 운용) 집회신고 단계부터 중복집회에 대해서는 시간,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되도록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의 집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화경찰관을 지정·배치 ○ (법률 개정) 중복집회와 관련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시 의견 개진 등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대부분의 집회·시위(배치율 94.1%)에 대화경찰을 배치하여, 집회 장소 또는 시간이 겹치는 단체 간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 활동 ○ 중복집회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논의 지원활동(단, 임기종료로 인하여 해당 개정안은 폐기 되었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화경찰을 현장에 적극 배치·활동한 결과, ▵집회·시위의 자유 ▵인권·안전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등에 도움이 되며(86.2%), 집회·시위 현장에서 단체간 갈등이나 마찰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는 데 효과(87.7%)가 있다고 평가('24. 12月 여론조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집회신고 단계부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첨예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화경찰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고도화 추진 ○ 22대 국회에서 중복집회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 時,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지원

28	Ⅰ-7-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보안관찰제도 운영 합리화			
	주요내용	○ 안보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 - 보안관찰제도 운용 시 필요한 유의사항 전파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충실한 사안 조사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적극적 지도 및 보호조치 실시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를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취지에 따라 법령 개정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충실한 사안 조사 후 적극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11건, 처분 3건, 면제신청 기각 2건 의결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하여 실질적 심의를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 외부위원 구성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인, 서울고법 부장판사 1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 ○ 「보안관찰법」 개정 추진 경과 - '23. 3. 2. 정부안 국회 제출 → '23. 6. 19. 법사위 1소위 상정,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협의 이견이 상당하여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정 시한('23. 6. 30.) 도과 - 제22대 국회에서 개정하기 위해 대검, 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 및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 준비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한 적극적 사안조사 통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도모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안조사시 대상자들이 보안관찰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안 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보안관찰법」 개정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정부안 수정을 검토한 후 지속 추진할 예정 - 법원행정처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입법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향후추진계획	○ 안보 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시비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 ○ 양심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29	Ⅰ-7-②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공공형사과
	과제목표	○ 수사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주요내용	○ 전국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법정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 철저히 준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23.)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법정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 철저히 준수 - '24. 사경신청 통신영장 검사 기각률 19.4%, 검사 청구(직청구, 사경신청) 통신영장 판사 기각률 2.2% * 사경신청 통신영장 56,258명 중 검사 기각 10,795명 / 검사 청구 통신 영장 55,279명(직청구 9,915명, 사경신청 45,364명) 중 판사 기각 1,190명(직청구 144명, 사경 신청 1,046명)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여 사후 통지 절차 철저 시행 중 - '23. 3. 정부안 국회 제출 → '23. 12. 19. 위원회 대안 상정 → '23. 12. 20. 국회 본회의 의결 → '24. 1. 1. 개정법 시행 - 개정 주요 내용 :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를 변경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사후 통지 규정' 신설 * 통신이용자정보 : ①이용자의 성명, ②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③ 이용자의 주소, ④ 이용자의 전화번호, ⑤ 이용자의 아이디, ⑥ 이용자의 가입일/해지일 * 사후 통지 규정 신설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정보조회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준수를 통한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호 철저 노력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장과 범죄대응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통신비밀보호법제 정비하고 이에 따라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준수를 통한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호 철저 노력 지속

30	Ⅰ-7-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과제목표	○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관리 강화 및 정확성 제고로 오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 신상등록정보 관련 비전자기록물 이미화를 통해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 유관기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			
	주요내용	○ 고위험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점검 및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전자문서 사용환경을 위한 신상등록정보 관련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업 강화 - 법무부(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 '24년 12회 실시(19,099건 점검, 583건 정보 현행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점검 및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강화 - '24년 112회 실시(320건 직권정정) ○ 판결문 등 신상등록정보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 '24년 20,212건 이미지화(스캐닝) 작업 실시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정기 3회) - 신상정보의 신속·정확성 제고 및 등록정보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및 정책 반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일제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등 등록대상자 인권침해 최소화 기여 ○ 전자문서 사용환경을 위한 신상등록정보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등으로 신상정보 오등록 전무(全無)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위험자(공개·고지)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일제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등 등록대상자 인권침해 최소화 기여 ○ 전자문서 사용환경을 위한 비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화 지속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신상등록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정확성 제고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주요내용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또는 하위 법령 개정 검토 * 최근 대법원은 임의제출물인 전자정보의 적법한 압수 범위에 관하여,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한적 해석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회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박주민, 1336, 김승원, 2657, 김동아, 701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 1098) 입법 논의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 합리적 재정비 방안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관련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계속

31	Ⅰ-7-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디지털포렌식센터
	과제목표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통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 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 수시 보완 노력 지속 ○ 현장수사관 대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교육 지속 확대			
	주요내용	○ 현장질의 대응 확대 및 현장지원 장비 보급 확대를 통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 지원 활성화 ○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현장용 모바일분석 프로그램 보급 ▵라이브포렌식* 등 고난도 압수현장에 분석관이 직접 임장·지원 등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 전원이 켜져있거나 네트워크와 연결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는 분석 ○ 임의제출을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 분석관의 현장지원 확대 ○ 교육과정 체계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성 제고 – ▵기초▸필수▸전문▸국외 교육▸자격취득으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교육과정 설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특별 교육과정 신설 ▵디지털포렌식연구회 및 분석기법 공유시스템 활성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현장지원 및 수사관의 적법절차 준수 의식 제고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수사·재판에서 디지털포렌식의 객관성·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수사관·분석관이 적법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숙지할 필요성 증대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최신판례 해설자료 등 제작·배포 ○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전담인력 확보 추진 ○ ▵현장용 분석 프로그램 라이센스 ▵교차분석 프로그램 ▵현장분석 장비키트 등 현장 분석용 장비 확대 보급

32	Ⅰ-7-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팀명	침해평가과
	과제목표	○ 형사사법 절차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안 제시 등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 형사사법 절차 관련 제·개정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 입법 지원			
	주요내용	○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근거하여, 법무부 소관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후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 통보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법무부 소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통보 - 총 38건의 제·개정안 중 개인정보 제외 법령 21건, 원안 동의 16건, 개선 권고 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개선권고를 통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선 권고 ※ 안전조치의 주체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 등 ○ 법무부는 입법단계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제·개정안 마련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개선 권고 이행 사항 관리 및 침해요인 평가 계속

33	Ⅰ-8-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생활교통복지과 교통서비스정책과
과제목표	○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주요내용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 1.)을 통해 보급률 제고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1.)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 확대 * 저상버스 도입률(%) ('22.) 34 → ('26.) 62 - 국가연구개발 R&D('23.~'26., 국비 250억원)를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 및 도입 의무화('27.1.)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7.)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24시간 운영, 광역권 이동) 및 환승·연계 체계 구축 추진 ○ 대부분 대중교통 취약지역(버스정류장 400m 또는 배차시간 3시간 이상) 대상으로 추진하되, 교통 취약계층 대상으로도 확대(예: 벽오지 학생 등·하교 등)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32,427	226,412	△6,015	△2.6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 공공형택시	6,933	8,480	1,547	2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류장 표준모델 개발('24.12.), 정류장 연석높이 개선, 역사 내 점자안내판 보완 규정 개정('24.1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1.)을 통한 보급률 제고

- '24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예산(148,085백만원) 확대를 통한 저상버스 3,339입 지원

* 저상버스 도입률 : ('22.) 34% → ('23.) 약 38.9% → ('26.) 62%(목표)

○ 총 63개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도입, 목표(61개市 도입) 대비 초과 달성

* '24년 공공형 택시 이용자 현황 : 4,180,071명(추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고 ○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수혜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저상버스 보급률 제고

- '25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160,290백만원) 지원을 통한 저상버스 3,700대 도입 예정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R&D)

-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광역노선에 대한 저상버스 의무화 예정('27.1월)에 따라 표준모델에 대한 시제품 차량 제작, 안정성 인증 및 성능평가 예정

* ('23.~'24.) 차량 기본 설계 → ('25.) 차량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 → ('26.) 시제품 개선 및 표준모델 제작

○ '25년 공공형 택시 운영실태 점검 및 분기별 국비 집행액 및 이용자현황 조사

34	Ⅰ-8-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연안해운과

과제목표

○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확대를 통한 이동권 증진

주요내용

○ 도서주민 차량 생산지, 연료 종류, 크기 등에 따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운임지원 확대('23.~)
○ 도서주민의 부담액이 육지대중교통 수준(≤3,500원)으로 낮춰지도록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추진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9,676	16,001	△3,675	△18.7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3,176	13,17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섬 주민 차량의 여객선 운임지원 시 국산·외산 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운임지원 제도 확대('23년) 후 현재까지 지속 시행

○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부담액이 육지대중교통 수준(3,500원 이하)로 낮춰지도록 '25년 예산안 심의 시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여객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난항

향후추진계획

○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지원을 지속하고, 운임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인 협의 추진

35	Ⅰ-9-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전자감독과

과제목표

○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장치 성능개선을 통한 대상자의 생활편의성 증진 등 인권침해적 요소 최소화 필요

주요내용

○ 휴대용 추적장치의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필요성이 없도록 편의성이 향상된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및 소형·경량화

○ 전자식 탈부착방식을 적용해 탈부착 시간이 단축된 개량형 전자장치 보급

○ 전자감독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치료 확대실시

○ 재범위험성 분석을 통한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법령에 근거한 수신자료 제공 및 '수신자료 폐기 대상 확인의 날'(월 1회) 운영 등 체계적 관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전자감독	32,427	36,847	4,420	13.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및 소형·경량화
* ('18.) 1,800세트 → ('19.) 1,420세트 → ('20.) 330세트

○ 개량형 전자장치 보급*
* ('20.) 1,293세트 → ('21.) 2,229세트 → ('22.) 2,300세트 → ('23.) 2,150세트 → ('24.) 2,000세트

○ 심리치료* 확대 실시
* 집행 횟수(회) : ('20.) 9,740 → ('21.) 14,381 → ('22.) 14,902 → ('23.) 17,977 → ('24.) 19,073

○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실시 인원(명) : ('20.) 123 → ('21.) 530 → ('22.) 407 → ('23.) 289 → ('24.) 184

○ 수신자료 제공*
* 실시 인원(명) : ('20.) 22 → ('21.) 140 → ('22.) 374 → ('23.) 494 → ('24.) 464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적인 전자장치 성능개선 추진으로 생활 편의성 증진 ○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자감독 심리치료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 추진

36	Ⅰ-10-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강화 추진			
	주요내용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 * 통영구치소 등 35개소 실태조사 실시, 개선요구 103건, 설문조사 2,681명, 면담 671명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88회 3,056명) ○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강화* * 접수 4,520건, 직접조사 2,984건(직접조사율 66.02%)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설치* * '21. 57개소 → '22. 63개소 → '23. 69개소 → '24. 71개소 구축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실태점검 실시로 인권침해적 요소 사전 제거, 대상기관 인권지수 향상 ○ 다양한 인권교육으로 인권의식 향상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강화, 화상조사시스템 지속적 확대 구축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 발굴·해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이슈, 사건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추진 ○ 진정사건 조사 및 주제별·집중 실태점검 강화* * 검찰수사관 1명을 조사·실태점검 업무에 추가 배치해 진정사건을 내실있게 조사토록 하고, 주제별 실태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진정사건 조사와 실태조사 연계를 통한 인권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146개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확대* * 정기 실태조사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출장소'를 대상기관에 포함 실시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군인권총괄담당관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과제목표

○ 장병의 고충 및 복무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적극적 관리 및 지휘 조언으로 복무 적응 여건 보장
○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장병 기본권 보장 추진

주요내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여건 개선 사항 훈령 반영 및 단체교섭 체결
- 국방부 타 직종 및 타 기관 유사직종 대비 과도한 근로조건 개선
  * 공무직 전환시기 단축, 직무평가 횟수 조정, 감정회복휴가 신설 등
- 3년 이상자부터 연차별 근속수당 조정(1만원 → 최대10만원)

○ 간부 및 군무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상담대상·예산 확대 및 홍보 강화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 당직직위 감축,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등 병영문화 개선 추진

○ 인권자문제도(군인권개선협의회)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 운영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34,753	36,328	938	4.5
▪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600	600	-	-
▪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232	232	-	-
▪ 인권상담관	234	230	△4	△1.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여건 및 근로조건 개선 사항 훈령 반영 및 단체교섭 체결
- (무기계약직 전환기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5년 → 2년
- (직무평가 횟수) 연 7회 → 연 2회
- (감정회복휴가) 자살장병 상담 시 심리안정휴가 4일 신설, 감정노동휴가 연 1일 → 연 2일
- (근속수당) 3년 이상자부터 연차별 근속수당 조정(1만원 → 최대10만원)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문성 강화 교육
- (직무보수교육) 상담 이해·해석기법, 트라우마 치료기법 등 체험 프로그램 구성, 2박3일
- (슈퍼비전) 상담사례 분석, 평가 및 감정소진 회복, 희망자 대상 연1회 지원

○ 군 간부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상담대상 확대)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간부 및 군무원으로 상담대상 확대
  * 검사결과 분류 : 위험군, 주의군, 양호군
- (예산 확대) '23년 3억원 (3,000회기) → '24년 6억원 (6,000회기)
- (홍보 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방일보 게재, 새이름 공모전,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
- '24년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교육 횟수 : 총 33회
- '24년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 인원 : 660명

	○ 병영문화 개선 추진 - '24년 당직근무비 예산 인상 지급 : ('23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당직직위 감축 추진 : ('23. 7월) 8,178개 직위 → ('24.12월) 6,912개 / △15.4% -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시행 * (군병원 입원환자) 08:30 ~ 21:00, (훈련병) 주말·공휴일 1시간 ○ 인권자문제도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 운영 등 - 군인권개선협의회를 통한 '24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관리 - 카카오톡 등 상담채널 다양화를 통한 인권 상담/진정제도 활성화 * (상담/진정 실적) 상담 7,821건, 진정 227건 처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병 고충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장병 복무 적응 지원을 강화 ○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 기본권 향상)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 당직직위 감축,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복무여건 개선 및 사회와 소통 기회 확대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원 확대 추진 * ('24.) 660명 → ('25.) 700명 → ('26.) 780명 → ('27.) 860명 → ('28.) 940명 → ('29.) 1,000명 ○ '25년 자살예방교육 법정의무화(반기 1회) 시행 ○ 당직근무비 인상 추진 : ('25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26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 ○ 당직직위 감축 지속 추진 : 목표 22% 감축 ○ 간부 근속휴가 신설*, 간부 외출 제도개선** 등 장병 휴식권 보장 * 20년 이상 7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이내 ** 하사 이상 군인의 외출을 '1시간 단위' → '1분 단위'로 개선 ○ 인권자문제도 및 장병 인권침해 상담/진정제도 등 지속 운영 및 내실화

37	Ⅰ-10-②-㉮	군 장병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폭력방지과
과제목표	○ 군 장병 인권보호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군외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을 활용하여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서비스 강화			

관련예산

(범피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9,413	2,059	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24년 이행실적

○ 군 성폭력 특화 상담소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운영지원을 통한 상담, 심리상담·치료, 수사·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군 성폭력 특화상담소 신규 국비지원('22년~)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접수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내실화 지원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24년 3개소) 및 조직문화 진단 지원(24년 5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군 성폭력 특화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서비스 제공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 제공

○ 군부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관리체계 지속 추진

38	Ⅰ-10-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민권익위원회	과·팀명	민원조사기획과

과제목표

○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고, 워크숍·교육 등을 통한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

주요내용

○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합의 등 해결
○ 각급 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1,324	1,600	276	20.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집단민원 적극 해결
- 다수기관 관련,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집단민원 318건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최근 5년간 집단민원 해결 건수 최대)
  * (주요사례) △안마도 유기 사슴 민원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중재하여 합동 대책 마련, △검단 택지개발지구 암반 제거 공법 절충안 제시로 주민 안전 확보 등

○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역량 강화 지원
- 분야별 전문조사 과정(총 6회, 200여명 수강), 시고위 및 악성민원 과정(총 5회, 1,200여명 수강) 등 각급 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자 대상 고충민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행정기관의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 유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다수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갈등 해소
○ 각급 기관의 고충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고충해결 체계 구축 및 국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집단민원 해결 추진(계속)
○ 각급 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 교육 실시(계속)
○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계속)

39	Ⅰ-10-④	회복적 경찰활동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피해 재발 방지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도모			
주요내용	○ △현장교육 △전문가 양성 △대내·외 홍보를 통한 제도운영 활성화			

관련예산

(피해자보호활동)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회복적 경찰활동	535	53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 가·피해자 간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운영 경찰서를 '22년 240개서에서 '24년 전 경찰서(259개서)로 확대 시행, 총 1,528건의 대화모임 접수

○ **회복적 경찰활동 관련 내부교육 강화**
- 기능 이관 이후 신규 담당자 대상 기본교육 운영, 총 108명 대상 교육 실시
- 현장경찰 대화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운영, 총 77명 대상 교육 실시(74명 수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를 통해 △층간소음 등 폭행·협박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총 1,528건 실시

향후추진계획

○ 운영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증액 추진

40	Ⅰ-10-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양성평등정책팀
과제목표	○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대응 정책 개선 및 법규·제도 발전 ○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군 성폭력 실태조사	174	-	△174	순감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8,135	8,373	238	2.9
▪ 사건처리관계관 대외위탁 직무향상 교육	45	45	-	-
▪ 성인지력 향상 교육	1,704	1,942	238	14.0

추진상황 :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 ('24. 12. 20.)
* △ 조사기한 명시, △ 조사관 지정조건 개선 등 사건처리절차 일부개정, 훈령 개정에 따라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매뉴얼' 개정 추진 중

○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 추진 ('25. 5월 개정 예정)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지휘조언 임무 역할 정착 시행 추진('24.11월~)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관 기관 협업을 통한 다각적 예방대응 활동 시행 ('24. 8. 29.~지속)
* 범정부TF 연계, 군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활동
* 국방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에서 식별· 확인한 피해자('25.1월까지 여군 40명) 대상 보호지원 중
*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강화(군 내부망 개인사진정보 비활성화) 및 민간전문가 자문 활성화
* 야전부대 대상 예방교육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간담회 실시

○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자료 시달/지휘관 주관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특별교육 추진('24. 9월)
* '25년 성인지교육 추진지침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추진 ('25. 1월 하달 완료)
* 국방부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및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 장병 접점이 높은 콘텐츠(카드뉴스 및 숏폼 등) 및 매체 활용,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 실시

○ '2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기간/설문방법/응답 : '24. 4월.~12월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 설문참여(7~8월) / 총 14.6만명
※ 군 성폭력 실태조사는 2년 단위로 조정 ⇒ '26년도 실태조사 예정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맞춤형 컨설팅」 추진
* 기간/방법 : '24. 4월~'25. 2월/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 1개 부대 대상 민간컨설팅 추진
* 내용 : 조직문화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체계 진단과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 ('24. 12.16.)
* 언제·어디서나 피해자가 24H 상담·신고할 수 있는 여건 보장 : 국방 1365 상담·신고앱 + 인터넷 홈페이지
* 상담·신고 사건DB 구축으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 사건관리시스템

	○ '24년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협업「성희롱·성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추진 * 해군 첫 여군 잠수함 보직, 조직문화 캠페인 연계(Open The HATCH) 등 2개 부대 대상 실시 ○ 취약시기 / 관심부대에 대한 성폭력 예방 현장 컨설팅 추진(총 53개 부대) * 연말연시(12월~1월), 하절기(7~8월)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및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추진 ○ 성고충전문상담관 정원 확대에 따른 연차별 채용/운영 * '24년 총 3회 총 23명 / 운영 143명, 연말 운영률 95.3% ○ 사건처리관계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24. 4월~11월) * 대외위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2회 526명 수료 - 사건조사 인력 대상 교육 확대(3→4회, 120명→180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 교육을 슈퍼비전 및 사례공유 중심으로 편성·대면 진행 ○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효성 제고 * 성인지교육(원격+강의/토의교육) 강조 : 전군 97.5% 이수 * 맞춤형 성인지교육체계 전환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교재 개발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① 간부 토의식 교육 확대 및 병사 교육을 군 전담교관 대면교육으로 변경 ② 군의 특성과 최신사건 경향 등을 반영한 국방부 맞춤형 표준교안 개정판, 원격교육 동영상 콘텐츠(총 10차시, 2시간) 등 개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적 이슈였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선제적 예방대응 활동 추진 - 국방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에서 추진한 예방활동 및 성인지교육 추진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경각심 고취 / 사건 발생 억제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속하게 피해자를 식별·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군내 성폭력 전담조직에 대한 신뢰도 상승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개선·보완사항 관련 야전부대 현장 및 관계부서/민간전문가 토의를 통해「부대관리훈령」개정 * 조사기한 명시 등 4개 부분 개정 ○ '2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 '2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23년 대비 간부·군무원 성희롱 피해 경험 감소, 관련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증가 - 병사는 성희롱 피해 경험 소폭 증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다소 감소 ○ 피해자 보호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 - 성고충전문상담관 신규채용 진행으로 운영률 향상 ('23년말 90% → '24년말 93.5%) - 사건처리관계관 대외 위탁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 신설 (평균 만족도 4.61 / 5점 만점) -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자의 상담·신고 및 피해자지원팀의 적시적 사건지원 및 사건관리 여건 보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 추진('25. 5월)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매뉴얼 개정 ('25. 5월 예정) ○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 (연 3회 예정, 100%보직 목표) ○ 사건처리관계관 대외위탁 직무향상 교육('25. 4월 ~ 11월) ○ 전군 성인지교육(원격+강의/토의교육) 이수 (연중) ○ 야전부대 대상 성폭력 예방 컨설팅(연중) * 연말연시(12월~1월), 하절기(7~8월), 관심부대 대상 수시 / 국가인권위원회 합동 예방 캠페인 병행

41	Ⅰ-10-⑥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사회통합지원과

과제목표

○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 (개요) 4·3사건법 개정('22.4.12.)에 따라, 4·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실시('22.6.~)
○ (대상)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 (기준) 희생자 1인당 9천만원 이하
※ (사망·행방불명) 9천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5천만~9천만원, (수형인) 유형별 3천만~9천만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제주4·3피해 보상(보상금 등) - 제주4·3피해 보상(보상금 등)	226,198	241,877	15,679	6.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14,935명 결정('24.12.말 기준)
-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심의·결정
※ 희생자 5,868명에 대해 5,220억원 지급 결정('24.12.말 기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충실 이행
※ '24년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 10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지속 추진
- 8차 추가 신고 접수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42	Ⅰ-10-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	과·팀명	소비자안전교육과

과제목표

○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23.)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까지 확대('26.)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24) 및 기능 개선('27.)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인증정보 등 기능개선)	337	219	△118	△3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소비자가 구매할 물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인허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정부포털사이트)'에서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 및 개선

- **(제공정보 확대)** 신규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2종의 인증정보 112,308건과, 식약처의 수입식품허가정보 등 3종의 인허가정보 3,302,991건 등 총 3,415,299건을 연계하여 제공함
- **(리콜정보 제공방법 개선)** 해외리콜 정보(환경부 어린이용품)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분석의 편리 도모
- **(데이터 분석·표준화)** '23년~'24년도 인증·인허가 관련 정보 3,881,947건에 대해 데이터의 형식·구조 통일, 중복 데이터 정리 등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제공 데이터의 품질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증·인허가 정보를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에 기여

- '24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3.3점이며, 인증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83.3점으로 높은 수준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 등까지 확대('26.)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기능 지속 개선('27.)

43	Ⅰ-11-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전체 여성공무원 대비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개선 등을 통해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주요내용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확대 추진			

《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1.5%	11.8%	12.4%	12.9%	13.5%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27.2%	27.8%	28.5%	29.3%	30.0%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년)」(여가부, '23.7월) 상의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을 통해 공직 입직 단계부터 성비 불균형 완화 추진

관련예산	○ 해당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목표치 초과 달성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분기별 점검·독려 등의 노력을 통해, '24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12.9%,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30.8%를 기록하여, 각 목표(11.8%, 28.5%) 대비 109.3%, 108.1% 달성

○ 인사혁신 수준진단을 통해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노력도 평가('24년 4월)

○ '24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발간('24년 9월)을 통해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현황 공개

○ 공직 입직 단계에서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방법 개선('24년 10월)

○ 「제2차 통합인사 기본계획('23~'27년)」에 따라, 부처별 2025년 통합인사 시행계획 수립·점검('24년 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통해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23년 11.7% → '24년 12.9%,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23년 28.4% → '24년 30.8% ○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3~'27년)」에 따른 부처별 통합인사 시행계획 추진 등을 통해 양성평등 근무여건 확립 등 공직사회 통합인사 지속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점검(매분기)

○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매년)

○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현황 공개(매년)

44	Ⅰ-11-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 지속 추진 - 장애인 공직임용 촉진을 위해 7·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 구분모집' 실시(법정 의무고용률 2배 이상 선발) -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적합직위 적극 발굴 * (자격) 경력·자격증·학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응시가능, (시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 ○ 장애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인사실무 시 활용 가능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 - 장애인공무원 의견 청취를 위한 '중증장애인 소통 간담회' 개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7·9급 국가직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지속 선발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 지속 적용 * '24년 법정의무고용률 3.8% → 7·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 중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비율 7.6% - '24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155명 선발 완료(7급 37명, 9급 118명) ○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 시험 확대 - 부처별 중증장애인 적합직위 적극 발굴, 제도 도입('08년) 이래 최대규모(65개) 직위 발굴 * 중증 경채 발굴직위 : ('08년) 25개→('19년) 31개→('20년) 50개→('21년) 46개→('22년) 61개→('23년) 64개→('24년) 65개 - '24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으로 38명 선발 완료 ○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 장애인공무원 공직적응 및 원활한 근무지원을 위한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 발간·배포('24. 4월) *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소개,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 안내 -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24. 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 ○ 장애인 공무원과의 소통 확대,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일하는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사혁신처 주관 7·9급 공채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의무고용률 2배(7.6%) 이상으로 지속 적용, 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적합직위 지속 발굴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부처별 조직진단·직위발굴·채용계획 수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속 추진

45	Ⅰ-11-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 보장을 통해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완화,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			
	주요내용	○ 저소득층 공직 채용 지속 추진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구분모집' 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內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공채 선발예정인원 대비 2.8%) 운영 - 선발예정인원 135명 공고, 최종 136명 선발 완료 ○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홍보 추진 - 제도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저소득층 접근도가 높은 복지로(사회복지서비스 정보 포털) 등에 게시 * 저소득층 구분모집 적용시험(국가직·지방직 9급 공채시험), 응시자격(기초생활수급자 등), 응시수수료 납부 면제 등 안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공직 채용 지속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공직사회 대표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內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시(매년)

46	Ⅰ-11-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공직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지방간 불균형 완화 및 지방학교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채용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속 추진 ○ 전국 지역인재 7·9급 추천채용제 선발 지속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추진으로 지방인재 추가 합격자 선발 -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 '24년 4명 - 7급 공채 : '24년 12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7급) 연장 완료 : 3차 '25~'29년 (1차 '15~'19년, 2차 '20~'24년) ○ 전국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추진으로 우수 인재 공직 등용 - 7급 전국 지역인재 선발 : '24년 175명 - 9급 전국 지역인재 선발 : '24년 250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및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노력 -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지방인재 합격자 13명 - (7급공채) 지방인재 합격자 180명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역인재 선발 지속 추진 및 지역별 균형 있는 공직 등용 노력 - 지역인재 선발 지속 추진 : 총 4,810명 - 특정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학교가 일정비율(7급 10%, 9급 20%)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방인재(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및 7급 공채) 채용목표제 지속 운영 ○ 전국 지역인재(7·9급) 선발 지속 운영 - '25년 7급 선발 인원 : 162명 - '25년 9급 선발 인원 : 260명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1. 노동권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84**	**5**	**79**	**0**	
1. 노동권	19	2	17	-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8	-	18	-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24	2	22	-	
4. 교육을 받을 권리	4	-	4	-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2	1	11	-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7	-	7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노동권】			
1	Ⅱ-1-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추진중
2	Ⅱ-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3	Ⅱ-1-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추진중
4	Ⅱ-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추진중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중
6	Ⅱ-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추진중
7	Ⅱ-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추진중
8	Ⅱ-1-⑧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추진중
9	Ⅱ-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추진중
10	Ⅱ-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추진중
11	Ⅱ-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12	Ⅱ-1-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추진중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일부완료**
14	Ⅱ-1-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추진중
15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완료('23.)**
16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과제완료('24.)**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추진중
18	Ⅱ-1-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추진중
19	Ⅱ-1-⑲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중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추진중
21	Ⅱ-2-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중
22	Ⅱ-2-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3	Ⅱ-2-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추진중
24	Ⅱ-2-⑤	물환경 위해관리 체계 강화	추진중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추진중
27	Ⅱ-2-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8	Ⅱ-2-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추진중
29	Ⅱ-2-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중
30	Ⅱ-2-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추진중
31	Ⅱ-2-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추진중
32	Ⅱ-2-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추진중
33	Ⅱ-2-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추진중
34	Ⅱ-2-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추진중
35	Ⅱ-2-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추진중
36	Ⅱ-2-⑰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추진중
37	Ⅱ-2-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추진중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38	Ⅱ-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추진중
39	Ⅱ-3-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추진중
40	Ⅱ-3-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추진중
41	Ⅱ-3-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추진중
42	Ⅱ-3-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추진중
43	Ⅱ-3-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추진중
44	Ⅱ-3-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45	Ⅱ-3-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추진중
46	Ⅱ-3-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추진중
47	Ⅱ-3-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추진중
48	Ⅱ-3-⑪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추진중
49	Ⅱ-3-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추진중
50	Ⅱ-3-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추진중
51	Ⅱ-3-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중
52	Ⅱ-3-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추진중
53	Ⅱ-3-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추진중
54	Ⅱ-3-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추진중
55	Ⅱ-3-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추진중
56	Ⅱ-3-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추진중
57	Ⅱ-3-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추진중
58	Ⅱ-3-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완료('23.)**
59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과제완료('24.)**
60	Ⅱ-3-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중
61	Ⅱ-3-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교육을 받을 권리】			
62	Ⅱ-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추진중
63	Ⅱ-4-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추진중
64	Ⅱ-4-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추진중
65	Ⅱ-4-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추진중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66	Ⅱ-5-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중
67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과제완료('23.)**
68	Ⅱ-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69	Ⅱ-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중
71	Ⅱ-5-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추진중
72	Ⅱ-5-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추진중
73	Ⅱ-5-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추진중
74	Ⅱ-5-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추진중
75	Ⅱ-5-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추진중
76	Ⅱ-5-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중
77	Ⅱ-5-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추진중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78	Ⅱ-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추진중
79	Ⅱ-6-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중
80	Ⅱ-6-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추진중
81	Ⅱ-6-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추진중
82	Ⅱ-6-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추진중
83	Ⅱ-6-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추진중
84	Ⅱ-6-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Ⅱ-1-①	청년 맞춤형 근로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공정채용기반과
과제목표	○ 청년 등 취업촉진			
주요내용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 1:1 상담을 바탕으로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등을 기반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고학년에는 취업역량 제고 지원 및 훈련·일 경험 연계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 - 민관협업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확대,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등 지원 -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채용절차법」을「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83,147	109,730	26,583	31.9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8,937	46,320	7,383	18.9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44,113	291,779	47,666	19.5
(청년일경험지원)	171,820	214,090	42,270	124.6
(청년도전지원사업)	45,833	52,753	6,920	15.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대학 53개교를 선정하여 재학생 16.2만명을 지원, 목표(15만명) 대비 초과 달성

  * ▲빌드업 프로젝트 102,034명 참여 → 82,701명에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점프업 프로젝트 60,384명 참여 → 41,165명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

- 청년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기회 제공 확대(4.9만명, '24.12월말 기준)
-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손쉽게 검색 및 신청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12월 시범오픈)
- 일경험 정책협의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일경험 제도 개선방향 논의(연 2~3회)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등 지원**

- (규모 확대) 지자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운영주체인 자치단체 참여 제고(72개) 및 청년 지원 확대(9,812명)
- (프로그램 다양화) 니트 청년별로 노동시장 참여 위한 준비 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다양화(단기, 장기→ 단기, 중기[신설], 장기)
- (지원 강화)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프로그램 이수율 개선을 위해 취업(성공)인센티브* 신설

  *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유지시 50만원

- (홍보 강화) 청년들의 사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GS편의점(삼각김밥), 우체국 택배 박스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 **공정채용법안 마련 및 입법을 위한 청년·기업·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홍보 지원**

* 2030 자문단 간담회, 공정채용 포럼, 청년·기업 및 전문가 회의 등 10여 회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학년에는 취업 역량 향상 지원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1:1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대학 및 참여 청년 모두 공감대 형성* * "취업정보가 많이 부족한 저학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맞는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참여학생)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 - 청년의 실무경험과 직무역량 향상 기회 제공('24.12월말 기준 4.9만명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등 지원** - 72개 지자체와 청년 9,811명 참여 ○ **공정채용법 입법 분위기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확대** -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사업확대·운영 * ('23.) 12개교 → ('24.) 53개교 → ('25.) 64개교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 - 청년 수요를 반영한 지원 규모 확대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전직무교육기관 신규 선정, 관계부처 협업 등 통한 참여 기업 발굴,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설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등 지원** - (지원 강화) 자치단체 참여(72→ 86개소) 및 청년 지원(목표 9,000→ 12,000명) 확대 - (홍보 강화) 동료 추천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 경로 확대, 청년친화·생활밀착형 홍보 지속 ○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발의·통과 지원**

2	Ⅱ-1-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공공·민간부문 고용의무 이행지원 강화 및 장애인 고용컨설팅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고용 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근로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고객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지속 추진
○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전문고충상담을 통해 노동문제 상담, 직업생활 유지 지원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정부·공공·3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컨설팅 제공 및 명단공표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한 고용의무 이행지원 강화
○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 구축으로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및 고용가이드 제공
○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운영
- 수도권 훈련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설립
- 양성훈련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초수행능력 향상을 통하여 양성훈련 진입 기회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개조·제작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관련 고충상담·노무교육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고용유지 지원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 취업지원	34,011	33,411	△600	△1.8
(고용의무이행지도)	2,353	1,553	△800	△34.0
▪ 장애인 고용장려금	353,371	377,377	24,006	6.8
(장애인고용장려금)	341,872	372,015	30,143	8.8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11,499	5,362	△6,137	△53.4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8,585	60,611	△28,992	△32.4
(경기남부직능원신축사업)	19,695	-	△19,695	순감
▪ 보조공학기기지원	19,603	19,793	190	1.65
(보조공학기기 지원)	19,603	19,793	190	1.65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48,006	252,114	4,108	1.66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1,673	1,67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3.8%로 상향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 유도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고용컨설팅 확대* 및 공공기관 동기부여를 위한 유관 부처와의 제도개선 노력** 추진

* ('23.) 5개소 → ('24.) 20개소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평가지표 상 '정규직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 추가('24.9.)

○ 민간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명단공표 운영규정 개정*

* 고용컨설팅 포털을 활용한 고용역량 진단 요건 신설

○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consulting.esingo.or.kr) 구축* 및 운영

* 기업이 스스로 장애인 고용역량을 진단하고 동종업계 고용사례 등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지원 사이트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23년) 및 예산확대* * ('23.) 2,977억 → ('24.) 3,234억 → ('25.) 3,774억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설립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완료('22.2.~'24.11.) 및 개원 예정('25.3. 예정) ※ 지하1층~지상4층, 실습관・협력관・생활관・다목적강당으로 구성, 연면적 22,386㎡(6,771평) -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운영을 위한 성과 목표 부여 및 목표 이행 ※ '24년 (목표) 615명/ (실적) 777명 ○ 개인별 특성과 직무, 작업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기 지원 및 개발을 위한 보조공학센터(1개소) 운영 - (맞춤기기 지원건수) 653건, (연구개발) 시각장애인용 웨어러블 AI 캠 등 8종 ○ 인권침해·노사분쟁·장애차별·부당해고 등 고충상담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6개소 운영 - (지역)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경기, (고충상담) 4,316건, (노동관계법 교육) 1,408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관·기업의 니즈와 여건에 맞는 이행지원으로 직무개발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적합직무 개발) DL E&C의 'CCTV 안전관제'와 같은 기업·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개발 - (일자리 창출) 정부·공공·대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20,232명(중증 2배수) 신규 채용 - (의무이행 노력도 제고) 고용의무 이행지원 강화로 명단공표 해소율 제고* * ('22.) 61.4% → ('23.) 69.4% → ('24.) 75.2% ○ 온·오프라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고용증가(지급연인원): '23년, 665,816명 → '24년, 709,945명 ○ 훈련인프라 확충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확대 - 수도권 훈련 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완료('24년 11월) ※ 취업훈련과정 665명 등 연간 1,000명 직업훈련 서비스 수혜 예정 - 직업훈련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준비과정*'을 통한 양성훈련 진입 기회 확대** * ('24.) 직업훈련준비과정 수료인원 777명 ** ('23.) 양성훈련 전이 503명 → ('24.) 양성훈련 전이 561명(11.5% 증가) ○ 보조공학센터 운영을 통해 '24년 신규개발 제품(8종) 중 4종의 특허출원,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2종 개발* 등 통해 보조공학기기 이용 편의성 및 안정성 제고 *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관련 기기 품질 및 사용성 평가, 차량용 기기 상담 ○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고충상담은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이용 만족도가 전년 대비 8.9%p 향상* *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23.) 74.7% → ('24.) 83.6%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 콘텐츠 보강·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및 상시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컨설팅 서비스의 전문성·대응성 제고 ○ 직업훈련 인프라 지속 확대를 통한 훈련수요 불균형 해소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운영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25년 3월~)을 통한 훈련서비스 확대, 역량을 갖춘 장애인력 양성 - 중증장애인 양성훈련 전이율 제고 및 취업 기회 확대 추진 ○ '24년 개발 기기의 시제품 및 상용화 지원, 첨단기술을 접목한 기기의 신규개발, 보조공학기기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속 ○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교육 지속

3	Ⅱ-1-③-㉮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안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보급 등 지원 강화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부모 대상으로 확대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790	1,876	86	4.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127	1,002	△125	△1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속 운영
-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개최('24.4월, 10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24.5월)

○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시정신청 사건 처리('24년 75건)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24년 2,229개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지원('24.2월, 교육영상, 강의시안, 리플릿 등 배포)

○ 모집·채용상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24년 20,000개)

○ 육아휴직 대상 확대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
*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4.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관리자)율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지속 상승
  * 여성고용률: ('21년) 37.78% → ('22년) 38.05% → ('23년) 38.28% → ('24년) 38.49%
  * 여성관리자율: ('21년) 21.30% → ('22년) 21.75% → ('23년) 22.11% → ('24년) 22.47%

○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성차별 시정신청 제도 안착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 시정신청 현황: ('23년) 52건 → ('24년) 75건

○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을 지속 및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문화 확산 지원
  * 사업장 감독: ('23년) 1,017개사 → ('24년) 2,229개사
  *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23년) 20,000건 → ('24년) 20,000건
  *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콘텐츠(영상교육, 자체 강의시안 등) 제작·배포('24.2월)

○ 모성보호 사각지대 관련 쟁점검토 등 대안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률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홍보 및 모집·채용상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등 지속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업장, 모성보호 제도 재위반 사업장 등을 대해 근로감독 강화로 남녀고용평등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

3	Ⅱ-1-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과제목표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주요내용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임신부터 직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직장문화 개선 등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73,468	85,292	11,824	1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AI, 디지털 등 신기술·미래유망 및 지역 산업·수요 기반 직업훈련 확대
* (고부가 직종 직업훈련 확대) ('23.) 74개 과정 → ('24.) 79개 과정
* (지역·산업 기반 훈련과정 개발) ('23.) 지역별 유망직종 발굴 연구 → ('24.) 10개 시·도 시범운영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 및 지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
*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기업 ('23.) 2,888개사 → ('24.) 4,352개사

○ (다부처협업 취업지원 확대)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성에게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지원
* ('23.) 8개 부처 11개 사업 → ('24.) 8개 부처 12개 사업

○ (일경험 제공)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지원, 사후관리 강화로 인턴십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 여성고용 촉진 및 정규직 장기고용 제고
* ('23.) 9,253명 연계 → ('24.) 9,825명 연계

○ (예비창업자 지원) 창업상담·훈련,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전담인력 40명 운용)
* ('23.) 1,865명 창업 성공 → ('24.) 1,982명 창업 성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 159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진로지도,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16.9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에 성공 ○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7.5만명)과 기업(4.4천개사)을 대상으로 노무·심리 고충·경력개발 상담·멘토링, 직장문화개선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새일센터('25년 159개소)를 통한 종합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직업교육훈련) 신기술 응용분야 및 지역 핵심산업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및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지원 * 디자인, 마케팅 등 디지털 분야, AI 활용 기술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기술, 반도체 설계 등 93개 과정 ** ('25. 신규) 월 10만원, 최대 4회 지급 - (다부처 협업) 부처 간 협업으로 (각부처)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여가부)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취업상담, 인턴 연계·취업 및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지원 * ('25.) 9개 부처, 13개 사업(농림부, 식품실무교육 추가)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 및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한 정규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7,777명 지원) * 1인당 지원금 : ('24.) 380만원 → ('25.) 460만원

4	Ⅱ-1-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유입·활용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경력복귀 지원 적극추진 및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주요내용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연구개발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향상 교육훈련 지속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력복귀 단계별 맞춤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설계 ○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출산·육아휴직자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보완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채용(대체)인력 매칭 및 인건비, 직무교육 지속 지원			
관련예산	(과학기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15,100	15,940	840	5.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 총 392명 지원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매칭 및 연구과제 수행 지원
- 경력복귀 예비자 대상 인력 수요가 높은 직군에 대한 직무 훈련 제공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유지·성장 위한 교육·멘토링 통합 경력개발 워크숍 운영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및 추가 연구인력 활용 지원 : 총 232명 지원
- 출산·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등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대체인력 지원
- 육아기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속 위한 인턴 및 전문박사연구원 지원
- 과학기술분야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위한 지역별·경력별 대체인력 풀 구축(3,648건)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대체인력 풀 누적 구축·관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를 통한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안착 및 재단절 방지 기여 ○ 과학기술분야 R&D 전문역량을 보유한 대체인력 풀 확대 구축 및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선제적 대응 및 육아기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경력 단절 예방, 연구·육아 병행 지원 본격 추진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지원 확대, 육아기 연구자를 위한 펀드지원 확대 및 R&D 경력복귀 인프라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등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플랫폼(W브릿지) AI기반 커리어지원 강화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주요내용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학교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 사안처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관련예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부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고특회계)	245	285	40	16.3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245	285	40	16.3
▪ 양성평등(5-24) (특별교부금)	1,950	1,400	△550	△28.2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200	200	-	-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감사관실 예산으로 추진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안(딥페이크 사안 포함) 접수 및 처리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성장훈련 및 모의훈련 실시
- 교육·훈련 종류 : 4종(성장훈련 3종, 모의훈련 1종), 교육·훈련 횟수 : 11회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계자 직무연수 실시
- 연수 종류 : 3종, 연수 횟수 : 15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지원
- 신고센터 접수안건 조치완료율 : 89.9%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사안처리 업무 역량 강화
- 성장훈련 및 모의훈련 참여 인원 : 884명, 참여자 만족도 : 91.1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계자 업무 역량 강화
- 직무연수 참여 인원 : 643명, 참여자 만족도 : 94.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계속)
-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초중등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안 접수 및 처리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성장훈련 및 모의훈련 실시(계속)
- 담당자 경력별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계자 직무연수 실시(계속)
- 대면 및 실습형 연수 확대 추진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 유도 및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주요내용

○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양성평등정책지원	233	23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 스토킹 규정 신설 등 지침 개정(법무부 훈령, '24.10.8.)
-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소속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지도점검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절차 모의훈련 실시

○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소규모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영화 상영 등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 및 양성평등추진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 유도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 체계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강화 필요
-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향후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및 폭력예방교육 지속 실시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문화·예술·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 및 근절방안 마련			
주요내용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문화·예술·체육 분야 신고·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정례협의체 개최를 통한 센터 간 사례 공유 및 정책개선 등 연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270	270	-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70	27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분야별 실태조사)**
- '24년 콘텐츠산업(출판·방송·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문화·예술·체육계 신고상담센터 활성화 및 기능 강화)**
- 센터 간 정례협의체 운영(연 2회)을 통한 업무계획 공유, 개선방안 논의 등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5회)
-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소속·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대상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서면점ㅁ검 실시(연1회 정례화 완료)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조치 강화)**
- 부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개정(스토킹 예방지침 추가)
- 성희롱·성폭력 대응 모의연습 실시(체험형 웹툰 기반 게임 형식, 신고·상담 등 절차 안내)
- 고충상담원 대상 자기돌봄 워크숍 추진(1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콘텐츠산업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방안 도출 및 실효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 ○ 문화·예술·체육 분야 상담센터 운영 및 반기별 정례회의를 통한 연계체계 구축 ○ 신고상담센터 예방교육 실적 지속적 증가('22년 96,101명, '23년 183,252명, '24년 231,566명) ○ 소관 기관 점검 및 교육 등 지원을 통한 예방조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고상담센터들의 인지도 제고 필요

향후추진계획

○ 각 센터별 사례 공유 정례화를 통해 센터 간 네트워킹 강화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활동 지원 활성화(출강 지원, 강의안 코칭 프로그램, 프로필 촬영 지원)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교육 신청·운영 시스템 구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개정
○ 성희롱·성폭력 근절 분과위원회 개최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의료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전문가 지원 및 의료현장의 인권침해 인식 개선 선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 및 제17조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지속 추진(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포함 근무여건 인식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2차 실태조사 실시 ('24년~'25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551	541	△10	△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의료현장 내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 및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상담·자문) 인권침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의 1:1 심리상담 및 법무·노무 자문 지원*
  * 지원실적 '23년 1,800건 → '24년 2,205건 (22.5% 증가)
- (인권교육) 보건의료현장 종사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권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실시*
  * 교육실적 '23년 82개소, 4,402명 → '24년 109개소, 15,203명 (각 32.9%, 245.3% 증가)

○ 인권침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 SNS 영상제작·게시, SP매체(KTX역, 지하철) 홍보,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침해상담센터 개소('21.8월) 이후 홍보 강화와 접근성 제고를 통해 상담실적 증가 등 운영실적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내실화
- 대상 맞춤형 교안개발로 환경 특화형 교육 추진(전공의, 예비의료인)

○ 보건의료현장 종사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협의체' 재구성 및 확대
- 대형 병원에 국한되어 운영하던 '병원내 인권센터 전략 협의체' 운영 및 지원 → 중소병원으로 확대 운영 및 멘토링 지원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과제목표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공공부문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한 신고·상담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 사건처리 등 지원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140	140	-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4,054	639	18.7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230	1,535	305	24.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 다수, 기관장 사건 등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요구('24년 36개소)

○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실태, 관련 인식 및 제도·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실시('25년 공표 예정)

* (조사내용)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방지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

- 공공부문 주요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 단축(3→1개월) 및 사건 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조치 시행('24.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24.4.19.)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24년 134건 접수·처리) 및 신고상담 활성화('24년 2,194건)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지원('24년 115개소)
- '23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24.10월)
- '24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공공기관 65회 5,097명, 교원원격연수 24회 7,604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수사기관(7개 기관) 여성폭력 업무담당자 2차 피해 및 스토킹 방지 교육 실시('23.7.~) -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및 스토킹 방지 교육지원 추진(61회 1,249명/대면 52회, 비대면 9회)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 방지교육 이행실적 : ('23)34,030명(95.3%), ('22)32,699명(95%) * '24년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추진실적 취합('25.2.28.한) ○ 공공기관(총 18,127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고위직, 종사자 등 참여율 제고 - 고위직 참여율 94.4%(전년 대비 1.2%p 상승), 종사자 참여율 93.7%(전년 대비 0.4%p 상승)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침개정 -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2차 피해 예방 등 신종 범죄 예방교육 별도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5점) - 부진기관 기준으로 고위직 참여율 기준 전년 대비 5%p 상향 조정(75%→80%)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 및 배포('24.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공공기관('23년 18,127개) 대상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 기관장 참여율 99.9%, 고위직 참여율 94.4%, 종사자 참여율 93.7%로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제고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을 통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관리체계 지속 강화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추진체계 지속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공공기관 종사자 등 대상 산종 범죄 포함 폭력예방 통합교육 가이드 개발·보급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대학 등 현장점검 지속 추진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 추진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 · 팀명	통합인사정책과
과제목표	○ 공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사건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			
주요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 중앙행정기관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공직사회인사혁신확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35	3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 1.~12.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
- (신고·상담) 210건, (조사·심의) 24건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 6회, 20건

○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2회) : 11개 기관, 56개 항목
○ 「중앙행정기관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개최('24. 4. 22.) : 30개 기관, 41명 참석
○ 「중앙행정기관 성고충업무 컨설팅」 신규 추진('24. 11.~12.) : 7개 기관, 40명 참석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함 ○ 중앙행정기관 성고충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을 위한 워크숍·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기관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고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연 2회)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지속)

5	Ⅱ-1-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 · 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제목표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주요내용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수립·추진 ○ 조직 內 성희롱·성폭력 실태 진단 및 현장점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획·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성평등 인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	402	40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 「'24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수립('24.3월),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4회) 및 분과회의(5회), 상시협의체(4회)를 통한 이행점검
-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범죄 발생관서 △신임 여성경찰 다수 배치 관서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 현장점검' 병행 (총 41개 관서)
- 조직 내 스토킹 예방 자체 지침 마련을 위한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개정 추진

○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24.9월)

○「경찰 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 관리자 대상 표준교육안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 성희롱·성폭력 전문강사 워크숍 실시 및 전문강사 인력풀(80명) 재정비
-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모니터링 실시(40개 관서)

결과분석

추진성과	○ '2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24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5개 분야 18개 과제, 9개 기능) 수립·시행 ○「성범죄 예방 및 근절 현장점검」 실시하여 현장근무자 심층 면담 및 기본시설 점검하여 '조직문화 15건, 제도 3건, 교육 4건, 시설 8건' 개선 조치 ○ 소관 훈령 개정으로 스토킹 예방·대응 절차와 제도 정비(신고센터명 변경 등) 기반 마련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96% 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25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추진과 더불어 「성범죄 예방·근절 현장 컨설팅」 실시하여 종합대책 과제 실행·정착 여부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 '25년 조직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25.9월)

○ 관리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및 전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진행 중

6	Ⅱ-1-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 · 감독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명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목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개선에 기여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지역협력) 3,000개소 〈자체 2,500, 합동 500개소〉 * 제조업 1,435개소, 농축산업 926개소, 어업 개274소, 건설 76개소, 서비스업 289개소 * 점검대상 중 숙소 제공 사업장 2,307개소 주거실태 확인 -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5,700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강화 - 법 위반 비율이 높고 타 업종 대비 근로조건이 취약한 농축산업·어업 분야에 대한 점검을 전체 물량 대비 40% 실시 - 지역협력과 소관 점검대상 3,000개소 점검결과 위반사항 1,707건 중 시정시시 1,607건, 고용제한·취소 22건, 과태 12건으로 위반사항 엄정조치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기여 - 지도점검 시 숙소실태조사(2,307개소)를 통해 냉·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 기숙사시설 기준 위반 시정지시(168건) 조치완료 -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의 경우 고용허가 불허됨에 따라 사업주의 숙소 개선 유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지속 추진('25년 8,000개소) ○ 건설업, 서비스업 신규업종 등 소수업종에 대한 점검 비중 확대 ○ 업종별 취약분야(농업-기숙사 등)를 집중 타게팅하여 점검

7	Ⅱ-1-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차별개선과

과제목표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주요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분위기 조성·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1,403	-	△1,403	순감
▪ 노사발전재단지원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419	-	△419	순감
▪ 노동약자지원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원)	-	378	378	순증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차별·고용구조개선)	-	1,030	1,030	순증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사업이 '25년부터 '노동약자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으로 통폐합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금)	4,000	2,500	△1,500	△37.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비정규직 보호,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 **비정규직 차별 릴레이 기획 감독** 실시

  * **(1분기)** 저축은행 등 35개소 **(2분기)**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47개소
  (3분기) 식품제조업 등 98개소 **(4분기)** 차별 익명신고 사업장 20개소

-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7월)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우려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

- **감독관 실무교육**(3월, 2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 역량 제고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등 비정규직 차별 자율개선 종합서비스 제공

- **차별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및 **자율적 차별개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차별진단** 및 **교육** 등 지원

  * 개선권고 353개소, 차별예방 교육 13,628명, 차별예방 상담 627명 등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간접노무비 등 지원**, 기업 부담 완화

  * 1,259개소, 3,370명에 대하여 9,599백만원 지원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중심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차별시정 지도·감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 및 차별시정 지도 건수 지속 증가**
* 기획감독을 통해 차별 1,144명, 5.4억원 적발
** 차별시정 지도건수(건): ('20.) 143 → ('21.) 175 → ('22.) 206 → ('23.) 251 → ('24.) 334
○ 감독결과 발표, 컨설팅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사업장 인식 변화에 집중, 민간부문 자율적인 개선 유도
- 특히, 컨설팅(353개소) 결과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등 고용형태 전환 817명, 임금상승 1,029명(연간 약 6.9억원<1인당 약 67만원> 임금상승 효과) 등의 근로조건 개선 창출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복지 확대 및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비율 증가 등 격차 해소 성과 도출
<table><tr><th colspan="7">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통계(통계청 경활 부가조사)</th></tr><tr><th colspan="2">구 분</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tr><td colspan="2">정규직 대비 임금수준(%)</td><td>72.4</td><td>72.8</td><td>75.0</td><td>76.2</td><td>77.9</td></tr><tr><td rowspan="3">복지 적용률(%)</td><td>상여금</td><td>37.6</td><td>35.7</td><td>38.5</td><td>39.4</td><td>40.1</td></tr><tr><td>퇴직급여</td><td>40.4</td><td>42.7</td><td>43.0</td><td>45.3</td><td>46.4</td></tr><tr><td>유급휴가</td><td>34.1</td><td>35.1</td><td>35.9</td><td>37.2</td><td>38.7</td></tr><tr><td colspan="2">자발적 선택 비율(%)</td><td>56.6</td><td>59.9</td><td>62.8</td><td>65.6</td><td>66.6</td></tr></table></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해당 없음</td></tr>
</table>

<table>
<tr><td>향후추진계획</td><td>○ 비정규직 차별 발생 高위험 사업장 지도·감독 등 지속 추진
○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산 및 격차해소 분위기 조성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전문성 제고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보호 제도개선 관련 논의 지속</td></tr>
</table>

8	Ⅱ-1-⑧	사내하도급 노동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고용차별개선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과제목표

○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및 고용구조 개선
○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1,403	-	△1,403	순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1,805	-	△1,805	순감
▪ 노동약자지원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	2,063	2,063	순증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원)	-	378	378	순증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차별·고용구조개선)	-	1,030	1,030	순증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이 '25년부터 '노동약자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으로 통폐합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운영하여 **원·하청 상생 중심 컨설팅** 제공(원청 기준 88개소)

  * ① 임금격차 해소, ② 근로자 복지 증진, ③ 원·하청 소통기구 마련 등

- 자율적 고용구조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 담보를 위하여 컨설팅 참여 사업장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한 **불법파견 근절 근로감독 추진**

- 파견제도의 적정운영 및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근로감독** 추진,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선택·집중 감독**

- 비정규직 감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노동약자지원」 신설하여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금(21억) 예산 확대 편성

○ 특고·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 플랫폼기업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자치단체 29개, 플랫폼기업 등 8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을 통한 **민간 자율적 원·하청 상생 분위기 형성** - 민간부문의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우수사례 다수 창출** * 동반성장펀드 대출지원, 고충처리 콜센터 운영, 하청 근로자 우선 채용 등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분위기 형성 * '24년 75개소와 협약 체결 ○ **불법파견 지도감독**을 통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성과 - 사내하도급업체 등 **531개소 감독** 실시, 불법파견 근로자 **1,14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 특히, **화성 화재 사고 후속 조치**로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불법파견 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87개소**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 **884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 안산지역 중심, 불법파견 적발업체 대상 채용·알선, 기업지원금 지원,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 컨설팅 병행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들의 노무제공 여건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원·하청 근로자 격차 해소 및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속 * ① 임금격차 해소, ② 근로자 복지 증진, ③ 원·하청 소통기구 마련 등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감독 지속 추진하여 불법파견 근절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등 운영 철저

9	Ⅱ-1-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근로자 산업재해 보호 강화
○ 근로자 안전보건 예방

주요내용

○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외부위탁 등을 통한 업무상 질병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근로자의 안전보건 예방과 산업재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

관련예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757	9,757	-	-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2,940	2,94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업무상 질병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단순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 위탁 확대(3개소→8개소) 등
- 역학조사 외부위탁 시범운영(1개소)

○ 산재 조사 시 유관기관 자료 자동 입수토록 연계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절차 개선 및 인프라 강화
- 전문(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 집중처리기간 운영
- 재해조사 전문인력 파견 및 조사장비 구입 등 인프라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산재 처리건수 20.7% 증가('23년 31,666건→ '24년 38,219건)
- 특별진찰 외부위탁 추가 확대 등을 통해 '24.5월 기점 질병 처리기간 감소세 전환*
  * ('24.5월) 240.7일 → ('24.12월) 227.7일
- 외부위탁 등으로 역학조사 30.6일 단축('23년 635.0일→ '24년 604.4일)

○ 유관기관 연계자료 자동입수 2종 확대
- 운전경력증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경력 증명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절차 개선 및 인프라 강화로 장기 미처리 해소
- 장기미처리 216건 처리, 인력 3명 확보, 역학조사 장비(11억) 확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업무상 질병 적시 보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지속
- 산재 다발 사업장 표준 동영상 시범 구축 및 확대, 장기 미처리사건 모니터링 강화 등
- 조사인력 확대·인프라 구축

10	Ⅱ-1-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최저임금 결정의 수용성 제고 및 현장안착 지원			
주요내용	○ 수용성 높은 최저임금 결정 지원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등 지원 ○ 최저임금 현장안착 강화 - 정책캠페인 실시,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근로조건 개선지원 (최저임금 안내, 정책영상 광고)	11,896	10,402	△1,494	△1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지원)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지원
- '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근거 논의
  * 연구위원회 3회, 전문위원회 2회, 전원회의 11회, 이해관계자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5회

○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지원)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등을 통해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 소규모·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무관리지도, 현장 예방점검 등 실시
  * 현장예방점검 18,031개소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5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7.12) →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없이 결정(8.5.) * 적용 연도 기준 이의제기 건수: ('23.) 4건 → ('24.) 1건 → ('25.) 0건 ○ (최저임금의 원만한 현장안착)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 현장안착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22.) 1,631 → ('23.) 1,519 → ('24.) 1,325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제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연구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사업장 방문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

11	Ⅰ-1-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기업훈련지원과

과제목표

○ 소외없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찾아가는 직업훈련 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32,271	32,706	435	1.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직업훈련 참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훈련 컨설팅 제공

- 인적·물적 인프라 및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 전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업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적시에 지원

*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https://www.hrdr4u.or.kr/hrddoctor/web)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추천 AI가 기업정보 및 훈련 역량·수요, 훈련 이력, 유사 기업의 선호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사업 및 과정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장벽 완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업훈련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종합 HRD 서비스 제공

- 지역의 HRD전문가(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훈련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에 필요한 훈련 서비스 매칭 및 훈련과정 개발, 참여 지원, 컨설팅 등 지원

* 2024년 총 14,1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HRD 컨설팅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소기업 훈련 컨설팅 품질 개선을 위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역량관리

- 직업훈련 취약계층인 중소기업에 고품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직무역량 교육 실시 및 체계적인 경력경로 관리

○ 훈련의 연속성을 위한 사후관리

- 훈련과정 종료 후 성과분석 및 피드백, 훈련정보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업 내 훈련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훈련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재직자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12	Ⅱ-1-⑫	신중년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제목표

○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주요내용

○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직장 내 연령 차별없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고령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제도 이행 지원

○ 중장년의 제2의 근로생애 지원을 위해 중장년층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중장년내일센터 및 중장년전담창구 설치 확대),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중장년 고용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산업·지역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중장년층 취업지원	20,052	18,443	△1,609	△8.0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62,102	56,730	△5,372	△8.7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4,982	35,706	724	2.1
(고령자고용지원금)	26,975	21,016	△5,959	△22.1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423	42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국민연금 수급연령 공백해소를 위해 지원기간 연장****

* ('24.) 350억→ ('25.) 357억 ** (지원기간) 2년 → 3년

○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논의(6.27.~12월, 12회)

→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자율적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장년 고용 우수사례 등 발굴 및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통한 중장년 고용 인식 변화 제고**

- 기업의 신규 고용, 계속 고용 우수사례, 개인의 재취업 성공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례집 제작, 홍보영상 제작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강화

	- 계속고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장간담회, 다큐멘터리(EBS특집다큐), 유튜브 컨텐츠(삼프로TV) 제작·홍보 ○ **고용서비스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중장년내일센터 4개소 추가지정* 및 고용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 입주 확대로 고용센터 내 맞춤형 프로그램**(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제공 강화 * ▲(중장년내일센터) 31개소→ 35개소(+4개소), ▲(전담창구) 48개소→ 61개소(+13개소), ▲(컨설턴트) 275명 → 322명(+47명) 등 확충 완료('24.6월) ** '심층상담 - 맞춤형 프로그램(생애, 전직, 재도약 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업 수요 기반의 중장년 취업지원 특화서비스 제공** - (산업별 특화서비스) 지역별 중점산업을 반영, 산업군별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직업정보 제공, 직무교육,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 지원 - (사업주지원패키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의 중장년 일자리 수요에 따라 「일자리 컨설팅→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채용서비스」 통합 제공 -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역 중점산업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여 해당 산업에 맞는 중장년 취·창업, 교육훈련 등을 지자체와 연계.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588만)·**고용률**(69.9%)이 **상승**하고, **상용직 비중**(49.2%)도 **증가**하여 **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고령층(55~64세)**의 **주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이 **전년 대비 2.3개월 증가** ('23년 15년 7.9개월 → '24년 **15년 10.2개월**) ○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계속고용** 논의(6월~) ○ **6.5만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중장년내일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취업** * 취업자: ('23년) 58,855명 → ('24년) 65,147명 <10.7% 증가> ○ 계속고용제도 확산을 위해 요건 완화(전부 재고용 → 노사합의 기준에 따른 재고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일경험, 취업알선·장려금 등 재취업지원까지 정책 패키지로 제공** **- 특히, 2차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자격·경력전환·경력이음형) 일자리를 발굴, 재취업 촉진**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확대			
주요내용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운영			

관련예산

(교육부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직업계고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200	2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내용 개편 및 운영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1~3학년
- 운영 기관 :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기관별 역할 :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콘텐츠 관리, 학습 운영, 이수자 관리 등
- 교육 기간 및 시간 : '24.4.29.~12.6.(9개월), 12차시
- 교육 내용 :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권익침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주요 내용
- 교육 방법 : https://www..keli.kr 접속 후 수강
- 운영 예산 : 200백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교육 실적 : 580개 학교, 수강 인원 61,157명 이수(목표 60,000명 대비 101.9% 달성) - 문제은행 확충으로 학습 효과성 제고 : '23년 72문항 → '24년 100문항 - 기대효과 : 직업계고 학생의 권익 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의식 함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속 추진
- 교육 대상 : 직업계고 1~3학년
- 운영 기관 : 교육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육 시간 : 12차시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주요내용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등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무사 등에 의한 상담 등 문제해결 창구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근로조건개선지원	11,896	10,402	△1,494	△12.6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613	933	△680	△4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청소년·청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2,262회·100,245명 대상 교육 실시

○ (청년 노동권 보호 지도점검) 청년 및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매 분기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현장예방점검 18,031개소 실시

○ (피해 청소년 상담·권리구제)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 실적: 상담 40,682건, 권리구제 1,132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충분한 제도 안내, 교육 등 계도활동을 통한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 - 청소년·청년 눈높이에 맞는 노동관계법 심층 상담 실시, 근로권익 침해 발생 시 신속한 무료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지속 운영

13	Ⅱ-1-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로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주요내용	○ 부당처우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24시간 상담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방문 등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 확인,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 청소년의 생활 여건 및 근로 사유에 맞는 청소년 관련 기관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연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1,273	-	△1,273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 완료(2023년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종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 근로보호 상담·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네이버 지식in 상담, 기관 연계, 메일·게시판 상담)
○ 전국 상담 사례 상시 모니터링 및 노동법 관련 자문 제공
○ 청소년 근로보호 콘텐츠, 법령 및 상담 사례집 개발 및 전국 보급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특화 프로그램(4종) 및 교보재(4종) 개발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및 부당처우 업주와의 면담・중재 해결 재원
- 청소년 근로보호 상담 8,041건, 현장 방문 등 중재 해결 83건(69명)
○ 청소년 대상'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운영 및 강사 양성
- 전국 중・고등학교 등 1,316회, 총 47,928명 교육
○ 사업장 방문 및 점검을 통한 '행복일터(우수 사업장)'발굴 및 캠페인 등
- 행복일터 발굴 218개소, 실시 1,393개소 /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홍보활동 총 257회(45,213명)
○ 전자근로계약서(신규체결 및 관리건수) : 331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확충으로 전국적 보호 지원 체계 및 기반 마련 - ('13~'17년) 시범운영, 중앙지원단 1개소 → ('18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17개소 → ('19~'21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 ('22~'23년)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17개소 ※ ('22~)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 : 17개 시·도별로 사업 확대(보조율 50%)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부당처우 해결 지원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 '근로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업주와 면담·중재 해결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23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90.10점 ○ 정부합동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점검, 정당한 근로문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근로보호사업(~2023년) 종료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상담 및 중재, 무료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연계

14	Ⅱ-1-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사협력정책과
	과제목표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주요내용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논의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예산	○ 해당 없음(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 및 필요 의제 발굴 논의(17회) - '24.1.18. 웹분야 프리랜서 관계자 간담회 - '24.1.29. 역대 위원장 간담회 개최 - '24.1.31. 역대 상임위원 간담회 개최 - '24.1.31.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참석(온라인) - '24.2.2.~2.5 제17차 운영위원회 서면 개최 - '24.2.6. 제13차 경제사회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 '24.3.7.~3.11 제14차 본위원회 서면 개최 - '24.3.24.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초청 강연회 - '24.3.26. '인공지능(AI)과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 - '24.4.29.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임원진 정책 간담회 - '24.5.13. 태국 공공 및 민간분야 고위급 대표단(KPI) 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 '24.5.30.~5.31.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참석 및 국제컨퍼런스 발제(온라인) - '24.6.19. 한국폴리텍대학과 MOU 체결 - '24.10.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 '24.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4.12.2.~12.3.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 참석 - '24.12.20. 중앙-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샵 개최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채널 등 운영 * 위원회 소식을 채널별로 OSMU(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화 하여 접근성 제고 - 이미지 중심 콘텐츠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접근성 제고 * 경사노위가 만난 사람들, 이슈&잇슈, 간담회 홍보 -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청년들이 고용노동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나누고 정책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플랫폼 '노말청년' 구축 운영(웹페이지, 모바일, 앱 등 접근성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논의 진행 및 의제 발굴 ○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 및 필요 의제 발굴 지속 노력(23년~)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23년~)

15	Ⅱ-1-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사협력정책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과제목표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주요내용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근로자참여법 개정 완료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배포(23.1월) ○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지원 및 자율적 권익 보호 활동 지원 - 중앙·지방 사회적 대화에 미조직 노동자 의견 참여 통로 확대 추진 - 특수형태근로·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현장의 자율적 질서 확립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근로자참여법 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및 질의회시집 발간하여, 배포('23.1.30) - 전국 지방관서 등 1,900여권 배포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l.go.rk)-"정책자료실"에 PDF파일 게시 ○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및 가전제품 방문판매·점검 직종 표준계약서 발표('23.12.26.) - 주요내용 리플릿과 활용가이드 함께 발표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l.go.rk)-"정책자료실"에 파일 게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근로자참여법 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법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도 중앙·지방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통로 확대 기여 ○ 노무제공자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통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여, 공정한 계약의 기준을 제공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현장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이행완료('23.)로 향후 계획 없음

16	Ⅱ-1-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과제목표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신용제재 * 최근 1년 내 ❶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❷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과제완료			

'24년 이행실적	○ '24.9.26,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4.10.22, 개정「근로기준법」 공포('25.10.23. 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완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을 위한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임금체불 근절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등 홍보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노동개혁총괄과
과제목표	○ 공정 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산업과 기업에 적합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상생협력 확산지원	21,010	8,542	△12,468	△59.3
(상생임금 확산지원)	9,725	5,918	△3,807	△3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업종별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 및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신설
- 직무분석, 분류, 평가, 보상체계 확립, 변화관리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종 내 컨설팅 미지원 기업도 활용가능한 표준임금모델안 개발
-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현장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임금체계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나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임금정보 브리프 발간(임금체계 개선 우수사례 등 포함), 맞춤형 임금정보(규모·산업·직업 등 변수 고려) 제공 등

○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등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3개 업종(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조선업) 64개소 컨설팅 지원(835개소 신청) - 표준임금모델안 개발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임금정보브리프(총 7호), 업종별 임금실태조사,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등 발간 ○ 공정임금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 KTV 국민영상제 우수상 수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인프라 운영, 정보 제공 등 공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현장 지원 지속

17	Ⅱ-1-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공정 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별 임금격차 개선 유도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790	1,876	86	4.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127	1,002	△125	△1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 AA 최초 적용 사업장 집체교육을 시행하여 제도 이해도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여성고용(관리자)율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지속 상승 * 여성고용률: ('21년) 37.78% → ('22년) 38.05% → ('23년) 38.28% → ('24년) 38.49% * 여성관리자율: ('21년) 21.30% → ('22년) 21.75% → ('23년) 22.11% → ('24년) 22.47%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18	Ⅱ-1-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및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도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근로조건개선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862	414	△448	△5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사업장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이 보도된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권조사에 착수('24.11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 폭행금지 검찰송치(기소),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행위자 징계 등 시정지시에 따라 해임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통한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개선 등 제도 안착

- (교육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과 취약 업종을 선정하여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최신 판례·업종별 사례 반영, 동영상 강의자료 등 교육수단의 현행화·다변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신청 시 임원 등 사용자 참여 적극 권장

  * 510회 목표, 774회 실시(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32회 실시(55.8%))

- (취약사업장 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취약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소속 근로자 면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확인 및 개선방안 제안 등 맞춤 컨설팅 등 직장문화 개선지원 컨설팅 실시(354개소)

- (홍보·캠페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사업장 내 상호존중 문화 안착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24.11월~'25.1월 유튜브, 지하철, KTX 홍보

상호존중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직장문화 개선 웹드라마 영상>(유튜브)





<괴롭힘 근절 캠페인 포스터 및 영상>(유튜브, 지하철, KTX 등 광고 송출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를 통해 법 준수 의식 확산 ○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지원,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및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지원을 위한 예방 교육 지원, 홍보 및 캠페인 지속

19	Ⅱ-1-⑲	장시간 근로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제목표	○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실현			
주요내용	○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휴식,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연장근로 개연성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감독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일터혁신상생컨설팅	29,824	37,731	7907	2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법정수당 미지급 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
- 총 428개소 감독하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지원(234개소)

○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도입·활용을 위한 제도 홍보
- 유연근로제도 유튜브 홍보, 근로시간제도(유연근로, 특별연장근로, 지원제도 등) 리플릿 제작·배포, 유연근로 활성화 모션그래픽 제작·옥외광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연간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으로 법 준수 의식 제고 및 실근로시간 단축 기여 ⇒ 연간 근로시간 감소: ('19.)1,957→('20.)1,927→('21.)1,928→('22.)1,904→('23.)1,874 <상용1인이상, 사업체노동력조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

○ 기업의 일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임금체계, 직장문화 등 분야에 대한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제목표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강화

주요내용

○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금액 상향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원대상 추가 등에 따른 지원수준·요건 등 제도 개선(고시* 등) 추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	%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37,516	885,130	47,614	5.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신규가입자 지원인원 지속적 증가
* ('22년) 78만명 → ('23년) 97만명 → ('24년) 111만명

'24년 이행실적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지원대상 월보수 수준 확대('23년 260만원 → '24년 270만원)

○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홍보 등으로 대상자 발굴과 홍보 등에 따른 지원인원 증가
- 지원대상 임금수준 및 지원요건 등 제도에 대하여 신규 성립 사업장 및 지원대상 사업장 중심으로 보험가입조사원 적극 활용하여 현장 방문 안내·홍보로 지원신청률 제고
-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사업규모 완화 관련 주요 직종 대상 사업장 현장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로 신청 독려
- 적극적인 홍보, 지원대상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예산 집행률 100% 달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규가입자 지원인력 증가
- '23년 97만명에서 '24년 111만명으로 신규가입자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미가입 사업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을 발굴·가입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계속)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지자체 협업, 유관기관 정보 연계, 집중홍보

20	Ⅱ-2-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취약계층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

주요내용

○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지속 확대 추진
-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공유를 통한 가입 추진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9,947	51,912	11,965	30.0

※ 두루누리 지원사업: ('24년) 6,670억원, ('25년) 6,896억원(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상한금액 인상 및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지원 기준소득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금액: ('23.) 월 최대 45,000원 → ('24.) 월 최대 46,350원
  * 두루누리 지원 기준소득: ('23.) 260만원 미만 → ('24.) 270만원 미만
-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완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간 7년 연장('24년→'31년까지)
  * 「국민연금법」 개정·시행("24.9.20.)

○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장가입 기준 개선(건설현장 단위→사업장 단위 적용)
  * 국민연금공단 지침 개정('24.12월) 및 시행('25.7월)
- 국세청 소득자료, 고용부 근로내용확인 신고자료 등 공유를 통해 일용근로자 가입 지속 추진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률: ('23.) 72.4% → ('24.) 78.7%

결과분석

추진성과

○ 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 지원인원: ('22.) 38,842명 → ('23.) 153,803명 → ('24.) 203,790명
지원규모: ('22.) 4,778백만원 → ('23.) 38,211백만원 → ('24.) 39,947백만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근로자 대상 지원 확대('25.~)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및 지원기준 개선 검토('25.~)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근로자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검토('25.~)

○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25.~)
- 국세청, 고용부 등 자료연계 확대로 지역 소득신고자 가입대상 지속 발굴 및 가입 확대 추진

21	Ⅱ-2-②	고용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산재보상정책과
	과제목표	○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기준, 부과·징수체계 등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한 가입누락자 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을 추가로 적용 확대 ○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기준, 부과·징수체계 등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한 가입누락자 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노무제공자 직종별 간담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홍보·독려 등을 통한 원활한 현장 안착 도모
* 노무제공자 간담회 개최(17회) 및 리플렛 등 홍보물 배포(97,000부)

○ (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추진)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의원입법안 발의('24.11.7., 임이자 의원)
*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TF 구성·운영('23.3월~, 총 11회)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운영전문위) 보고('23.11.28.)

○ (가입누락자 발굴)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 47만명('24년 누계) 발굴 및 가입 조치

-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국세청)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기반* 마련 및 국세 소득자료 정합성 제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최종근무일 추가('23.7.1. 시행)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귀속월 추가('23.7.1. 시행), 지급연도 추가('24.1.1. 시행)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 '26.1월 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23.7월) 이후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수 증가 ('23.6월 80.4만명 → '24.12월 143.8만명) ○ 노·사, 전문가 논의 거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의원입법안 발의 ○ 국세 소득자료 연계·활용한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 발굴로 고용안전망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되어, 제도개선 이전보다 노무제공자 약 63만명이 추가 적용('24.12월 기준 143.8만명 적용)
- 이에,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도 홍보 등 현장에 원활한 제도 안착 지속

○ 소득기반 고용보험 국회 입법 추진 절차 지원

○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누락자 지속 발굴

22	Ⅱ-2-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수도기획과
과제목표	○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신규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상수도 연구관리	300	300	-	-
상수도 연구관리	300	3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미규제 신규 미량물질 탐색 기반구축(고성능 질량분석기 HRMS) 및 표적분석기법 마련
-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체영향, 검출수준 등을 고려한 조사대상 우선순위 도출 프로그램 개발
- 정수장 수돗물 원·정수 조사대상 항목(70개) 분석법 마련 및 정도관리 검증

○ 신규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전국 단위 정수장 원·정수 미량유해물질 조사* 실시
  * (대상) 정수장 70개소, (주기) 2회/연, (항목) 과불화화합물, 마이크로시스틴 등 70개 항목
- 조사 항목별 노출수준 및 위해도 평가 등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설정 필요성* 검토
  * 현재까지 조사결과('23.~)에서 모든 검출물질은 수질감시항목 설정 요건에 미해당
- 먹는물 수질기준 개선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유기물 및 소독부산물 조사* 실시
  * 지역, 용량, 상수원 등을 고려한 정수장(30개) 및 소규모 시설(30) 대상 유기물 지표 및 소독부산물 조사

○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3회)
  * (1차)과불화화합물 처리기술 현황 및 관리방안('24.7.), (2차)과불화화합물 위해성 및 국내외 관리 동향('24.8.), (3차)수돗물 소독부산물 관리방안('24.12.)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설정 및 미규제 물질 조사·평가 관련 근거 법규정 개정안 마련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운영 체계 법제화 및 세부 절차 구체화 등 제도개선안 마련
- 먹는물 과불화화합물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착수('24.1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돗물 조사 및 수질감시항목 설정 검토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및 물복지 향상

향후추진계획

○ 정수장 원·정수 미량유해물질 조사·평가 및 관리강화 지속 추진('25.~)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운영체계 개선 및 미량유해물질 안전관리 대응전략 수립 추진('25.~)

23	Ⅱ-2-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지속 이행을 위하여 깨끗한 물환경 확보 방안 수립			
주요내용	○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26.~'35.)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물환경정책연구)	1,975	1,120	△855	△4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개선에 따라 계획 폐지 가능성 있○,□

'24년 이행실적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 추진('23.4~'24.1.)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수립방향"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24.3.)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연구용역 추진('24.1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기본구상 추진 및 수립방향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26.~'35.)" 수립 착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물 관련 법정계획 체계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추후 해당 변경안에 따라 물환경 분야 법정계획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제3차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6.~'35.)" 수립 추진('24.~)

- 전국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26.~'35.) 달성도 평가 및 목표기준('26.~'35.) 설정

24	Ⅱ-2-⑤	물환경 위해관리 체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물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 제고			
주요내용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생물 독성 및 농축성, 잔류성 등을 고려한 수생생물 보호 환경기준 마련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국가수질측정망 운영(신규 오염물질 관리))	800	8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수계 내 잠재 미량오염물질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국내 강·하천 공공수역 대상 모니터링 추진
- (조사기간·항목) '23.5.~'24.4., 의약품·농약·산업용화학물질 등 88종
- (조사지점·횟수) 130개 지점, 연 3회

○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하천·강에서의 사람의 건강 및 수생생물 보호기준(안) 도출
- (사람의 건강보호) 어패류 섭취량, 생물농축계수, 물 섭취량, 체중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2개 물질(벤조(a)피렌, 다이벤즈(a,h)안트라센) 기준(안) 산정
- (수생생물 보호) 국내 서식 생물종 대상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절차에 따라 2개 물질(뷰타클로르, 토날라이드) 기준(안) 도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계 내 잠재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점검하여 공공수역 안전 선제 점검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안) 및 수생생물 보호기준(안) 도출하여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보호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수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미관리·미량 오염물질 지속 모니터링 필요

향후추진계획

○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선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수생생물 보호기준 2개 항목 도출(~'25년)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축산위생품질팀
과제목표	○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상시 조사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사전 예방 ○ GAP 인증 사후관리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안심 제고 - 단체인증 인증심사 표본농가수 확대, 인증품 잔류농약 분석 강화, 수확후 GAP관리 시설의 점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 실시 및 부적합 농가 체계적 관리 -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대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			

관련예산

(농산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산물안전성조사	25,540	25,356	△184	△0.7
▪ 허용물질목록제도(PLS)정착지원	362	462	100	27.6

(GAP,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1,325	11,139	△186	△1.6
GAP 농산물 안전성 위탁분석 사업	700	700	-	-

(축산물, 축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20,103	20,592	489	2.4
▪ 축산물HACCP지원	2,742	2,845	103	3.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농산물>

○ 생산단계 유해물질 사전차단과 안전기준 부적합품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 '24년 안전성조사 : 60,658(건) / 부적합: 736(건)

○ 재배환경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기반 마련

- 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배환경(토양, 용수)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4년 재배환경 실태조사 : 6,720건[농지 6,460, 용수 260]

○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PLS 교육·홍보

- 온라인 매체 활용 농산물 PLS 홍보영상 송출(10.14~11.13.), TV홍보(MBN(4.8.), SRT객실 내 홍보영상 송출 (9.12.~10.13.), 문자발송(토양살충제 사용유의 권장 및 주요성분 안내, 8.14.~16. 255,968명), 지상파 라디오 활용 PLS 홍보음원 송출(10.15~11.14.), 언론매체 홍보(전문지 33개 등), PLS 홍보물 제작·배포(7~8월) 등

	○ GAP 인증 단체인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심사 표본농가 수 확대* * '24년 12월 법제 및 사전 규제심사 요청에 국조실 반려 처리, '25년 진행 예정 - 인증품의 잔류농약 분석강화(4.2천 건) 및 RPA(로봇처리 자동화) 기법 도입(연 4회)으로 온라인상의 비인증품의 인증품 둔갑행위 집중 점검 - 수확 후 처리시설의 GAP인증품 취급량 등 통계 전수조사(1,038개소) 및 대량 취급업체(45개소) 특별점검 추진 **<축산물>** ○ 축산물 HACCP 컨설팅(209건), 현장기술지도(525건)를 통한 HACCP 운용수준 제고, 도축장·집유장 조사·평가(182개소)를 통한 우수 작업장 선정 ○ 식육·식용란에 대한 축산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 ('24년 실적) 미생물 : 104,492건 / 잔류물질 : 167,508건 ○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연간 위생감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위생 취약시기 특별감시 * ('24년 실적) 도축장 89건, 집유장 33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농산물) 사후대응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및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최소화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23년) 1.2% → ('24년) 1.2% ○ (GAP) GAP 부적합 인증품 유통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안심제고, 일반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안전성 기준 위반사례 감소 - '24년 GAP 인증농가 123,598호(전체농가의 12.4%), 재배면적 134천ha(8.9%) 차지 ○ (축산물)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통한 HACCP 운영 내실화 및 안전성 상시검사와 위생감시를 통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GAP 단체인증의 인증심사 표본농가수 확대는 규제사항으로 국조실 통과 지난 * (기존) 10%이상 표본 추출 → (개선) 15%이상 표본 추출

향후추진계획	○ (농산물)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통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지속 추진 ○ (GAP)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과정, 유통·판매과정 잔류농약분석 및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분석, 수확 후 처리시설의 GAP 인증품 취급량 등 통계 전수조사 및 대량 취급업체 특별점검 지속 추진 ○ (축산물) 생산단계 축산물의 잔류물질·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 및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 확산 등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25	Ⅱ-2-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국내 유통 농축산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주요내용	○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판매 제품, 새벽 배송 제품, 국민 다소비 품목, 다빈도 부적합 발생 품목 등 집중관리 -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판매를 사전 차단하고, 단순처리 농산물 관리도 강화 - 축산물 가공·유통단계 안전관리 제도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5,874	5,193	△681	△11.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제품, 국민 다소비 품목, 다빈도 부적합 발생 품목 등 집중관리**

- **(농산물 위생점검)** 식품으로 사용 불가한 농·임산물 유통실태 점검(3월), 식품·의약품 공통 원료 농산물 검사(4월), 온라인 판매 농산물 검사(4월, 10월),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검사(5월, 10월)
- **(축산물 위생점검)** 수요가 증가하는 갈비탕·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관련 식육가공품 안전관리(2월), 고단백·저지방 표방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강화(2·7·11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온라인 염소 제품 및 달걀 사육환경 표시 기획점검(6·11월), 유통사 PB(자체브랜드) 축산물 제품 생산·판매업체 점검(11월) 등

○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축산물 위생 기획점검**

- 명절(1·9월), 하절기(6월) 등 주요 특정 시기별 다소비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적 취급 여부 집중 점검
- '23년 발생한 육회 식중독 관련 부적합 업체 집중 관리(7~10월)

○ **유통 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차단**

- **(부적합 농산물)**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적합 우려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

*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대상 물류센터 확대(3→4곳, 8월)

** 절임배추, 깐밤, 등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현장교육 실시(5월, 11월)

○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환경을 조성**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상향*

* **(기존)** 해당 축산물 판매금액 → **(개선)** 해당 축산물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

※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를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채취・수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축산물 압류·폐기·회수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행정 처분 기준 신설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유통 증가,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추진 - 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차단의 선제적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지속** - **(온라인 유통·판매 농산물)** 온라인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새벽 배송 농산물 제품 신속검사 물량을 확대*하여 온라인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24년 실적 대비 '25년 목표 건수를 20% 이상 확대 - **(유통 축산물)** 부산물·유가공품·알가공품 제조업체 기획점검(3월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점검(신규), 달걀 살모넬라균 안전관리 지속 및 1:1 현장 맞춤형 멘토링(기술지원) 실시 ○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 전문가·업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지속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지역먹거리계획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식생활소비정책과
과제목표	○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및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지역먹거리계획) 수립 - (국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적 대응 전략 마련 - (지역)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안정, 물류거리 단축을 통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7,490	7,49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매뉴얼 개정
- 지역먹거리계획 업무 프로세스를 매뉴얼화·배포하여 지자체 담당자(신규, 관리자 등)의 업무 적응력을 높여 정책 연속성 유지

○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6.19., 충북보은 1개소)

* 패키지지원 대상 사업(8개)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산물직거래(직거래장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지원, 농산물 안전분석실운영

○ 지역먹거리계획 전문자문가(FD) 제도 운영(전문자문가 13명, 20개 지자체, 33회 자문 실시)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초기단계 대상 전문자문가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먹거리계획의 체계적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추진상황 현장점검(6~12월)
- 연구용역 추진현황,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체계, 애로사항 등 파악

○「지역먹거리계획 워크숍」 2회 개최 (7.11., 10.31.)
-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전문가 강의 및 우수지자체 추진사례 공유,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논의, 종합토론 등

	○ '지역먹거리지수' 서면평가(7~9월) 및 현장 및 전문가 평가(10~11월), 결과 발표 및 시상(12.3.) -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활성화 실천 노력과 성과를 지수화하여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 * '24년 평가결과 : S등급(3개소), A등급(17개소), B등급(53개소) * 지수 등급별 평균 : ('21.) 1.34 → ('22.) 1.57 → ('23.) 2.07 → ('24.) 2.25 * 상위등급(S-A) 지자체 : ('20.) 3개소 → ('21.) 10 → ('22.) 15 → ('23.) 17 → ('24.) 20 ○「지역먹거리계획 포럼」 6회 개최 (6.20. 순천, 8.23. 보은, 10.10. 장수, 10.25. 고성, 11.5. 여수, 11.21 합천) -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도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지자체 확대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21.) 111개소 → ('22.) 64 → ('23.) 115 → **('24.) 151** ○ 소비자의 선택과 먹거리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의 종합적인 평가인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상위등급 지자체 개소수 증가 * 참여지자체 : ('22.) 114개소 → ('23.) 156 → **('24.) 158** ** 우수 지자체(S-A등급) : ('22.) 15개소 → ('23.) 17 → **('24.) 20** ○ 중소농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지속적 증가 * 로컬푸드 직매장(매출액): ('20.) 7,143억원 → ('21.) 8,970 → ('22.) 9,772 → ('23.) 10,032 → **('24.) 10,80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역먹거리계획에 대한 지자체, 농업인, 주민 등 실행주체들의 역량 및 자율성 한계 (관주도형에서 민간 및 시민단체 주도형으로 전환 필요)

향후추진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지역먹거리 이슈 해결과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 역량을 강화 -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의식 향상 등 지역먹거리계획과 연계된 민간의 자율적인 효과 실증 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 성과 확산 지원

26	Ⅱ-2-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 바우처)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식생활소비정책과
과제목표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월 4만원/1인가구)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 (국정과제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14,800	38,100	23,300	157.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24.3~8월)

- 농식품 바우처 시범지역 및 지원 대상 확대*
  * ('23.) 18개 시군구, 6만 6천 가구 → ('24.) 24개 시군구, 9만 6천 가구

- 이용자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거동 불편자 대상 등 꾸러미 배송서비스** 추진
  * ('23.)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GS더프레시, 농협몰(온라인), 남도장터(온라인) → ('24. 추가) CU, 아이마트 밀양수산점, 인더마켓
  ** 꾸러미 배송서비스 지원 현황 : ('22.) 11개 시군구 → ('23.) 12개 시군구 → ('24.) 10개 시군구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후속조치 완료('24.8.)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영양 섭취 격차 완화 등 식생활 개선* * 식생활 만족도(3.2점/5점→3.5, +0.3점), 식품 충분성(12.1%→26.1%, +14.0%p), 식품 다양성(10.2%→25.1%, +14.9%p) 증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지속 요구 -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확대 및 업무시스템 고도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26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농식품 바우처 정의, 지원 근거,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전담 기관 지정 등

27	Ⅱ-2-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유통정책과 수산물안전정책과
과제목표	○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매년 30개소 이상 등록 추진)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주요내용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속 강화 및 HACCP 등록 확대 ○ 주요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조사 및 오염원 관리 ○ 수산물 위판장 위생기준 적용, 유통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위판장 현대화 사업,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및 유통기준 기술개발 * 저온·친환경 위판장('23년~계속),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21년~'25년)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수산물 위생관리	25,510	24,489	△1,021	△4.1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3,756	6,006	△7,750	△56.3
(저온·친환경 위판장)	11,940	5,130	△6,810	△57.0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	4,725	3,875	△850	△18.0
(신선유통 표준화 기술 개발)	2,355	1,875	△480	△20.4
(수산물 유통 현안해결 기술 개발)	550	-	△550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지속 강화
- '24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 수립('23.12.22.)
-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등 잠재 위해요인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항목 확충(188개→195개)
- 안전성조사 건수 확대*

* 조사계획(목표): ('22년) 15,500건 → ('23년) 19,000건 → ('24년) 21,000건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추진
- 양식장 HACCP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24년 누적 530개소 이상 HACCP 등록 추진*

* HACCP 등록 양식장(개소): ('22년) 447 → ('23년) 506 → ('24년) 576

-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식장 HACCP 적용 대상 확대*('24.4.)

* 기존 육상양식장 약 5,000개소 → 해상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등을 추가(약 8,300개소로 확대)

- 기등록 양식장의 사후관리 및 HACCP 위생관리점검관(지자체) 교육, 관계기관 워크숍, 현장평가 등 추진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패류 생산 해역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패류독소 조사정점 추가(118개→120개)
- 생산해역 수질 확인, 패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 111개 항목(분변계대장균, 살모넬라, 이질균 등)에 대해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위생조사 추진

	- 미처리오수의 해역유입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가정집 정화조 수거 및 이동식화장실, 바다공중화장실 8개소 지원 ○ 연근해 수산물을 안전·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전국 노후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위생시설 설비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5개소 선정 / 충남(2), 제주, 강원, 경남 ○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주요 어종(5종)에 대한 품질지표, 등급 기준 및 품질결정 모델 개발하고 위판장 3.0 표준모델*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 - 위판장 3.0 표준모델 현장 보급을 위해 산지 위판장(목포)과 MOU 체결 * 전자경매플랫폼, 아이스슬러리 제조 시스템, 환경친화형 스마트 어상자 등 기술개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전성조사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패류생산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바다공중화장실 8개소를 지원하는 등 생산해역 환경 개선 ○ 수산물 유통의 시작인 위판장을 위생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5개 위판장을 지원하고 위판장 3.0 표준모델 개발 등 유통기준을 마련하여 수산물 유통 현장 개선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HACCP 등록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및 HACCP 등록대상 확대(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지속 적용 *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목표): ('23년) 19,000건 → ('24년) 21,000건 → ('25년) 22,000건 * HACCP 등록 양식장 목표(개소): ('23년) 506개소 → ('24년) 576개소 → ('25년) 600개소 ○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 협업 추진, 바다공중화장실 '25년 3개소 지원 예정 ○ 생산해역 수질 확인, 패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 111개 항목(분변계대장균, 살모넬라, 이질균 등)에 대해 70개 해역을 대상으로 위생조사 지속 추진 ○ 패류 생산 해역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패류독소 조사정점 추가(120개→122개) ○ 실험실 패류 위생검사 분석결과 품질보증을 위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중금속 8종에 대한 국제인증(ISO 17025) 취득 추진 ○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자 지속 선정*을 통해 전국 노후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위판장 3.0 표준모델의 현장 보급을 위해 목포 위판장과 협업을 통해 실증 추진 -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 조기 공모와 위판장 표준모델 시스템별 통합 설치 *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24.12.~ '25.2.) / 산지 위판장 표준모델 현장 적용(~'25.)

28	Ⅱ-2-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식중독예방과
과제목표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주요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 관리지원>

○ 어린이급식소별 급식형태에 따른 맞춤형 현장지원, 취약급식소 집중관리 등

-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 세분화,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관리제 운영

○ 사회복지급식 지원범위 확대 및 센터 추가 확충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운영

-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63,137	66,024	△2,887	△4.6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0,319	63,062	2,743	4.5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7,795	9,233	1,438	18.4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2,515	2,515	-	-

※ '24년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2개 예산 통합운영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급식소 현장 지원 및 급식소별 전담영양사제 운영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급식소별 전담영양사가 위생영양 순회방문(6~8회)을 실시하여 대상자별 교육(8~10회) 지원*

* 전국 236개 센터에서 어린이급식소 34,238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영양 관리 지원

○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센터를 통한 지원 급식소 확대

-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 총 120개 센터를 운영('24.12월 기준),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급식소 3,428개소를 지원('23년 1,801개소)

<음식점 위생개선>

○ 일상 속 많이 이용하는 시설 내 음식점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식품안심구역 지정 확대*

* 에버랜드('24.7월), KTX서울역('24.9월), 경주월드('24.11월)

○ 인천공항 내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위생등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6월)

○ 기술지원 신속 지원 안내 등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업계* 등과 업무 협의

* 신세계프라퍼티(3월), 삼성물산(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4월), 네이버(5월), ㈜와드(7월) 등

○ 지자체별 위생등급 희망 구역, 소규모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급보류 판정업소 등에 대해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연중, 약 1,900개소)

○ 식품안전나라 및 식품안전정보앱 '내손안(安)'에서 위생등급 음식점을 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검색 기능 제공(9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 안전관리 환경 조성 - 모든 시·군·구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6개 센터)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급식위생·영양 관리지원 실시 - 신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속 확대로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 체계 확산 ○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통한 음식점 자율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 소규모 음식점의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로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추진 및 위생수준 향상 활성화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내실화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기반 확대 강화**(연중) ○ **소비자 근접 홍보로 위생등급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유도**(연중) -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음식점 위생등급 홍보부스 운영 등 소비자 대상 현장홍보 실시

29	Ⅱ-2-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및 현장 밀착지원 등 지속 추진

주요내용

○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주거복지센터 등과 함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제 발굴 및 이주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10,000	10,0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지원센터 설치('24.10)

- LH 이주지원 센터(59개소)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63개소)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 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홍보하고 이주 과정을 밀착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단위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설치·운영 매뉴얼 수립 및 배포

- 취약계층 이주지원 확대('22년 7천호→'23년 1만호→'24년 1.2만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자체 및 공공기관(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주거상향 대상자 발굴·이주 지원 지속 추진

30	Ⅱ-2-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조합, 공공기관 등)에게 사업비를 기금 지원하여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모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관련예산

(주택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13,600	337,000	△76,600	△18.5
가로주택정비사업	402,100	322,500	△79,600	△19.8
자율주택정비사업	4,700	10,000	5,300	112.8
이차보전	6,800	4,500	△2,300	△33.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

* 자율주택정비 49억원(5개소), 가로주택정비 3,803억원(153개소), 이차보전지원 30억원(42개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4.3.19., '24.11.5.)

*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노후도 요건 완화(現2/3→60%, 관리지역 50%),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허용(現1만m^2미만→1.3만m^2미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구역 요건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 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24.9.30.)

* (주요내용) 소규모재개발사업 접도요건 완화(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너비 20m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도 허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사업비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활성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및 법령 정비 등 지속 추진

31	Ⅱ-2-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공공주택정책과
과제목표	○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 '23~'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관련예산

(주택도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영구임대출자	82,321	43,116	△39,205	△47.6
▪ 국민임대출·융자	275,019	260,754	△14,265	△5.2
▪ 행복주택출·융자	1,367,102	573,003	△794,099	△58.1
▪ 통합공공임대출·융자	2,617,429	3,124,111	506,682	19.4
▪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6,046,322	3,317,464	△3,753,858	△53.1
▪ 전세임대경상보조·융자	4,692,221	5,274,165	581,944	12.4
▪ 공공임대융자	818,896	662,758	△156,138	△1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5년 공공임대 13.5만호 공급(건설임대 4.4만, 매입임대 4.7만, 전세임대 4.5만)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 대상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신설 및 공공임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등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지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4.8.23.)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24.12.)을 통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 신설. '24년 하반기 첫 공모를 통해 5곳 1,234호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하여 공급 확대(年 1천호 → 3천호)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활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감소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이 기존 생활거점 또는 원하는 지역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32	Ⅱ-2-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택기금과

과제목표

○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로 지원

관련예산

(주택도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A)	'25예산(B)	전년대비	
			증감(B-A)	%[(B-A)/A]
▪ 구입전세자금	10,671,445	14,057,155	3,385,710	31.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기금운용계획 106,714억원 중 87,550억원을 집행함에 따라 추진목표 달성(집행률 82.0%)
* 기금재원 外 은행재원을 통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전체 지원 증가('23년 47.0조원 → '24년 54.7조원)

- 신혼가구 94,227건, 청년가구 169,741건 등 총 347,887건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지원

- 특히, '24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24.1.)을 통해 출산가구 지원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24년 기금운용계획 106,714억원 중 87,550억원을 집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 기금운용계획 140,572억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출을 지속 시행

33	Ⅱ-2-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지원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
○ 주거급여 보장 수준 확대

주요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
○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별 보수한도액을 상향하여 수급가구의 주거여건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주거급여지원	2,726,586	3,036,823	294,387	10.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 증가

- 수급가구 '23.12월 141.5만가구 → '24.12월 148.3만가구

* '23년 기준중위소득 47% → '24년 기준중위소득 48% (3인가구 기준 208.4 → 226.3만원/월)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준임대료 인상(급지·가구원수별 1.1~2.7만원 인상)을 통해 월평균 급여액 '23.12월 18.1만원 → '24.12월 19.2만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최저보장수준 지속 확대

- '27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및 보수한도액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속 인상 추진

34	Ⅱ-2-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거복지정책과
	과제목표	○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지속 공급			
	주요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설계가 반영된 건설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수도권 8%, 비수도권 5%) 지속 공급			
	관련예산	○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에 포함되어 산출 불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편의시설이 기본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 총 3,258호 공급(LH 공급) * 수도권 2,627호(공급비율 10.22%), 비수도권 631호(공급비율 6.46%)

결과분석	추진성과	○ 주거약자용 주택 3,258호 공급(LH 공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주거약자용 주택 지속 공급 추진

35	Ⅱ-2-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주택임대차기획팀
과제목표	○ 임대차 시장 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추진			
주요내용	○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제도 마련 ○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7,326	6,495	△831	△11.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준공('24.4.)

○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TF 2회 개최('24.7., '24.9.)
- 임대차2법 연구결과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사항 논의

○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24.1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24.11.18.) 및 외국인 임대차 수요자를 위한 영문 보도자료 배포('24.12.2.)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24.11.)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포함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4.12.)

○ 임대차 당사자간 분쟁해소를 위한 '24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전국 12개소)
-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876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23,59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연구결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TF 활동 등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중 ○ 주택임대차계약 교육 동영상 유튜브(국토부, EBS 통합) 조회수 78.9만회 이상 달성으로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국회 등과 함께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 국민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36	Ⅱ-2-⑰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험정책과(상병수당추진단)
과제목표	○ 질병·부상 발생 시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통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적시치료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주요내용	○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시범사업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4,605	3,614	△10,991	△75.2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4,605	3,614	△10,991	△75.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3단계 시범사업 시행)** 3단계 시범사업 지역 공모(2월), 선정(4월) 및 시행(7월~)

구분	1단계('22.7월~'24.12월)			2단계('23.7월~)		3단계('24.7월~)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50%
모형구분	근로불가	근로불가	의료이용	근로불가	혼합근로불가	근로불가
대상지역	부천·포항	서울종로·천안	순천·창원	대구달서·안양	용인·익산	전주·원주 충주·홍성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7일(재택·외래), 없음(4일 이상 입원)	7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50일	150일

- 3단계 지역 '집중신청기간' 운영(10.14.~11.15.) 및 시행 초 제도 미인지로 인한 신청기한 도과 등 구제(202건)

○ **(2단계 모형 전환)** 용인·익산 지역은 입원치료 외에 재택 및 통원치료 인정하는 모형으로 전환하여 수급권 확대('24.10월~)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 서류 간소화('24.1.), 주기적인 실적 분석(연구용역 병행), 지역별 협의체* 운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개선 소요 도출 및 반영**(7월~)

* (구성)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의료공급자, 공익대표 등 11명 이내(운영) 분기별 1회, 시범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개선사항 발굴, 홍보 진행

** 취업자기준 완화, 재산기준 폐지, 참여의료기관에 한의과 포함 및 지원금 인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급자 만족도)** 수혜자들의 만족도 측정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음

구분	가중치	'20.	'21.	'22.	'23.	'24.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급자 만족도(%)						
▪ 목표	0.5	신규	신규	65	70	75
▪ 실적	0.5	신규	신규	66.1	70.3	74.3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

○ **(운영실적)** '22.7월~ '24.12월 상병수당 16,345백만원(18,565건) 지급, 1인당 18.8일, 88만원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범사업 지속운영 및 효과성 평가, 본사업 관련 쟁점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사업 도입방안 마련('27.)

37	Ⅱ-2-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사회서비스과

과제목표

○ 의료, 돌봄 등 농촌에 부족한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주요내용

○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농촌 왕진버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추진

○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돌봄마을 등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

관련예산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28,795	28,782	△13	△0.05
(농촌형보건의료지원)	3,326	4,096	770	23.2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	21,973	20,400	△1,573	△7.2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4,300	6,500	2,200	51.2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348,396	344,398	△3,998	△1.1
(연금보험료지원)	149,320	148,316	△1,004	△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의료서비스>

○ 농촌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 도입 운영('24년~)

* 농촌 지역의 고령자, 취약계층, 농업인 등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구강관리, 검안 등 의료서비스 제공(약 9.1만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 18,687명에게 근골격계, 농약중독 등 농작업성 질환에 특화된 검진 서비스 제공

- 50개 시·군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제공하고, 그 중 14개 시·군에 이동검진 운영

<돌봄서비스>

○ '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지원

- 농촌돌봄농장('23. 92개소 → '24. 97개소), 농촌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23. 30개소 → '24. 33개소)

○ 농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추진('24. 3개소)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8.17.)을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추진 경과: '23.8월 법률 제정 → '24.8월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보험료 지원> ○ 농업인의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개정('24. 9월) (기존) ~'24년 → (개정) ~'31년까지(7년 연장)

결과분석	**추진성과**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노력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협의 및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등 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사회안전망 확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농촌 고령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인·농촌주민의 복지 향상 - 농촌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육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농촌돌봄농장)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 등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제공,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38	Ⅱ-3-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공공의료과

과제목표

○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하여 지역 내 지방의료원, 권역 필수의료센터, 민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필수의료 연계·협력 구축
○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85,409	236,963	151,554	177.4
(공공보건의료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19,346	100,710	81,364	420.6

※ 기존 세부사업(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에서 일부사업 이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인력확충 통한 공공성 강화**
- ▲기관별 신·증축*, ▲노후 설비·의료장비 개선, 분야별 전문화(응급, 감염, 재활, 노인진료 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신축(대전, 경남 진주, 서부산), 이전신축(삼척), 증축(서울, 부산 등 17개소) 영월의료원 이전신축('22.12.~),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24.8.~) 예타 통과

** 기능보강사업 예산(국비) : ('23.) 1,136억원→('24.)1,408억원(+272억)

- 대학병원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증원*** 및 지역 필수의료분야 진료공백 최소화 위한 **시니어의사제** 개시**

* (파견의료인력지원) ('22.) 55명(55억원) →('23.) 60명(60억원) →('24.) 80명(80억원)

** (시니어의사제) 34개소, 80명 채용지원금 지원가능한 예비비 1,390백만원(국비100%) 확보

○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통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인프라 확보**
- 책임의료기관 **총 14개소*** 추가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 16→17개소(+1), 지역책임의료기관 42→55개소(+13)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방안 마련 및 추진**
-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위한 수술실 확충, 중환자실 현대화 등 **시설·장비 투자 착수('25년 국비 812억원** 편성)
- 국립대병원 핵심진료과 유지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예외되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24.10)**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 월례간담회(6회), 대표자회의(4회), 실무협의체(2회), 연석회의 및 정책토론회(3회) 등 개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프라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위한 인건비·사업비 지원으로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 위한 지원체계 지속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역 중증·필수의료 진료체계유지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 운영비 등 미반영

향후추진계획

○ 진료권 재검토 필요성 대두에 따라 「제3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6~'30)」내 진료권 재설정 위한 계획 마련 예정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방안 지속 마련

○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인력확충 통한 공공성 강화 사업 계속 추진

39	Ⅱ-3-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노인건강과

과제목표

○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관련 정보가 통합 구축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매관리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개편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중증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치매환자가 전담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시·군·구별 치매안심마을 조성 확대 및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이용·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확대 시행 등 추진
-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 및 인식개선 홍보 지속 추진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경도인지장애·7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집중 검사관리 추진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중 선별검사 무료 제공, 진단검사는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치매관리체계구축	191,989	178,235	△13,754	△7.2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4,094	4,452	358	8.7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293	569	276	94.2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67,047	150,577	△16,470	△9.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치매환자 관련 정보 연계 지속 추진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실시('24. 4월~),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2차연도 실시(126개소) 및 희망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통한 치매의료 인프라 확대 : ('22.) 10개소 → ('23.) 16개소 → ('24.) 22개소
-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대상 '성과기반 인센티브' 2차 시범사업 운영 및 중간평가 실시('23.1.~'25.12.), BPSD가 심한 치매환자 대상 집중치료 및 지역사회 복귀 도모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치매·관리 및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문제 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1차년도 실시('24.7월~)*

* (현황) 22개 시군구, 162개 의료기관, 의사 203명 참여 중('24.12월 기준)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실시('24.7~12월. 48개소 선정) 및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지속('24년까지 후견심판 청구 680건, 인용 599건, 후견인 후보자 1,459명 양성) - 치매 용어개정 관련 의료계 및 유관기관, 이해관계단체 대상 간담회 진행(9월, 11월)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진 사업 실시 등 선별검사 1,484,973건, 진단검사 115,566건, 감별검사 37,626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등을 통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도모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및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으로 양질의 치매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실시 및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속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거주 지원 강화 -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용어 법률개정안 발의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조기발견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정보 연계 지속 추진 - 2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차연도 실시 및 치매프로그램 질 관리 평가체계 시범 적용 실시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지속 추진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년도 실시('25.7월~)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추진 -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지속 - 국회 발의된 용어 포함 대체용어에 대해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용어 변경 지속 추진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진 사업 지속 실시

40	Ⅱ-3-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 · 보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의료기관정책과
과제목표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적용 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주요내용	○ 환자안전지표 고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정책과제와 연계한 신규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확산('23.~'24.) - 국가 수준의 지표 수집 및 산출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25.) - 국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문화 측정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지표 활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26.~'27.)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11,845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지원)	10,672	11,152	△480	△4.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표 활용 결과 모니터링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에 환자안전지표 선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보건의료기관 차원의 지표 활용 방안 및 개선활동 결과 모니터링

결과분석

추진성과	○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의 보급 및 활용 안내,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상 교육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활용률 100% 달성('25.1.31.기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환자안전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보급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형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확산' 사업 결과 검토를 통해 실효성 높은 신규 지표 선정, 국가 수준의 지표 수집 레지스트리 구축 기반 조성

향후추진계획

○ 환자안전지표 보급 계획 수립, 지속적인 신규 지표 선정 및 고도화 추진
- 신규 지표 중 유관기관, 전문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과의 논의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단계적 보급 방안 마련
- 지표의 정의, 측정산식, 조사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 및 안내, 보건의료기관별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방안 검토

○ 환자안전기준 개정 검토
-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는 기준 개정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춘 세부지침(병문안 기준, 시설 및 장비, 안전 관리체계, 직원 안전 등) 현행화 검토

41	Ⅱ-3-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공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의약품관리지원팀

과제목표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환자의 적기 치료 지원

주요내용

○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원료 및 완제품 국산화 추진**

-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기술 개발 지원

○ **원료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마련**

- 일부 특정 수입국에 대하여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 중단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 대응을 위한 수급 모니터링 실시
- 위험요인 사전포착·전파, 관련 품목 국내 생산·비축량 점검, 대체 의약품 허가 여부를 감안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화·비축 등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도입 인정을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속**

- 현재 지원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도입 인정을 지속함으로써, 희귀난치병 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 긴급도입 제도: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나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의약품을 구입하여 공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희귀·필수의약품센터지원	3,330	4,541	1,211	36.3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예산 운영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희귀·필수의약품의 원료·완제 국산화 지원**

- '22년부터 필수·원료의약품 공급 등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연구사업'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고혈압 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의 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23.12월)하였으며,

* 원료·완제의약품 공통(3개): 아미오다론(부정맥 치료제, 완제:주사제·정제)
원료의약품(2개): 케토코나졸(진균 치료제), 벤세라지드(파킨슨증후군 치료제)

- 추가로 5개 의약품**(원료의약품 3개, 완제의약품 2개)에 대한 생산 기술도 개발 완료 예정(~'26년)

** 원료·완제의약품 공통(3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 푸로세미드(간성부종 등 치료제)
원료의약품(2개): 이프라트로피움(천식 치료제)

○ **원료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마련**

- **(공급기반 구축)** 현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은 「공급망안정화법(기재부 주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선정

* 공급망기금(수출입은행) 활용 금융지원(우대금리 대출), 조세감면 등 적용하는 지원정책이 적용될 예정

- **(수급 안정화)** 완제의약품 허가 전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를 허가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조원 등록을 신속 처리하는 등 원료의약품 공급처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 **해외 의약품 긴급도입을 통해 국내 미허가 희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지속** - **(국내 미허가 제품)** 질병청·경찰청·원안위 등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내 허가되지 않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와 3세대 두창백신 등을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도록 조치(5건) ※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24.12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인마젭'('24.12월) 등 - **(국내 공급중단 제품)** 채산성 부족 등 사유로 국내 공급이 중단된 협심증, 부정맥 치료제, 전신마취중 기관지 삽관을 위한 근이완제 등 의약품을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도록 조치(14건) ※ 협심증, 부정맥 치료제(베라파밀 주사, '24.12월), 쿠싱증후군(케토코나졸정, '24.3월) 등 긴급도입 필요성 인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가능케 하여 희귀난치 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수입의존도 높은 국가필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술(공정) 개발 지원(~'26),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 원료의약품 모니터링(지속) ○ 특정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귀·필수의약품 등 국민 보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외 의약품 공급(지속)

42	Ⅱ-3-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

○ 장병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병원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격오지 장병들에 대한 원격진료 확대 및 군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후송능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기타 진료지원비	37,059	33,542	△3,517	△9.5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16,559	10,502	△6,057	△36.6
(장병 외진셔틀버스)	6,126	8,851	2,725	44.5
▪ 여군 부인과 이용지원	74	87	13	17.6
▪ 일반의무장비획득	21,627	22,825	1,198	5.5
(원격진료체계)	1,335	713	△622	△4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민간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장병의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 지원 확대
- (지급절차 개선) '24년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도입 및 지급주기 확대 (월 1회 → 월 2회)
- (지원 대상자 확대) 학군 군간부후보생 대상 소집훈련 기간동안 진료비 지원
- (지원범위 확대) 병사 정신건강진료비 지원범위를 기존 급여항목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지원
- (여군 산부인과 이용비 지원) 여군의 모성 보호를 위해 부인과 이용비 지원 (계속)

○ **(군의료기관 접근성 개선)** 장병들이 군병원 이용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진셔틀버스 확대
- (외진셔틀버스)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외진버스 노선확대 및 운행횟수 증대 추진 ('23년 66대 → '24년 77대)

○ **(원격진료 확대)** 군의관이 미보직된 격오지 및 함정 내 원격진료체계 확대 도입
- (격오지)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8개소에 원격진료체계 추가 구축 (89개소 → 97개소)
- (함정) 군의관이 보직하지 않는 함정 22척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체계 추가 설치 (3척 → 22척)

결과분석

추진성과

○ 현역병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절차 개선을 통해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평균 185일 → 35일)
- '24년 KIDA 조사결과, 장병이 원할 때 군 외부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는 92.3%가 긍정적으로 답변

○ 원격진료체계 확대를 통해 격오지 부대 및 함정 근무장병들의 진료권을 보장
- '24년 원격진료 실적은 총 7,099건으로 목표치인 최근 3년 평균 6,859건 초과 달성
- '24년 KIDA 조사결과, 장병이 원할 때 군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는 90.4%가 긍정적으로 답변

○ 외진셔틀버스 확대 도입을 통해 전방부대에 있는 장병들의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성 증진
- 외진셔틀버스 확대 ('23년 66대 → '24년 77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민간병원 지원)** 군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민간병원 이용의 효과성 증진

○ **(후송능력 강화)** 외진셔틀버스 확대 및 의무후송전용헬기 추가 전력화를 통해 후송능력 강화

○ **(원격진료 확대)** 격오지 부대 및 함정 대상 원격진료 소요발굴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완화 추진

43	Ⅱ-3-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영유아안전정보과

과제목표

○ 학교·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교육(지원)청, 급식 전문가(교수 등))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지원 강화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학교·유치원의 위생관리 역량 제고

주요내용

○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 및 컨설팅 실시, 연수 지원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급식의 위생관 우수사례 등을 발굴·전파하여 학교의 위생관리 역량 제고

관련예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교급식 내실화 지원	3,145	2,863	△282	△9.0
- 학교급식 내실화 지원	3,145	2,863	△282	△9.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학교급식 위생·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실시
- 학교 급식시설 개학기 자체 전수점검(연 2회), 교육청 주관 모든 학교 전수 점검실시(연 2회), 신설학교 등 취약학교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식약처 주관 급식업체 점검 실시(3,246교)

○ 학교급식 종사자 등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
-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 개발·보급(위생교육 가이드(1종), 교육 PPT(12종), 카드뉴스(8종))
-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대응 및 예방 관리 등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24.7.)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도교육청 급식 관계관 회의 개최('24., 5회)

○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보급('24.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연 2회 이상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급식소 위생점검 : 연 2회

○ 학교급식 관계자 등 위생관리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 식중독 예방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4.) 230명
- 유치원 급식 컨설턴트(영양교사 및 공무원) 양성 : ('24.) 136명
- 유치원·학교급식 위생관리 교육 자료 개발·보급 : ('24.) 교육자료·동영상·카드뉴스 등

○ 우수사례 발굴·전파
- 학교급식 우수사례 발굴 ('24.) 11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컨설팅) 지속 추진

○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 지속 추진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속 추진

44	Ⅱ-3-⑦	흡연 · 음주 예방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주요내용	○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안내('24.1.18.) ○ 각급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 전국 각급학교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음주 예방교육자료 지원 지속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 ※ 금연 웹툰, 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학교 내 흡연금지 사전 안내 등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12.7.) 제도개선 참조 ○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24.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다양한 자료들로 관련 교과 시간에 학생 대상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인식개선 - 금연 후 식단관리, 간접흡연의 위험성, 담배거절하기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청소년의 실생활에 밀접한 흡연 예방교육 ○ 교사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정규수업, 재량시간 등을 통한 흡연·음주 예방 교육 실시(계속) ○ 교사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계속) ○ 중·고등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지도서 수정·보급('25.상반기)

45	Ⅱ-3-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마약정책과

과제목표

○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스토리가 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

○ 자연스러운 경험 습득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양방향 소통 강화

○ 깊이 있는 정보전달과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메시지 전달

주요내용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연중)
- 메타버스·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 예방교육에 활용(~12월)
- MZ세대의 관심 유도를 위해 유튜버 협업 쇼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메시지 전달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및 운영**

- 24시간 상담가능한 1342[용기]한걸음센터 운영(3월~) 및 [함께]한걸음센터 전국설치,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 방지에 기여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및 지도점검**

- 의료용 마약류 관리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처방·분석통계 제공, 오남용 실시간 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오남용 관리를 위한 정책 운영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 차단을 위해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범부처 기획·합동 점검 실시(연중)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조치기준 위반 처방 사실을 알리고 추적관찰을 통한 처방 개선 여부 관리(연중)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7,615	9,015	1,400	18.4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5,993	16,456	463	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옴니버스형 광고 영상 제작 및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송출
-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활용한 참여형 홍보콘텐츠 제작
- 전문가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

* (KBS) 생로병사의 비밀, (EBS) 마약,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 (유튜브) 닥터프렌즈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맞춤형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확대**

- 청소년·성인 등 대국민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도서산간 지역 등에도 혜택이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확대*

  * 마약류 예방교육 실적: ('23년) 8,750회(691,785명) → ('24년) 32,206회(2,283,182명)

- 10개 대학*과 함께 대학 내 캠페인(22회), 마약예방부스(10회), 특별 강연(21회) 등을 통해 대학생·유학생의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24.8월~12월)

  * 고려대, 총신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한동대, 조선대, 을지대

- 올바른 마약류 인식 산을 위해 지역 내 행사 등과 연계한 마약류 예방 캠페인 실시(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62회의 캠페인 활동 실시)

- 청소년·대학생의 마약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우수 동아리·활동 선정 및 표창(5점의 우수작 선정 및 식약처장상 수여)

○ **마약류 관련 정보·교육·상담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플랫폼을 통해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등 전 부처의 교육 교재·영상, 언론 기사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활용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 뉴스·보도자료 1,289건, 정책 정보·홍보자료 179건, 온라인 교육영상 26건 운영('24년 기준)

○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교안평가 협의체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표준안 4종 마련 및 배포

- 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교육극** 등 체험형 콘텐츠개발

  * VR콘텐츠 개발 : ('23년) 2종 → ('24년) 5종 추가(유아, 청소년, 학부모, 운전자, 외국인)

  **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극 운영 : ('24년) 1,013회(206,249명) 실시

- 전문 작가와 협업하여 대상별 맞춤형 만화·웹툰*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학습만화: 유아, 초등 1~2학년 등 4개 대상 5화씩 /
  웹툰(살아남은 약속): 인기 웹툰 '살아남은 로맨스' 외전편으로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연재(총 8화)

○ **예방·사회재활 인프라 확대에 맞춰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24.1.30.)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3.15.)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기존 20~36시간에서 현장실습 등을 포함하여 대폭 세분화·확대*한 교육과정 개발로 전문성 강화

  * (~'23년) 20~36시간 온라인 교육 → ('24년) 130~220시간 이론·현장실습 교육(식약처 인증)

- 마약류 예방·재활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운영*

  * 인증 대상자 : 총 88명(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77명, 사회재활상담사 11명)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및 운영>

○ **마약류 사회재활 인프라 확대로 재활 기능 강화 및 접근성 제고**

-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육-상담-재활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함께한걸음 센터(14개소 신설) 전국 확대·설치*

  * ('23년) 3개소(서울중앙, 부산, 대전) → ('24년) 17개소(전국 14개소 신설)

- 약물별·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중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 약물별(대마, 향정, 의료용마약류), 대상별(청소년, 가족)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중들의 거부감 억제를 위한 용기·함께한걸음센터 약칭·캐릭터* 개발 및 홍보로 이용 활성화 추진

* (청정이) 마약류 예방을 통해 마약청정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새로이) 마약류 재활사업을 통해 중독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

○ **시간·장소 제약 없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본격 운영**

- 오남용·중독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마약류 투약으로 비이성적·혼미한 정신 상태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1342)* 지정

* (1342 번호 의미)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는 센터

-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42용기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 구축*

* 1342 용기한걸음센터 실적: ('24년) 4,502건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및 **범부처 유기적 연계 강화**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기소유예 대상자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 대상, 정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제·개정

-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역량 집중 및 유기적 연계강화를 위해 범정부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 개최·운영(1.31, 4.4, 8.23, 12.1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및 지도점검>

○ **마약류 관리 대내외 협력·공조체계 강화**

- 제1차 범부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추진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점검 및 기본계획(안) 논의

* (1차, 3.26) (실무협의회, 6.19) (2차, 6.26) 25년 인력조직 및 예산 요구안 및 기본계획(안) 논의

○ **하수기반 신종·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분석** 추진

- 사업계획 수립('23.12월), 공고('24.1월), 계약('24.2월) 및 사업수행(~'24.12월)

○ **신종물질의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한 국내 반입·유통 차단**

- **(마약류 지정)** 유엔 신규 통제물질과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지정(연중)

-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발굴하여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연중)

○ **처방단계의 오남용 사전 차단을 위해 의사가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시행**

-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원천 방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자동 팝업** 및 확인 후 처방전이 발급되도록 기능 개발

* 펜타닐 처방 이력이 있는 160개 처방 소프트웨어 및 2,885개 병의원 대상으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자동 팝업 연계(~'24.6)

** 마약류 불법사용·의료쇼핑·과다사용·안전사용기준 초과 의심사용 환자 선별하고 환자별 위험등급을 신호등((주의등급(●), 관심등급(●), 일반등급(●))으로 표시

- 시스템 오류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 대응을 위한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12월) 및 미조회 의사 대상 현장점검·유선확인을 통해 상담 및 조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의심사례를 발굴하여 범부처 기획(합동)점검 강화**

- 다양한 테마를 선정*하여 식약처 주관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의심 기관 대상 경찰·지자체 등과 기획(합동)점검 실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 셀프처방 등), 불법유통·취급(사망자·타인 명의도용, 구입·사용 미보고 등) 관련 등

  ※ 의료용 마약류 점검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23.4～)

- 기획(합동)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운영**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 후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오남용 조치기준')」 제정('22.4월)

- '24년 오남용 정보제공 및 처방·투약금지 조치 운영방안 마련 및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대상 정보제공(1,114명, '24.5월)

- 정보제공 대상 의사 중 조치기준 위반 여부 추적관찰('24.6~8월)

- 추적관찰 기간 중 의학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사본인 의견수렴('24.10월) 및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운영('24.11월)

- 전문가 검토 결과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처방 의사 등에게 마약류 취급금지 조치 사전통지

○ **의사의 처방단계에서부터 불법·과다·중복 처방 등 차단·관리**

-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제정 완료('20.~'24.6월), 동물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국내 처음으로 마련

  * 사용 대상, 용량 및 기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 수록

- 청소년에게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사용량이 급증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고시)에 신설*('24.9월)

  *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기간·대상 및 사용량의 기준을 제시

- 중독성·의존성이 높고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마약류(프로포폴 등)를 의사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2항('24.2.6.개정, '25.2.7.시행)

-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대상 모니터링·정보제공(알림톡, 연 6회)

-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중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효능군(32종)을 처방한 의사·수의사별 처방 통계 온라인 제공(4회)

○ **남은 마약류로 인한 사고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 운영**

- 마약류 오남용 사고가 발생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중심으로 경기도(부천시) 및 전국 6대 광역시의 종합병원 인근 약국 운영

- 사업 내실 강화를 위해 경북대병원과 함께 처방량 대비 복용량, 잔여량에 대한 설문조사 병행

- 참여 약국(100개소) 이외 인근 의료기관(약 51개소)까지 홍보를 확대*하여 국민 참여 유도

  * ('23년) 참여 약국 대상 포스터, 스티커, 비닐봉투 → ('24년) 의료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추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내실화 및 확대**(연중) - 메타버스·VR(가상현실)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1342 용기·함께한걸음센터 구축·운영**(3월) -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재활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펜타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6월) - 펜타닐 처방 시 환자 과거 1년간 투약내역 확인으로 의사는 과다·중복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어, 환자의 오남용 원천 차단 ○ **빅데이터 기반 오남용·불법유통 점검**(연중) - 마약류 통합정보를 통해 인지된 사항 등을 감시 주제·대상 선정 시 활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과 교육콘텐츠 제공 확대**

-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지원 확대와 소외 계층 없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교육부·여가부 등)와 협력 강화(~'25.12월)
- 교육 몰입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교육극, 메타버스,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제공 확대(~'25.12월)

○ **마약류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 실시(7월~)
- 약물별·대상별로 수요자의 특성(성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확대

○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대상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속**(연중)

○ **빅데이터 분석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하는 의사 대상 정보제공 및 추적관리 지속**(연중)

○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 단계적 확대 추진**(6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측 및 방지를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3개년 사업으로 구축**('24.~'26.)

○ **환자가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개선**('25.12월)

46	Ⅱ-3-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의 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보건 공공기술 개발 및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환경성질환 질병부담 저감 및 환경보건 선진화 구축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환경 거버넌스 기반 강화 및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국민 체내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 71종의 노출수준 파악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환경유해물질 노출관련 설문조사, △혈액학 검사 등 환경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임상검사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공기술 개발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환경보건콘서트 및 환경보건이동학교 등 교육·홍보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환경건강연구)	1,830	1,830	-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R&D)	16,276	16,900	624	3.8
▪ 환경보건 디지털조사 기반 구축 기술개발사업(R&D)	2,007	-	△2,007	사업종료
▪ 환경보건센터 운영(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4,744	4,74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5기 기초조사 결과 발표 및 제6기 확대 추진

- (제5기) 제5기('21.~'23.) 연령별·성별 환경유해인자 체내 농도 및 노출환경을 종합 분석하여 전국민 노출 농도의 대푯값 등 결과 공표('24.12.)
- (제6기) 체내 잔류성 등을 고려한 환경유해인자 분석물질* 및 설문항목** 등을 확대·개선하여 제6기('24.~'2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 64종 → 71종으로 확대 / ** 신규 노출원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노출평가 기반 강화

○ (환경보건 기술개발)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21개 과제 추진

❖ **환경성질환 및 환경보건 디지털 기술개발사업**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21.~'28.))**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12개 과제)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4개 과제)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21.~'24.))**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술개발(4개 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기술개발(1개 과제)

○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보건 지역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24.3.),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정책지원 등 환경보건기반 강화를 위해 18개 환경보건센터 운영(4,744백만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형 센터 확대 추진('24년 3개소 신규 지정), 환경보건 DB구축, 환경보건콘서트(5회, 1,647명 참여), 환경보건이동학교(76회, 1,647명 참여) 등 교육·홍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환경보건 기술개발) 오믹스 등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환경·건강 빅데이터 생산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기술 등 개발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이슈 대응,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 필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환경보건센터 운영)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환경보건 분야 정책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형 환경보건센터 신설 필요

향후추진계획	○ (환경보건센터 운영) 기후·환경보건 분야 정책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형 환경보건센터 신설 추진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6기 기초조사 추진(~'26.12) 및 결과 공표(~'27.12) ○ (환경보건 기술개발)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 이행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 R&D 지속

47	Ⅱ-3-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 자연 방사성 물질로서 흡연과 함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의 적정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주요내용

○ 실내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 : 한국환경공단) 지속 추진
- 현장 방문을 통해 라돈검출기 설치·측정, 저감 컨설팅 내용을 포함한 분석 결과서 제공
- 300Bq/㎥ 이상 고농도 마을회관, 주택 대상으로 저감시공 제공 및 사후관리 실시
○ 라돈 고농도지역 대상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8,964	7,961	△1,003	△11.2
실내라돈 관리대책	2,542	2,462	△80	△3.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남지역 라돈 집중 실태조사**
-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총 3,000여 호 대상 실내 라돈 농도 조사 및 주변 환경(토양, 암석 등) 총 200여 지점 대상 라돈 노출요인을 조사하여 전라남도 실내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 단독주택·마을회관 대상 실내 라돈 무료측정(2,159개소), 저감 컨설팅(알람기 보급 400개소, 저감시공 100개소) 지원 및 '23년 저감시공 시설 20개소 사후관리
* 실내 라돈 농도 148Bq/㎥ 초과 알람기 보급, 300Bq/㎥ 이상 알람기 보급+저감 시공

○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원**
- 전라북도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 실내 라돈 농도 조사, 주변 환경(토양, 암석 등) 라돈 노출 요인 조사 및 라돈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라돈 저감·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실현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대상 지역 전국 확대
-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에 대해 라돈 저감 컨설팅으로 총 74.6%(290.6→73.7Bq/㎥) 실내 라돈 저감(알람기 보급 59.4%, 시공 89.1% 저감)
- '23년 저감 시공 시설 사후관리 결과, 권고기준(148Bq/㎥) 미만 유지 90% 달성(2세대 측정 미동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필요

향후추진계획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지속 추진
○ 라돈 고농도지역에 대한 라돈 우선 저감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48	Ⅱ-3-⑪	환경성 질환 예방 · 관리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과제목표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임산부 7만명 모집(대규모 코호트 6만 5천명, 상세코호트 5천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유해인자의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지원*

* 벽지·장판지 등 교체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529	-	△529	순감
(건강나누리 캠프)	529	-	△529	순감
▪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11,067	8,448	-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5,146	5,146	-	-
(사회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1,788	2,156	368	2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111회, 6,770명 참여)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영유아·어린이(대규모·상세, 36~84개월) 대상으로 환경설문, 생체시료 채취·분석, 성장·인지발달 검사 등 추적조사 실시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에게 시설개선(장판, 벽지교체 등) 지원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 제공

* 진단·컨설팅 1,501개소, 시설개선 513가구, 진료지원 271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건강나누리 캠프 참여 아토피·피부염 질환 아동 조사 결과, 피부수분손실량 감소(39.2→ 33.8), 피부 수분도(18.0 → 37.6)는 증가하는 등 환경성질환 증상 완화 확인 ○ 코호트 중 임산부 연구결과를 활용해 생활 속 환경보건 실천가이드를 삽입한 '산모 환경보건 수첩' 제작·배포('24.12월) ○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150가구)의 시설개선(장판, 벽지교체 등)을 통해 개선가구의 곰팡이 저감율 56.6% 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환경유해인자 노출·거주환경 등에 따른 성장단계별 건강영향추적 지속 실시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이용권(상품·서비스, 실내환경 진단·컨설팅)을 도입·운영하여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49	Ⅱ-3-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성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팀명	위해예방정책과	
과제목표	○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및 안전강화				
주요내용	○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의 통합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 ○ 실생활 중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체 노출 총량을 고려한 유해물질 저감 ○ 통합 위해성평가를 위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관리 방안 협의 등 협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1,602	1,348	△254	△15.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용자 중심 통합 위해성평가 수행 및 노출저감기반 마련**

-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프탈레이트(7종) 및 알루미늄 평가 결과, 건강 위해우려가 낮은 수준임을 대국민 공개(4월, 홈페이지)
- **(위해성평가 수행)** 비스페놀(3종) 위해평가 완료 및 대체가소제(5종) 위험성 결정 완료('25년 위해성평가 완료 예정)
- **(노출 저감화 방안)** 중금속(납·수은·카드뮴·비소) 노출 민감군(영유아, 임산부 등) 대한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마련 추진*('24.~'26.)
  * ('24.) 기초자료(주요 노출원, 식품군) 조사 → ('25.) 저감기술 개발 → ('26.) 노출 저감 지침 마련 등

○ **실태조사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유해물질 함량 조사)** 인체적용제품의 대체가소제, 비스페놀, 난연제 함량 실태조사*(239품목, 2,566건)
  * ('22.) 프탈레이트 등 42종 → ('23.) 알루미늄 등 35종 → ('24.) 대체가소제 등 58종
- **(건강취약계층 섭취·노출 실태)** 영유아·임산부·고령자의 식품 섭취량 및 노출계수 등 조사*(1,400명)
  * 비스페놀 3종 및 가소제류 13종에 대한 사용량, 시간, 빈도, 이행량 등
- **(한국형 총식이조사)** 다소비·다빈도 섭취 식품을 대상으로 조리 단계에서 생성·감소 되는 과불화화합물(17종) 및 바이오제닉아민류(8종) 분석
-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3세 이상 국민 대상*, 인체시료(소변, 혈액) 수거·분석**, 임상검사 및 설문조사 데이터 확보 등 추진('23.~'25.)
  * 인체대상자: ('23.) 1,000명 → ('24.) 2,000명 → ('25.) 2,000명
  ** 인체시료 중 과불화화합물 20종, 프탈레이트(대체가소제 포함) 13종, 중금속 7종 분석(~'25)
- **(시험법 등)** 인체시료 중 유해물질 시험법 표준화 및 분석기술 지원 병행*(10월)
  * 납, 카드뮴, 니켈, 크롬, 알루미늄 등 중금속 동시분석법 개발, 인체시료 중 유해물질(가소제, 과불화화합물) 분석기술 프로그램 실시
- **(통합 DB 구축)** 유해물질 함량 실태조사 자료 등 위해성평가 기초자료 DB화* 및 인체바이오모니터링 데이터 디지털 표준체계 구축**(12월)
  * 가소제류(16종), 유해금속류(11종), 페놀류(16종) 등 식품(1,410건) 오염도 자료 업데이트 등
  ** 연구데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서 및 표준코드체계 마련 등

	○ **AI를 활용한 위해평가 기술 도입 등 스마트 평가체계 기반 마련** - **(AI 기반 위해평가 전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프로그램 이용 비스페놀F 위험성 정보 수집·분석 등(11월) - **(독성동태학적TK 모델 개발)** 비스페놀류(3종)* 노출량 산출(11월) 및 대체가소제(3종)* 노출량 산출을 위한 독성동태학적 모델 마련(12월) * (비스페놀류 3종) BPA, BPS, BPF / (대체가소제 3종) DEHT, DEHA, DINCH - **(차세대 위해평가 기술미래기술 연구)** 동물대체실험 등 미래기술 활용 위험성 확인 및 결정기술 연구 추진*('24.~'25.) * ('24.) 동물대체 시험 관련 기술 조사 → ('25.) 독성시작값 분석 및 적용 가이드 마련 등 ○ **국민이 체감하는 위해 소통 및 국내외 협력 강화** - **(위해 소통)** 다이옥신 노출 저감 생활 가이드 제공(7월), 유해물질 노출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10월), 소비자 위해성평가 요청제 운영(연중) - **(데이터 개방)** 프탈레이트류(7종) 및 알루미늄 위해성평가 결과 중 공개 대상 데이터 선정(품목별 평균 오염도) 및 개방(12월) - **(국제 조화)** 국제 규제기관 위해성평가기술 국제협력회의* 및 공동컨퍼런스 개최(5월), 식품화학물질 위해성평가국제협의회(ILMERAC)** 참여 * 위해성평가기술 국제협력회의 : 한국(NIFDS)·독일(BfR)·프랑스(ANSES) 참여 ** 식품화학위해성평가국제협의회 : 온라인 회의(6.20.)·세미나(9.4., 11.7.), 대면회의(12.2.) - **(관계부처 등 협력)** 범부처 실무협의회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추진*(11월) 및 위해성평가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연중) *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11.7.) **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 위원장 회의(3월) 및 위원회 개최(9, 10월) - **(역량 강화)** 위해성평가 관련 위해성 평가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식품위해평가 전문성 강화 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식약처, 지자체(시·군·구) 23명, 2일(13시간, 9월) ▸ 경력별 기본 교육(한국규제과학센터): 위해평가 관련 부서, 15명, 2일(10시간, 10월) ▸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지원(고대 식품규제과학과):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이해 특강(2시간, 9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성평가 체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 안전 중심 통합 위해성평가 수행으로 발전, 안전관리 수준 강화 ○ 통합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미래대비 차세대 평가 기술 개발 전략 마련으로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해물질의 통합 위해성 평가 수행 및 결과공개** - 비스페놀류(3종)의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25.4.) 및 니켈·대체가소제(5종)의 통합 위해성평가 실시 ○ **유해물질의 인체독성참고치 설정** - 과불화화합물(6종: PFOS, PFOA, PFNA, PFHxS, PFHpS, PFDA)의 인체독성참고치 설정 ○ **인체 위해성 평가 관련 기술개발** - 유해물질의 체내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독성동태 모델 확충, 생리학 기반 독성동태 모델 최적화 등 ○ **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50	Ⅱ-3-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기후적응과, 기후경제과
과제목표	○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			
주요내용	○ 기후 모니터링 체계 및 전망 기술 강화 ○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탄소 감축 유도			

관련예산

(기후대응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32,032	33,986	1,954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6,026	5,602	△424	7.03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10,000	10.000	-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지원	31,090	31,092	2	-
(2050 탄소중립 이행)	495	495	-	-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224,308	213,204	△28,590	△11.8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134,008	131,934	△19,560	△1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기후 모니터링 체계 및 전망 기술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부처별 산재된 적응정보를 표준화하여 일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구축 ISP 수립('24.2.) 및 위험요인별(폭염,한파,홍수,가뭄,태풍) 기후위기 리스크를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 ISP 수립('24.12.)
- (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전국 행정구역별로 기후노출 DB(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구축,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12개) 개선·반영

○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적응>

- (4차 대책 기반마련) 리스크 목록 현행화 및 중점 리스크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24.6.~10.), 적응강화대책 진단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4.8.) 및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추진
- (지자체 적응역량 제고 및 실행력 강화) 지역 적응대책의 실효성과 현장적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주민·전문가 참여단 구성·운영(연중), 국가·광역·기초 지자체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방 적응대책 수립 지침 개정('24.10.)
- (공공기관 적응대책 이행지원) 적응대책의 체계적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 적응대책 관리체계 구축 및 담당자 교육(연 2회)
- (산업계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정부-산업계간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확대·구성*하여 포럼(2회) 및 중점 역량강화(의류섬유, 자동차) 워크숍 개최(3회)를 통해 적응정보 공유

  * ('23년) 10개 업종 52개사 → ('24년) 19개 업종 74개사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서 작성 내실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적용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범평가서('24.5.~'25.5.) 및 사업자·대행자의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작성 매뉴얼 등 마련('24.1.0~'25.10.)

	- (제도 수용력 제고) 사업자·승인기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안내, 주요 평가사례 공유 등 설명회 및 교육(2회 실시, 8.8., 11.20.) 추진 등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 (적응시설)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적응시설 설치 중점 지원('24년 81억원, 57개 지자체), 지자체 사업 추진상황 점검(1.31.) 등 기후탄력성 강화 - (농촌형 쉼터) 야외 농촌 근로자 밀집지역에 냉난방 설비를 갖춘 쉼터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및 온열질환 예방 - (실태조사)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의 피해실태, 정책 수요 등 실태 시범조사 실시('24.8~9., 서울, 부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400명 대상) **○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탄소 감축 유도** - 배출권 시장 기능 회복 및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 선순환 체계 구축방안" 발표(10.18.) 및 후속조치*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통해 이월제한 기준 완화(순매도량의 3배 → 순매도량의 5배)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교체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배출효율을 개선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24년 1,277억원) - 2030 NDC 달성 및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대한 정책과제별 점검과 환류('24.5.)를 통해 적응대책의 이행력 확보 및 정책 실효성 제고 ○ 국가-지자체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방 적응대책 지침 개정('24.10.)과 지자체 적응교육(연 2회),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정부-산업계 적응협의체 확대·운영으로 기후위기 대응역량 확보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범평가서(에너지, 도시개발) 및 사업별(폐기물, 수자원, 에너지 분야) 평가서 작성 참고서 마련, 기후변화영향평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포럼·교육 등 실시 등으로 제도 안착 노력 및 계획·사업 등에 탄소중립 내재화 유도에 기여 ○ 맞춤형 적응시설 유형 발굴 및 시범사업*으로 폭염·한파로부터 농촌 야외근로자 보호 * (농촌형 쉼터 설치) 비닐하우스 밀집 단지 내 냉·난방 설비를 갖춘 쉼터 시범 설치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시행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피해실태 파악으로 정책 수요 확인 및 지자체 적응대책 활용방안 모색 ○ 배출량의 약 73.5%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지속적인 감축 지원을 통해 총배출량 지속 감소* 및 배출효율 개선**에 기여 * 국가 총배출량 '18년 725백만톤 → '24년 626.1백만톤 ** ('24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약 167,109톤 감축 예상(사업신청서 기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3차 적응대책 종합평가 및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제3차 적응대책 전주기('21.~'25.) 종합평가를 통한 주요성과 및 한계점 도출 - 민생안정과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 · 적응대책 수립 시, 모든 적응주체(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청년단체 등)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연중) ○ 부처별 산재된 적응정보를 표준분류체계로 연계하여 사용자 맞춤형으로 일괄제공 및 공동활용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추진('25.~)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안정화 - 대행자·검토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구체적 평가서 작성·검토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별 작성 가이드 마련 - 사업자, 대행자, 검토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평가 절차 全 과정을 진행하여 실제사례에 적용가능한 시범평가서 개발 ○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강화 - 야외 근로자 쉼터, 벽면 녹화 등 적응인프라 설치 지원,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위한 안내서 마련(~'25.12.)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확대 실시(2차) - 시범 지자체 2~3개소 선정(농어촌 1개 이상 포함), 도시 및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조사체계 구축 - 중점관리지역(유동인구 밀집도, 기후노출 지역, WBGT 문제 지역 등) 반영 강화 ○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내용이 반영된 할당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4차 계획기간('26.~'30.)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51	Ⅱ-3-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과제목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사업장 부문 대기환경 개선
-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및 취약시설 민생서비스 제고

주요내용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감축 지속
- 소규모 및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생활 주변 유해물질 배출 저감
- 한·중 맑은하늘(晴天) 계획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66,591	48,953	△17,638	△26.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49,200	31,536	△17,664	△35.9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2,400	-	-	-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	2,400	-	-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59,552	42,366	△17,186	△28.9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9,000	9,000	-	-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4,024	3,235	△789	△19.6
(한중 미세먼지 대응 공동연구)	3,057	2,267	△790	△25.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한·중 청천(晴天) 계획 세부이행방안 확정('24.3.) 및 이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공유회의('24.5., 영상) 및 사전교류회의('24.11., 영상),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 대기질 공동연구 워크숍('24.4., 중국/'24.10., 한국) 등 추진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728개소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비 개선 융자 승인 578억원(7개 사업장)

○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17,696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내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목표 대비 107% 상향 지원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비 개선 융자 목표 대비 72.3% 달성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17,696대), 초미세먼지 저감 기여 (1대당 PM2.5 저감량 0.217kg, '24년 지원물량에 따른 총 감축량 약 3.8톤/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한·중 청천(晴天) 계획에 따라 협력사업 계속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공유회의 및 사전교류회의,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 대기질 공동연구 워크숍 등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개편('25.) : 소규모 분산지원 → 집중관리지역, 집중지원 - 사업장 관리 패키지(기술진단 + 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후관리) 지원으로 지역대기질 개선 ※ '25.1.16.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및 대상지 선정(5개 지역, 국비 110억원) ○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융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과 통합 운영('25.) ○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대상 확대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 교체 시 LPG보일러 지원

52	Ⅱ-3-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생활환경과
과제목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사장·교통소음·층간소음 등의 소음·진동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정책 마련			
주요내용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도로변 교통 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등 추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등 층간소음 갈등 완화 추진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생활공해관리	6,839	6,940	101	1.5
소음진동관리대책	6,576	6,677	101	1.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공사장 등 소음관리 강화**
- 고소음 장비사용공사 맞춤형 가이드라인(안) 마련 및 동일건물 내 특정사업장의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24.12.)
-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폭음기(카바이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24.6.)

○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78개),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2개) 및 관리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현장측정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한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 도입·운영('24.9.), 상담심리사 현장상담 시범실시('24.2., 수도권) 및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서울중구) 등 갈등 해소 지원

* 현장진단 소음측정예약관리시스템 구축('24.2.~서울, '24.7.~인천·부산·울산·대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소음 장비사용공사 맞춤형 가이드라인(안) 및 폭음기 소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78개), 확성기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2개) 및 관리 ○ 층간소음 상담 시행 : 전화상담(33,027건), 현장진단(7,033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다양한 소음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와 소음발생원의 복잡·다양화로 인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미흡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와 주거 환경의 구조적 문제, 생활양식 다양화, 개인 중심 문화 확산으로 이웃 간 배려와 소통 부족 등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층간소음 민원 추이 : '15년 대비 '24 1.7배 증가(15년 19.3천건 → '24년 33천건) -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건설현장, 도로 및 철도의 확장, 교통수단(버스, 철도, 자동차 등)의 소음발생원 증가 및 소음원 다양화(풋살장, 드론 등)로 인한 소음관리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제5차 소음진동종합관리계획('26.~'30.)」 수립을 통한 소음·진동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및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한 소음관리 지속 추진
○ 환경소음 IoT 측정망을 활용한 소음관리 및 데이터 확보
○ 비공동주택 대상 지원 및 상담심리사 현장상담 지역 확대 등 층간소음 갈등 서비스 개선 등

53	Ⅱ-3-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국토환경정책과
	과제목표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주요내용	○ 국가단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고도화 및 강화 지원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컨설팅 추진('24.3.~12.) - (계획수립 초기 단계) 2개 광역자치단체, 7개 기초지자체 - (계획수립 중간 단계) 2개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지차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24.9.)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24.12.) - 국토계획 환경성 검토 전문성 강화, 환경계획 통합관리 검토 체계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통합관리 컨설팅 추진을 통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컨설팅 대상 지자체별로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미흡 ○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원 체계 한계

향후추진계획	○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컨설팅* 추진('25.6.~) * 통합관리 제도 설명,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통합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25.하) ○ 통합계획 수립 시범사업(2개 지자체) 시행(~'25.12.)

54	Ⅱ-3-⑰	필수 ·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보험약제과
	과제목표	○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확대를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 필수 · 고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제* 도입 · 운영 * (위험분담제) 약제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별도 환급계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방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등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총 24개 품목 급여등재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항암제, 중증 ·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약 4,500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불확실성이 높은 고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급여 확대 요구 증가

향후추진계획	○ 희귀질환치료제 및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계속) ○ 환자의 약제투여 성과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 운영(계속)

55	Ⅱ-3-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질병관리청	과·팀명	에이즈관리과

과제목표

○ HIV 감염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을 포함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에이즈 인식 개선 및 감염인 차별·낙인 해소 기대

주요내용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차별·낙인 해소를 위한 대국민·대상군별 교육홍보 강화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에이즈및성병예방	16,314	16,430	116	0.7
(에이즈및성병예방)	5,648	5,764	116	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전문인력 양성교육 시 HIV/AIDS 차별 금지 관련 교육 실시
  * 예비의료인 511명, 의료인 40명, 상담간호사 39명, 상담사 15명, 예방강사 9명
- 보건소 HIV/AIDS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5회, 5개 시·도)

○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고등학생용 HIV/AIDS 표준화된 성교육 자료 개발(PPT 및 교구, 교사용 교안, 동영상)(4월~12월)
- 학교 밖 청소년 선택검진 시 HIV 검사 실시 안내 협조 요청 및 홍보용 포스터(3종)·리플릿(2종) 배포(3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2개소)에 총 2,422부 배부
- 젊은 층 대상 SNS 채널,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옥외광고를 활용한 HIV/AIDS 예방 홍보 콘텐츠 확산
  * **(온라인)** 카드뉴스(6월), 모션그래픽(7월), 웹드라마(8월), 브랜드웹툰(9월), 카드뉴스(11월), 공익광고(11월) 등
  (오프라인) 질병청-대한숙박업중앙회 협업 홍보물(POP, 문고리택, 콘돔패키지) 제작 및 전국 숙박업소 배포(9월), 교통광고(KTX 열차 모니터) 및 디지털 게시판(아파트 타운보드) 광고(12월), 포스터(3종) 및 리플릿(1종) 유관기관 배포(11월)
- 건강한 성(性) 인식 제고를 위한 계기별 현장 캠페인 개최(9월, 1,000명 참가)
- 세계 에이즈의 날(12.1.) 현장 캠페인(3일간, 1,500명 참가)
- 에이즈 예방주간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12.1.~12.7.) 실시

○ 'HIV 감염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 협조 요청
- 의료인 대상 HIV 감염인 진료차별금지를 위해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적극 활용 당부(질병관리청 감염병 ALERT)
- 간호사 보수교육 내 HIV 관련 의료차별 내용 포함 여부 등 의견 조회(대한간호협회)
- 지자체 담당자 대상 HIV/AIDS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3월~4월)
  * 2025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과정(권역별, 총 5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 대상 HIV/AIDS 및 차별 금지 등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 상담간호사의 AIDS에 대한 낙인은 6점 만점에 교육 전 2.11점 → 교육 후 2.10점으로 감소, 상담수행 능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96 이상 - 상담사의 AIDS에 대한 태도는 10점 만점에 교육 전 7.53점 → 교육 후 7.678점으로 향상 - 예비의료인의 HIV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10점 만점에 교육 전 6.12점 → 교육 후 4.67점으로 감소, AIDS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교육 전 2.84점 → 교육 후 3.47점으로 긍정적으로 상승, AIDS에 대한 낙인 정도는 6점 만점에 교육 전 3.21점 → 교육 후 2.59점으로 감소 - 의료인의 HIV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10점 만점에 교육 전 6.65점 → 교육 후 5.52점으로 감소, AIDS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교육 전 3.11점 → 교육 후 3.30점으로 향상, AIDS에 대한 낙인은 5점 만점에 교육 전 3.08점 → 교육 후 2.79점으로 감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HIV/AIDS 교육·홍보 자료 배포(교육부, 여성가족부) - 세계 에이즈의 날(12.1.), 청년의 날(9월), 에이즈 예방주간(12.1.~12.7.) 등 대국민 캠페인 실시 -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의료차별 예방 교육·홍보 확대 - 의사 연수교육 내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교육 포함 방안 검토 - 전문인력 양성교육 시 HIV/AIDS 차별 금지 관련 교육 실시(상담간호사, 의료인, 예비의료인 등) - 지자체 공무원 대상 HIV/AIDS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배포로 의료행위 중 표준주의 원칙 준수 등의 내용 홍보

56	Ⅱ-3-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 공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 · 팀명	화학물질정책과

과제목표

○ 국내에서 유통·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인체·환경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과 하위사용자의 알권리 확보 및 화학안전사고 예방 등 기여

주요내용

○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거쳐 확보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및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자료 등을 제출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	47,559			
- 환경건강연구	10,676			
- 화학물질등록평가연구	1,450			
▪ 화학물질안전원연구사업*	-	2,709	△2,709	순증
- 화학물질등록평가연구	-	1,450	△1,450	순증

* 화학물질 기능 안전원으로 일원화('24.4.)되어 예산조정됨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된 유해성자료 등에 대한 심사 및 확보된 유해성정보 공개 지속 확대

- (심사) '24년 29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추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유해성심사)에 따라 '23년에 등록한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 대상

- (정보 확보·공개) 유해성 심사 결과 고시된 분류·표시 등 유해성 정보가 확보된 233종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공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심사, 보급 및 유통 지속 확대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여

- (자료확보 및 심사)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련 자료 확보, 심사 등 수행
- (정보 공개) 확보된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여 보급·유통 확대 및 화학사고 예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확보 정보 지속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보장 및 화학사고 예방 관리 기여

- ('21.) 2,328종 → ('22.) 2,623종 → ('23.) 2,875종 → ('24.) 3,119종 → ('25.) 3,360종 이상(예정, 누적)

57	Ⅱ-3-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의료과
과제목표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주요내용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 의료인력 확보 및 외부 전문의 진료 활성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의료비	13,248	15,726	△2,478	△18.7
▪ 원격화상진료시스템구축	505	505	-	-
▪ 정신질환전문인력양성	54	5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의무관 등 의료인력 확보
- 의무관 채용 16명
- 공중보건의사 86명 배치

○ 의무관 연봉 등 처우개선 노력(2024년부터 적용)
- 의무관 전체 정원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여 연봉 인상
- 일반임기제 의무관 연봉 상한 폐지

○ 원격화상진료 협력 병원 신규 협약
- 정읍 참조은병원 등 3개 병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의무관에 의한 진료 8,299,530건
- 외부의사 방문진료, 원격화상진료, 이송진료 합계 155,468건*

* 2023년 대비 내부진료 851,040건(11.4%) 증가, 외부의사 진료 608건(0.4%) 감소

년도	내부진료(건)	외부의사 진료(건)			
		방문진료	원격화상진료	이송진료	합계
2024년	8,299,530	56,425	49,868	49,175	155,468
2023년	7,448,490	58,598	49,129	48,349	156,076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민간대비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의무관 채용 어려움

○ 원격의료시스템 장비의 노후화

향후추진계획

○ 의무관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 사항 적극 홍보

○ 원격의료시스템 장비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58	Ⅱ-3-㉑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간호정책과
	과제목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합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7회, '22.12월~'23.3월) 운영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 실시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인력배치 상향 등 개선방안 마련('23.4.25) - 또한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12.21.)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23.4.25.) ○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23.12.2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 수 확대: 2,446,537명('23.12월) - 병동 참여신청서 개편(체크리스트 신설), 대국민 홍보, 참여 확대 독려 및 조사 등을 통해 전년대비 이용환자 수 20.8% 증가(직전년도 증가율 5.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추진

59	Ⅱ-3-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과제목표	○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주요내용	○ 급격한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의 변화로 병원·시설보다는 재가 중심의 일상적·주기적 지역의료·돌봄의 중요성 증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서비스 확충이 지연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가 저조한 상황으로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검토 필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6,880	7,130	250	3.6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6,480	6,480	-	-
(전문인력 양성·교육)	300	300	-	-
(모니터링 및 평가)	100	350	250	250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과제완료

'24년 이행실적

○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 내 통합적 지원의 근거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 추진
○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포럼 운영(6회)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고시 제정('24.11.29.)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 돌봄·의료 등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 제정으로 과제 목표 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26.3월)

60	Ⅱ-3-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보건의료정책과
	과제목표	○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			
	주요내용	○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24.2.23.) - 기존 시범사업은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환자를 분산하고 대면진료가 필수적인 환자의 병원 이용 지원 ○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24.4.3.)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외부파견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예방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24.12.2.)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출시 이후 제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고, 비만치료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처방될 수 있도록 유도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25.)

61	Ⅱ-3-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물자관리과
과제목표	○ 급식 및 피복체계 발전을 통한 장병 전투력 발휘 여건 보장			
주요내용	○ 보온력과 착용감을 향상시킨 전투피복체계 보급 ○ 군 급식체계 개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전투피복체계 보급('25년 하반기 전력화)	-	53,630	53,630	순증
▪ 군 급식체계 개선	1,731,520	1,684,395	△47,125	△2.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투피복체계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방한복, 기능성전투우의) 개선 및 보급
- 부대시험 : '24. 1월 ~ 8월
- 군사용 '적합' 판정 및 업체 계약체결 : '24. 9월
- 야전 운용적합성 평가중 : '24. 12월 ~

○ 군 급식체계 개선
-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전문업체((주)더본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 '24. 1월
- 민간위탁 급식 확대 및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 '24. 4월 ~
- 조리병 사기진작을 위한 군인요리대회 방송프로그램(전설의 취사병, KBS) 방영 : '24. 10월 ~
- 군 급식 혁신 TF 출범 : '24. 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기존 8종의 방한피복·우의류를 기능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피복 4종으로 통합·개선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 개선 및 전투력 향상 추진중으로 '25년 후반기부터 보급 예정 ○장병 선호를 고려한 급식을 위해 흰우유 의무급식 폐지*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확대 * '23년 200㎖ 235회 → '24년 폐지, ** '23년 1,800품목 → 3,300품목 ○급식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급식 확대*, 뷔페식 급식 시범 도입 * '23년 13개 부대 → '24년 26개 부대 ○혁신추진체계 내재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군 급식 혁신 TF 출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투피복체계 야전 운용적합성 평가 : '24. 12월 ~ '25. 3월
○ 전투피복체계 구매요구서 확정 : '25. 5월 한
○ 전투피복체계 장병 보급 : '25년 후반기 중
○ 민간위탁(뷔페식) 급식 확대 : '25. 4월 ~
○ 전문업체 협업을 통한 간편식/조리법 개발 및 시범 적용 : '25. 3월~

62	Ⅱ-4-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영유아재정과
과제목표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보육 점진적 확대 - 적정 수준의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관련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108,618	△3.4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108,618	△3.4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	-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시도교육청 기준재정수요 보통교부금에 '24년 5세 5만원 추가지원 예산 편성 및 확정교부 통지('24.2월, 총 173,539백만원)

○ 5세 대상 유아교육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시행('24.3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여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에게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추가 지원(인당 월 5만원)하여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아교육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대상을 '24년 5세에서 '25년 4~5세까지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25.2월, 총 327,160백만원)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63	Ⅱ-4-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평생직업교육기획과
과제목표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취업 지원 강화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장애대학(원)생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 교육과정 연계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강화 ○ 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병행, 수업 중 활용 영상물 제작 관련 장애인 편의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시·도 교육감과 협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포함)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학생 교육지원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3,417	2,975	△442	△12.9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운영	1,300	1,400	100	7.7
▪ 평생교육바우처지원				
- 평생교육바우처(장애인) 지원	2,185	2,848	663	30.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수립('22.12.6.), 3-3.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

-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추진('24.10.1.~2.)
- 범부처(교육・고용・복지) 연계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이력관리 지원
- 지역사회(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 지원('24. 3개교)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교육 콘텐츠(1종)* 개발・보급

* ('24.) 예술·체육, 사무지원, 식·음료제조 등 6개 직무별 교육 자료 등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장애대학생 학습 편의 제공 및 장애 인식개선교육 확대로 장애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

- 교육활동지원 69교, 보조기기 지원 58교, 대학자율사업 8교 등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안내(12월)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지침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 포함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3,092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모델 개발 연구('24.)를 통해 현장 수요를 고려한 정책 지원 방향 모색 ○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 및 자아성취감 고취 등을 위해 장애유형별 직업기능경진대회 운영으로 현장 만족도 제고 ○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 기여 ○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모델 개발('25.) ○ 통합적인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25.)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25.) ○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지속 확대('25.)

64	Ⅱ-4-③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생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집중점검 및 이전·폐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 (**학교주변 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강·안전 위협, 불건전 행위 및 시설 진입 규제, 잔존 유해업소 정비 등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 ①설정범위: (절대구역)학교출입문 50미터이내, (상대구역)학교경계 200미터 이내
②금지행위 및 시설: (절대금지)공해·성풍속업 등, (상대금지)유흥·오락·사행·숙박업종 등

○ (**교육환경평가 관리**) 학교주변 재개발, 학교신설 관련 '일조, 소음, 악취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항목* 평가(전문기관 사전컨설팅) 및 사후관리

* 학교위치, 통학권, 통학안전, 통풍, 조망, 일조, 교지면적, 교지형태, 지형 및 경사도, 풍수해, 교지이용상황, 토양환경, 대기질, 소음 및 진동, 금지행위 및 시설·위험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또는 학교주변 재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컨설팅 및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보완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개발	235	500	265	212.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및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실시

* 교육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참여 개학기 각 1회 / ** 시·도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수시 및 정기 점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무단 설치업소) 이전·폐쇄 조치 57건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또는 학교주변 재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및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보완

※ 교육환경보호 설정고시 지원 3,612건,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55명) 443회 활동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정적 업무지원
※ 설정고시 지원 3,612건, 보호구역 심의이력 등록 823건, 평가서 등록 949건

○ 교육환경 현안대응 기술지원 및 분쟁해결 지원
※ 현안대응 15건, 일조검증 16건, 사전컨설팅 28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관계기관(경찰서, 구청 등) 간 유해업소 관리카드 공유 등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인·허가 시설 외에도 신고로 영업하는 업종(마사지업, 성기구취급업소 등) 및 다수의 변종업종(뮤비방 등) 신설은 계속되고 있어서 점검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주변 불법 유해시설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자체점검(수시) 실시

○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보완을 위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실시(계속)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및 사업자 조치계획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 운영(계속)

65	Ⅱ-4-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제목표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여 센터로 연계된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학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8,888	29,408	520	1.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연계하는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24.3월)

※ (개정 전)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 → (개정 후)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 포함(6개월 이내 사후동의 진행)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26.) 및 시행('24.9.27.)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 ('22년) 44개소 → ('23년) 54개소 → ('24년) 59개소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꿈드림 멘토단 학습지원, 원격 강의·인터넷 수강권 지원, 대입 설명회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검정고시 및 대입 지원 강화

※ 검정고시 합격인원 : ('23년) 11,382명 → ('24년) 11,667명 / 대입설명회 : ('23년) 44개 센터(52회) → ('24년) 52개 센터(70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의무교육단계(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23년 46.2% → '24년 47.0%)과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23년 93.6점 → '24년 93.8점)가 향상되어 성과 제고

지원인원	성과인원		18,758명	지원서비스 건수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향상	
39,930명	14,941명	4,405명	3,753명	2,184,097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활동 및 또래소통이 가능한 전용공간 확대('24년 59개소→ '25년 64개소)

○ 비대면교육에 익숙한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공간을 지속 운영하고, 연령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등 지속 개발·보급

○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16개 시·도)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 추진

66	Ⅱ-5-①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 · 팀명	문화예술교육과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 교사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교육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8,315	72,106	△16,209	△18.3
(아동·청소년 꿈의 예술단 지원)	10,730	12,530	1,800	16.7

(언론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미디어교육 사업	3,085	4,312	1,227	39.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아동·청소년 꿈의 예술단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49개소, 꿈의 무용단 29개소, 꿈의 극단(신규) 20개소 거점기관 확대 운영 지원
- 참여단원 4,013명, 예술강사 804명, 취약계층 65% 참여

○ **(미디어교육 확대)**
- 교육부 인가 종합연수원 운영(미디어교육원) 및 교원 직무연수 실시(6,437명)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강사 파견 통해 전국 1,170개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 어린이 미디어교육 특화교재 <미디어 탐험대> 개발, 실습형 AI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대상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및 취약계층 범주 확대
○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으로 누적 617명 합격자 배출
○ 미디어교육 대국민 캠페인 <ME:LI 3일> , 방탈출 게임 추진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초등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 과정에 <미디어 탐험대> 프로그램 홍보 강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문화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예술단체(오케스트라·무용·극단·스튜디오(신규)) 운영을 통한 적극적·주체적인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의 기회 제공

○ **(맞춤형 미디어교육)** <미디어 탐험대> 적용 초등 저학년 수업 과정 지원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중·고교 인정교과서 등 신규 콘텐츠 개발

○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미디어교육 연수 강화, 콘텐츠 개발, 교사연구모임 등 지원

67	Ⅱ-5-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

주요내용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어울림마당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 국내·외 청소년이 모여 전지구적 의제에 대한 토의 및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1,512	-	△1,512	순감
▪ 청소년국제교류지원 (글로벌청소년서밋)	447	-	△447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2023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및 글로벌청소년서밋 사업종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 126개소 지원
-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제고
-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 및 110개 시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 현장 의견 청취(전국 순회 간담회, 모니터링 등)를 통한 맞춤형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등

○ 전세계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서밋' 개최
- 전지구적 의제 토론 및 문화교류활동, 공동과제 수행, 권고문 발표 등
  * '23.7.19~7.26 (7박8일,국제청소년센터), 47개국 127명 참여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을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그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23년에 대면·대규모 행사로 추진,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주도성 강화 ○ 시도별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반영으로 활동 참여 청소년 만족도 향상 등 ○ 국내·외 청소년간 의견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사업종료

68	Ⅱ-5-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장애인체육과

과제목표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기술 진보 및 장애 인구 특성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및 어울림체육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지원금 인상, 수혜자 확대, 가맹시설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참여 확대
-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 장애인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합 계	90,536	86,344	△4,192	△4.6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8,575	29,600	1,025	3.6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8,991	24,643	5,652	29.8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및 계속지원 -장애인형)	42,970	32,101	△10,869	△25.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형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 유형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생활체육 교실(699개소 지원), 동호인클럽(301개소 지원)
- 통합체육 교실 98개소 지원, 통합체육 교사 직무연수 250명 참여
-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제3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6.14.~16., 3일/서울시), 1,190명 참여

○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지도자 857명 배치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지원대상(19~69세), 지원내용(월 11만원, 12개월), 지원인원(20,0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참여 확대
-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11개소 신규 선정, 누적 99개소 건립 지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체력인증센터 총 17개소 운영
- 장애인 스포츠용 휠체어 보급 20대 지원

<table>
<tr><td rowspan="2">결과분석</td><td>추진성과</td><td>○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병행 추진 등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찾아가는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의 건립 지원의 정상추진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table><tr><th>연 도</th><th>'13</th><th>'14</th><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r><tr><td>참여율(%)</td><td>12.3</td><td>14.1</td><td>15.8</td><td>17.7</td><td>20.1</td><td>23.8</td><td>24.9</td><td>24.2</td><td>20.2</td><td>26.6</td><td>33.9</td><td>35.2</td></tr></table></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결원율 발생(정원 1,000명/현원857명)</td></tr>
<tr><td>향후추진계획</td><td>○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25년 15개소 신규 선정 목표)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4년 857명 → '25년 1,000명)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24년 20,000명 → '25년 25,900명)
○ 통합체육교실 확대('24년 98개소 → '25년 170개소)</td></tr>
</table>

69	Ⅱ-5-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노년층의 경우, 유아·청소년·청년·중년에 비해 직접적인 문화예술 경험이 낮아 자발적인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
  * 문화예술관람률 : 60대(30.3%), 70세 이상(14.8%)로 세대 평균 관람률(58.1%)보다 매우 낮음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내용

○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취약지역 어르신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 전국 단위 노년 문화 활동 공유·확산을 위한 축제 개최로 실버 세대 문화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지역간·세대간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 실버마이크 운영
- 60세 이상 어르신 예술가 선발,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 지원

관련예산

(지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 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일반회계)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3,589	0	△3,589	순감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3,589	0	△3,589	순감
▪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2,500	2,500	-	-
(문화균형발전 증진-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1,250	800	△450	△3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사업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 총 56개 프로그램, 1,339명 참여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39개 프로그램, 871명 참여
  (어르신 문화로 동행) 17개 프로그램, 468명 참여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9.27.~29. 총 22,000여명 관람
- 실버문화페스티벌 세부 내용

내용	일자	관람객(명)	주요내용	비고(어르신팀)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공연)	9.28.~29. (2일)	8,800	무용, 연주, 합창, 연주 등 무대공연	9개 단체 무대공연
문화교류한마당 (전시·체험)	9.27.~29. (3일)	13,200	전시·체험 부스, 시니어인생네컷, 연날리기체험, 파크골프 올림픽 등	14개 단체 전시·체험 부스 운영

○ 관계자 역량강화 및 어르신 문화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역량강화 10회, 문체부장관상(1매), 연합회장상(16매) 시상

○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공연(전국 4개 권역, 총 55팀 실버예술가 팀 참여, 연간 128회 공연)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년층 문화향유권 증진** - 소멸고위험지역 및 문화환경 취약 지역 노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문화로 청춘/39개) 기회 확대 및 문화 매개 사회공헌 활동(어르신 문화로 동행/17개) 프로그램 지원 등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운영('24년 총 56개 프로그램, 1,782회, 1,339명 참여)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국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노년 세대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세대의 사회적·문화적 자긍심 제고('24.9.27~9.29, 부산 / 23개 단체 305명 참여, 지역문화박람회 연계, 관람객 22,000여명 관람)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층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노년문화에 대한 중요성 및 가치 인식 제고 ○ **'실버마이크' 참여예술가의 자신감, 성취감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 * '24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종합성과 분석 결과(2024, 지역문화진흥원) - 참여한 실버예술가 설문조사 결과, 공연지속에 대한 자신감 및 성취감 향성 기여(93.22점), 삶의 질 향상과 활력증진(92.99점), 자기효능감 향상(91.49점) 등 높게 평가 - 공연을 관람한 응답자의 85.1%가 '오늘 실버예술가의 공연은 노년 세대에도 더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갖게 했다'고 응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취약지역 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참여형·사회활동형)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노년층의 문화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 긍정적 노년문화 활동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발굴, 시상하여 사업 성과 확산 및 관련 참여자의 사기 독려 및 동기부여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과학기술문화과
과제목표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원 강화			
주요내용	○ 과학문화확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 - 학교밖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소외계층 초중고생 대상 과학체험교실 운영 - 과학문화 바우처 지급, 찾아가는 과학관(두드림 프로젝트) 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과학기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과학문화확산사업	14,767	14,540	△227	△1.5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생활과학교실 운영**

- 도서벽지,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나눔과학교실 운영 확대*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과학기술 관심 제고**

* ('23년) 나눔과학교실 46,185회 운영, 143,977명 수혜 → ('24년) 나눔과학교실 38,475회, 172,787명 수혜

** 나눔과학교실 수혜자의 과학기술관심도 : ('23년) 77.3점 → ('24년) 81.3점(전년대비 약 5% 향상)

○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 경제적 소외계층의 온라인 과학문화바우처 수혜 확대(30,744명→47,384명) 및 찾아가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신설, 소외계층·지역을 총 439회 방문하여 20,484명 신규 수혜 창출*

* 과학문화바우처 총 수혜자 전년대비 220.8% 확대('23년 30,744명 → '24년 67,868명)

○ **두드림 프로젝트**

-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 및 사회배려계층 대상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5개* 권역, 총 10회)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 등 5개 권역 총 9,703명 관람, 운영 참여 만족도 93.1% 달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부 사업평가 결과**

- (과학문화확산사업) '23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 달성('21년, '22년 '매우 우수')

* '24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통보는 2025년 5월 예정

○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년 대비 사업예산 28% 감축에도 불구, 사업 총 수혜자 17% 향상('23년 163,351명 →'24년 191,640명), 생활과학교실 강사로 구성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신설 지원(3개), 강사연구회 시범 운영을 통해 생활과학교실 특화 신규 프로그램 12개 개발

○ **과학문화 향유 시·공간의 제약 타파 및 양적 확대를 통한 과학문화 격차 해소**

- 찾아가는 과학문화바우처 프로그램 다양화(82개 프로그램 개발) 및 본격 운영에 따른 수혜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로 과학문화 격차 해소(439회 운영, 20,484명 수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과학기술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수혜 및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추진 필요**

- 농어촌·도서벽지의 지역적 제한 없이 과학기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다양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광역 단위 생활과학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 강화

○ 지역 네트워크 연계 활용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찾아가는 과학문화바우처' 수혜 규모 확대 및 사업 품질 제고

○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과학관' 지속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70	Ⅱ-5-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교육과 도서관정책기획단

과제목표

○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 강화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취약한 국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가구와 내국인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취약한 국민을 찾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가구와 내국인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
○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취약계층의 도서 접근성 강화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원, 미수혜자 권리구제서비스 지원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가치봄영화(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포함 영화) 제작 및 상영
- 가치봄영화 사전제작 지원 및 영화관 상영회 진행으로 장애인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
○ 가치봄 영화제 개최 지원
- 가치봄영화 및 장애 소재 영화, 장애영화인 제작 작품 상영
○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폐쇄형 동시관람 장비 구축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 도서관 다문화 이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급속히 확대되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독서 문화 수요에 맞추어 큰글자책 보급 지원

관련예산

(문예기금,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예술향유지원	275,149	280,581	5,432	1.97
(통합문화이용권)	239,662	263,581	23,919	9.98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관람환경개선	4,603	4,623	20	0.4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제작 지원 및 상영	1,300	1,300	-	-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80	100	20	25
영화관 동시관람장비 도입 지원	3,159	3,159	-	-
사업운영비	64	64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8,315	72,106	△16,209	△18.3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15,789	14,210	△1,579	△10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420	420	-	-
▪ 큰글자책 보급 지원	300	3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확대 : ('23년) 11만원 → ('24년) 13만원, 2만원 인상
- 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 ('23년) 255만명 → ('24년) 258만명, 3만명 확대
- 자동재충전 인원 확대 : ('23년) 196만명 → ('24년) 210만명, 14만명 확대
- 미수혜자 권리구제 : 복지부, 문체부, 주민센터 협업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카드 미발급자 정보 조회 및 발급 안내('24년 연 4회 추진)

○ **가치봄영화 제작 및 상영**
- 가치봄영화 제작: 총 127편 제작
- 가치봄영화 상영회 개최: 영화관 85개관, 상영편수 15편, 상영회차 743회, 관람객수 32,185명
- 전국 70개 영화관에서 최신한국영화 한글자막(cc)+ 화면해설(AD) 동시개봉 추진 8편
  - <범죄도시 4>, <설계자>, <하이재킹>, <파일럿>, <빅토리>, <베테랑2>,<대도시의 사랑법>, <청설> 폐쇄형 3편 동시개봉 추진 <딜리버리>, <1승>, <소방관>

○ **가치봄 영화제 개최 지원**
-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개최(9. 3.~ 9. 7.): 33편 상영, 870명 관람, 만족도 조사 결과 98.7% 달성

○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 청각장애인을 위한 AR글라스 2,200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 2,200대 등 폐쇄형 동시관람 장비 5,000여 대 구축
-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협의체 운영(총 5회)을 통한 유관단체 의견 수렴 및 동시관람 시스템 도입 실무 협의 진행
- 시각·청각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폐쇄형 시범 상영회 총 69회 개최, 약 2,100여 명 관람
- 장애인 동시관람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체험 부스 운영(총 5회), 약 4,200여 명 방문 등

○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58개 시설 선정
- 노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185개 시설 선정
-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168개 시설 선정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논현도서관(서울) 등 134개 도서관 다문화 이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에 큰글자책 보급** (25종 15,500책 제작 / 공공도서관 600개관 보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근 5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 평균 증가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발급자 수(명)	1,752,875	1,975,071	2,319,973	2,554,011	2,619,775
증감율(%)	7.6	12.7	17.4	10.1	101.5

○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서적 변화> 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용 전보다 더 생활이 활기차진 느낌이다.

<사회적 변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졌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소비활동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변화> 문화여가 관련 정보 및 활동에 관심이 많아졌다. 문화여가활동에 더 참여하고 있다.

		○ 한국영화 <범죄도시4> 등 11편 가치봄 동시개봉으로 청각장애인의 최신영화 관람 접근권 제고 ○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최신 개봉영화를 영화관에서 동시관람 가능한 가치봄 사전제작 및 동시관람 장비 시범 도입으로 장애인의 영화 향유방식 개선 - (기존) 개봉 후 가치봄영화 제작하여 장애인들만 모여서 영화관람 → (개선) 개봉 전 가치봄영화 사전제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영화관람 ○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최신 개봉영화를 영화관에서 동시관람 가능한 시스템 시범 도입으로 장애인의 영화 향유방식 개선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형 동시관람 장비 총 5,350대 24식 구축 및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장애인 단체를 통한 무상대여 환경 마련 - 배리어프리 어플리케이션 내 화면해설(AD)·한글자막(CC) 탑재를 통해 <1승>,<소방관> 등 최신영화 동시관람 환경 구축 ○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 ○ 다문화 가구와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상호 문화 이해 존중 확산 ○ 저시력자 등 독서 취약계층 도서 접근성 강화, 출판사 큰글자책 장서개발 확대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가치봄영화 외화 제작지원 부진 (관련 예산 부족) ○ 큰글자책 보급 단가 인상으로 향후 보급 권수 감소 우려

향후추진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 13만원→14만원)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가치봄영화 제작 및 상영 - 최신영화 동시개봉 12편 예정(결합형 6편, 폐쇄형 6편), 가치봄영화 외화 및 단편 포함 100편 이상 제작 ○ 가치봄영화제 개최 지원 - 지역 순회 상영회 신규 추진 ○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 추진 -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장비활용 교육 및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시범상영회 확대를 통한 동시관람 인식 개선과 무인대여함 고도화 등을 통한 폐쇄형 동시관람 장비 활용도 제고 ○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 분야 확대 및 교육방식(개인예술가, 팀티칭) 관련 문화예술교육 현장 수요 반영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운영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큰글자책 보급 지원 지속 추진 및 예산 확대 노력

71	Ⅱ-5-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기반과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 문화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주요내용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인증제 시행
- 설립·운영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및 설립 결과의 질적 제고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 등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추진
- 도서관 및 건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 공간구성, 운영실태 등 진단·분석 및 도서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6,519	6,012	△507	△7.8
(박물관 운영 활성화-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319	255	△64	△20.1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982	4,167	185	4.6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2,218	1,590	△628	△28.3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추진	200	200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	37,000	37,000	순증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	-	36,000	36,000	순증
(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	350	1,000	650	185.7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세종))	-	3,000	3,000	순증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지원(세종))	-	3,000	3,000	순증
▪ 문화도시 조성(자율)	34,500	25,500	△9,000	△26.1
(문화도시 조성 지원)	34,500	25,000	△9,000	△26.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 인증제 시행 -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30개관 신청→13개관 적정 -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1개관 신청→1개관 부적정 - 국・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미인증 기관 컨설팅: 총 52개관 * 국립박물관 9관, 공립미술관 12관, 공립박물관 31관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일자리 창출(’24년 275명: 박물관 200명, 미술관 75명) 및 양성 계기 마련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추진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규 건립 또는 리모델링 예정 도서관 대상으로 건축·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55개관) ○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 13개소 -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추진(’24년)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및 최종 지정(’24.12.) ※ 수성, 수영, 안성, 세종, 충주, 홍성, 속초, 안동, 진주, 통영, 순천, 전주, 진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 인증제 시행을 통한 지역문화기반 확대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확충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역량강화 - 지역문화기반 확대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관련 일자리 창출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을 통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 대상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 및 주변환경에 적합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 ○ 문화도시 주요성과 - 2024년 한 해 동안 1~4차 24개 도시 곳곳에서 5,239곳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423만 명의 지역주민과 지역방문객이 문화를 향유함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승인 도시에서 앵커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및 최종 지정함(’24.12.) * 수성, 수영, 안성, 세종, 충주, 홍성, 속초, 안동, 진주, 통영, 순천, 전주, 진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 인증제 시행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지속 추진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추진 및 기존 1~4차 문화도시와 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확대

72	Ⅱ-5-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문화정책과
과제목표	○ 문화다양성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확대를 통한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체계 강화			
주요내용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문화다양성 가치 홍보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운영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환경 분석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1,470	2,470	1,000	6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문인력(초등교원, 문화기관종사자, 콘텐츠제작자 등) 양성, 교과연구 지원(중·고교) 등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 전문인력 양성과정(온·오프라인) 운영('24.7월~12월)
-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교과연구 지원('24.8월~11월)

○ 유엔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축제형 대국민 캠페인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5.21.~5.27.)

○ 문화다양성법상 정책 이행현황 분석·보고 의무 준수 및 문화다양성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24.8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전문인력(초등교원, 문화기관종사자, 콘텐츠제작자, 일반성인) 양성과정 운영(1,941명 참여),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 활용 교과연구 지원(중·고교 각5개교, 1,029명 참여)
  * '문화다양성의 이해' 중등(선택)·고등(상업) 각 1종 인정도서 개발('20~'21, 교육부 협업)
- 교육참가자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도 19.5% 증가(사전 69.4점→사후 82.9점)

○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문화다양성 주간(5.21.~27.) 행사 개최
- 2024 문화다양성 주간 전문가 정책포럼*, 청년 문화다양성 토론회,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음악회·강연·토크콘서트·참여형 캠페인 및 미디어 협업 프로그램 등 운영(49만여 명 참여)
  * 저명인사 10인이 추천하는 문화다양성 도서·음악·영화 추천 온라인 전시
  ** 문화다양성의 시대, 공생을 위한 환대의 길' 주제 국내외 연구 및 우수사례 발표·토론

○ '2023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적기 제출('24.8월) *문화다양성법 제9조 근거
- 중앙부처 및 지자체 2023년도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추진실적 취합 및 분석
  * 중앙부처('22년·'23년 74개), 지자체('22년 698개→ '23년 1,290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사회다변화에 따른 국민의 타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지역연계 추진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 확대

○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국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 제시 및 기초자료 확보

73	Ⅱ-5-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예술인지원팀

과제목표

○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주요내용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 본격 시행 및 교육지원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및 가입 편의 제고

○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
- 신진예술인 등에 대한 창작준비금(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66,000	60,000	△6,000	△9.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운영('23.1.~)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운영
-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시행('24.1.~11.)

○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 지급**
- 일반예술인 20,000명(인당 3백만원), 신진예술인 3,000명(2백만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및 가입 편의 제고**
- 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총 2,852건의 대면·비대면 상담 진행
-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34회) 및 온·오프라인 안내 콘텐츠 제작 배포(419개소)
-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 계산기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자의 업무 편의 지원
  * '24년 보험료 계산기 이용 누적 건수: 147,718건
- 신고 대행 전문협력기관 운영(18개 기관, '24.12월 기준)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산재보험) ▲2024년 가입유지자 4,892명의 보험 사무 대행 추진, 찾아가는 설명회 24회 진행, ▲가입자 중 보험료 1회 이상 납부자 4,239명에게 453,443,390원 보험료 지원, ▲안내책자·홍보영상 배포 등 홍보 강화
- (국민연금) ▲2024년 예술인 총 1,656명* 및 25개 단체(문화예술사업자) 536,827,490원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국민연금공단-지역문화재단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예술인 노후대비 교육 최초 시행(3회)
  * 프리랜서 지원규모 전년도 대비 27.3% 증가('23년 1,002년→'24년 1,276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예술인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침해 구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한 예술인 인권개선 -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43회)를 통해,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의 제도적 추진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 통합 창구 마련 - 예술 계약·저작권·성폭력 예방 등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시행(61,095명 수료)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통한 예술인들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제도 상시 상담·안내를 통해 실직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 예술인의 생활 안정 보장에 기여* * 고용보험 가입자 : 245,382명('24.12월 기준, 누계) ○ 예술인 산재보험 및 국민보험 가입 지원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사건 조사 인력 부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2.9.25.~)으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범위 대폭 확대 및 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관련 담당 전담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팀장 1명, 사무관 3명, 주무관 4명)이며, 예술인지원팀의 조사관 3명(사무관 1명, 주무관 2명)이 사건조사 업무를 담당

향후추진계획	○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지속 추진 및 권리 보호 교육 내실화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을 통한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지속 추진 - 예술 분야별·대상별 찾아가는 권리 보호 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행 -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사건 조사인력 확보 및 증원 노력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일반예술인 20,000명) ○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홍보 및 가입 지원 -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예술인 및 사업장, 유관기관, 협·단체 등) -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홍보* ·안내콘텐츠 제작·배포, 산재보험 사례집 및 홍보영상 제작·배포, 고용보험 안내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74	Ⅱ-5-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도입확대를 통한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주요내용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확산 - 영화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영화산업 지원 사업 심사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및 심사 시 우대 등 활용 확대 독려 - 애니메이션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정부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만화: 웹툰 작가·사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조사 및 만화·웹툰산업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표준계약서 활용 사업체 우대 등 활용 확대 방안 마련			
	관련예산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영화)** - (실태조사)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시행('24년), ▲2023년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진행('24년 6월~12월, '25년 2월 공개 예정) - (표준계약서 제・개정) 2024년 1~2분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쟁점에 대한 협의 노력* * 시나리오, 제작, 법무 전문가 참여, 상세부금정산서 개발 합의 시도, '25년 사업계획 내 사업 수행 조건에 표준계약서 사용 내용 포함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방영권, 투자, 시나리오, 음악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조사 시행('24년) ○ **(만화)** -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창작자·업계·학계) 의견수렴 및 이견 조율(~'24.4월)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24.6월) * ▲(개정)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등 6종, ▲(제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양도 계약서 등 2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영화)** 2024년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대상 확대하여 실시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공정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일부 대체하여 수행 (기존: 근로/시나리오 → 변경: 근로/시나리오/**상영/투자**)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활용률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실시, 지원사업 참여 대상 활용 권고 및 선정평가 지표 도입('22년~),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추진('24년) ※ 지원과제 선정평가 지표 활용 도입 이후 증감률 ▲ ~'21년(도입 전) 활용 평균 0.6건 → '22년~(도입 후) 활용 평균 1.24건, 도입 이후 1개 과제 당 표준계약서 활용도 약 2.1배 증가 ○ **(만화)** 만화·웹툰 작가 및 사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조사 실시('24년), * '23년 기준 표준계약서 활용률 86.4%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영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개정 참여 단체의 의견 불일치로 개정 최종 중단 -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약서 반영은 하지 못하였으나 각 업계별 최우선 과제를 파악하여 향후 반영예정

향후추진계획	
	○ **(영화)**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실시 - 2024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4종(근로, 시나리오, 투자, 상영) 확대 진행(계속) 및 설문조사 응답률 확대 방안 모색 - 상영 표준계약 관련 객단가(부금)정산 합리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상세부금정산서 합의 등) ○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산업 표준계약서 4종 이용 실태조사 후속연구(프리랜서 분야) 추진예정 ('25년) - 기존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활용 확대 방안 모색('25년, 간담회 개최 등) ○ **(만화)** 매 3년마다 표준계약서 타당성 재검토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5	Ⅱ-5-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특허청	과·팀명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중소기업)에게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필요**

주요내용

○ 전국 주요 도시의 유관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상담하는 **'공익변리사 지역상담서비스' 운영**

○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상담·자문** 강화(발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심판·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 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법률자문, 소송비용지원,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관련 상담·자문

○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시,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와 협력**하고, **특별사법경찰관수사 및 행정조사 연계 지원 추진**

관련예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				
(내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내내역)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내내내역)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2,219	2,219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확대

- **(PCT 출원 지원)** 사회적 약자의 해외 특허권리 취득 및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PCT 출원서류 작성 지원('24년 연간 5회)
- **(상표출원 지원강화 및 신속심사 실시)** 상표출원 관련 지원 강화(이의신청서, 출원서 작성 등) 및 신속·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심사 개최('24년 연간 5회)

○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유관기관 업무협력)** 사업수요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추진('24년 연간 총 12회, 프랜차이즈협회, 한국관광공사, 벤처기업협회 등)

○ 상담 및 서류작성, 소송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익변리사 지역상담 서비스, 중소기업 컨설팅 총 158회 제공 ○ 지재권 상담 10,364건, 출원·심판 서류 작성 671건, 심판·소송대리 147건 수행 ○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특사경 수사,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 등과의 사업연계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익변리사 지역상담,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및 사업연계 계속 수행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기관명칭 변경을 위한 발명진흥법(법 제26조의2) 개정 추진

76	Ⅱ-5-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보호과
과제목표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대국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주요내용	○ 신속한 통합 저작권 침해대응체계 마련 ○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선제적 예방 및 전문인력 양성 ○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초중고등학교 저작권교육 강화 기반조성 ○ 대학 내 저작권 강좌 운영 고도화 ○ 국립저작권박물관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0,359	26,884	△3,475	△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신속한 통합 저작권 침해대응체계 마련**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속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시스템 2단계 구축완료('23.8.~'24.5.) 및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한 업무* 간 연계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3단계 구축 추진 중

*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및 증거수집, 심의, 결과통지, 이행 결과 확인 등

1단계('22.5.~'22.12.)	2단계('23.8~'24.5.)	3단계 추진 중('25.3.~'25.12.)
저작권 침해 단계별(모니터링 및 심의 등) 대응 시스템 개선·확대	빅데이터 기반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분석·보고 시스템 구축	핵심 시스템 간 연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포털 구축

- **(저작권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어 기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를 언어별*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2개어(영어, 중국어) → '24년 9개어로 확대(베트남어, 태국어 등 7개어 추가)

** '24년 기준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인력: 한국어 기반 195명, 해외 현지어 기반 20명

○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인터폴 중심 국제협력 강화)** ▲태국 최초 불법사이트 접속차단('24.7.), ▲필리핀 교민 대상 불법 IPTV 운영자 검거('24.8.), ▲인니 지식재산청과의 저작권 보호 관련 MOU 체결('24.9.),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24.11.), ▲인터폴·美국토안보수사국 국제공조 요청(34건) 등
- **(국제적 수사 네트워크 다양화)** ▲필리핀·베트남 법집행기관 초청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 회의 개최('24.6./서울), ▲▲미국·포르투갈·인니 등 초청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개최('24.9./서울), ▲국제공조 회의 개최 및 참석(33회) 등

○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인력 양성**

-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 가능한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 '저작권·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 운영(고려대학교): 총 13개 교과목(저작권 디지털포렌식 전공), '24년 졸업생 13명, 논문게재 8건('22년~'24년 졸업생 총 43명, 논문 총 31건)

	○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 **(대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확대)** K-저작권 지킴이 운영*, 다양한 매체 활용 불법유통 경각심 제고 및 저작권 보호 동참 메시지 확산**, 특정이슈(캠페인·출판 등) 매체 활용 메시지 확산 등 * 대학생 50명, 창작자 5명(홍보대사), 콘텐츠 기업 42개사 참여,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 추진, 대국민 서명 운동, 온·오프라인(유튜브·언론·옥외광고 등) 홍보 등 - **(해외 인식 전환)** 국제 저작권 보호 공모전* 개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현지 광고** 추진 * 공모전 결과(5.20.~6.19.) : 총 1,152명 접수(한국 777명 베·영 375명), 최종 대상 2명 선정(한·베 각 1명) ** 베트남 34개 CGV 상영관 캠페인 영상 5,400회 송출, 850,652명 관람(9.13.~10.12.),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옥외전광판 캠페인 영상 상시 송출(9.19.~) ○ **초중고등학교 저작권교육 강화 기반조성** - **(저작권 교육 협력 강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대상 저작권 전문연수 추진,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교육 관계자 대상 저작권 전문연수 추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연수(10.31.~11.1., 16명), 진주지역 중학교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7.31., 16명), 진주지역 고등학교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8.27., 13명) ○ **대학 내 저작권 강좌 운영 고도화** - **(전문인력 양성)** 대학연계 저작권 강좌 운영을 통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6개 대학(경상국립대, 세종대학교 등) 연간 34강좌 운영을 통해 1천8백여 명 수강 ○ **국립저작권박물관 운영**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전시 환경 구축·운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개발**** * 상설전시 운영 / 기획전시 연 1회 ** 기본교육 9종 운영, 대상별 10종 개발 - **(저작권분야 주요자료 확보)** 자료 기증자 우대방안 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자료 확보* 및 자료 수집방법 다각화 * '24년 수집자료 : 총 110건 681점(총 평가액 77,470천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작권 침해 대응 다각화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추진으로 불법복제 이용률 감소* * 불법복제 이용률 '19년 22% → '24년 19.1% ○ 저작권 교육 및 예방 활동,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저작권 인식개선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 한류 콘텐츠의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 구축(~'25년), 해외 현지어 기반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화(인력, 모니터링 대상 현지어 추가 등) ○ **(국제공조 협력)** ▲K-콘텐츠 보호 등을 위한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 MOU 체결('25.1.), ▲주요 K-콘텐츠 소비국과의 MOU 체결을 통한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등 ○ **(저작권 교육 확대)** 최근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생태계 변동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현행화된 저작권 교육 제공

77	Ⅱ-5-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체육진흥과 스포츠혁신지원과
과제목표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주요내용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양성,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제공 및 스포츠클럽 제도 정비 -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전문성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시군구 체육회 배치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체육지도활동 지원 - 「스포츠클럽법」 제정('22.6.시행)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 제도 시행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0,186	102,889	2,703	△2.7
(맞춤형생활체육활동 지원)	25,389	28,759	3,370	13.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44,523	47,003	2,480	5.6
(스포츠클럽 육성)	30,274	27,127	△3,147	△10.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 유아체육교실 운영(458개소, 23,161회 운영, 319,228명 참가)
- (청소년) 여학생 대상 스포츠 활동 지원(22종목 선정, 633개소, 235,001명 참가)
- (여성) 종목별 여성체육교실 운영(200개소, 5,435회 운영, 65,292명 참가)
- (어르신) 어르신 종목별 교실 운영(639개소, 12,793회 운영, 196,843명 참가) /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교실 운영(223개소, 10,844회 운영, 251,030명 참가)

○ **(체육지도자 양성)** '24년 21,513명

○ **(스포츠클럽 지원)**
- (등록・지정스포츠클럽) 학교연계형, 취약계층형, 지역특화형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지역 체육복지 향상 등 체육참여 활성화(등록스포츠클럽 722개소, 지정스포츠클럽 154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219개소, 86,827명 회원, 2,038개 일자리 창출
- (전문선수반 운영) 스포츠클럽 중심 전문선수 육성 및 인적자원의 양적확대로 종목저변 확대 기틀 마련(67개소, 103개, 3,121명 선수, 213명 지도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맞춤형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기반 마련 ○ 전문 선수반 육성으로 스포츠클럽 내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선수저변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추진
* 정책대상별로 추진하던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체육지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추진

○ 양질의 특화프로그램 마련,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도모

78	Ⅱ-6-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 시에도 양육자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부모교육) 양육자의 휴식보장 및 양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거점 양육지원 기관 제도 도입 추진 및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체계 마련

주요내용

○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

○ (부모교육) 지역거점 부모교육 기관(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접근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공통 부모교육) 제공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시간제보육 지원	250	280	30	12.0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내내역사업)	316	383	67	2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속 확충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 관리
-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사업 실시 및 제공기관 확충('23년 1,002개반→'24년 2,046개반)
- 시간제보육사업안내 제작·배포('24.2월, 8월), 사업설명회(7회,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963명 참여), 담당자 교육(대면/비대면, 7,755명)*, 제공기관 모니터링(신규 838, 정기 954, 수시 8개소)

* 지자체, 관리기관 79명(사업 이해도 (교육 전) 6.91→ (교육 후) 7.92점)
제공기관 7,676명(업무 이해도 (교육 전) 7.6점→ (교육 후) 8.7점

○ (부모교육) 지역거점 부모교육(사업명 육아쉼표) 사업 운영 및 공통 부모교육 지속 실시
- 지역거점 부모교육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사업계획 수립('24.1.) → 기관 공모('24.3.) → 운영('24.4.~) 및 모니터링(4회) → 운영 성과 보고 및 분석('24.12.)

※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12개소, 어린이집 87개소 참여(만족도 96.4/100점)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공통 부모교육 교과목 개정·보급 및 강사진 교육 실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온오프라인 실시 지속

※ (공통 부모교육) 177,593명 이수(만족도 95.5점, 100점 기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긴급·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 기반 제공

* ('23.) 1,030개반 → ('24.) 2,046개반/ '24년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수 31,921명

- 시간제보육 이용아동 수 전년 대비 13.3% 증가('23년 28,177명 → '24년 31,921명), 이용자 만족도 84.8점(100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향상

○ 지역거점 부모교육 기관 확대 및 수요자 맞춤 부모교육(대면, 비대면, 온라인) 추진

※ 육아쉼표 ('23.) 육아종 10개소, 어린이집 50개소 → ('24.) 육아종 12개소, 어린이집 87개소

※ 공통 부모교육 ('23.) 166,791명 이수 → ('24.) 177,593명 이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부모교육) 지역거점 부모교육 사업 운영 내실화 및 안착 지원 및 공통 부모교육 운영 및 확대

79	Ⅱ-6-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영유아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25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32.5% 목표, '27년 이후 공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매입·리모델링 및 장기임차 시 국비 지원

확충 유형	내용
신축·매입	• **(신축)** 신규 및 동일 부지에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매입)** 기존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 국공립 설치(의무 포함)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동,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장기임차	•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민간, 가정, 법인·단체등)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지자체 담당자, 전문기관 관계자 등과의 협의 및 워크숍,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 사업 운영 관리

관련예산

(지역균형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어린이집 확충	41,624	26,664	△14,960	△35.9
▪ 운영 및 관리	30	20	△10	△33.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369개소 신규 확충 지원
* 신축(3개소), 매입(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324개소), 장기임차(39개소)

○ 전문가 협의회('24.6.13., '8.29.), 정책연구('24.10.~12.)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및 유보통합에 따른 확충 방향 설정 등 성과 제고 노력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31.1%로, 목표 초과 달성(목표치 29.2%)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저출생·지역소멸 등 영유아 수 감소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불가피한 집행 실적 저조 발생

○ 신축·매입보다는 저비용의 리모델링 위주의 확충 진행되어 예산 실집행률 저조

향후추진계획

○ 보육수요 기반 공급을 벗어나 유치원 연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체계 구축·유보통합 안착 지원
- 정책연구 기반 '25년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의사항(지침) 배포하여, 지자체 대상 확충 수요 조사 시 유치원 현황도 연계하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 저고위(저출생 반전 대책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분기별 이행점검·개선대책·합동 점검 등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향을 가칭영유아학교로 즉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향후 유보통합 현장 안착 기반 조성에 기여

80	Ⅱ-6-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공백 및 저출산 해소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돌봄공간 제공, 공동육아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이돌봄지원	467,866	475,028	7,162	1.5
(아이돌봄지원)	467,866	475,028	7,162	1.5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5,197	△934	△0.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813	12,132	319	2.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및 이용가구 확대

  * (지원비율) 소득 구간별 5~10%p 상향 / (이용가구) 8.6만 ('23.) → 11.8만 ('24.)

- 다자녀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가구 추가 지원

  * (다자녀)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 1세 이하 아동 양육 시 이용요금 90%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 (처우개선) 돌봄수당 인상(5%↑) 및 교통비 지급지역 확대((現)도서·벽지, 읍·면 지역 → (改) 현행 + 인구감소지역 포함)

  * (서비스제공기관) 228개소 ('23.) → 231개소 ('24.)

- 돌봄관련 유사자격 소지자 대상 단축교육과정(40시간) 도입

  * 기본교육(120시간) 단축 대상자 : (기존)16시간 교육 : 교사·보육교사·간호사 +
    (신설)40시간 교육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간호조무사 등('24.7월)

○ 지자체(공간발굴)-기업(리모델링)-정부(운영지원) 간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신한금융그룹과 MOU체결('24.6.) 및 공간조성 확대('23년 395개소→'24년 435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및 아이돌보미 확대 * (이용가구) 71,789가구 ('21.) → 78,212가구 ('22.) → 86,100가구 ('23.) → 118,126가구 ('24.) * (돌보미) 25,917명 ('21.) → 26,675명 ('22.) → 28,071명 ('23.) → 29,635명 ('24.)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증가 * ('23.) 91.4점 → ('24.) 91.9점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 '23년 395개소 → '24년 435개소(40개소 증)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가 이웃과 자녀돌봄을 품앗이하는 공간으로 이용자 접근성이 중요한 바, 마을생활권으로 지속적 확충 필요

향후추진계획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강화 및 공급 확대** - 정부지원 기준 완화, 대상가구 확대 및 돌봄 취약가정 추가지원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 민관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모델인 '꿈도담터' 조성 확대 - '24년 200개소 → '25년 210개소

81	Ⅱ-6-④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가족친화기반과
과제목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포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505	2,518	13	0.5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7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증 확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23.) 5,911개 → ('24.) 6,502개
※ 대기업 784(12.1%), 중소기업 4,552(70%), 공공기관 1,166(17.9%)

○ (인센티브 확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제공
*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및 제작비 지원, 금리 우대 상향, 신용보증 보증료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등

○ (우수사례 확산) 인증기업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기업 포상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우수사례집 제작을 통한 성과 공유 확대
※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10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24년 인증기업·기관은 6,502개사로 전년(5,911개)에 비해 10% 증가 ○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지원 ○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 홍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심사기준 적용한 가족친화 예비인증 시범운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기관에 대한 포상 등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확산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대상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82	II-6-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지원과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단가 확대 ○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및 이행제도 개선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강화 ○ 미혼모부의 보호 지원 강화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35,595	552,833	17,238	3.2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2,723	△580	△17.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5,245	5,846	601	11.5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962	1,312	△650	△33.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8,730	28,730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60% → 6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8세 미만 → 고등학교 재학)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월 20만원 → 21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위기임산부(지역상담기관 연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24.7.19.)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확대('23년: 266호 → '24년: 306호(누적))

○ 양육비 이행지원 전문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24.9.2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도개선
-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24.9.27.)
-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 소명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24.10.16., '25.7.1.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24.10.16., '25.7.1. 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 수혜자 수 및 정책만족도 크게 증가 * 아동양육비 수혜 아동수 : ('23.) 21.2만명 → ('24.) 24.0 명(+13.2%) * 한부모가족 정책 수혜자 만족도 : ('23.) 80.9점 → ('24.) 82.5점(+1.6점) ○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 위기임산부가 연령, 소득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자녀 양육 및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공동생활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서비스의 안정성 확대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양육비이행률 상승 * ('23.) 42.8% → ('24.) 45.3%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로 제재조치 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신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 계획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등 지속 추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활용한 주거 지원 강화(시설 입소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신규 물량 추가확보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지침 등 마련

83	Ⅱ-6-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과제목표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주요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시행('25. 7.)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헤이그 협약이 정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입양체계로 개편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공적입양체계 관리·운영 (협약 이행 및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370	37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협약의 이행법률*로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23.7.18., '25.7.19. 시행)

* 입양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수행

○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가 간 협의하에 아동의 국제입양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 마련 및 주요 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양부모 자격심의 및 아동의 국제입양 결정, 중앙당국 간 입양절차 진행협의 등

○ 협약 비준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24.12.6.~12.13.) 및 외교부에 비준절차 의뢰('24.12.26.)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행법률이 완비됨으로써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입양절차로 개편 기반을 마련하고,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25.7.~) 및 협약 비준(~'25.)으로,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추진

84	II-6-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지원과
과제목표	○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주요내용	○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8,730	28,730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센터 확대
* ('23.) 18개소 → ('24.) 49개소

○ 양육비 이행지원 전문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24.9.2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도개선
-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24.9.27)
-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 소명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24.10.16., '25.7.1.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24.10.16., '25.7.1. 시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비양육부모의 자발적 양육 책임성 제고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양육비이행률 상승 * ('23.) 42.8% → ('24.) 45.3%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로 제재조치 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신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지침 등 마련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1. 평등 증진

2. 여성

3. 아동·청소년

4. 장애인

5. 노인

6. 외국인과 재외동포

7. 북한이탈주민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79	3	76	0	-
1. 평등 증진	7	-	7	-	
2. 여성	6	-	6	-	
3. 아동·청소년	19	-	19	-	
4. 장애인	13	-	13	-	
5. 노인	8	1	7	-	
6. 외국인과 재외동포	21	2	19	-	
7. 북한이탈주민	5	-	5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평등 증진】			
1	Ⅲ-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추진중
2	Ⅲ-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추진중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추진중
4	Ⅲ-1-④	성별 대표성 제고	추진중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추진중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추진중
7	Ⅲ-1-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추진중
【여성】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추진중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추진중
10	Ⅲ-2-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추진중
11	Ⅲ-2-④	모·부성권 강화	추진중
12	Ⅲ-2-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추진중
【아동·청소년】			
14	Ⅲ-3-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추진중
15	Ⅲ-3-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추진중
16	Ⅲ-3-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추진중
17	Ⅲ-3-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추진중
18	Ⅲ-3-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추진중
19	Ⅲ-3-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추진중
20	Ⅲ-3-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1	Ⅲ-3-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추진중
22	Ⅲ-3-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중
23	Ⅲ-3-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중
24	Ⅲ-3-⑪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중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일부완료**
26	Ⅲ-3-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추진중
27	Ⅲ-3-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추진중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추진중
29	Ⅲ-3-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추진중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추진중
31	Ⅲ-3-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추진중
32	Ⅲ-3-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추진중
【장애인】			
33	Ⅲ-4-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추진중
34	Ⅲ-4-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중
35	Ⅲ-4-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추진중
36	Ⅲ-4-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추진중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추진중
38	Ⅲ-4-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추진중
39	Ⅲ-4-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0	Ⅲ-4-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추진중
41	Ⅲ-4-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중
42	Ⅲ-4-⑩	장애인 고용 개선	추진중
43	Ⅲ-4-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추진중
44	Ⅲ-4-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추진중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추진중
【노인】			
46	Ⅲ-5-①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7	Ⅲ-5-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추진중
48	Ⅲ-5-③	노인 건강권 보장	추진중
49	Ⅲ-5-④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추진중
50	Ⅲ-5-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추진중
51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완료('23.)**
52	Ⅲ-5-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추진중
53	Ⅲ-5-⑧	농지연금 활성화	추진중
【외국인과 재외동포】			
54	Ⅲ-6-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추진중
55	Ⅲ-6-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
56	Ⅲ-6-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추진중
57	Ⅲ-6-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58	Ⅲ-6-⑤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추진중
59	Ⅲ-6-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추진중
60	Ⅲ-6-⑦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중
61	Ⅲ-6-⑧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추진중
62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과제완료('23.)***
63	Ⅲ-6-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추진중
64	Ⅲ-6-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추진중
65	Ⅲ-6-⑫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중
66	Ⅲ-6-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추진중
67	Ⅲ-6-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추진중
68	Ⅲ-6-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추진중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추진중
70	Ⅲ-6-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추진중
71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과제완료('24.)**
72	Ⅲ-6-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추진중
73	Ⅲ-6-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추진중
74	Ⅲ-6-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중
【북한이탈주민】			
75	Ⅲ-7-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추진중
76	Ⅲ-7-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추진중
77	Ⅲ-7-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중
78	Ⅲ-7-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추진중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추진중

* 과제 내용(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정)이 '23년에 완료되었으므로 '23년 완료로 처리

과제별 이행상황

1	Ⅲ-1-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주요내용	○ 장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 예방 및 시정 등 개선방안 마련 ○ 고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원입법)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원입법) 내역 >

의안명	제안자(대표)	제안일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의원	'20. 6.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21. 6.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21. 8.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	'21. 8.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 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에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논의 시 적극 협력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2	Ⅲ-1-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과제목표

○ 생활밀착형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별통계 개선·이용, 국가 및 지방 성평등지수 측정·평가 등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전문가 심층 분석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추진

○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 발표
-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성평등 수준 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

○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신규 승인 통계, 주요 정책 분야 통계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인지정책분석평가운영	4,075	3,940	△135	△3.3
(성별영향평가 운영)	3,664	3,529	△135	△3.7
(성인지 통계)	40	4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고려하여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 ('22.) 40개 기관, 148개 사업 → ('23.) 중앙부처 27개 기관, 74개 사업→ ('24.) 중앙부처 20개 기관, 51개 사업
  * ('24.) 정책개선 반영률 84.7%
- 지자체 일자리사업, 도서관사업 대상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범적용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STEM 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 고용 및 교육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정책, 생활체감형 정책(향정신성의약품 등 유해약물관리 등)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주요내용 >

개선권고 내용	대상 부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활용'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항목에 추가	고용노동부
연령별·성별 STEM분야 진로콘텐츠 개발·보급(교육부), 과학기술 분야 진로·진학 멘토링 강화 및 전공탐색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채용도구의 편향성과 차별 가능성 개선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고용부), 디지털 기술 활용을 교육 시 디지털 소양교육 확대	교육부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측정 · 발표('23.12월 측정/ '24.6월 발표) - ('22년 측정결과) 개편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 대비 0.2점 상승 * 기존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 ** ('22년 지역성평등지수)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 ○ 성별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22년 신규 승인 국가통계(47종)에 대한 성별 구분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 사항 제안 및 반영 요청(15종) ※ 사회적기업실태조사(고용노동부) 등 개선의견 수용(9종) 및 일부수용(1종) - '23년 신규 승인 국가통계 43종의 조사표 및 결과표 점검을 통한 개선 의견 마련(22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별균형 정책기반 제도가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개선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목표에 근거한 대상과제 선정,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성평등 조치사항을 발굴, 정책개선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과제 발굴·선정하고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형(체크리스트) 평가 확대 실시* * (기존) 일자리사업, 도서관사업 → (확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사업(추가) ○ 중대재해감축 정책 등 7개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추진 ○ 국가 및 지역성평등보고서 연구 추진('25.12월) ○ 국가승인통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25.12월)

3	Ⅲ-1-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과제목표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주요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의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케하여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지속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도입·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790	1,876	86	4.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127	1,002	△125	△11.1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2,502	11,007	△1,495	△12.0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7,287	6,230	△1,057	△14.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데이터 감수 및 정합성 분석 등 실시
- 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수행('24년 2,229개소 실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을 지속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 제2항 제1호)

○ 산업현장의 직무중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24.12월 총 1,100개 NCS 확정, 고시)

*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데이터거래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봉사관리 등 7개 NCS 개발

* 보안사고분석대응, 인공지능서비스구현, 스마트설비설계 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105개 NCS 개선

○ 중견·중소기업의 직무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NCS 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 '24년 1,050개 기업 대상 1,400건 실시(NCS 기반 직무분석, 채용·훈련프로그램 설계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남녀 근로자 현황 등' 제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다소 완화 * '17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4.6%였으나, '23년에는 29.3%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및 목표치 달성 * 감독시행 사업장: '22년 953개 → '23년 1,017개 → '24년 2,229개 ○ 직무·능력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 NCS를 활용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NCS 활용 확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 남녀고용평등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 산업현장 변화에 발맞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및 기업의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 지원 계속

4	Ⅲ-1-④	성별 대표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인력개발과

과제목표

○ 공공·민간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통해 사회 전반 성별다양성을 높이고, 여성인재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반 강화

주요내용

○ 의사결정직위 성별 균형제고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현황 관리
○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86	606	220	57.0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100	320	220	220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	156	156	-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50	50	-	-
(여성인재풀 확충)	80	8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중앙*·지자체** 소관 법정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 : ('23.) 40.5%, ('24.) 집계중
** 지자체 위원회 : ('23.) 42.6%, ('24.) 집계중

○ 여성인재풀 발굴·활용 및 홍보 추진 * 여성인재풀 등재 인원 : ('24.) 171,230명

○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실시 ('24.) 282개사

○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 기준(40% 이상) 연속 달성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한 지속 확대

○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성별균형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사회 각 분야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확산 노력 지속 필요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관점을 반영하여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 기업의 성별다양성 확보 및 현장 안착 지원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지원			
주요내용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활용 지원 ○ 교원연수 및 다양한 교육 활동 사례 발굴·공유 등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지원 지속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양성평등 (디지털 환경 맞춤형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원)	300	250	△50	△2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활용 지원

- 여러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콘텐츠를 수집·선별, 교원전용플랫폼에 공유하여 교사들의 수업 활동 지원 ※ 에듀넷·티-클리어 내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플랫폼(ITDA) "양성평등한 미래인재 채널" 운영 개편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고등학교)

○ 교원 연수 및 다양한 교육 활동 사례 발굴·공유 등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지원

- 범교과 학습 주제간 통합, 관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단위학교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편성·운영 안내
  ※ 2024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3.11.27.) 내 세부주제로 양성평등교육 15차시 반영
- 초·중등 현직 교원들의 양성평등교육 교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
  ※ (대상)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집합) 8.29.-8.30.(1차), 10.21(2차). (온라인) 9.4.-10.30.(초등/중등 2회씩), (참여자) 310명, (만족도) 90.0점
- 초·중등 교사들이 직접 계획·운영하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동 사례 발굴 및 지원(10개팀)
- 초·중등 국립학교 대상 상설연구학교 연구과제 운영(학교 양성평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 1개교씩, '24.3.~)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별 학교별 특색과 상황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주제를 활용한 양성평등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및 교사들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양성평등교육 역량 향상 연수 지원 등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지속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교육 등 범교과 학습 주제 간 통합 운영 및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학교 양성평등교육 편성·운영 안내 지속

○ 시·도교육청별 자체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기반 구축 지원 지속

○ 교사들의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산 지원을 통한 단위 학교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 지속

5	Ⅲ-1-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추진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지원			
주요내용	○ 양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550	550	-	-
(양성평등학교문화조성지원)	88	8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추진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14,038명)
- 공무원 사이버 교육 9개 과목 운영(30,847명)

○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지원
-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추진(8회)

○ 양성평등한 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참여프로그램 운영
- 제15회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 및 시상(장관상 등 총 71편 시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무원 및 정책이해관계자 대상 온・오프라인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8회) ○ 제15회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 및 우수사례 발굴(71편 시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부문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등 운영(6,000명)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운영 및 시스템 운영·관리(30,900명)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차별·비하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인·국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교·강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실시
- 혐오표현 및 차별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언론인 연수 개발 및 실시

주요내용

○ 차별·비하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3년~'25년)
- 교·강사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매년)
- 장애관련 보도특강 등 온라인 연수 서비스 제공
- 최신 이슈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언론인 재교육 강화로 언론속 차별·비하표현 지양

관련예산

(언론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미디어교육 사업	3,085	4,312	1,227	39.8

(언론재단 자체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언론진흥 사업비	896	772	△124	△13.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 늘봄용 교육 과정, 중학생용 AI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아동·청소년 연령별 교재 19,943부 배포
-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 대응 교육을 위해 중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팩트체크 교실> 운영 통해 중학생 5,936명 교육 지원
-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 속 혐오·차별 없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해 자체 개발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KT 협업 교육 지원으로 초·중학생 14,614명에게 교육 제공

○ 교·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미디어 속에서 차별·비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급별 교사연수 156개 과정 운영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 등을 위해 <찾아가는 교사연수> 53회 운영 및 309명 수강

○ 언론인 대상 장애관련 보도특강 등 온라인 연수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보도실천법>*, <기자들을 이한 장애 관련 보도 특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완료
  * 장애인과 언론, 장애인 취재 시 고려사항 및 접근법, 장애인 보도 윤리 등 5개 차시 과정 개발
  * 장애관련 보도 시 유의해야 할 관점, 장애인 취재원을 대하는 에티켓 등 3개 차시 과정 개발

○ 인권, 양성평등 외부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수습 및 경력기자 연수 개발 및 실시
- '양성평등진흥원' 협업 '데이터 속 양성평등: 잇다' 전문과정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AI 신기술 친화 교육 콘텐츠와 초·중등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차별 및 비하 방지 예방 교육 지원 ○ 교급별 교·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트랙별로(기초, 중급, 심화) 운영 - 2024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최고 등급 획득 및 교육부 장관상 수상 ○ 수습 및 경력기자 '장애관련 보도특강' 온라인 연수 355명 수료 ○ 기자 대상 인권 이슈 관련 전문연수 실시(수습 및 경력기자 401명 수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신규 개발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 보급 확대 및 고등학생 과정 연계 개발 필요 ○ 다양한 인권 관련 언론인 연수 주제 발굴

향후추진계획	○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활용 증대를 위해 교사가 직접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실> 지원 추진 ○ 인권, 장애, 양성평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 교육과정 확대

6	Ⅲ-1-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방송기반총괄과

과제목표

○ 인권침해,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제재 및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인권침해, 사회적 약자 및 타 민족·문화에 대한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위반 방송사 제재 지속 추진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 인권 보호, 양성평등 관련 심의사례, 주요 현안 방송사 공유 및 심의책임자·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속 지원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심의 활동)	7,346	4,577	△2,769	△37.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권침해 및 문화 차별·비하, 혐오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의결 15건 실시

<관련 조항 방송심의 의결 현황>

(2019년~2024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정제재	12	5	3	3	4	3
행정지도	42	36	11	7	9	12
계	54	41	14	10	13	15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적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침해 및 사회적 약자, 타 민족·문화 차별·비하, 혐오 등에 대한 적극적 심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2019년 이후 제재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방송에서의 인권 및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있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권침해 및 문화 차별·비하, 혐오 관련 방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심의책임자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사 심의책임자·실무자,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업무협의 및 교육 수행

7	Ⅲ-1-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여성정책과
과제목표	○ 민간 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대중매체 내용분석 실시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시민 대상 교육·캠페인 등 미디어 인식 개선 활동 추진으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도모			
주요내용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위한 민간 협력기관 운영 지원 ○ 시민 대상 미디어 인식 개선 지원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344	344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협력기관 운영(2개 기관) 및 매체·장르·주제별 내용분석(14종)
  * 시사보도, 예능·오락, 광고, 인터넷 기사, 쇼츠, 온라인 커뮤니티, 웹예능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408건)

○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지원
- 언론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모니터요원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21회)
- 시민참여 캠페인 및 미디어 포럼 실시(5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미디어 내용분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및 성차별 사례 심의요청으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지원 ○ 미디어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과 시민참여 캠페인 및 포럼 실시로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 및 심의요청
- 협력기관 운영 및 매체별 내용분석(14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요청 및 업무협력

○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지원
- 언론인·미디어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 시민 대상 캠페인 및 미디어 포럼 실시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인권침해방지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치유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 자활을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법률, 수사, 보호·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공공부문 및 일반 국민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필요

주요내용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논의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기관장에 의한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제재 조치 마련 등의 대응체계 내실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여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공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여성폭력 통계 생산 등 정책기반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복합 피해에 대한 협업 지원체계 마련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지원 인프라 확대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및 편의 증진, 장애인 피해자 특화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금,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가사·형사사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지원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해자 수요에 맞는 법률·의료·자립지원 등 유관기관으로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실시
-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촘촘한 의료지원 서비스 내실화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자활 등 지원체계 운영으로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과 전문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예방환경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양평기금・범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4,054	639	18.7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91	401	110	37.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9,037	527	2.8
▪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3,167	569	1.3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7,961	8,123	162	2.0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9,413	2,059	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 다수, 기관장 사건 등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요구('24년 36개소)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지원('24년 115개소) ○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실태, 관련 인식 및 제도·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실시('25년 공표 예정) * (조사내용)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방지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4년 시행계획 수립 및 '23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여성폭력 사각지대(기초지원시설 미설치지역) 및 복합, 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5개소,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1개소)을 통한 상담·구조·보호·자활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추진 * 연도별 지원건수 : ('21년) 154,888건 → ('22년) 145,390건 → ('23년) 145,521건 → ('24년) 152,460건 - 지자체 협력을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사례, 청소년 성범죄가 잦은 장소, 구직사이트・채팅앱, 광고물 등 현장점검, 캠페인 등 활성화 ※ '24.상반기까지 129개 시군구 총 3,373개 업소 현장 합동점검 실시, 유흥업소, 숙박시설(모텔) 성매매 알선 등 고발 36건, 행정지도 166건(성매매 경고문구 미부착, 불법 성매매광고물 철저 등), 시민감시단을 통한 성매매 유인, 광고 등 모니터링 실시(SNS, 채팅앱 등 총 79,575건 적발・신고)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대상 교육 관리 강화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별도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에 따라 고위직 특화교육 지원 실시(88회 3,985명) * ('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본부 → ('22년)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까지 확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 : ('24년)5,943회 152,409명 ※ ('23년)5,293회 142,632명 ○ 폭력예방교육 인적기반 확충·내실화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23년 965명→'24년 992명) - 모니터링 다각화, 통합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운영 등 전문강사 관리·감독 사업 추진 ○ 맞춤형 콘텐츠 및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콘텐츠(4종15편) 등 개발·보급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상담·보호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293,438건,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545,925건, 보호시설 지원 건수 181,090건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대상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 상담 등 무료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11,872건 ○ 성폭력 피해 대상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피해자 접근성 제고 *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24.6월) ○ 성폭력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퇴소자립지원금 인상(5→10백만원),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간) 신설 추진('25년 예산 반영) * (기존)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 (완화)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 -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 '24년 전담인력 신규 배치(13개소 각 1명)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을 통한 상담, 심리상담·치료, 수사·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상담 실적 : 93,004건('24.6. 기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실적 : 75,792건('24.6. 기준)

	해바라기센터(통합지원센터) 지원 실적 : 192,887건('24.6. 기준)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중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력 착취분야 식별지표"개정고시('24.12.) / 활용(4,244명) ○ 대국민 홍보 콘텐츠 확산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1종) 및 의무 교육 실시(24년 264,856명 이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이주민 지원단체 종사자 워크숍(2회) ○ 「중앙권익보호기관」 내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하여 피해자 사례판정 및 확인서 발급,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급 (피해자확인서 발급 12건,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급 10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개 중앙행정기관·17개 시도 131개 과제를 아우르는 여성폭력방지 총체적 계획 마련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책 환경변화, 새로운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 ○ 통합지원 사업 추진으로 여성폭력 복합피해 사각지대 점진적 해소 및 전국적인 지원 체계 구축(11개 시·도 지원)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집결지 내 현장 상담소를 통한 심층상담 및 특성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 집결지 현황 : '04년 35개 → '16년 24개 → '19년 18개 → '22년 14개 → '23년 12개 ○ (성매매 피해자 사회복귀율)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매년 회복·자활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자활역량 향상으로 취업 등 사회복귀 인원 증가 * 취업현황 : ('21년) 1,543명 → ('22년) 1,530명 → ('23년) 1,563명 → ('24년) 1,570명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23년 18,127개) 대상 폭력예방교육 점검 결과, 기관장 참여율 99.8%, 고위직 참여율 94.4%, 종사자 참여율 93.7%로 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상향 안정화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관리·감독으로 폭력예방교육 인적기반 확충·내실화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발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통한 인식 개선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및 인권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 해바라기센터 : ('23.) 39개소 → ('24.) 40개소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 강화,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조기 구조·지원> ○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부터 구조지원까지 단계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으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미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노력 긍정평가 *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3년) 2 등급 → ('24년) 1 등급(한국, 미국, 영국, 대만 등) 국가로 상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25년 여성폭력통계를 구축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확대운영 및 전국적 지원체계 구축 지속 추진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공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관리체계 지속 강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체계 활용 및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성매매 방지 활동 지속 추진 ○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강화* 및 자활참여지원프로그램(공동작업장 및 인턴십)을 거주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24.) 월 100시간, 100만 원 → ('25.) 월 150시간, 150만 원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 예방교육 정보(실시율, 참여율 등) 공개 및 현장점검 지속 추진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확대 및 재위촉 보수과정 강화, 청년 모니터링제 등 강사별 관리방안 다각화 ○ 대학생 및 일반국민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속 추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및 인권보장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 ○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및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8	Ⅲ-2-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 인신매매 등 여성 대상 신종 범죄 대응 ○ 가정폭력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경찰청 법정교육으로 지정, 전체 경찰관의 96.6% 이수

(교육 내용)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인식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등

- 피해자 식별 관련 심화 교육과정인 '인신매매방지법의 이해 및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요령' 신규 개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탑재 및 식별 현황 관리

○ **가정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가정폭력처벌(방지)법 개정 추진 △재발우려가정 관리체계 개선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대응 △가정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 강화**
- 최신 사례 등 반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법정교육) 교육자료 개선 예정

○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도구의 개선 및 간소화 검토**
- 관계성 범죄 관련 보호조치 활성화 및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통합 등 간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및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내실화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주말 돌봄방 등 농촌 특화형 보육서비스 확대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총 예산	3,951	4,711	760	19.2
▪농촌보육여건개선	3,496	4.286	790	22.6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80	50	△30	△37.5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200	200	-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	175	175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정책기반 마련>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1~'25년)에 따른 '24년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 수립(24.2.)
- 우리 부 시행계획을 토대로 15개 시·도 2024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인력 운영, 여성농업인 육성 표준조례안 운영 등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정책 추진 도모

○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공포('24.4.)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통계
- 여성농업인 동향 및 전망, 농촌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양성평등, 농업기술교육 역량 현황 등을 포함하는 기초 데이터 확보

○ 주요 정책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실무회의) 등 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

* 여성농업인육성심의회, 장관님-단체장 간담회, 단체 실무급 회의 등 진행
- '24.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심의, 공동경영주제도 등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의견수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기획 등

○ (제3회 여성농업인의날) 여성농업인 직업적 위상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24.10.)
- 여성농업인 육성 유공자 표창, 여성농업인단체 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에 대해 대내·외 관심 환기

※ 참석: 농식품부 장관, 농협회장, 8개 여성농업인 단체장 및 회원, 국회의원(4명) 등 200여명

<교육지원>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고령여성) 주로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지역에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 여성농업인 정책·편이 장비 등을 소개하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사업 운영*

  * 교육인원/예산: ('22.) 20,501명/5억원 → ('23.) 18,594/5 → ('24.) 6,167/2

- (청년여성)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긍정 정서 함양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진로 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를 위한 시골언니프로젝트 사업 운영*

  * 교육인원/예산: ('22.) 240명/5억원 → ('23.) 260/5 → ('24.) 118/1.75

<양성평등>

○ (양성평등 교육) 농촌 특화 양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및 교육 내실화를 통해 성평등 인식개선 확산 노력

  * 양성평등 전문강사 위촉현황 : ('22.) 34명 → ('23.) 42 → ('24.) 47 → ('25.) 53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정책 추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 농식품부는 제19회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대통령 표창)

<보육지원>

○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

-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보육)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아이돌봄 지원(72개소), 농번기 돌봄 지원(100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14개소)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개선사항* 발굴하여 지침 개정

  *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돌봄 대상 연령 확대(초등학교 4학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최대 10개월), 급·간식비 인상(1일 8천원), 차량운영비 신설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진출 확대를 위한 경영 능력, 영농기술 교육, 직업 교육 등 지원 ○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의사소통 활성화, 정책홍보 강화 ○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확대 기반마련 ○ 보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확대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경영역량 강화, 노동여건 개선으로 경영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개선, 맞춤형 교육 확대, 제6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 등

○ 농업·농촌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교육 확대, 정책 담당자의 성평등 이해도 제고로 농촌주민 인식 개선과 정책추진 실효성 확보

9	Ⅲ-2-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소득복지과
과제목표	○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정책 등 실질적 지원 추진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향상 추진			
주요내용	○ 여성어업인 지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지원 - 어업활동 지원 사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여성어업인 포럼 사업			

관련예산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업활동 지원)	180	180	-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687	1,172	△515	△30.5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여성어업인 포럼)	21	2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4.4.)을 통해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3년도 성과를 점검, 미이행과제 추가 이행을 검토

○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지원
- 질병·임신 등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 대해 대체인력 비용을 지속적 지원하여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24년 예산 36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에 특화된 건강검진 사업을 전년대비 확대 실시('23년 317백만원→'24년 1,172백만원)하여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여성어업인의 위상 강화
- 제3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10.16.) 개최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권익 향상 및 위상 제고
- '24년도 여성어업인 포럼(12.31.) 개최를 통해 여성어업인 정책 홍보 및 현장의견 수렴, 정책 확대 유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어업활동 지원) 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대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인원 약 0.8% 증가('23년 2,957 → '24년 2,980명)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표준 지침 개발,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직업성 질환(근골격계, 난청 등) 수검자 약 2배 확대('23년 674명 → '24년 1,350명) ○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제3회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10.16., 장관님 참석)하고, 우수 여성어업인 13인 포상(장관표창) ○ (여성어업인 포럼) 여성어업인 정책 발전 방향, 여성어업인의 역할 강화 방안 등 논의(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및 분회장 54명 참석, 58개 분회에 브로셔 5,000부 배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확대 추진 : 수검자 목표 상향('24년 1,350명 검진 → '24년 목표 4,000명) 및 검진기관 추가 지정 추진('23년 12개소 → '24년 29개소 → '25년 33개소)

○ 어업활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24년 1일 최대 10만원 → '25년 1일 최대 12만원)

○ 여성어업인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컨설팅 지원 예산(5억원) 확보 추진('25~)

10	Ⅲ-2-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술인지원팀	
과제목표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				
주요내용	○ 여성문화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조성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500	466	△34	△6.8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581	58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양성평등정책위원회(2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2회)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을 통한 성인지예산사업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분야별 양성평등 정책수요에 기반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홍보물·행정규칙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성인지 통계 작성
-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 개최(6개 분야 15점 시상)
- 문화 분야 종사자 및 일반국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2024 벡델데이' 행사 개최
-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관계자 대상 포럼(5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인식개선 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추진(영상(12편) 및 인스타툰 제작)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센터 2개소 운영

-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운영하는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운영(대학로, 마포)
- 총 4,525명 예술인 자녀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양성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 예술인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작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과 양성평등 인식 수준을 고려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발굴 및 추진 필요

향후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양성평등 문화생태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실행 지속

○ 반디돌봄센터(서울 대학로) 및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서울 마포) 지속 운영

11	Ⅲ-2-④	모 · 부성권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 · 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 지속,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등을 통해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및 모·부성권 강화			
주요내용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스마트 근로감독 등) 지속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할 사용횟수 제한(현행 1회) 완화 검토('23.~)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모성보호육아지원	2,100,641	2,496,830	396,189	18.9
(육아휴직급여)	1,696,352	1,986,864	290,512	17.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24년 1,028개소)을 통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로 확대·개편('23.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24.10.22. 남녀고평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1회→3회(네 번에 나누어 사용)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남녀고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증가 및 목표치 달성 * 감독시행 사업장: '22년 953개 → '23년 1,017개 → '24년 2,229개 ○ '24년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로 개편 이후, 사용자 수가 51,761명으로 전년 대비 2.16배 증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모 맞돌봄 확산 효과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등 확대('24.10.22. 개정, '25.2.23. 시행) -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 편의성 개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현장 예방점검의 날 등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지속

○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확대 시행(첫 1개월 급여 상한을 200만원→250만원으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시행(분할횟수, 사용기간, 급여지원기간 등 확대)

12	Ⅲ-2-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과제목표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자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 -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주요내용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제정·시행 ○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 긴급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 -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458	2,231	△227	△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대응역량 제고) 직장 내 스토킹 대응력,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인력 전문성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역량 강화

- (예방지침) 공공부문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배포*, 표준안에 따른 기관 자체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등 기관 내 스토킹 예방 조치 강화
  * 국가·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진단도구)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보완·배포*하여 스토킹 피해 여부 조기 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 방향 결정 등 지원
  * (지원기관용) 1366, 통합상담소, 스토킹 사업 운영기관 등 전국 배포('24.)
- (전문성)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피해 지원 역량 제고
  * 총 8회 실시, 1,443명 수료('24.) / 이러닝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교육 등
- (사후관리) 수사기관 대상 스토킹 피해자 2차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추진*
  * '24년 6개 수사기관(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상 61회 실시(1,249명)

○ (보호·지원 강화) 긴급 주거지원 확대, 경찰 연계 신변보호,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및 일상회복 지원

- (주거지원)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
- (신변보호) 경찰청 협업, 거주지(주거지원 시설 포함) 주변 순찰 강화, '경찰청 112-여성긴급전화 1366' 간 스토킹 피해 신고 연계 등 신변 보호 강화
  * (여가부-경찰청 여성폭력방지 실무협의회 개최)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협업체계 강화
- (회복지원)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전국(17개소 운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정서 회복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실적 : ('24.) 1,281건

	- (현장점검) 주거지원 시설 현장방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논의 ○ (인식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를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심각성 인식을 통한 초기신고 유도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인지도 제고 -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SBS·EBS 등 방송 송출 및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스토킹 예방 및 정책 홍보영상 EBS·유튜브 송출(8~9월),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영상 온·오프라인(SBS·유튜브·지하철 등) 송출(10~11월),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포스터(1종) 배포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기관,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 및 직장의 스토킹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 * 국가기관 1,317개, 지자체 1,007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221개 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 ○ 긴급주거지원 사업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긴급주거지원: ('23.) 60건 → ('24.) 272건, 치료회복 프로그램 ('23.) 916건 → ('24.) 1,281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업·연계하여 스토킹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내실화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 다양화 * (기존) 고정 쉼터 → (개선) 고정 쉼터+맞춤형 쉼터 제공(공유숙박시설 등) - 공공부문 자체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 여부 점검 ○ 스토킹행위 경각심 고취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출산정책과 장애인건강과

과제목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 여성 및 태아의 건강권을 위한 난임시술 통계 관리
○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여성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난임시술 통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장애친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모자보건사업	24,450	27,643	3,193	13.1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7,756	7701	△55	0.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750	700	△50	△6.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공임신중절 관련「모자보건법」 국회 입법 논의지원 등을 위한 설명회(계속) 및 제도 개선 등 참고 위한 해외사례 연구 추진('24.10~12월, 모자보건학회)
○ 2023년 난임시술 진료분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2024년도 통계관리를 수행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23년) → 보편적 지원('24년~)
- (선천성이상아 지원기한 완화)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진단·수술('23년) → 2년으로 확대하면서 예외기간*도 인정('24년~) * 저체중 등으로 수술이 곤란한 경우, 2년 후라도 의사소견시 예외기간 부여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 지원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2개소 운영 개시, 총 10개소 운영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총 114명 교육 이수, 누적 이수율 89.3% 달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 인식 반영한 개선 입법 추진중 ○ 2024년도 난임시술 통계 공개('24.12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기한 완화('24년~ 적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2개소 추가(8개소→10개소) 운영 개시하여,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 ○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른 계류 중인 법안 자동 폐기('24.5월)

향후추진계획	○ 인공임신중절 관련「모자보건법」 국회 입법 논의지원(계속), 입법 공백기 여성 건강권 보호 정책 계속 지원(상담, 성·피임 교육 등) ○ 2024년 난임시술 진료분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2025년도 통계관리를 수행하고 ▲2024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3차 평가 ○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전국 17개 시·도) 추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및 지정 확대('24년 10개소→ '27년 15개소), 종사자 교육 실시

13	Ⅲ-2-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정책과
과제목표	○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주요내용	○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4,827	16,425	1,598	10.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1인당 연 156,000원 한도)
(반기별 1회씩 분할 및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매토록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취약계층 20만여 명)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생리용품 지원 단가 인상(월 13,000원 → 월 14,000원) 등으로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

14	Ⅲ-3-①	아동 · 청소년 활동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청소년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며 데이터 시스템화가 가능한 전국 청소년활동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 코딩, 드론, 영상·미디어 제작 등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예산 확보
○ 코딩·드론 등 디지털 체험활동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151	-	△151	순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850	85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생애주기별 청소년 활동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26~'28년) 이행계획 수립('24년)

* (기초연구)「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24.5.27.~11.24.)

○ 디지털 전환시대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2024년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디지털 활동 21개 프로그램, 8,662명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 추진기반 마련
○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경험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활동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25년)

○ 디지털 전환시대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15	Ⅲ-3-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제목표	○ 방과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			
주요내용	○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관련예산

(청육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485	30,387	△1,098	△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31,306	30,006	△1,098	△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을 통해 돌봄취약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돌봄) 참여 불균형 해소
* 운영기관 및 청소년 참여 확대 : ('23.) 350개소/14,588명→ ('24.) 355개소/14,712명

○ 사회환경 변화와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탐색·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 활동 등을 중점 지원
* 진로탐색·체험 활동: 260개 기관, 1,529개 프로그램, 53,853명 참여
* 디지털 체험활동: 256개 기관, 2,121개 프로그램, 70,098명 참여

○ 기업의 사회공헌, 유관기관 등 외부자원을 연계·활용한 AI·경제 등 전문 분야 교육·활동 제공*을 통해 활동 지원 다변화
* '24년 34개 기관 연계, 44개 프로그램 제공(과학창의재단 AI교육, 삼성복지재단 진로멘토링, LG이노텍·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학교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프라 확충, 청소년의 특성·요구를 고려한 활동·학습·돌봄 프로그램 다변화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사업효과성 제고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전/사후 효과성 증가율(심리적응, 핵심역량 등) : 21.3% 향상 ○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탐색·체험 활동, 디지털 체험 활동 등을 집중 지원하여 청소년의 미래역량 제고에 기여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성장기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식단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현실화 지속 요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단가('24년) 5천원 ※ 지역아동센터 9천원 내외

향후 추진계획

○ (인프라 확충) 방과후 활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속 확충에 노력('25년 355개소 운영)

○ (운영내실화 추진) 현장 컨설팅(2~12월), 종사자 교육(4~11월), 종합 평가(110개소, 3~10월)
민관협력(기업 사회공헌 등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연중)

16	Ⅲ-3-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사회정서성장지원과
과제목표	○ 시·도 교육청별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증원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기관 운영 실태 점검·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			
주요내용	○ 학교에서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상담 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등 위(Wee) 프로젝트 사업기관 확대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각종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수 지원 등 학생 상담 내실화 ○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위(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지정을 통한 심리치료 및 자문 지원 -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과 학생 간 1:1 화상상담(랜선 위(Wee) 클래스) 시스템 운영 및 지원			
관련예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생 상담 내실화 지원	1,636	1,189	△447	△27.3
- 학생 상담 활동화 지원	470	450	△20	△4.3
- 학생 상담 자문 지원	1,166	739	△427	△36.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온라인 연수 지원
- 위기학생의 상담 사례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원격 자문 서비스 제공
  * 위(Wee)닥터(정신과전문의) 자문 현황: ('22.) 3,433건 → ('23.) 3,672건 → ('24.) 3,484건
- 전문상담(교)사와 학생 간의 비대면 1:1 원격 화상 상담 시스템(랜선 위(Wee)클래스) 운영
- 상담 지원 및 기관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위(Wee)프로젝트 희망대상 개최('24.11.29.)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Wee) 클래스/센터 신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 위(Wee) 클래스: ('22.) 8,619교 → ('23.) 8,863교 → ('24.) 9,115교 - 위(Wee) 센터: ('22.) 238개소 → ('23.) 239개소 → ('24.) 242개소 - 공립학교 전문상담(순회)교사: ('22.) 4,664명 → ('23.) 4,765명 → ('24.) 4,965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등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전문상담교사 지속 확충 및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추진
○ 위센터 자문의 위촉 및 위닥터 운영을 통해 고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17	Ⅲ-3-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학교폭력대책과

과제목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주요내용

○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발달해가는 또래상담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 운영학교 컨설팅, 지도교사 연수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또랜(LAN)상담소, 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방어자 되기' 등 교내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및 운영사례 발굴
-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서포터즈단 운영 지원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폭대응	62,888	36,261	△26,627	△4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5,932	3,136	△2,796	△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또래상담자가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또래상담학교(5,041교) 운영

○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학생 주도성 및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서포터즈단(61팀) 운영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또래상담사업 담당 실무자 설명회 및 지도교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또래상담학교 이해도 제고 및 상담인력 양성(지도자: 3,022명, 또래상담자: 241,769명)

○ 학생서포터즈단 사전교육 및 지도교사 중간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인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생 참여 중심의 예방활동(또래상담학교, 학생서포터즈단 등) 지속 추진으로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18	Ⅲ-3-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아동학대대응과

과제목표

○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
-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 대응체계 공고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1,450	1,450	-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활성화	1,050	1,050	-	-
아동학대대응체계 활성화(조기개입)	100	100	-	-
아동학대방지인프라 기능보강	300	300	-	-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48,565	49,058	493	1
▪ 요보호그룹홈 운영지원	24,074	16,247	△7,827	32.5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24,074	16,247	△7,827	32.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신고활성화) '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 의료인·영유아 종사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24년)

○ (인식 개선) 부모-자녀 간 상호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129원칙' 지속 확산,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긍정양육 공익광고, 아동학대 경각심 공익광고, 부모 대상 교육영상 2편, 아동학대예방 SNS 릴레이 캠페인, 카드뉴스 5종, 긍정양육 리플릿(35만부) 및 책자(15천부),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전(9~11월) 등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개입) e아동행복지원사업(3세 아동 전수조사 포함)을 통해 아동 111,511명의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27,71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154명은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위기정보를 조합 선별하여 아동을 발굴하는 상시발굴 기능 시범운영('24.7월)
- 아동의 누적된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위기아동 시계열 활용모형 도입('24.7월)

○ (조기지원)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시행('24.4월~)
- 9개월간 총 354가정에 주거환경개선, 긴급 의료비,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등 지원

○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98개소(신규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51개소(신규 7개소) 운영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확대('22년 8개소 → '24년 16개소)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확대('22년 1,000가정 → '24년 2,400가정)

○ (대응체계 공고화)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85명 배치, 아동학대 대응인력 직무교육 17과정, 5,258명 수료
-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 최고점 부여 기준 상향**으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협업 강화
* ('23.) 229개 시군구, 2,310회 → ('24.) 229개 시군구, 2,428회(5.1%↑) ** 연 9회 → '24년 실적부터 연 10회로 상향 조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시행 및 '긍정양육 129원칙' 홍보물 제작·배포, 공익광고 송출 등 시행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e아동행복지원사업(3세 아동 전수조사 포함)을 통해 아동 111,511명 가정 방문하여 양육환경 확인 등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 (대응체계 공고화) 맞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대응체계 내실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시행(연중상시) 및 학원종사자용(체육시설 종사자 포함)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 '25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시행 등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25년 e아동행복지원사업(3세 아동 전수조사 포함) 실시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지자체 설치수요에 맞춰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정하되, 아동보호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량이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에 추가인력 지원 *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계획 변경 및 성별 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추진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확대 ○ (대응체계 공고화)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지속 추진

19	Ⅲ-3-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스포츠혁신지원과
과제목표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체육계 인권 보호 및 공정성 확립 추진			
주요내용	○ 조사관·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상담 운영 ○ 인권침해 피해자 대상 의료·법률·체육활동 비용 및 심층 상담 지원 ○ 다중매체를 활용한 스포츠 인권 홍보, 체육 현장 점검, 예방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 효과 증대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육계 비리 인권침해 사건 관리			

관련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613	9,374	1,761	23.1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지원)	5,471	6,348	877	16
(스포츠윤리센터 사업지원)	2,142	3,026	884	41.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 활동)**
- 언론보도, SNS, 홍보 부스, 캠페인 운영으로 체육인 인권 및 윤리 인식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31개 고등학교 운동부 전수 현장 점검 및 학생선수 지도자 집중 면담 실시
- 가이드라인 형태 결과보고서 제작·배포 및 포럼 개최('24.12.)
- 전국(장애인)체전 간 대면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찾아가는 상담 운영('24.10./경남 일원)
- 스포츠윤리교육 인원 확대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 이수자 ('23년) 16.2만명 → ('24년) 20.9만명
- 체육계 성인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콘텐츠 개발 협조(문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장애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 실시, 사건 사후 심층실태 파악 및 문화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스포츠 인권 심층 실태조사 실시* * 선수, 지도자 및 심판 대상 정량·정성조사(5,060명), 50개 운동부
- 체육계 징계이력 확인 목적의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통한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선제적 예방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 상담 2,246건·신고 851건 접수(전년대비 35.1% 증가), 사건처리 757건(전년대비 24.3% 증가)
  ※ 학교폭력 관련 사건 접수 50건 포함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건 심의 (16회/394건)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조사관 증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사무소 5개 지역(경기, 경남, 대전, 강원, 광주) 운영을 통한 상담 및 조사 접근성 제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센터 조사 권한 및 후속조치 실효성 강화

○ **(피해자 지원)** (단위: 건/천원)

분야	의료	법률	정서심리	체육활동	계
지원 건 수	13	12	5	2	**32**
지원비용	8,501	36,000	3,040	1,945	**49,486**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속한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대상 경제적, 사회적 지원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 사건 평균 처리기간 ('23년) 145일 → ('24년) 99일 ○ 체육계 현장 점검,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권 상생 가치 공유 ○ 체육인 징계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채용, 대회출전 등에 제재를 적용,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예방에 기여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총 29,785건 발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피해자지원, 홍보 등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피해 보호 및 캠페인 추진 한계 발생 ○ 일부 지역사무소의 교통편 부족에 따른 접근성 미흡으로 이전 또는 추가 개소 등 조치 필요

향후추진계획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 활동)**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 (2개→4개 대회) -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선수·지도자 대상 인권보호관 활동 추진 - 체육인 인권 교육 지속·확대 및 전국 체육단체 대상 스포츠인권·비리 실태조사 실시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이행 및 정책 기반 강화* * 중징계·경징계 요청, 재조치 요구, 직접 조치 요구 등 센터의 조사권한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5.1.) 및 시행('25.8.)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 개시('25.3.~) - 징계정보시스템-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법정시스템 운영 실효성 제고

20	Ⅲ-3-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대중문화산업과

과제목표

○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 인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지침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24.3월)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존중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대상 교육 강화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5,300여명) 등록교육(40시간) 및 법정교육(최초교육 1년 6시간, 연간 교육 1년 3시간)과정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관련 교육내용 신설

○ 우울증·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기획사 또는 연예인 신청 방문 상담 포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 교육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대상 성폭력 예방, 스트레스 관리, 인성교육 등(1회 1~4시간) 35개 과정 운영(오프라인 방문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육성	47,069	42,460	△4,609	△9.7
(대중문화산업진흥)	4,359	3,559	△800	△18.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024.3.27.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유관기관 등 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존중 강화를 위한 업계 대상 교육)**
-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정기(법정)교육 실시*

* 온라인(8월~11월) 및 오프라인 교육 병행, 3,622개 업체 참여(최초교육 574개 업체, 연간교육 3,048개 업체)

○ **(대중문화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총 1,883회 및 211명 참가(개인상담 1,864회/197명 참가, 집단상담 19회/24명 참가)

※ 총 7개 영역(회복탄력성, 자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음주)에서 모두 개선되었으며, 특히 우울(7.3점 감소), 스트레스 (6.5점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 성, 심리(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리 등), 자살예방, 인성 등 275회, 1,620명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을 통해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기본인권 인식 제고 - 법정 교육 이수율 87.4% 달성,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4.7점(5점 만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련 법령 개정은 이견으로 인하여 미이행 - 청소년 예술인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연령대 세분화, 주당 용역제공시간 축소 및 1일 최대 제공시간 설정 등 법률 개정안(문체위 계류중)에 대한 K-팝 시장 위축 우려, 용역제공방식 산정방식 등 이견이 있어 개정의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만12~15세 한 구간 추가, 벌칙조항 삭제 등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쟁점 해소에 난관이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중장기 검토가 필요

향후추진계획	○ 업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개정('26.1.1. 시행)을 통해 업계 및 연예인 지망생 대상 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교육(직업윤리와 법령 교육) 의무 이수 시간 확대(개정 전: 12시간 → 개정 후: 16시간) 및 관련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으로 교육 이수 환경 마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25년 소양교육 250회, 심리상담 2,000회 예정

21	Ⅲ-3-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목표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과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로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주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점검 등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추진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청소년의 성착취 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 온라인 상 성착취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평)	18,510	19,037	527	2.8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1,239	1,265	26	2.1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265	265	4	1.5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15	1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부터 성매매 뿐만 아니라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지원 포함(지침 변경)

'24년 이행실적

○ 랜덤채팅앱 주기적 점검 및 단속('24.1.~24.12., 5차례 점검)

- 점검결과 : 시정 요구 및 형사고발 30건, 방심위 차단요청 2건, 상품 판매 중단 요청 26건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성매매 등 성착취로 유입된 피해 아동・청소년(1,187명*)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자활 등 지원

(단위 : 건)

계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긴급지원	연계지원	사후지원	보호자상담
35,485	17,245	1,817	1,614	3,865	209	332	676	250	57	9,420

* 연도별 지원실적: ('21년) 727명 → ('22년) 862명 → ('23년) 952명 → ('24년) 1,187명

-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4,644건) 및 아웃리치(8,280건) 실시 등을 통해 피해 방지 추진

○ 성착취 고위험 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아웃리치) 등 신속한 피해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 4,644건, 성착취 유인 정보 신고 3,770건, 온라인 아웃리치 8,280건

-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상담 앱 개발·운영('24.4.25.~, 여가부·방통위·경찰청 협업)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운영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기소·기소유예처분 외 법원 소년부 송치사건까지 확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근거 마련('24.10월, 시행령 개정)
-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신고포상금 지급('24년 42건 접수, 18건 1,440만원 집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목표 92.0점 대비 3.3점 높은 95.2점으로 목표치 대비 103.5%를 달성 - 특히 보호자 상담을 별도 실시하여 2차 피해, 성착취 재유입 등 방지에 노력 - 각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등을 포함한 '성착취'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기술 도입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22년) 1개 지역 → ('24년) 6개 지역 *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변경 ○ 온라인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사전 차단 및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한 성착취 노출 위험 아동 발굴, 신속한 피해 지원서비스 연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피해 발생 증가에 따른 지원센터의 상시 구조, 상담, 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보강 필요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불건전 교제 조장 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주기적 점검·단속, 법 위반 랜덤채팅앱 시정 요구 및 상품판매 중단 요청, 형사 고발 등 조치 ○ 성매매 범죄와 연관된 그루밍, 온라인 성착취, 성폭행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피해에 대해 체계적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의 운영 내실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온라인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지속 운영,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의심 정보 모니터링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지속 운영

22	Ⅲ-3-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필요
  *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지속 증가

주요내용

○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 등 통합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청소년상담 1388' 상시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신규 배치,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후 원스톱 지원,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마음건강 지원강화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72,073	71,820	△253	△0.4
(청소년안전망 운영)	31,242	31,698	456	1.5
(청소년상담1388 운영)	2,601	2,670	69	2.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역 내 상담·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동반자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동반자 배치 1,398명

○ 청소년상담1388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SNS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상담 접근성 제고
  * 청소년상담1388 채널 확대 : 4개→6개(+인스타그램, 네이버 라인)

○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및 전담인력(105명) 배치('24.1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심리평가 사업 연중 운영을 통해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특화지원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운영을 확대*하여, 상담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시 센터 등 유관 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
  * 전남('23.7월), 대전('23.10월), 세종('23.12월), 충북('24.2월), 경남('24.5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안전망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유형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전국 240개 센터'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종합심리평가 전문인력 배치로 원스톱 지원 강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신규 운영('23.7월) 등으로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특화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귀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 13.9만 여 명의 청소년에게 552만여 건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기관 운영 효율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 연중 운영
-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및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살·자해, 미디어 중독, 고립·은둔 등 고위기청소년에게 적시·적기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상담채널(전화, 온라인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채널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성 강화

23	Ⅲ-3-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

주요내용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인권·권리교육 실시
○ 청소년쉼터 종사자 대상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교육

관련예산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인권교육 : 별도 예산 없음)	30,855	33,079	2,224	7.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청소년쉼터(135개소) 대상 인권보호 점검('24.6~8월)
* 청소년 및 종사자 인권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 점검

○ 청소년쉼터 종사자 대상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관련 교육 실시(5~6월, 상시)
* 비폭력 대화를 활용한 의사소통(5.20., 6.25.), 자해 및 자살시도 위기개입(6.25),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인권감수성(상시학습),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감수성 챌린지 100℃(상시학습)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국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기적 인권점검을 통해 민주적이고 인권 존중적 시설 운영 정착

○ 청소년쉼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인권 관련 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쉼터 인권보호 점검*('25.하반기)
*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 인권·권리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수칙 인권 체크리스트 개발('25.하반기)

24	Ⅲ-3-⑪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학교폭력대책과

과제목표

○ 학교급별, 수준별, 역량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지속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인식 제고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성 제고

주요내용

○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강화

○ 학부모의 자녀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소식지 배부, 교육자료 제공 및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연수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원격연수 지속 운영
-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학폭대응	62,888	36,261	△26,627	△4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지원)	5,932	3,136	△2,796	△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급별 연간 11차시 이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 편성·운영 지원
○ 학교폭력 유형, 예방 및 대응 방법,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학교폭력예방 컨설팅단 구성·운영
○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활용도·효과성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이 연중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학교폭력 컨설팅단 구성·운영(453명)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재구조화 프로그램(초5-6, 중2-3, 고2-3 총 3종)
○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소식지(4회), 학부모용 리플릿(3종) 등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학교, 학생, 교사부문) 공모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인식 확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지속 지원
- 어울림재구조화 프로그램 현장 확산을 위한 컨텐츠 제작·배포
-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지원
-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예방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실시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무심의관실
	과제목표	○ 출생통보제 시행			
	주요내용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23. 3.) 법무부·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업무협의 ○ (’23.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4. 6. 30.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7. 19. 제도 시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25	Ⅲ-3-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계청	과·팀명	인구동향과
	과제목표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을 통해 아동 인권정책 수립 지원			
	주요내용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각종 조사 및 분석 실시 □- 월·분기별 및 연간 기준 인구동향 통계를 차질없이 작성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출생·사망통계(잠정, 2월), 출생통계(확정, 8월), 사망원인통계(9월) 등)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구동태 통계 작성 - 월간 인구동향 공표(매월말) -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공표('24.2.28.) - 2023년 출생 통계(확정) 공표('24.8.28.) - 사망원인 통계 공표('24.10.4., 영아·모성 사망 보완조사 포함) -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통계 공표('24.11.7.) ○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출생통계 시스템 개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자료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연간 인구동태 통계 작성(계속)

26	Ⅲ-3-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보호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현장슈퍼비전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추진

주요내용

○ 미성년후견인 부재로 인한 법정 문제 지원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에 공공후견 지원
○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아동보호체계 유관기관의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실시
○ 사례결정위원회 활성화 및 양육상황 점검 지속 실시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회계(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21,047	21,591	544	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미성년후견인 지원 필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사업 추진
- 미성년 공공후견지원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후견인 양성교육, 공공후견인 선임청구 및 후견인 활동 지원 등 실시
* **(홍보)** 사업설명회 1회, 지자체 워크숍 1회, 사업안내 브로슈어(70,000부), 리플릿(35,000부), 포스터(2,000부) 배포 등, **(양성교육)** 총3과정 7회 145명 수료 완료, **(공공후견인활동지원)** 후견활동비(월20만원) 지원 및 활동키트 제작 및 지급, **(선임청구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신청 5건, 법률자문30회

○ 지자체 현장간담회 9회*,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 총4회 실시(권역별)
-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다영한 현장의견 수렴
* 서울 노원구,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서구, 광주 동구청, 전북 익산시, 대전 동구청, 경기 광명시, 충북 음성군, 대전 대덕구

○ 공적 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활성화 및 아동의 안전한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양육상황점검(96,356회) 지속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후견인 부재로 인해 교육, 금융, 통신 분야에서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법정문제 지원 기반 마련 및 체계적 후견 지원 구축

○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아동보호체계 유관기관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하 제도개선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보호대상아동 후견선임 활성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공공후견 지원사업 확대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 (기존) 경기 → (확대) 인천, 서울

○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 및 포상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전담인력 배치 등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노력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아동보호 지자체 인식 제고 실시
* 포상 규모 : 시·도 2개소(대상1, 최우수1), 시·군·구 7개소(대상1, 최우수1, 우수5)

27	Ⅲ-3-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국적 및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증명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로부터 보호			
	주요내용	○ 외국인 아동의 교육, 생활지원 및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개정 추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법률안 통과 시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신청과정 및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및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411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24. 1.) - 권인숙,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 제414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24. 5.) - 권인숙,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논의 ○ 김남희 의원,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대표발의('24. 10.) - 김남희 의원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24. 12.) ○ 서미화 의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24. 12.) - 서미화 의원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검토 중('24.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2회에 걸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 및 발의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제시를 통해 제도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유관 기관 입장 확인, 법률안 각 조항에 대한 논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입법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발의 시 입법 논의 지원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소년범죄예방팀

과제목표

○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통한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적절한 처우와 보호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 학교·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 특별교육 운영 활성화
- 초기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이 아님에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는바, 소년원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제한

○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과 복지적 조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우범소년에 대해「소년법」제32조의 보호처분 중 1·2·3·4호만 부과하여 과도한 보호처분을 제한하면서도, 단기보호관찰(4호) 처분을 존치하여 대안교육, 상담·교육명령, 보호자교육 등 교육적·보호적 부가처분을 통해 비행예방 기능 유지

관련예산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청소년비행예방	5,447	5,577	130	2.4

○ 우범소년 제도 개선
- 해당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 학교·검찰·법원 등 의뢰 초기비행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5,488명, 보호자 교육 3,873명
- 지역사회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개별상담 3,352건
-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프로그램 209개 과정 운영
- 교육 담당 직원 직무연수('24.2.), 직원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24.12.)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하여 입법논의 지원
-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24. 5. 29.)

○ 22대 국회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 제한' 규정 신설을 포함한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의원)이 발의되어,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제출(2024. 9. ~ 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 저연령·정신질환 등 초기비행 청소년 개별특성을 고려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확대 - 교육 담당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제고 ○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정부 발의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 같은 취지의 법안(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의원)이 발의,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제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 제출 후 입법 논의를 지속 지원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향후추진계획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성 제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진입 차단, 지역사회 위기·초기비행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심리상담 등 실시 ○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의원)에 대해 법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대응하여 입법 논의 지원

28	Ⅲ-3-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청소년보호과

과제목표

○ 비행초기 경찰선도제도* 운영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성 제고
*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 우범소년에 대한 제한적·보충적 운영으로 인권보호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주요내용

○ 비행초기 선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경찰선도제도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예산 확충
- 경찰청·국회·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비행초기 적극적 선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선도제도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우범소년 제도 개선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적절한 처우와 보호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 법무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 마련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위기청소년 선도(경찰청)	62	221	159*	256.5

* 중독정신의학회 협업, 마약·도박 등 중독성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시범운영 예산 등 증액
※ 시·도경찰청별 예산은 자치경찰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시·도경찰청별 사업명과 예산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선도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계 불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경찰의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 현황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전문가 참여제 연계인원(명)	12,611	13,965	15,119	17,157(13.5%↑)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결정인원(명)	3,756	4,638	4,995	8,889(78.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명)	20,411	26,714	30,155	31,665(5.0%↑)

○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선도프로그램 개발) 중독정신의학회 협업, 도박·마약 등 중독성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개발
- (인프라 확충) 도박문제예방치유원·중독관기센터 등 협업,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실) 운영기관 확대('23년 244개소→'24년 268개소)

○ 재범 우려 고위험 위기청소년 대상 제한적·보충적 우범소년 송치
- (우범소년 송치 대상)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취약환경에 노출될 경우 가·피해자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폭력서클·가출팸 등 고위험 위기청소년 대상 우범소년 송치

'24년 이행실적

► 가출팸·폭력서클 가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의 보호력이 부재하였으며, 무단결석 등으로 학교로부터의 적절한 가르침이나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범죄·비행(△오토바이절도·무면허운전 △집단폭행 △금전목적 범죄 △성비행)에 노출되거나 성인조직과 연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혁 外, 2022. 가출팸·폭력서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우범소년 송치인원(명)	792	584	731	890
폭력서클 해체(건/명)	70/529	50/350	56/427	63/360
가출팸 해체(건/명)	77/360	52/274	74/358	68/320

- (우범송치 대상자 선정요건 개선) 우범소년 송치 대상자 발견 時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년부 송치·긴급동행영장 발부 요청 여부 등 결정, 우범송치 기준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선도제도 효과) 소년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적극 운영으로 연계 인원 증가와 함께 소년범 재범률(27.9%→25.7%)도 낮아져 재범방지 효과성 입증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소년범 재범률(%)	30.2	27.9	25.7	23.0(2.7%p↓)

-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경찰단계 종결(조건부 훈방)로 소년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본인 및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선도프로그램 연계로 실질적·인권친화적 계도 가능

○ (입법 추진) 의원실 협조, 경찰선도제도 근거 및 촉법·우범소년 조사·신병확보 권한 마련을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

- 소년부에서 소년사건 조사·심리 시 경찰관서의 전문가 참여 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조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토록 「소년법」 개정 추진('24.6.25. 김석기 의원, '24.6.27.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 촉법·우범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의 조사, 소환,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24.6.26.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

○ (제도 보완) 우범소년 선정·송치 기준 드을 마련하여 범죄 우려가 높은 청소년 대상 경찰의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범송치제도의 인권침해 사전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소년범죄 유형 다변화 추세를 반영, 유형별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지속 개발

○ 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비행초기 조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경찰단계의 교육·상담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 확충 필요

○ 촉법·우범소년의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하고 있으나, 경찰의 송치 전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로 인권침해 우려,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 치유선도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효과성 분석 용역 추진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선도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확대 지정(탁틴내일, 성문화센터 등)

○ 국회·법무부 등 협조, 경찰선도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개정 지속 추진

○ 전문가 참여제 운영 관련 심리사 인력풀 보강 및 '전문가 참여제' 운영 효과성 분석 용역 추진

29	Ⅲ-3-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보호자립과
과제목표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 및 시설·그룹홈 등 종사자, 시설 퇴소 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로드맵 구성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 마련 - 가정형 보호 활성화, 시설 기능전환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정위탁 지원·운영	6,340	5,706	△634	△10.0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455	458	3	0.7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479	138	△341	△71.2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927	2,927	-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95	27	△68	△71.2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2,184	1,966	△218	△10.0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지원)	-	-	-	-
(가정위탁 사업운영비)	200	190	△10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도 개선) 대기위탁가정 현황공개(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절차 간소화 등

· ('가정형 보호추진 기록지' 신설)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 시 가정위탁 연계 가능성 우선적으로 검토, 미연계시 검토 사유 적시
· (대기위탁부모 현황 공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상시 확인
· (가정위탁 연계 절차 간소화) ①既보호 중인 위탁가정 선정 시 추천서 생략 가능
②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 시 위탁가정에 선보호 조치 후 서류제출

○ (재정지원 확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기준 개정('20년대비 물가상승분 반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정형 보호율 확대 - 보호대상아동 대비 가정형 보호율의 지속적 상승 * '21년 29.9% → '22년 35% → '23년 38% → '25년 43.7%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위탁가정 pool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필요

향후추진계획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연례 개정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양육코칭(조손가정) 전국 확대 통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출산정책과

과제목표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그 외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최대 2년까지 지원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모자보건사업	24,450	27,643	3,193	13.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28	22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산전·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482명) 및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유사사업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24.1월, 다태아 지원 확대) 및 저출산 관련 타 사업 확대로 '25년 예산 전년동(228백만원)

향후추진계획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 지속 및 대상자 단계적 확대 검토

30	Ⅲ-3-⑰-㉯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제목표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주요내용

○ 청소년 한부모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사례관리 추진
○ 청소년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이 다양한 도구·매체를 활용,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구축·운영 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852	2,582	△270	△9.5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879	4,932	53	1.1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사업 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추진(별도예산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을 포함한 대상별 특화사업을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확대 운영하여 취약·위기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청소년한부모에게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확대('23년 20개소 → '24년 온가족보듬 수행센터 220개소)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
- 0~1세 자녀양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월 35만원 → 월 40만원)
○ 청소년성문화센터(전국 57개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24년 교육인원 1,959천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녀양육·학업·심리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을 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지원금액 : ('23.) 월 35만원→ ('24.) 월 35만원(0-1세 40만원)
○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교육서비스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
* 교육인원 : ('21.) 1,640천 명 → ('22.) 1,829천명 → ('23.) 1,833천 명 → ('24.) 1,959천 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상담, 출산·양육지원 등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온가족보듬사업 지속 추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월 35만원 → 월 37만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의 특성 및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형 전문 성교육 지속 제공

31	Ⅲ-3-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아동 참여와 함께 제도 적용 확장 ○ 아동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제도 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영향평가 시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의견청취 여부 등을 평가 ○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시된 정책개선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이행 모니터링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6,427	28,038	1,611	6.1
(아동정책개발지원 및 역량강화)	200	2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211개 지자체(시·도 17, 시·군·구 194) 참여, 총 594건 평가 실시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별 참여 현황: ('22년) 140개소 → ('23년) 180개소 → ('24년) 211개소

○ '24년 아동총회 개최 실적
- 지역대회('24년 5~7월, 전국시·도, 744명), 전국대회('24년 8.6.~8.8. 국회, 국제청소년센터 165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도 평균 2.6건, 시·군·구 평균 2.8건 실시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검토 후 개선사항을 지자체에 통보 191건), 지자체는 개선사항 반영계획 수립(146건) 및 이행 중 ○ 아동대표가 '23년 제20회 아동총회(8.8.~8.10.)에서 채택한 결의문(정부에 정책개선사항 14건 건의)에 대한 각 부처 수용여부 검토하고 아동정책조정위에 결과를 보고('24.3.) * 아동총회-아동정책조정위 연계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에 상정 보고('19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참여 제고

○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25년 5~6월), 전국대회('25년 8월) 실시

32	Ⅲ-3-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한국국제협력단
	과제목표	○ 인권분야 사업 발굴, 인권기반접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KOICA 인권분야 중기전략('21-'25)' 지속 이행			
	주요내용	○ 주요사업(예비조사, 기획조사, 사업 착수) 단계별 인권영향평가 지속 실시 및 이행 고도화 ○ 인권영향평가 결과 모니터링 활동 등 실사(Due Diligence) 체계 강화 ○ 취약계층 인권사업 성과관리 실시 등을 통한 인권분야 중기전략 이행 확보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주요사업(예비조사, 기획조사, 사업 착수) 단계별 인권영향평가 지속 실시 및 이행 고도화 - (예비조사) 전 후보 사업 대상 인권위험 스크리닝 수행(아동권리 보호 항목 포함) - (기획조사) 고위험 및 인권주류화 사업 대상 시정조치 송부 - (현장실사) 수혜 주민 의견수렴 및 시정조치 점검 ○ 인권영향평가 결과 모니터링 활동 등 실사(Due Diligence) 체계 강화 - 이주 인권 변호사 및 재정착・네팔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팔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22-'28, 800만 불) 현장 실사 수행 - ▲협력국 정부 ▲사업수행기관 ▲이주노동자 그룹 ▲수혜 주민 면담을 통해 인권위험 예방 및 인권주류화 차원의 사업 이행방안 협의 (이주여성노동자 및 아동 인권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 점검 등 포함) ○ 취약계층 인권사업 성과관리 실시 등을 통한 인권분야 중기전략 이행 확보 - 인권·젠더·평화 등 분야 전략('21-'25) 상 인권 관련 사업 성과관리(국제인권규범 준수), 젠더·장애 마커* 지속 실시 * OECD DAC 회원국의 원조활동을 기록하는 통계도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확대 ○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이해관계자(사업 수행기관 등)의 "개발협력과 인권" 의제 및 인권기준을 적용한 사업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향후추진계획	○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기반 개발협력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한 정책 이행 강화 ○ 인권분야 중기전략('26-'30) 개정 준비 ○ 사업 수행파트너 대상 인권교육 보급 및 성비위 등 인권위험 예방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 지속

33	Ⅲ-4-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관련 주기적 점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인권실태조사)	100	100	-	-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90	9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 2회(8시간) 이상 인권 교육 실시
-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대상 연 4시간 이상 인권 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침 개정
- 월 1회 정기회의 시 인권상황 점검 진행 내용 추가

○ 인권지킴이 지원센터(전국 인권지킴이단 17개 시·도 783개소 운영)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대상 운영 실무(인권교육, 상황점검, 지침 해설 등) 교육 실시
- 인권침해 발생 상황 점검 및 사후조치 (274건), 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등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점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인권 관련 상황 점검

○ 장애인 거주시설 84개소에 인권실태 조사 실시하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 권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인권 의식 개선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보호 체계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관련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현황 서면조사('25.2월~)
○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 수립·시행('25.3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25.下)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속 추진(연중)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지속 추진(연중)

34	Ⅲ-4-②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건강과

과제목표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에 따른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시·도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 (출산비용지원)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2백만원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544	2,589	45	1.8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771	1,887	116	6.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761	691	△70	△9.2
(사업운영비)	12	11	△1	△8.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 ('24년) 전국 42개소, 86,431명 지원(상담·사례관리 20,698명, 역량강화프로그램 53,424명, 지역사회연계 5,507건, 자조모임 6,802명)

○ (출산비용지원)
- 출산비용지원 금액 인상('23년 1백만원→'24년 1.2백만원)
- 여성장애인 850명에게 출산비용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과 협업하여 홍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장애인의 출산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감소 추세에 따른 출산비용지원 인원 감소

향후추진계획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의 교육프로그램 및 대상자 지속 확대

○ (출산비용지원) 출산비용 지속 지원 및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 누락자 발굴 및 신청 안내, 홍보 강화

35	Ⅲ-4-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주요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재활바우처)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및 휴식지원 등 양육지원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미·여가, 직업탐구·자립준비 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아동가족지원	194,047	232,654	38,607	19.9
(발달재활서비스)	138,288	167,232	28,944	20.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54,887	64,551	9,664	17.6
▪ 발달장애인지원	357,738	402,962	45,224	12.6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55,704	63,058	7,354	13.2
(부모·가족지원)	4,064	4,06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 ('23년) 월 평균 지원단가 20만원, 97,469명 → ('24년) 월 20만원, 103,523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하여 중증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 ('23년) 연 960시간 → ('24년) 연 1,080시간(+120시간)

○ 청소년 발달장애인(6세~17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3년 11,961명 → '24년 13,142명

○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용자수 증대 : '23년 1,047명 → '24년 1,230명

○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대상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 서비스 이용자수 증대 : '23년 24,867명 → '24년 26,512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 경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이용자 확대 및 예산집행률 제고 -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3년 11,961명 → '24년 13,142명/ 예산집행실적 : '23년 70.1% → 88.2% ○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 제고 - '24년 이용자수 : 부모상담 1,230명, 가족휴식 14,217명, 부모교육 26,512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양육지원 지속 확대 추진 ('25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지속 노력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중증 장애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지원단가 인상 및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관 확대 및 예산 추가 확보 추진 ○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및 대상자 지속 확대

36	Ⅲ-4-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환경 조성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26.)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본사업 추진('27.~)

○ 장애인 거주시설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주요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추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자 및 제공시간을 확대 및 모형 개발 등 지원 강화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 자립대상자 조사·발굴,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LH 매입임대주택 등), 소득(생계·주거급여, 연금 등), 일자리, 활동지원, 건강검진 등 서비스 통합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전·후 모든 과정을 지원

*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적공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	전년대비 %
▪ 장애인활동지원	2,284,604	2,532,343	247,739	10.8
▪ 발달장애인 지원	357,738	402,962	45,224	12.6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197,963	222,245	24,282	12.3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17,563	25,051	7,488	42.6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4,192	17,482	17,482	3,290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40,484	41,671	1,187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982	5,448	△534	△8.9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5,982	5,448	△534	△8.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침 마련 및 배포('24.2.)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1:1 통합돌봄서비스 추진*('24.6.~)

* 대상자 수(2,340명) : 24시간 개별형 340명, 주간 개별형 500명, 주간 그룹형 1,500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 개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위한 2차 연구(~'24.3.)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연구('24.1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자 확대* 및 제공단가 인상*('24.1.~) * 대상자 수 : ('23.) 11,000명 → ('24.) 11,000명 → ('25.) 12,000명, 제공단가 인상 : ('23.) 15,570원 → ('24.) 16,150원 → ('25. 16,620원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도간 예산 변경 추진(1차) 및 내역사업간 예산 변경 추진(2차)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대상 지속 확대* * (기본급여) 대상자 수 : ('23.) 115,000명 → ('24.) 123,715명 -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4.9월)하여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24.2.6. 개정, '24.9.1. 시행)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기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서비스단가 인상* * 제공단가 인상 : ('23) 15,570원 → ('24) 16,150원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자립) 총 288명*이 지역사회로 주거 전환 및 서비스 연계 * 시설 133명, 재가 107명, 학대피해쉼터 25명 등 / 발달장애인 226명 등('24.12월 기준) - (참여지역) 총 30개 지자체(광역 7, 기초 23) - (주택) 총 319호 확보 및 공급(LH 매입임대주택 등) - (전담인력) 128명 배치(사회복지사 등) ○ **장애인 자립 관련 정책지원 강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23. 11월)하여 **기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24.6.~) ○ 제도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대폭 증가* * ('23.) 11,000명 → ('24.) 11,000명 → ('25.) 12,000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만족도 증가* * 이용자수 : ('23.) 128,959명 → ('24.) 138,793명(9,834명) / 만족도 : ('23.) 91.8점 → ('24.) 93.2점 ○ 장애인의 자립 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연차별 종단연구 결과*('24.3월) 자립만족도 상승 ('23년 79.8점 → '24년 86.5점) *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4.3.] ○ 국토교통부(LH)와 시범사업 필요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상하반기 연 2회) ○ 사업대상을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거 유지 지원형 모델** 마련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 대상자의 자택을 활용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해 제공기관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추진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제공기관 지속 확대를 통해 의미있는 낮 시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서비스단가 등의 확대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돌봄 부담경감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5.3.18. 제정, '27.3.19.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27년~) 전환을 위한 하위법령 등 준비 필요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여성아동인권과

과제목표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진술권을 보장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및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 보호

주요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 추진
- 적극적인 홍보, 안내 등을 통하여 지원 실적 증가 도모
- 국선변호사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조력 전문성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 진술조력인을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 추진
- 장애인 의사소통에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관련 업무 매뉴얼 개선 추진
- 장애인 진술조력 사례 공유 및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교육 실시

관련예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1,632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560	13,495	935	7.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진술조력인
- '22. 1.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에 장애인 특성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된 교육 과정 개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2024년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심화과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윤리' 과목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24. 9.~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법접근성 향상
- 장애인 전문가 위주(재활심리사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옹호기관 근무경력자 등)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24. 14명)
- '24년 장애인 피해자 대상 70건의 진술조력인 지원 실시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법접근성 향상
- '24년 장애인 피해자 대상 1,058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진술조력인
-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25.)
- 진술조력인의 장애인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편된 교육과정 실시('25.)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현실화를 위한 예산 935백만원 증액하여 법원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 수준으로 보수 인상('25.)

○ 피해자 국선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 추진('2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강화 및 조문 정비를 위해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5. 3.)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생활교통복지과

과제목표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주요내용

○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23. 7.)하고, '26년까지 상향된 법정대수 100% 달성 추진 및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24시간 운행 등을 위해 운영비 국비지원 추진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24.1월 시행)

관련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32,427	226,412	△6,015	△2.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다양한 수요를 위한 다인승·침대형휠체어(종전 좌석형 휠체어만 可)가 특별교통수단 이용토록 개선('24.1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구축('24.12.)

○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간 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국비 지원 ('23.7.~, 운영비 24년 예산 473억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지속 지원('25년 예산 649억원)

○ 강력범죄자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종사제한 규정마련(교통약자법령 개정)

○ 전국 어디서나 앱·전화 등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25.)

37	Ⅲ-4-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시설이용편의 보장 -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접근, 동원권 개선 및 사법 접근성 보장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전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약 2,000개소)의 편의시설 설치·유지 모니터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정상 설치·유지되도록 조치 ○ 유니버설 디자인*(UD, Universal Design,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환경 확대 방안 강구 * 생활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국제교류를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의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축을 위한 민·관·산·학의 연계시스템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 환경 기반 확대 및 형성 ○ BF 인증 활성화* 필요 *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로 민간시설 BF 인증유도, 인증 사후관리 강화, 인증 운영기관 지정·운영 ○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없는 사법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사회적 인식 고취 필요*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 환경 기반 확대 및 형성 * 제6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건축, 관광, 제품분야, ’24.3월~’24.9월) ○ 2024년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24.9월) ○ 소규모 근린시설 편의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4.9월) ○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리플릿 배포를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24.5월)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확대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4.12월～’25.9월)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확대방안 연구 실시 ○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홍보를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확대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4.12월～’25.9월) ○ 시도별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별 시행실적 및 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38	Ⅲ-4-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 확대

주요내용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962	4,626	△336	△6.8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801	792	△9	△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품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전부처 및 유관단체, 지역주민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최초 실시('24.5.27., 435명 참여)
- 부처별 중복교육 부담완화 등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통합콘텐츠 제작(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장애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사적 교육관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중 "법과 제도" 심화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유치원 기관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교구개발 및 시연교육 지원
- 전문과정 강사양성(48명), 보수교육을 통한 강사 역량 강화 및 재위촉(54명)
- 인식개선교육기관 추가 3개소 지정(누적 32개소)
- 장애인식개선 지정기관 실적평가 및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9월)
- 장애공감주간 운영 및 장애공감 캠페인 실시, 장애공감페스티벌(12.3) 개최
- 인식개선 광고 제작 및 지상파·온라인 등 공익광고 송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기관 및 강사 역량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강사양성체계 운영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로 사용자 맞춤형 교육환경 기반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신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을 고도화(예시: 전문, 특별)하여 사용자의 교육 선택폭을 확대

39	Ⅲ-4-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건강과
과제목표	○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관리 개선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개시(2.28.)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개선 ○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통해 정기적 건강관리 및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8,442	8,638	196	2.3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8,442	8,638	196	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운영
- 등록 주치의 703명, 등록 장애인 7,115명('24.12월말)
- 제도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모든 장애인), 방문진료 연간 횟수 확대(연 18회→연 24회) 등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기준 등록주치의·장애인 현황 주간보고, 심평원 정보시스템 기준 이용현황 월간보고 체계 구축하여 상시 운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의료·복지·교육 자원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연계 등 통합건강보건관리 제공(전국 47,000개 이상 자원 확보)

○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5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3단계 성과평가 등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4단계 시범사업 개시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운영 - 등록 주치의 703명, 등록 장애인 7,115명('24.12월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제공 -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8,148명), 보건소 정기적 건강관리 56,617명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방안 검토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내 방문재활 시행 법적근거 마련 등 장애인의 건강문제 및 의료서비스 욕구를 반영 개선 추진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 연계·소통 강화를 위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협의회 및 지역 간담회 수시 개최

○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10	Ⅲ-4-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수립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계획'* 수립('25.)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토대로 '00년부터 5년마다 편의 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24.4월~'24.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4.4월~'24.12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시도별 제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별 시행실적 및 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41	Ⅲ-4-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제목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			

주요내용

○ 장애인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1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내실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사후관리 등

○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거주공간 및 치료, 의료, 양육서비스 등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962	4,626	△336	△6.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172	3,244	72	2.3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69,549	690,308	20,759	3.1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비)	1,675	1,725	50	3.0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비)	1,227	1,255	28	2.3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비)	1,142	-	1,142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애인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 장애학대 발생요인 분석 및 유형·장소별 맞춤형 대응매뉴얼 개발 연구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 온라인홍보물 6회 제작, 보도자료 5회 배포
-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안내서 배포(경찰청, 시도경찰청, 지역경찰서 등 6,856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내실화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중앙-지역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전체 정기회의체 운영 및 지역기관 현장지원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효율성 제고 및 업무편의 지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교육실시 등 역량 강화

○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2024.10.)
- 2023.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분석

○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장애아동쉼터 운영 및 설치 확대*

* '24말 기준, 피해장애인쉼터 19개, 피해장애아동쉼터 10개소 운영 중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학대 의심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학대예방 인식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기능 강화
○ 학대의심신고 접수 후 신속대응체계 강화
○ 홍보활동 다변화로 장애인 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학대대응체계 마련 등
○ 장애인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배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현행화

42	Ⅲ-4-⑩	장애인 고용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수요자 중심 교육 인프라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교육 내실화 도모			
주요내용	○ 교육대상자 특성 및 수요 등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이러닝 시스템 정식 운영에 따른 온라인 교육 제공 - 업종별·장애유형별 등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확대 - 문화·체험형 인식 개선 위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764	5,064	△700	△1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직무별(사업주·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용) 콘텐츠 보급** ▲수요자가 직접 교육 설계 가능하도록 교육대상자별·업종별 **모듈형 콘텐츠 제공 ('23년 0종 → '24년 12종)**
-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외국어 자막 콘텐츠 지원 ('23년 2종 → '24년 6종)**
- **유엔권리협약 이행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국가인권위 권고 → 교육 내용 관련 법령 개정 → 개정 사항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 사업주 및 강사 활용

○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이러닝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중단 오류 대비 서버 이중화로 시스템 운영 안정성 도모
-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교육포털과 이러닝 시스템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
- 웹접근성 인증 획득으로 사용자 이용 편의 위한 기능 보강

○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결합한 **문화·체험형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

- 교육지원 사업체 수('23년 199회 → '24년 257회) 및 교육 참여 인원('23년 28,161명→ '24년 38,250명)

○ 강사양성 교육 운영 및 필기 평가시 ①**장애유형별 편의 지원 제공** ②**권역별 교육 개최**

- 시각장애(강의 텍스트 자료 사전 메일 전송, 확대 시험지 제공, 대독, 대필 등), 청각장애(문자 및 수어통역), 뇌병변장애(대필) 등 지원으로 교육 및 강사 자격취득 기회 확대
-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권역별 교육 및 필기 평가 시행으로 접근성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육콘텐츠 다양화 및 시스템 고도화로 콘텐츠 활용 건수 및 이러닝 교육인원 증가 - **(교육 콘텐츠 활용 건수)** ('23년) 119,721건) → ('24년) 135,852건, 13.5% 증가 - **(이러닝 교육인원)** ('23년) 16,201명 → ('24년) 29,311명, 59.9% 증가 ○ 문화·체험형 교육 참여인원 증가 - **(교육횟수)** ('23년) 199회 → ('24년) 257회, 29.2% 증가 - **(교육인원)** ('23년) 28,161명 → ('24년) 38,250명, 35.8% 증가 ○ 강사 양성교육 시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 및 지역교육 활성화로 **강사 저변 확대** - 지체(51.5%), 시·청각(29.8%), 뇌병변(12.0%), 정신적(2.8%), 기타(3.9%) 등 장애유형 다양화 (최근 3년간 장애인 강사 258명 양성)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문 강사 비중 증가 ('23년 51.0% → '24년 57.8%)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육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이행 점검 및 사업체 인식개선 교육 컨설팅 확대 ○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 적극 운영으로 사업주의 교육부담 완화 - ▲무료 강사지원사업,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문화체험형 교육지원 등 ○ 외국인이나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모듈형 콘텐츠 개발 보급(계속) - **(외국어 자막 콘텐츠 확대)** 국내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

43	Ⅲ-4-⑪	변호사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조인력과
	과제목표	○ 변호사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주요내용	○ 지방 거점별 장애인 시험장 점진적 확대 추진 -대전(2023)→대전·부산(2024)→대전·부산·광주(2025)→대전·부산·광주·대구(2026)→대전·부산·광주·대구·제주(2027)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시험장 - 대전·부산·광주 3개 지역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시험장 확대 운영 - 2024년도 운영 예정이었던 대전·부산 이외 대구 지역까지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 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장애인 시험장 운영 지속 추진

44	Ⅲ-4-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서비스과

과제목표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주요내용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
○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발달장애인 지원	357,738	402,962	45,224	12.6
(공공후견 지원)	3,515	3,527	12	0.3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460	46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후견 심판청구를 위한 행정절차 전 과정 등 지원('13년~)
- 공공후견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을 통한 후견인 활동 지원 및 양성

○ 발달장애인 금전 관리 지원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22.5월~'24.12월)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총 127명의 발달장애인에 재산관리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후견 심판청구,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및 후견인 양성 등
- 공공후견 심판청구 814건, 활동비용 1,151명 지급, 후견후보자 625명 양성('24.12월 기준)

○ 발달장애인 재산의 안심보관 및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한 재정적 자립 지원
* 신탁재산 약 31억원 관리 및 사용지원 5,532회('24.12월 기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후견제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의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본사업 전환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팀명	선거관리과
	과제목표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 안내			
	주요내용	○ 유관 기관(보건복지부 등) 대상 거소투표 관련 안내 협조 요청(중앙선관위) ○ 기관·시설의 장 대상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관할선관위)			
	관련예산	○ 비예산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보건복지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요청」 문서 발송('24. 2. 13.) ○ 보건복지부에 「2024. 10. 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요청」 문서 발송('24. 8. 29.) [협조요청 내용] - 병원·요양소 등에 머무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 - 전국 병원·요양소에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관 기관(보건복지부 등) 대상 거소투표 관련 안내 협조 요청(계속) ○ 기관·시설의 장 대상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등 안내(계속)

45	Ⅲ-4-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장애인고용과

과제목표

○ '18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선 이후 변화와 시사점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방안 검토하되,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보다는 적용 제외 근로자 실질적 감소 방향을 우선 검토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개선을 통해 저임금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적극 연계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작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진행('22.2~'24.11.)

관련예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장애인전환지원	3,712	3,712	-	-
(최저임금적용제외근로장애인전환지원)	3,712	3,712	-	-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8,585	60,611	△28,992	△32.4
(경기남부직능원신축사업)	19,695	-	△19,695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작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일반사업장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운영

※ (작업능력평가 결과 인가 대상자) '22년 10,043명 → '23년 9,816명 → '24년 10,277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24년 전환지원 참여 직업재활시설 191개, 전환지원 참여 근로장애인 884명, 전환성공 인원 85명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완료('22.2.~'24.11.) 및 개원('25.상) 예정

※ 지하1층~지상4층, 실습관·협력관·생활관·다목적강당으로 구성, 연면적 22,386㎡(6,771평)

- 훈련직종 총 25개, 연간 훈련인원 1,000명* 규모 훈련 과정 운영계획 수립

* 취업관련과정 665명, 향상훈련 및 특별과정 335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근로자 감소를 위해 사업주지원금 단가 인상(80만원→90만원) 등 통해 채용사업체 유인 강화 및 사업 활성화 도모 ○ 전환지원 우수 직업재활시설 고용지원부 장관상 포상(3점)으로 사업 참여 동기 유발 ○ 최저임금적용제외 전환지원 사업 고객만족도 결과 종합만족도 90.1점으로 전년대비 1.3점 향상 - 수당 지급에 대한 만족도 높음, 참여기간 확대 및 시설 지원금 신설 요구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건립 공사('25년 상반기 개원 예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원활한 전환 배출·유지를 위한 직업재활 및 훈련 다각적인 지원 강화 ○ 우수기관 노하우 공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 (우수기관 포상) 전환성공에 기여한 시설 포상 및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노하우 공유 ○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 지속 추진 예정 - 대기업 전용반 운영 등 기업 연계을 통한 여성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검토

46	Ⅲ-5-①	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주요내용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 학대 예방의 날(6.15.) 행사의 확대, '나비새김' 캠페인노인 학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활성화 추진 - 학대 감지 응급 신고, 영상녹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정·시설 내 학대 사건 예방 - 노인복지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 연구 ○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인프라 확충 및 인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후관리 대응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에 맞춘 상담, 심리프로그램 및 법률·의료 일자리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예방효과 확대** - 노인 학대 조사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및 사례·판례집 등 전문적 자료 발간 -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단순 조사 거부, 방해, 거짓 진술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사 확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노인보호전문기관	12,354	12,740	386	3.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277	1,294	17	1.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8,730	9,015	285	3.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2,347	2,430	83	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행사*

*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 실시간 방송 송출 및 콘텐츠 업로드 영상송출(4건), 시청자 수 총 3,853회 참여

* KBS, YTN 포함한 총 31곳의 언론사에 보도자료 게재

- 제6회 나비새김 캠페인 운영

·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 캠페인: 33개 기관 참여

· 전국민 대상 신고앱 다운로드 이벤트: 404명 참여

· SNS 홍보 결과: 19,298건(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홍보내역	홍보상세	진행건수(건)
SNS 홍보 (유튜브, 인스타그램)	- (유튜브) 나비새김 홍보대사 송가인과 함께하는 노인학대예방 공익광고 조회수	2,819
	- (유튜브) 나비새김 홍보대사 새김지기단 5기 응원 영상 조회수	1,775
	- (유튜브) 새김리플라이 캠페인 7종 조회수	497
	- (유튜브) 서진실 나비새김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송 조회수	165
	- (인스타그램) 2024년 노인학대예방 공익광고 재생수	909
	- (인스타그램) 송가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노출수	571
	-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 카드뉴스 홍보 노출수	1,382
	-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 동영상 7종 재생수	4,149
	- (인스타그램) 전국민 다운로드 이벤트 1차(나비새김 듣기평가) 노출수	829
	- (인스타그램) 전국민 다운로드 이벤트 2차(나비새김 초성퀴즈) 노출수	1,034
	- (인스타그램) 전국민 다운로드 이벤트 3차(나비새김 신고송 신고번호 등장횟수) 재생수	1,639
	- (인스타그램) 전국민 다운로드 이벤트 4차(송가인과 함께하는 이벤트) 재생수	2,127
	- (인스타그램)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위촉 홍보 노출수	695
	- (인스타그램) 나비새김 홍보대사 새김지기단 5기 응원 영상 재생수	707
합계		19,298

- 경찰청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6.1. ~ 6.30.) 홍보 협력

· 현수막, 웹포스터, 전단지 시안 배포

· 전국 18개 경찰청에 홍보 전단지 배포(26,200부)

- 기업 연계 캠페인 추진

연계 기업	주요내용
신신제약	- 학대 피해 어르신 대상 신신제약 통증케어키트 600개 지급(총19,353,960원)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국내 주요 편의점 5개* 전국 편의점 점포 내 포스기에 나비새김 포스터 송출 * CU, GS25, 세븐일레븐, e마트24, 씨스페이스24 - CU 및 세븐일레븐 앱 내 나비새김 캠페인 배너 광고 게시

- 노인학대예방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 SBS 러브 및 파워 FM 홍보스팟 송출: 245회

· 노인학대예방 고지멘트 송출: 4회(이숙영 러브FM, 뜨거우면 지상렬, 김영철의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노인학대예방 고지멘트 송출)

내용	결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고지멘트 송출	4회
고릴라데이 홍보스팟 송출	85회
이윤아 아나운서 녹음본(2023) 송출	160회
고릴라데이 관련 추가 홍보	- 유튜브 채널에 영상 업로드 - 인스타그램에 게시글 업로드 - SBS 고릴라 앱 내 게시글 업로드

- 대학생 서포터즈 '새김지기단' 운영을 통한 홍보 활성화

· 새김지기단 5기 100명 선발 및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1,100건*(온라인 563건, 오프라인 537건)

*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한 홍보, 노인학대 신고앱 오프라인 다운로드 홍보 등

- **KTX 객실 내 노인학대 예방 영상광고 송출(9.14.~9.20.)**

구분	KTX	KTX-산천
송출 영상	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 방법 안내 영상	
송출 시간	34초	
운행 시 송출 횟수	1회	
1일 운행 횟수	150회	80회
편성당 모니터 수	80대	36대
1일 노출 횟수	12,000회	2,880회
집행기간 횟수	84,000회	20,160회
노출횟수 합계	**104,160회**	

-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활성화**

<2024 나비새김 신고앱 다운로드 결과(2024.1.1~12.31.)>

구글	애플	계
10,611	1,292	11,903

- **응급신고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정 내 학대 사건 예방***

* AI모니터링 상담 비즈콜 관련 노인보호전문기관(21개소) 시행, 2차년도(2023. 9.~2024. 8.)의 경우 어르신 573명, AI모니터링 12,418건 진행

*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확보' 사후관리 강화사업 수행기관 총 25개소로 노인보호전문기관(17개소),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8개소) 시행, 어르신 337명, ICT기기 총 205대 설치, 교육훈련 635명, 심리상담 2,242건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 연구**

· 시설학대 핀포인트 조사전문가 양성과정 기초과정(Lv0) 172명 수료, 조사전문가(Lv1) 교육과정 50명 수료, 수석조사원(Lv2) 교육과정 2명 수료, 보수교육(Lv1) 14명 이수, 교육심의위원회 총 3회 진행

·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임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1회 실시

○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37개소→38개소(부산)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에 맞춘 상담, 심리프로그램 및 법률·의료·일자리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상담서비스	136,844	23,627
복지서비스 연계	19,991	1,619
법률서비스 연계	574	55
의료서비스 연계	1,760	152
보호서비스	2,485	-
정보제공 서비스	89,519	17,401
소계	**251,173**	**42,854**

※ 「2024 노인학대현황」 검토 단계로 잠정 수치임

구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노인	이용노인
식사제공	46,823	1,213
법률서비스 연계	28	-
의료서비스 연계	3,076	24
상담서비스	12,366	915
프로그램	49,581	1,578
계	**111,874**	**3,730**

※ 「2024 노인학대현황」 검토 단계로 잠정 수치임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예방효과 확대** **- 노인학대 조사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및 사례·판례집 등 전문적 자료 발간*** * 노인학대 사례집(가정편, 시설편) 각 1편 제작,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결정문 1편 제작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기관운영(1권), 사례개입(2권) 제작 * 노인학대 담당 공무원 대상 시설학대 개입 절차 교육 온라인 실무플랫폼 4시간 교육과정 시행 * 유관기관 협력지원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개입 및 운영 질의(13건), 법률자문(24건), 언론보도 사례 개요 작성(25건)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 노력 ·제6회 나비새김 캠페인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앱 다운로드 활성화: 33개 기관 참여, 404명 참여, SNS 홍보 19,298건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홍보스팟 24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고지멘트 송출 4회 ·KTX 객실 내 노인학대 예방 영상광고 송출: 노출횟수 104,160회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다운로드 전년도 대비 77.4% 증가 * ('21., 론칭) 2,777건 → ('22.) 5,122건 → ('23.) 6,711건 → ('24.) 11,903건 –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예방 * AI 상담 진행: 2차년도(2023. 9.~2024. 8.)의 경우 어르신 573명, AI모니터링 12,418건 *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확보' 사후관리 모니터링 ICT기기를 가정 내 총 205대 설치, 635명 교육훈련 및 2,242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연구사업을 통해 시설 내 방임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1회)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분쟁사례 조정 등 피해노인 권리보장 강화** - 중앙상정심의소위원회 (6회,12건),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5회,5건) 심의를 통한 분쟁사례 조정 및 권리 보장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제7회 나비새김 캠페인 운영

47	Ⅲ-5-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노인복지시설 내 생활 노인 인권 보호			
주요내용	○ 인권교육,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교육 및 인권 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강화 ○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3. 6. 시행)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157	160	3	1.9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	-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23년 단년도 사업으로 과제완료

'24년 이행실적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활동
- 인권교육(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실시*
  * 교육 모수(74만 명) 대비 97.3%(720,332명) 이수 및 교육만족도 4.14점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212개 시설 지정하여 운영(17개 시도 전체 시설 대비 36.0%)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유예기간('23.12.21.)만료에 따른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점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117개소 전수조사('24.2~3월)
- 설치 대상 5,526개소 중 5,513개소*(99.8%) 설치 완료
  * 미설치 13개소 : 휴·폐업 및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변경(1개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노인 인권 인식 제고 및 개선 ○ CCTV 점검 미흡 시설 시정조치하여 수급자의 안전 확보 및 노인학대 예방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장기요양기관 하절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매년 CCTV 실태점검 실시('25년~)

48	Ⅲ-5-③	노인 건강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건강정책과, 노인건강과
과제목표	○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	○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및 사업 수행 지역 전국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실명예방 추진 - 대상자 발견으로 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안과검진 등 실명예방사업 추진 ○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관련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노인건강관리	8,333	7,345	△988	△11.9
(노인실명예방관리)	2,054	2,062	8	0.4
(노인무릎관절수술지원)	4,082	4,086	4	0.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24.9월~)

- 의료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본사업 방안 마련 및 시행*

* 등록의사 3,155명, 등록환자 약 73만명 참여('24.12월 누적 기준)

○ 저소득 노인 대상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노인 개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제외)

* ('19.) 5,429명(8,321안) → ('20.) 5,458명(8,334안) → ('21.) 4,968명(7,564안) → ('22.) 5,462명(7,295안) → ('23.) 4,706명(7,020안) → ('24.) 5,300명(8,327안)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지원*

* ('19.) 1,722명(2,549건) → ('20.) 1,735명(2,537건) → ('21.) 1,705명(2,484건) → ('22.) 1,741명(2,491건) → ('23.) 1,555명(2,192건) → ('24.) 2,346명(3,235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에 맞추어 사업 지역 전국 확대 등 추진하여 노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질 제고 ○ 저소득 노인 대상 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인 삶의 질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고령화로 노인 안질환 지원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나 예산*은 5년전보다 감소한 수준으로, '24년의 경우 8월에 신청이 조기마감 되는 등 지원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실명예방) ('20., '21., '22.) 2,070백만원 → ('23.) 1,862백만원 →('24.) 2,054백만원

향후추진계획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운영 현황 모니터링 지속

○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료안검진, 개안수술비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지속

49	Ⅲ-5-④	단체 · 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 · 팀명	노인지원과
과제목표	○ 단체 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주요내용	○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노인여가시설 중심으로 노인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 창출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수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 - 노인복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50%	2,385	2,428	43	1.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국 8,125개소에 7종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신규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강좌 개발·보급

* **(신규확대)** '24년 목표 6,480개소 대비 125.4%달성, **(디지털 격차 해소)** 자체 교육교재 발간 및 찾아가는 스마트폰, 무인기기 사용법 등 교육 실시 및 스마트 경로당 표준안 마련·보급(어르신들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자체 교육교재 발간 및 찾아가는 스마트폰, 무인기기 사용법 등 교육 실시)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요 >

① 건강운동(체조·댄스교실, 웃음교실, 요가 등), ② 건강관리(건강검진, 한방치료, 방문간호 등), ③ 교육·상담(정보화, 어학, 노인상담 등), ④ 여가활동(음악, 바둑 등), ⑤ 권익증진(성교육, 학대 및 자살예방교육 등), ⑥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⑦ 공동작업장 운영

- 경로당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3,824개소, 66,664명)
- 경로당에 경로당 지도자 리더쉽 교육, 경제 교육, 숲체험 교육, 회계 교육, 여가프로그램(건강체조, 문예창작),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공(18,306개소, 140개 프로그램, 54,872명)

○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사업' 운영*,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81개소),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38명) 및 어르신 서포터즈(240명)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홍보·웰다잉 문화 확산

- 노인복지관에 무용·미술·연극·음악 분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188개소, 188개 프로그램, 3,859명)
- 노인복지관에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50개소, 1,000명)

* 디지털 교재 5만부 배포, 강사파견을 통해 교육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노인이용시설 대상, 지역유형·대상자·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노인 만족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노인여가 활성화) 노인복지관·경로당의 여가·건강프로그램확대
- (경로당 기능 강화) 다양한 교육·취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7종 프로그램을 확대한 경로당 ('25년 목표 신규 6,794개소)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노인복지관 6대 프로그램 분야 가이드라인 개선·보급, 인지 및 신체·건강 증진, 노년기 재사회화 등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제공

50	Ⅲ-5-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제목표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주요내용	○ 1:1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을 토대로 **고령층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 알선 강화 ○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금융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복지·금융·간병 등 **장애요인 제거** ○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취업희망하는 고령층 모집**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민취업지원제도	942,515	845,709	△96,806	△10.3

*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의 연령과 무관하게 편성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령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24년 **60세 이상 고령층 1.6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전체 취업취약계층 지원은 31.8만명)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소득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정비 등 보장성 강화
  *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과 취업준비를 병행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24.2월~)

○ **1:1 심층상담에 기초한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특화위탁기관 운영**

- '24년 취업취약계층 49.5만명(이월자 포함, 전체 취약계층)에게 569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있게 제공하였으며, 구직촉진수당 6,590억원을 지원하여 생계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한 구직활동 유도
  * 60세 이상 고령층 2.4만명(이월자 포함)에게 2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4년 중장년(35~69세) 특화 민간위탁기관 23개소 선정·운영하여 고령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선제 발굴, 고용서비스로 연계**

- 복지부, 금융위, 중기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부-금융위 업무협약 및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발표('24.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부-중기부 협업체계 협약('24.8.)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24년 60세 이상 고령층 0.6만명 취·창업**(전체 취업취약계층 취·창업은 17.5만명)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참여자(전체 취약계층) 1.9만명 증가 ※ ('22년) 28.5만명 → ('23년) 29.9만명(증 1.4만명) → **31.8만명(증 1.9만명)** ○ 취업상담·직업능력 향상·취업알선 등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으로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취업취약계층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의 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사례관리협의체, 학습조직 등 적극 운영
- AI·디지털 활용 및 실습, 직무·직군 특강 등 상담사 전문성 강화 지원 등

○ **(연계·협업 확산)** 고용-복지-금융 연계를 위한 기존 지역 내 협업모델 지속 확대하고 지원 대상 적극 발굴 지원

51	Ⅲ-5-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개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민연금정책과
과제목표	○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중('22~) -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국민연금 재정계산	90	-	△90	순감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임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제5차 재정계산)**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재정전망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 발전방안 수립(~'23.10)

* 사용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재정계산위 22차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 22차례,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14차례 개최하여, 재정추계·제도개선방안 논의

○ **(종합운영계획)** 전문가 논의 및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국회 제출**('23.10.)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5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체계 정립

- 재정추계 결과,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집 총 25종**(전체 5,621p)를 **함께 제출·대국민 공개**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후소득보장 강화,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발표** -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연금개혁은 노사관계,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쟁점이 얽힌 과제** -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국회 주도 사회적 합의 추진)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 연금개혁 논의 적극 지원

52	Ⅲ-5-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요양보험운영과

과제목표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질적 수준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내실화
* '23년부터 '27년까지 공립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충

주요내용

○ 공립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지역(53개 시·군·구) 중심,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립 요양시설 단계적 확대

-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운영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수준 담보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관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노인요양시설 확충	21,711	28,649	6,938	32.0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18,582	25,505	6,923	37.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공립요양시설 2개소* 신규 신축 지원 * ①서울 노원구, ②부산 사상구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제2판)」('24.12.)
- △지정갱신제 개요, △심사절차, △지정갱신 심사기준 포함
*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제2판) 지자체 담당자 및 심사위원 설명회 개최(2회, '24.12.10.~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립요양시설 2개소 신규 신축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연구용역을 기초로 갱신 절차, 갱신 심사 대상군 분류, 갱신 심사 지표기준 등 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 수립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24.6.)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건축비 예산지원 단가가 낮아 지방비 부담으로 신축 사업 지원신청 저조
* (예산지원 단가) 1,980천원/㎡, (조달청 노유자시설 3개년 평균 건축단가) 3,182천원/㎡

향후추진계획

○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립요양시설 53개소 확충

○ 노인요양시설 건축 지원단가 현실화(1,980→3,182천원/㎡)

○ 지정갱신 심사 시기 도래('25.12.)에 따른 지정갱신제 표준 매뉴얼(제2판) 제작 완료·지자체 담당자 교육(~'25.上)

○ 갱신심사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전산시스템 구축(~'25.下)

53	Ⅲ-5-⑧	농지연금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지과
과제목표	○ 농지연금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통해 노후 생활 지원 대상 확대 -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품 지속 개발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 연장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홍보 채널 다양화 ○ 기존 가입자 해지율 감소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존 상품 지급 방식 개선 -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 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관련예산	(농지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농지연금(융자)	242,309	246,877	4,568	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4년 기준 **누적 가입 27,705건**을 기록하며 **목표 초과 달성**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홍보 어려움, 저금리기조 지속 등으로 신규 가입이 감소하였으나, 가입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규 가입 회복 추세***

  * 연도별 신규 가입 건수: ('20.) 2,606건 → ('21.) 2,080 → ('22.) 2,530 → ('23.) 2,882 → ('24.) 3,115

- **'24년도**는 **신규 가입 목표**(2,405건)을 **29.5% 초과**한 3,115건 신규 가입 달성 등 성과

< '24년 목표 대비 가입 실적 >

(건, %)	'23년 실적(A)	'24년 실적			전년 대비 증감률(C/A-1)
		목표(B)	실적(C)	달성률(C/B)	
누적 가입	24,590	26,480	27,705	104.6	12.7
신규 가입	2,882	2,405	3,115	129.5	8.1

○ 농지은행 연계 상품 출시 등 **가입상품 다양화 추진**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직불형 연금상품 신규 출시('24.3월)
- 농지이양은퇴직불 신청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농지연금, 임대료 동시 수령

  * '24년 94건 가입(은퇴직불형 총 가입면적 87.9ha, 평균 월지급금 2,076천원)

○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사업홍보**

- 신문, 방송, SNS(네이버,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
- 유관기관을 활용한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리플렛 발송 등

<table>
<tr><td rowspan="2">결
과
분
석</td><td>추진성과</td><td>○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제도개선으로 평균 월지급금 상향('22.: 99만원 → '23.: 103 → '24. 110), 농촌지역 고령·은퇴농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 '24년 말 기준 27,705건(누적) 가입 및 1조 6,159억원 연금 지급
* (누적 가입건수) ('20.) 17,098 → ('21.) 19,178 → ('22.) 21,708 → ('23.) 24,590 → ('24.) 27,705
* (예산) ('20.) 1,776억원 → ('21.) 1,848 → ('22.) 2,408 → ('23.) 2,631 → ('24.) 2,626
⇒ 농지연금 지급을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 노후 생활 부족 자금(연평균 13백만원)* 보전
* (출처) 2023년 농가 경제 조사 70세 이상 농가기준
 

* 고령농 생활부족액(13백만원)
= 농가소비(30백만원) - 농가순소득(17백만원)
※ '23년 농가경제조사 70세 이상 농가기준
** 연평균 농지연금 지급액(13백만원)
= 농지연금 평균 월지급액 108만원
('23년말 기준 누적가입자)×12개월</td></tr>
<tr><td>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td><td>○ 해당 없음</td></tr>
<tr><td>향후추진계획</td><td>○ 농지연금 합리화를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농지연금 사업 운영을 위해 기초변수 조정
-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서 인정 기준 개선
- 수시인출형 상품 운영의 합리화
○ 농업구조조정촉진 및 농지연금 수급자 혜택 강화
- 대출금리 이원화를 통한 농업구조조정 촉진에 기여
- 휴·폐경지 재경작으로 인한 월지급금 재산정 추가
- 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근저당 설정 변경 유예</td></tr>
</table>

54	Ⅲ-6-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관련 절차 준수			
	주요내용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근로 개시 신고안내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불법 고용이나 고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방문취업동포는 잦은 입출국으로 인해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총 체류규모를 250천명으로 유지 ○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결정방식 변경('23.1.1~계속) - 허용업종 지정(포지티브)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 지정(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특례외국인근로자(H-2)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취업활동기간(3년, 재고용 1년 10월)을 확대('24.2.28.~)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점검('24년) - 점검대상 3,000개 중 1,707건 위반 확인 → 시정지시 1,607건, 고용제한·취소 22건, 과태료 12건 등 위반사항 엄정 조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포의 총 체류규모 유지정책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H-2)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 규모를 250천명 이내로 유지하여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 ※ 외국국적 동포(H-2) 체류현황: ('21.)125,453명→('22.)105,567명→('23.)103,981명→('24.) 93,302명 ○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 고용 또는 고용절차 미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동포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불법고용 방지 및 고용절차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지속 ○ 내실있는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개시 신고 등 고용절차 준수 인식 제고

55	Ⅲ-6-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확대 ○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추진 ○ 동포의 국내 체류 관련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사증 제도 개선 - 동포의 미성년 자녀 체류 기간을 부모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허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동포의 국내 체류 관련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사증제도 개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에 '임업 단순 종사원'과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추가 허용 확대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확대 - 요양보호사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변경 허용

결과분석	추진성과	○ 관련 법령·지침 개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재외동포(F-4) 자격 활동범위 확대 -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의 활동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 ○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추진 - 출신 국가별 요구조건 폐지 및 장기적 관점에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일원화

56	Ⅲ-6-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			
주요내용	○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 외국국적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동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10,439	13,594	3,155	30.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동포중점운영기관 지정 및 동포중점반 운영
- 335개 운영기관 중 38개 동포중점운영기관 지정
- '24년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20개반 360명 교육 참여

○ 한국사회이해 기초(1, 2) 부교재 배포('24.8.)

결과분석

추진성과	○ 동포 중점반 및 맞춤형 과정 운영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사회통합지원 강화 ○ 한국사회이해 기초(1, 2) 부교재 배포로, 동포 맞춤형 교육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동포 맞춤형 과정 추가 개설 및 활성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25 ~ '27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규 지정
- 동포 밀집지역 중심으로 동포운영기관 확대 지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맞춤형 과정 확대 운영

57	Ⅲ-6-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국외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지원			
주요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입양기록물을 이관하여 공적관리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일원화 ○ 국외입양인 권익보호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모국방문, 멘토링 등 사후서비스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공적입양체계 관리·운영	2,092	3,570	1,478	70.7
(입양인 사후서비스지원)	1,850	1,819	△31	△1.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입양정보공개청구 일원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

○ 입양기록물 이관 및 공적관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실시('24.7.~11.)

○ 국외입양인을 위한 시민권취득 지원,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등 사후서비스 지원('24년 25개 단체, 26개 사업 지원)

○ 국외입양인의 가족찾기 서비스 제공, 친생부모 및 가족 간 상봉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외입양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및 기록물 이관 준비 ○ 가족찾기 서비스, 모국방문, 모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국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입양기록물 이관 실시('25.7.~10.)

○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 및 실적 모니터링(지속)

58	Ⅲ-6-⑤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외국인정책과
과제목표	○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주요내용	○ 외국인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 지속적 추가·보완 ○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의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실질적 기여를 위한 노력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62	16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동 작성 기관 업무협의회('24. 2. 27.)
- (주요 내용) '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관련 사항 및 '25년 통계조사 예산 협의, '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성항목(재외동포) 조사표 최종안 공유 등

○ '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중 체류자격별로 세부 분석하여 기획보도('24. 4. 17.)
- '법무부 - 통계청' 공동 발표 방식으로 보도자료 배포

○ '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동 작성 기관 간 홍보 협업
- 공동작성기관 간 협력으로 문자발송 ('24. 5. 16.) 및 홈페이지 배너 게시('24. 5. 13.~6. 4.), 계간지 포스터 광고 게재(법무부 계간 저널(저널명: 공존) '24년 5월 발간호)

○ '24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4. 5. 12. ~ 5. 18.)
- (대상) 2만 5천명('24. 5. 15. 기준 만 15세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 2만명,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5천명)
- (방법) 면접(조사담당자가 표본 응답자 방문, 필요시 응답자 직접 작성 허용)
- (예산) 17억 2천 6백만원(법무부 1억 6천 2백만원, 통계청 15억 6천 4백만원)

○ '24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공표('24. 12. 17.)
- '법무부 - 통계청' 공동 발표 방식으로 보도자료 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한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 ○ 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업, 고용 실태 등 파악을 통한 외국인 고용 및 인력수급 정책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준비·실시
- 공동 작성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 법무부 홍보 채널을 통한 '25년도 본조사 홍보
- '25년도 본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24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획보도 계획(안) 마련·실시
- 체류 외국인의 가정·고용·경제·언어 등 한국생활 현황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인구·사회·경제 등 관련 이민정책 수립 기여

59	Ⅲ-6-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과제목표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재정착난민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공
○ 재한외국인 대상 출입국 민원 및 체류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합 계	15,823	19,945	4,122	26
▪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963	1,919	956	99.3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99	60	△39	△39.4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	4,322	4,372	50	1.2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0,439	13,594	3,155	30.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 실시(연중)
- 관련부처 합동「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일환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시민교육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운영('24. 9.)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술능력 강화를 위한 심화반 개설('24. 10.)
- 컴퓨터 기반 평가장 주말 운영 확대('24.10.) 및 서울 CBT센터 추가 개소('24. 12.)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계절근로자, 외국인력, 재정착 난민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계절근로자 11개 지자체 795명, 조선업체 6회 156명, 재정착 난민 3회 14명 조기적응 교육 제공

○ 재정착난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
- 국내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2회 실시('24. 2., '24. 4.)
-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교육 등 실시
- 지역사회 정착 후 생활밀착형 멘토링 등을 통한 맞춤형 정착지원
- 재정착난민 제도 체계화 및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착난민 멘토단 간담회' 실시('24. 11.)
- 정착지 다변화 및 난민 인식개선 활동(연중)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의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재한외국인 출입국 민원 안내, 각종 생활정보 제공('24년 2,543,832건)
- 외부 공공기관 지자체 제3자 통역서비스(질병관리본부,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기관)
- 전자민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민자의 우리사회 조기 정착 및 적응을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실시 ○ 재정착난민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20개 언어로 출입국 체류 상담 서비스 및 생활 정보 제공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방안 지속 추진 ○ 재정착 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지속 ○ 재한 외국인 대상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지속

60	Ⅲ-6-⑦	외국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 · 팀명	이민통합과
과제목표	○ 국민과 외국인·이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을 확대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인식 개선			
주요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개최, 세계인의 날 주제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 ○ 고충상담, 법률상담 및 건강캠프를 내용으로 하는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고충상담' 개최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운영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세계인의 날 행사	310	310	-	-
▪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90	9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제17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주제 영상 제작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주제영상을 제작하여,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희망메시지 전달

○제17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식 개최
- 일시, 장소 : '24. 5. 20.(월) 14:0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참석 : 법무부장관, 국민 및 재한외국인 등 약 600명
- 내용 : 「올해의 이민자 상」등 정부포상자 시상
  ※ 17개 소속 기관에서 자체 혹은 지자체 협업 방식의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병행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제작·배포
-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출입국 관서 및 다도협 도시 대상 미담 사례 발굴요청
-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 32건을 '미담 사례집'으로 200부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배포

○제11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개최
- 일시, 장소 : '24. 10. 20.(일) 09: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양천공원
- 참석 : 내·외국인 약 1,200여명
- 내용 : 걷기행사, 고충상담, 건강캠프, 문화행사 등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실시(2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상호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여 정부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18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주제 영상 제작
-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상생·포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비전을 반영한 주제 영상 제작·배포 예정

○ 제18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예정
- 일시, 장소 : '25. 5. 20.(화) 14:0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 참석 : 법무부장관, 국민 및 재한외국인 등 500~600여명
- 내용 : 「올해의 이민자 상」등 정부포상자 시상, 세계인의 날 주제 영상,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 17개 소속 기관에서 자체 혹은 지자체 협업 방식의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병행 예정

○ 제12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확대 개최 예정
-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재한외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걷기행사, 고충상담, 건강캠프,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 개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운영(2회)

61	Ⅲ-6-⑧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외국인력담당관

과제목표

○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장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7,934	9,591	△1,657	△2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고용허가제 대상 이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지역협력) 3,000개소,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5,700개소

○ 농업 분야 우수기숙사 인증 시행
- 사업주 신청에 대해 지방관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가점 부여 및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지도·점검('24년)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숙소 등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지역협력과 소관 점검대상 3,000개 중 1,707건 위반 확인 → 시정지시 1,607건, 고용제한·취소 22건, 과태료 12건 등 위반사항 엄정 조치
- 숙소실태조사(2,307개소)를 통해 냉·난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 기숙사시설 기준 위반 시정지시(168건) 조치완료
-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24년 8,380개소)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언어 및 상담지원

구분	합계 (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	3자통화	번역상담 등
건수	432,911	371,585	10,873	48,442	2,011

○ 외국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시설을 신설·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9개소, 각 2억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송출국 현지 EPS센터 등을 통한 휴면보험금(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
- 총 2,442건, 17억원(출국만기보험 211건, 7억원/귀국비용보험 2,231건, 10억원)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취업생활 적응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업주 교육 지속 추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 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안 예산반영 노력 지속 - 상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담원 역량교육 내실화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지속적 제고 ○ 송출국 현지 EPS센터 등을 통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추진

62	Ⅲ-6-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명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목표	○ 외국인근로자 합리적인 숙식비 공제 개선방안 마련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17.2.) 하였으나 숙식비 징수 상한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노사이견 지속 - 일부 사업주가 1실을 여러 명이 사용케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여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사례 등 문제가 있어 공제 금액·기준 개선이 필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22.9월부터 노사정 실무자가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 변경 관련 실무 TF」 통해 지침 개정 논의를 진행

○ '23.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의결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 '23.11.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지방관서별로 권익보호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방관서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명시

· 사업주가 숙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 숙소비 산정근거 제시, 공동거주시 1/n, 가설건축물은 지역 월세 최저액 미만 등 권익보호협의회에서 마련

· 숙식비 징구 방식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범위 내, 임금에서 사전 공제시 동의, 분쟁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안내

· 기타
*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으로 사후정산 원칙, 근로기준법기숙사 요건 준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노사간에 분쟁이 없도록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과제완료

63	Ⅲ-6-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다누리콜 센터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5,197	△934	△0.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 수립('24.4월)
* 중앙행정기관(16개 기관), 122개 과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1,245개 과제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2024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실시

○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포털다누리(www.liveinkorea.kr), 한국생활가이드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13개 언어)로 제공
- 민간단체·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사이트 운영, 지역특화교육기관 운영 확대 등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 ('24년) 439,859명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개인·가족 상담,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속 확대
  * ('18.) 152개소 → ('19.) 183개소 → ('23.) 210개소 → ('24.) 212개소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프로그램 이용자 : ('18.) 96,321명 → ('24.) 112,319명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지속 확대를 통해 미래 인재로의 성장 지원
  * 기초학습 지원 2023년 138개소 취학전, 초등저학년 → 2024년 168개소 / 초등고학년까지 확대
  * 진로설계 지원 2023년 113개소 → 2024년 135개소,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신설('24.)

결과분석

추진성과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지원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나갈 예정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2024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발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정착단계별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사업 강화 및 운영 내실화(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64	Ⅲ-6-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촌여성정책팀
과제목표	○ 농촌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주요내용	○ 다문화여성 대상으로 농촌문화 및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 -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우리 농업·농촌 및 가족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관련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717	687	△30	△4.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의 정착을 위한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 실시(394명)
- (1:1 맞춤형 농업교육) 영농의지가 강한 이민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농업교육 진행(260명)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 (현장과정)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및 관계 향상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과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617명)
- (청소년캠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차세대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세대 캠프 운영(194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단계별 교육과 1:1 멘토링을 통해 농기계 사용법,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 제공 * 단계별 농업교육 만족도 ('23.: 94.4%→ '24.: 95.8, +1.4%p), 1:1 멘토링 만족도 ('23: 90.2% → '24: 94.6, +4.4%p) ○ 다문화 가족 농촌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인식 개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농촌적응과 한국에 대한 자긍심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요구를 반영하여 단계별 농업교육 교재 개편 추진
○ 결혼이민여성 리더 경진대회 및 연말 워크숍을 통해 우수 교육생의 교류기회 확대
○ 미래세대캠프를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 효과 제고
○ 결혼이민여성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속 추진

65	Ⅲ-6-⑫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폭력예방교육과
과제목표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주요내용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숙식 제공 및 구조, 출국,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통역 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192	200	8	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외국인 피해자 지원시설(1개소)에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 (비상근 통역사)배치 등 보호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지원실적) 총 79명 대상으로 의료185건, 법률134건, 귀국지원 10건 ('24년 기준)
- (지원성과) 취업 7명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4.12.31.기준)

인원(명)	합계(건)	현장긴급구조	수사의뢰	수사지원			수사동행	소송지원	소년보호재판	법률지원상담	기 타
				소계	기소	피소					
20	134	9	·	10	10	·	4	16	-	73	22

* 기타 : 출입국 체류지원(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신용회복신청,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 지원시설에서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으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특성에 맞는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외국인지원시설 지속 운영 및 내실화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숙식 제공 및 안전한 귀국 지원
- 법률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 피해여성에 입소기간 상관없이 시설 거주 허용 및 자활참여자지원사업(공동작업장, 인턴십프로그램) 지원

66	Ⅲ-6-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등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주요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상담,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지원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7,609	7,891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6,230	6,445	215	3.5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운영)	1,379	1,446	67	4.9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5,644	5,782,	138	2.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이주여성 보호시설(33개소) 및 상담소(9개소)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96.3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99,341건) ※ '24.6월 기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정책 홍보
* 여성가족부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복합적 가정 내 문제 상담 진행
* 상담건수 '23년 211,196건→ '24년 225,769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회복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기여 ○ 다누리콜센터-경찰서 간 협조체계 구축, 전담 경찰관과 연계한 폭력 관련 상황 공조 및 수사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누리콜센터 운영을 통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치료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정책 지속 추진

67	Ⅲ-6-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이주배경학생지원팀
과제목표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주요내용	○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 지원 ○ 학교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설치 확대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26,520	16,189	△10,331	△39.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법무부 정보 연계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안내
-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난민 자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연 2회 국내학교 진입 절차 안내
-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를 한국어 외 언어로 번역 제공(가족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배포)

○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초·중고등) '23년 501학급 → '24년 525학급
- (유치원) '23년 24학급 → '24년 28학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어려움 경감 ○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개정 및 현행화 추진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한국어학급 지속 확대 운영 추진

68	Ⅲ-6-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출입국심사과
	과제목표	○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요내용	○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중대 범죄자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등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동포의 입국 기회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마약, 살인, 성범죄 등 중대범죄자에 대해 강화된 입국규제 지속 적용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입국규제의 면제·해제 심사 시 동포 여부 확인 및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제도 지속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 강화된 입국규제를 적용하여 입국 차단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를 운영하여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외국인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지속 추진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인권침해방지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주요내용	○ 인신매매방지 정책기반 마련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운영 추진 ○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정책기반 조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91	401	110	37.8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부터 구조지원까지 단계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으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미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노력 긍정평가
*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3년) 2 등급 → **('24년) 1 등급(한국,** 미국, 영국, 대만 등) 국가로 상향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중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력 착취분야 식별지표"개정·고시('24.12.) / 활용(4,244명)

○ 대국민 홍보 콘텐츠 확산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30.) 계기 홍보 콘텐츠 확산 및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 EBS 지식채널e 방송(5분), 유튜브 광고, 보도자료, 웹포스터, 카드뉴스, 홍보리플릿, 식별지표 현장활용 가이드북 배포
-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1종) 및 의무 교육 실시('24년 264,856명 이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이주민 지원단체 종사자 워크숍(2회)

○「중앙권익보호기관」내「사례판정위원회」구성·운영하여 피해자 사례판정 및 확인서 발급,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급 (피해자확인서 발급 12건,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급 10명)

○ 인신매매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인신매매등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 마련(4월)·시행
*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귀국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신청, 심사, 지원절차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선, 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체계 구축·운영,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국제사회의 긍정평가* *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3년) 2 등급 → **('24년) 1 등급(한국,** 미국, 영국, 대만 등) 국가로 상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중심으로 피해상담, 신고접수, 사례판정, 구조지원비 지원 등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24년 개선 권고사항 중 식별지표 적용 활성화,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호·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하여 '25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1등급 유지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선원정책과
	과제목표	○ 선원직 기피현상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지속 증가하게 되어 이들의 인권보장,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60세 이상 선원 비중은 약 37%로 사회 일반 고령화율(약 26%)보다 높은 수준, 업종별로는 근해어선(54%) → 내항상선(53%) → 원양어선(29%) → 외항상선(19%) 순 ** (외국인선원 수) ('07.) 9,916명 → ('14.) 22,696명 → ('23.) 30,436명으로 현재 전체 선원 중 외국인선원 비중은 약 49.9% 수준			
	주요내용	○ 선원근로감독관 교육실시 ○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 ○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26년까지 한국인선원 수준으로 상향 ○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2회) ○ 외국인 선원 인권 관련 선원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확대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정기 직무교육*을 통해 선원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인신매매 예방 지식 함양 * (일시/장소/참석자) '24.4.22~4.26./해양수산인재개발원/선원근로감독관 등 ○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매년 6만여 명 이수) ○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한국인선원의 90% 수준으로 상향* * ('24년) 2,304,927원(한국인 선원의 90%) ○ 선내 인권침해예방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 기관의 인권보호 시책 확인·공유(4.26./10.4./12.2.)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4월~7월/10월~12월)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송출국(인니) 정부와 지속 협력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실태조사 지속 실시 ○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기준 개선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주요 송출국(인니)과 협력체계 구축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일수 확대(3일→5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선원근로감독관 정기 직무교육 내용 지속 개발, 교육일수 확대(3일→5일) ○ 선원 노동인권교육 지속 실시 ○ '24년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한국인 선원의 90% 수준으로 상향 ○ 선내 인권침해예방 네트워크 지속 운영 ○ 근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추진(2회) ○ 외국인 선원 주요 송출국과 협력 지속 추진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인권기획담당관실
	과제목표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확대			
	주요내용	○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 기회 부여 ○ 사건 기소 시, 사건처분결과 및 재판일시, 장소 등 통지 등 피해자 참여권 보장 조치 강화 ○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법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철저 지시」 등 일선 청 업무지시를 통해 구조금 지원 대상 적극 발굴 독려('24. 9.) ○ 체계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피해자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사건관리회의 적극 활용」 지시('24. 6.)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정착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의 간담회 개최('24. 9.) - 일선청↔원스톱 솔루션센터 간 업무 프로세스를 포함한「원스톱 솔루션센터 연계 피해자지원 활성화 방안」 시행('24. 10.) ○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지침」 개정('24. 12.) - 생계비 지원금 상한 증액 및 지원 기간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지원 실시 ○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 상한 증액 및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실질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일선 검찰청, 유관기관, 타 관공서 등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동영상 또는 피해자지원제도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 지속 추진 ○ 형사절차정보 피해자 자동통지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피해자 참여권 보장 강화 ○ 피해자지원 분야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및 실질화 지속 추진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3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주요내용	○ 성착취, 노동착취, 장기적출 등 인신매매 사건 엄정 처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적극 활용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신매매범죄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 발생 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 협력, 신병과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유관기관간 협조 체계 확립 ○ 검찰 자체 인신매매등 범죄 통계 시스템 구축 - 인신매매등 범죄 중 검찰 자체 통계 구축이 가능한 형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4개 법률 관련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정형통계인 '인신매매등 사범 검사수사범죄 사건표' 개발 완료 ○ 피해자 식별지표의 수사 및 재판 활용방안 일선청 전파 -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송치, 처분 등 수사·재판 경과에 따라 식별지표 적극 적용 - 피해자로 식별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하여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적극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범죄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등범죄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단기조 지속 유지 ○ '인신매매등 사범 검사수사범죄 사건표' 통계 관리 및 보완 검토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여성안전기획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권리 및 보호·지원 안내 확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KICS 탑재, 운영 중**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등 피해정황이 있는 범죄에 대해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24년 61명의 피해자 식별

○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KICS 탑재, 운영 중**
- 범죄피해자에게 교부되는 공통 안내서 외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안내서를 신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여 피해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침 하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신규 개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탑재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 강화**
- 최신 사례 등 반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법정교육) 교육자료 개선 예정

69	Ⅲ-6-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경찰청	과·팀명	수사심사과
	과제목표	○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내용	○ 피해자식별지표 활용을 통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강화 ○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권침해 범죄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전문교육 운영 - 인신매매 방지교육 및 인권침해범죄 수사사례·기법 관련 전문교육 과정 운영으로 범죄 대응력 강화 ○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 해양경찰청과 피해자보호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 개최로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 방안 모색 ○ 해양경찰교육원 피해상담사 3급 과정 자격 취득과정 신규 개설 및 자격증 26명 취득 - 전국 피해자전담경찰관 우선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으로 피해상담 능력 향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범죄 및 피해자 보호지원 교육 강화 - 노동력 및 성적 착취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등' 정의로 인식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신매매방지" 지속적 교육 및 피해자식별지표 적극 활용을 통해 인신매매등 피해자 선별 및 보호·지원 강화

70	Ⅲ-6-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이주배경학생지원팀

과제목표

○ 이주배경아동의 공교육 진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 내실화
○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주요내용

○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안내 문자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
○ 현장 수요에 맞춰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이주배경학생 재학 현황을 고려하여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한국어학급 전담교원을 확보하여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주배경가족 학생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지속 강화 추진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26,520	16,189	△10,331	△39.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법무부 정보 연계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안내
-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난민 자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연 2회 국내학교 진입 절차 안내
-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를 한국어 외 언어로 번역 제공(가족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배포)

○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초·중고등)'23년 501학급 →'24년 525학급
- (유치원) '23년 24학급 → '24년 28학급

○ 이주배경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징검다리 과정) 초·중학교 입학예정 이주배경가정 자녀 대상 사전 준비교육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이해도 증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교육 진입 안내자료 개정 및 현행화 추진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한국어학급 지속 확대 운영 추진
○ 한국어학급 담당교원 및 관리자 연수 확대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 이주배경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 및 확산

71	Ⅲ-6-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구조과
	과제목표	○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격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과제완료			

’24년 이행실적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24. 9. 20.)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 보유 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24. 9. 20.) 및 시행 예정(’25. 3. 21.) - (기존)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범죄피해구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하위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실무매뉴얼 등을 조속히 정비·완료하겠음

72	Ⅲ-6-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체류·의료·법률지원 등 기본권 보장 필요			
주요내용	○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서·학업·법률서비스 등 제공 ○ 취·창업 교육 진행 등을 통한 귀환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 마련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국외다문화가족 지원	200	2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베트남 1개 지역(하이퐁)
※ 하이퐁 여맹과 업무협의 19회, 자조모임 154명, 법률상담 110명, 한국어교육 142명, 취·창업교육 18명, 어린이도서관·공부방 운영 447명

○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국 초청 문화체험 캠프 신규 실시
※ (기간) 8.12.(월)~8.14.(수) / (참가) 청소년 10명, 국내 멘토 봉사단 등 20명

○ 민·관 협업으로 한-베 자녀 장학금 수여를 통한 학업 지원

○ 베트남 주요 성·시 귀환자녀 규모 및 생활현황 등 실태조사 추진(~'24.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한-베 다문화가정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법률지원 ○ 한-베 자녀와 결혼이민자 및 한-베 가족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귀환결혼이민자 취·창업 자립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베트남 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모

○ 한-베 가족의 자녀를 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73	Ⅲ-6-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과제목표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난민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난민제도 개선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제도 운용
○ 국가정황정보 고도화

주요내용

○ 난민심사 인력 확충,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 법령 제·개정 및 난민 제도개선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난민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난민심사 역량 강화	56	56	-	-
(난민심사관 교육)	9	9	-	-
(직무교육 교재 발간)	7	7	-	-
(난민통역 평가)	40	40	-	-
▪ 난민통역인증제 등 위탁	158	158	-	-
(난민통역 인증제)	80	80	-	-
(난민통역인 교육)	78	78	-	-
▪ 난민위원회 운영	38	38	-	-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	192	192	-	-
▪ 국가 정황정보 전담기관 업무협의	17	17	-	-
▪ 국가 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2,848	2,848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25개 언어 106명 난민전문통역인 신규 위촉('24. 1.)
- 일본 법무성 및 UNHCR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난민전담공무원 교육(6회)* 실시
  * 총 269명 참여(1차 31명, 2차 25명, 3차 57명, 4차 44명, 5차 43명, 6차 69명)
-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4회) 및 보수교육(2회)* 실시
  * 총 249명 교육 참여(1차 94명, 2차 155명)

○ 난민법령 제·개정 및 난민제도 개선 활동
- 지방 거주 소수언어 구사 난민신청자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시범 실시한 난민심사 화상면접 매뉴얼 개정 후 정식 운영('24. 5.)
- 국가안보·공공질서 위해자에 대한 난민인정 제한·취소·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난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24. 9.)
-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화상면접 등 근거 규정 보완('24. 12.)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이용기간 연장 관련 운영기준 명확화('24. 12.)

○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제정 및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24. 4.)
- 난민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 안내서(특수외국어 16개*) 발간·배포('24. 9.)
  * 카자흐어, 힌디어, 튀르키예어, 말레이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등
- 법무부-UNHCR 공동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4. 8. 난민조사관, '24. 12. 국가정황조사관)

	-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내부 워크숍 개최(연 6회*) * 특이 사례 분석('24. 4.), 난민소송 판례('24. 5.), 성소수자('24. 6.), 호주 난민심사제도('24. 7.), 난민심사와 디지털 기술변화('24. 8.), 난민과 자연법('24.10.) ○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배포(5회) *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사회환경, 정치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 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 - 1차 심사기관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국가정황정보 조사기법 등 순회교육 실시('24. 5~6., 4회) - 해외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담기관 업무 협의('24. 7. 호주 이민성, '24. 11. 오스트리아 내무부 등) -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 사업 실시('24. 11.)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정황보고서 등 36건 번역·감수

결과분석	**추진성과**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을 통한 민간 전문 통역인 확보 ○ 난민법령 제·개정 및 난민제도 개선 활동 - 난민심사 화상면접 운용의 법적 근거 보완, 난민신청자의 국내 법질서 준수 의무 명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정비 - 면접기법 교육, 워크숍 등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한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 보장 - 외부전문가와 협업하여 난민통역인의 통역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교육한 결과, 난민통역의 대외 신뢰도 제고 ○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이의신청 절차 다국어(16개 특수외국어)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난민지위심사 안내서 제정,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 전문성 강화 ○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 난민신청자 출신국에 대한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배포,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 추진을 통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1차 심사기관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순회 교육을 통해 난민전담공무원의 국가정황정보 수집·활용 역량 강화 - 해외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담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정부 간 다자 협력체계 기틀 마련 및 역내 난민문제 공동 대응 체계 확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난민법령 개정 및 난민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확대 실시 추진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진정한 난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 보호 강화 ○ 주변국 정세 불안 등 국제정세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개발·구축

74	Ⅲ-6-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난민정책과
과제목표	○ 난민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 난민 등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 민·관협력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	59	59	-	-
(난민교육비)	106	106	-	-
(난민신청자 구호 및 교정비)	216	21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난민 등 정착 지원 강화
- 재정착난민 초기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2회 실시('24. 2., 4.)
- 재정착난민 멘토링 가이드북 배포('24. 7.)
- 난민신청자 지원제도①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안내서② 다국어로 제작·배포('24. 9.)
  ※ 기존 한국어, 영어에서 '① 아랍어, 카자흐어, 힌디어', '② 미얀마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힌디어' 추가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의료지원 등 지원(연중)

○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안 공유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24. 6.)
- 국제적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지속적 협력
- 난민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지속적 협력

○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 관계기관 지원을 통해 '재정착난민과 함께하는 식목일 기념' 행사 진행('24. 4.)
- 교육관계자, 학생, 시민 대상, 난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강연('24. 8.)
- 난민정책 시행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난민정책 뉴스레터' 분기별 배포(분기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난민인정자의 자립 및 안정적 정착 환경 조성 ○ 국내외 관련 단체,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구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난민인정자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국익 기여 및 난민 인식개선 제고

75	Ⅲ-7-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포용적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체계화			
주요내용	○ 정책추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정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987	16,945	958	5.9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8,757	16,413	△2,344	△12.4

추진상황 :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탈북민과 자녀의 교육지원 등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교육지원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자(탈북민)에서 탈북민과 그 자녀로 확대, 탈북민 자녀에 대해 초중고 각급 학교의 입학금 등을 면제하고(일부 학교 제외), 대학교 등록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등) △북한이탈주민의 날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양육 현황 조사 등 근거 마련

○ '23년 개정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연장 근거 및 서식 마련 △정착지원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신변보호 재실시 근거 및 서식 마련 △남북통합문화센터 위탁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 법령 등 제도개선 횟수 : 10회

○ 탈북민 초기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금 50% 증액, 「정착금 예규」 신설
- 세대별 기본금 50% 증액, 1인 기준 1,000만원→1,500만원 증액

○ 탈북민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새출발 장려금 신설을 위한 시행규칙 및 「정착금 예규」 개정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무연고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이상 무연고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가산금 신설
- (새출발 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거주지 보호기간 경과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로시 장려금 지급

○ 정착지원 범부처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착지원협의회 운영예규」 개정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교육 및 일자리 소위, 중앙지방 소위 신설 △민간자문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연번	구분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1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5.21.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국가기념일 제정
2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7.9.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연장 근거 마련 정착지원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신변보호 재실시 근거 마련 남북통합문화센터 위탁근거 마련

연번	구분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3	부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7.30.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 서식 반영
4	행정규칙	정착지원협의회 운영예규	10.3.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효율화 예규개정 - 교육 및 일자리 소위, 중앙지방 소위
5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0.26.	교육지원 대상을 탈북민의 자녀로 확대
6	부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11.1.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신설
7	행정규칙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예규	11.1.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새출발장려금 신설
8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2.20.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률 근거 마련 해외탈북민 입국지원, 양육 현황 조사 등
9	행정규칙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예규	12.17.	정착기본금 1,500만원으로 인상(25.1.1. 시행)
10	내규	보호결정 세부기준		국내 거주요건 3년 기준 명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계기 10대 과제 추진, 10대 과제 제도화 ○ 법률 개정 2회, 시행령 2건, 시행규칙 2건, 예규 개정 3회, 지침 1회 등 총 10회 법령 개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북한이탈주민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시행령,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시행령 개정 등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매년 실시

○ 정착기본금 추가 증액 추진,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및 새출발 장려금 지급 등

76	Ⅲ-7-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 · 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일자리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사항인 만큼, 일자리 창출로 탈북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통해 탈북민 삶의 질을 개선			
주요내용	○ 탈북민 직업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 고용 촉진 등 일자리 지원 ○ 탈북민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운영	36,273	35,086	△1,187	△3.3
(자립·자활 지원)	4,510	4,828	318	7.1
(정착금 등(미래행복통장) 지급)	11,808	9,733	△2,075	△17.6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일자리성공패키지)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직업탐색 및 준비과정을 거쳐,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는 구직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취업클리닉 236명 △스피치(언어)교육 304명 △일 체험 100명 △취업박람회 등 106명 참여

○ (창업지원) 경영개선자금 등 기창업자 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자 사업화 지원, 1:1 컨설팅 전문가 지원단 운영 등

구분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자원	창업 실습	신규창업지원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
			생활밀착형	아산상회		
창업지원 실적(명)	318명(8.2억)	8명	8건(40.5백만원)	6건(41.3백만원)	363회	407명

※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위해, 농진청·지자체와 협업하여 단계별 영·귀농 지원(39명 귀농창업)

○ (취업지원) 진로설계, 구인·구직 등록, 동행면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취업	알선	동행면접	대면상담	전화상담
누계(건)	1,476	1,732	1,346	1,636	446	6,619	13,253

○ (교육·훈련) 채용연계 단기 연수 프로그램 및 직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단기연수) 직무경험 축적을 통한 채용확대를 위해 단기연수프로그램 지원(206개 기업, 195명 지원, 191명 채용)
- (직업역량강화)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취업연계 심화 직업훈련 과정 △전문직 양성과정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심화 직업교육 실시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취업연계 직업훈련	전문직 양성과정**
460명(559개 과정)	2회	44명(5개 과정)	47명

* 취업바우처 :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 형식의 교육비 지원(만18세~59세)

**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실기실습처 지원(간호사, 소방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등)

	○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통장 만기 수혜자 증가를 통한 탈북민의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 기여, 가입·연장조건에서 '거주지보호기간'을 삭제하는 가입조건 완화 추진(「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25.2.11. 개정) <미래행복통장 만기 수혜자 현황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12 17명 | 49명 | 169명 | 398명 | 433명 | 453명 | 488명 ○ (고용기업 인센티브)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 생산품 우선구매, 재정지원, 컨설팅 지원 -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1곳) 및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2곳) 신규 지정 - 모범사업주(2곳) 및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2곳)에 사업개발비 지원(총 37백만원) - 탈북민 고용기업 세액공제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재부 협의('25.2.28. 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중심의 사업 추진 및 양적·질적 확대 - 취업지원센터, 직업심화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 - 미래행복통장 만기수혜자, 단기연수 참여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 - 경기침체 상황에도 탈북민 평균임금 전년 대비 6.5% 상승('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가입자격 완화에 따른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 및 탈북민 고용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속 추진 ○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77	Ⅲ-7-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
과제목표	○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주요내용	○ 거주지 초기 정착지원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0,865	11,115	250	2.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528	7,728	△200	△2.7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37	3,387	50	1.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남북통합문화센터,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남북주민 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 '23년 센터 방문객 '23년 67,000명 → '24년 78,657명

- 탈북민 사회공헌 활동 촉진, △양천구 경로당 봉사활동(3.4.) △탈북 봉사단체 포상, 자원봉사페스티벌(9.28.)
- 탈북예술인 문화행사 실시, △센터개관 4주년 문화행사(5.17.) △남북 출신 예술인들의 찾아가는 문화행사(속초, 6.16. 부산, 11.8.) △분기별 기획전시 실시
- 남북 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남북생애나눔대화 총 65회 △남북청소년 합창단(매주) △남북자원봉사단(매월)
- 탈북 예술인의 역량 제고 및 창작활동 지원(도서 6건, 시각예술 12건, 공연 3건 등)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위기 정보에 대한 상시적 공유로 선제적 위기발굴 및 종합적 지원 실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24.1월~)

- 복지부·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협업 및 통일부 자체 위기지표 등 활용, 고위험군 상시 관리 및 위기 적시 포착·대응
  - (대상 선별) 복지부가 통일부에 제공한 위기징후 정보(45개 지표) 활용, 관련 지표가 장기간 중첩된 상시관리대상 7,200여명 선별
  - (상시 모니터링) 위기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선별된 고위험군 1,200여명 중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적 안부 확인('24년 하나센터 상담 총 66,349건 진행)
  - (종합지원) 발굴된 대상에 대해 지원 필요시, 지자체·하나재단·하나센터의 자원을 종합적 연계, 맞춤형 지원 실시*

* '24년중 △하나재단을 통해 긴급생계비 658건, 의료비 927건, 장제비 33건, 사망위로금 58건, 무연고자 장례 22건 지원 △위기가구 탈북민 37명에게 1,85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 △독거고령 탈북민 대상 안부확인 시범사업 실시(서울·경기·인천 지역지역 530여명 대상 유제품 배송)

* 통일부 성과목표별 목표달성 노력에 대한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1위(72.88점)

	○ 하나센터가 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 포착, 발굴,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및 현장점검 - (역량강화) △평가체계 개선 용역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관리 업무집중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 그간 복지부와 협의해 온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는 '25.1월 편입 완료 - (현장점검) △위기관리 업무추진 실태 점검 △관계기관 합동 보안점검 실시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同 협의회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운영지침 개정(지자체의 하나센터 의견수렴 등 근거 마련)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유관기관 정례협의체」 운영(분기별) - 경찰청 등 신변보호 유관기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지속 개선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민 위기 가구에 선제적 대응 등 긴급복지 서비스의 즉시성 및 접근성 강화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통합적 사례관리 실시 ○ 탈북민 위기 가구 지원의 전문성 강화 - 하나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개정 △운영평가결과를 공유·환류하여 역량강화 및 운영상의 효율성 개선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하나센터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

향후추진계획	○ 고령 탈북민,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대상 위기관리 특화 사업 확대 실시(수도권→전국)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으로 위기 탈북민 현장지원 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화 추진,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인력·운영 체계 개선

78	Ⅲ-7-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가정보원	과・팀명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주요내용	○ 신속한 조사, 조사종료 후 하나원 이동 대기기간 단축 등 임시보호기간을 법정시한(90일)보다 단축하도록 실질적 추진 * ('18.2.)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을 개정,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조사 전・후 면담 등을 통해 임시보호 중인 탈북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임시보호 절차 개선 - 외국제도 연구용역, 인권보호관의 정책・제도개선 자문,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체계 지속 개선			
	관련예산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조사・임시보호기간 최소화 - 신속한 조사로 탈북민 조사・임시보호기간 단축(평균 60일 내외) ○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외부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탈북민 상담 확대(2023년 349건 → 2024년 447건)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임시보호 절차 개선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업무 개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속한 조사로 실질적인 탈북민 임시보호기간 단축 ○ 탈북민이 변호사로부터 인권・법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제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임시보호 체계 개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탈북민 입국자 수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비 필요

향후추진계획	○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환경 개선 지속 추진 ○ 탈북민 입국자 수 급증에 따른 대책 점검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이주배경학생지원팀
과제목표	○ 북한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북한배경학생의 역량 강화 및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			
주요내용	○ 담임·교과교사 1:1 멘토링, 성장 멘토링,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지속 실시 ○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 등을 통해 북한배경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학부모 교육 내실화 ○ 북한배경학생의 정규학교 적응 및 통일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지원			
관련예산	(특별교부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배경학생 교육지원	3,309	2,500	△809	△24.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배경학생의 학교 적응과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멘토링 실시
- (성장 멘토링) 북한배경학생의 적응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전·현직교원이 2년 이상 장기멘토링 진행
- (심리상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배경학생 대상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

○ 북한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진로 코칭
- 진로진학 지도 참고자료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진로상담 실시

○ 북한배경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북한배경학생 대상 진로희망분야 전문가 멘토 1:1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배경학생이 놓일 수 있는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 북한배경학생이 소수 재학하는 학교를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 및 장기 멘토링 운영 - 위기에 놓인 북한배경학생 대상 신속하고 전문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담팀(돋움지원팀) 운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북한배경학생의 학교 적응과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멘토링 지속 운영
○ 북한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진로 코칭지속 운영
○ 북한배경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79	Ⅲ-7-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자립지원과
과제목표	○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제고 및 통일미래인재 육성			
주요내용	○ 탈북청소년 부적응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비대학 및 탈북청소년 학교 지원 - 일반학교 학업중단율이 높은 점을 고려,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노력(통일전담교육사 등) -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증가에 대응, 특성화·대안학교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탈북청소년학교 지원_인가 대안학교(5)〕	4,827	4,522	△305	6.3
▪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 운영	-	170	170	순증
▪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	-	370	370	순증
▪ 탈북민 교육 및 적응지원 〔대안교육기관(6)+방과후공부방(7) 등〕	1,663	1,533	△130	7.8
▪ 탈북민 교육지원금(사립대 등록금 보조)	4,984	4,657	△327	6.6
▪ 가산금(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	283	273	△10	3.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교육지원 제도 개선) 교육지원 대상을 탈북민 자녀까지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법」(제24조) 개정('24.10월 공포, '25.4.23. 시행)

- 탈북민 자녀의 적응, 정착과정에서 언어 및 문화 차이, 정체성 혼란, 학습 격차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교육지원 확대 근거 마련

○ (입국 초기 교육지원) 하나둘학교 재학생들의 학력 결손 보충교육, 정규학교 적응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및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

- 학력인정 신청 지원, 진로체험, 대학교 탐방, 대안학교 설명회, 상담 등 교육지원

○ (정규학교 적응 지원) 탈북학생 다수 재학 정규학교에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화상 영어, 방문학습지 등을 지원

-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멘토링,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고, 학력결손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해 화상 영어, 방문학습지, 방과후 공부방 등을 지원

  * △통일전담교육사 22개교 20명 배치(367명 지원) △1:1 온라인 화상영어(만 9세~24세) 월 평균 158명 △방문학습지(만3세~초등학생) 월 평균 1,015명 △방과후 공부방(지역아동센터 7곳, 월 평균 200여명)

- 진로진학 온라인 맞춤형 상담, 탈북민 및 자녀 대상 특별전형 입시자료집 제작·배포, 대학생 멘토와 초중고 탈북학생 멘티를 연계한 1:1 맞춤형 멘토링 등 실시 지원

○ (고등교육 적응력 제고) 탈북대학생 학업기회 제공 및 학교 적응, 학사관리, 진로개발 지원

- 대학 등록금(국공립 면제, 사립대 반액 보조), 생활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회 제공

  * '24년 사립대 등록금 지원 202개교 1,540명

- 맞춤형 멘토링, 다양한 진로진학 지도, 통일미래인재 육성사업 등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 지원

○ (다양한 대안교육 지원) 중등 정규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

- △특성화학교(한겨레), 인가 대안학교(여명, 하늘꿈, 드림, 장대현) 인건비, 운영비 등 4,827백만원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6곳 운영비 900백만원 등을 지원,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실시
- 이중언어강사 배치, 맞춤형 교육교재 개발 추진

○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탈북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관리 제도 정비

- 경제적 생활 지원 강화(가산금 신설, 월 20만원), 생활실태 전수(83명) 조사('24.8월)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청소년의 학업역량 및 학교적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 통일시대 미래인재로 양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육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탈북민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연령 및 거주지 보호기간 등 폐지 ○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력 제고 및 다양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내실있게 지원 ○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안정적 진로진학 지원, 멘토링 등을 통한 통일미래인재 육성 지원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1.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2.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3.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20	2	18	0	
1.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7	2	5	-	
2.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4	-	4	-	
3.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4	-	4	-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5	-	5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1	Ⅳ-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제완료('24.)**
2	Ⅳ-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제완료('24.)**
3	Ⅳ-1-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추진중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추진중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일부완료**
6	Ⅳ-1-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추진중
7	Ⅳ-1-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추진중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일부완료**
9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일부완료**
10	Ⅳ-2-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추진중
11	Ⅳ-2-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추진중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추진중
13	Ⅳ-3-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추진중
14	Ⅳ-3-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추진중
15	Ⅳ-3-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추진중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추진중
17	Ⅳ-4-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추진중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추진중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추진중
20	Ⅳ-4-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Ⅳ-1-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전략팀
과제목표	○ 디지털 심화시대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 제시			
주요내용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기존의 규범체계, 질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디지털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 제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3,800	5,757	1957	△51.5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1,000	827	△173	△17.3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800	630	△170	△21.25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과제완료

'24년 이행실적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9.25.) 완료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24.5.21.) 완료
- 고용부·교육부·과기정통부·방통위 등 부처별 디지털 정책 수립, 쟁점 대응현황 진단 및 실태조사 등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국무회의 보고, '23.9.25) ○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기본방향 마련('24.5.2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완료

2	Ⅳ-1-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전략팀
과제목표	○ 디지털 심화시대에 개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디지털 정책 수립 추진			
주요내용	○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고, 디지털 심화시대의 심화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26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3,800	5,757	1957	△51.5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1,000	827	△173	△17.3
(디지털 질서 글로벌 확산)	800	630	△170	△21.25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과제완료

’24년 이행실적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

- **(사회적 공론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론화* 진행
  * (6~7월) AI 안전·윤리, (8~9월) 디지털 접근성, (10~11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12월) 비대면 진료
- **(정책연구)** 디지털 심화쟁점 해소를 위한 부처 합동 정책연구 실시
  * (보건복지부) 비대면 의료, (고용노동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여성가족부) 딥페이크 성범죄
- **(이행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부처별 추진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차년도 쟁점 발굴을 위한 종합점검 추진*
  * (대상)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등 25개 부처 20대 정책과제(8대 핵심과제), 171개 세부과제
-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전반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 및 대응, 디지털 권리장전 인식 등 조사

○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을 위해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I·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 (캐나다) UBC, 토론토大, (영국) Demos·옥스퍼드大

결과분석

추진성과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AI기본법」,「디지털포용법」 제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3법(성폭력처벌법, 성폭력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4.10.),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24.10)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을 위한 「자율주행차법」 개정 등 완료 ○ 캐나다 UBC, 토론토大, 영국 Demos·옥스퍼드大와 디지털 규범 공동 연구를 통해 보고서 발간, 워크숍 등 추진 - (UBC)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한 북미 지역 정책 대응 비교·분석 - (토론토大) AI 안전 관련 신규 현안·쟁점 도출 - (Demos·옥스퍼드大) 「2025년 디지털 권리 강화: 영국, 유럽연합 및 글로벌 환경의 동향, 도전과제 그리고 기회」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여, 영국판 디지털 권리장전(UK Declaration of Digital Rights & Principles) 수립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완료

3	Ⅳ-1-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제목표	○ 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추진			
주요내용	○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 전 국민의 성숙한 디지털윤리 의식과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간 21만 명 이상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3.~'27.) - 디지털 윤리 체험관 운영 및 지역 연계 대국민 행사 개최('23.~'27.)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디지털윤리 교육)	5,224	4,963	△261	△5.0
(디지털윤리 홍보활동)	889	845	△44	△4.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디지털윤리 교육)**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디지털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5.3만명)

※ AI윤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력 강화와 건전한 AI 활용 문화 조성에 기여

○ **(대국민 인식 제고)** 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 활동 추진

- **(국민참여형 캠페인)** 창작콘텐츠 공모전(6.3.~10.4.), 디지털윤리 주간*(7.22.~7.28.), 디지털윤리대전(유공포상, 12.27.)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전국 6개 체험관, 피서지(제주, 양양), 업무지구(광화문, 여의도) 등 지역과 연계한 디지털윤리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디지털윤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6개소(서울·경기·광주·전북·대구·부산) 체험관 운영

※ 대구 디지털윤리체험관 신규 개소(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과학관, 5.3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 국민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피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 - 교육 수혜자 대상 만족도 91.0점, 청소년 교육 전/후 디지털윤리 의식개선도 12.8%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계속)

- 인공지능의 건전한 활용과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고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험형 교육(실습형 AI·메타버스 윤리 교육, 디지털윤리 골든벨 등) 확대

○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추진(계속)

- 디지털윤리체험관 운영 및 디지털윤리 주간, 창작콘텐츠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개최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 · 제도 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팀명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목표	○ AI 기술 활용·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율규제로서의 AI 윤리체계 정립 및 확산 기반조성			
주요내용	○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인공지능(AI) 윤리기준」('20.12.)을 준수·점검할 수 있도록 실천수단으로서의 자율점검표를 마련하고, 현장 적용 지원 ○ 국가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및 국제 기준들을 반영하는 AI 윤리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AI 기반 서비스의 편익·위험 식별 및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AI 윤리 확산 기반조성)	500	5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AI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현장 적용 지원 및 세부 분야 윤리점검표 개발

- 영상합성 분야 AI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개발을 통해 AI 윤리기준 자율점검표*를 실제 현장에서 더욱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예시를 구체적으로 제공(총 44개 점검항목 제시)

* 자율점검표 : 「인공지능(AI)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 실천을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이를 이행할 방법을 범용성 있는 점검 문항으로 제시

- 자율점검표의 영상합성 분야 현장 적용 컨설팅을 통한 기업 윤리점검표 개발 지원(1건. 이스트소프트)

○ AI 제품·서비스의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 시민사회, 학계, 공공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윤리적 AI 개발·배포·활용을 위한 기준자료 제공(1건. AI 영상 합성 서비스)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관계부처 합동, 2020),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과기정통부·KISDI, 2024)', '윤리영향평가 도구'(UNESCO, 2023)를 토대로 윤리적 영향평가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AI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및 수용성 확대에 기여 ○ 영상합성 분야 AI 제품·서비스의 AI 윤리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법제도·기술적 조치방안 제안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정 분야* AI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개발 및 현장 적용 지원

* 사회에 미칠 파급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중요성, 대응 필요성,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윤리영향평가 및 점검표 적용 분야 선정 예정

○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추진

4	Ⅳ-1-④-㉮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과제목표	○ 편향적·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생성·유통을 방지하고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추구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21.6월)			
주요내용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패널조사에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830	792	△38	△4.6
(경험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470	440	△30	△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이용자패널조사 내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패널조사」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 책무' 문항을 편성하여 서비스 제공자 책무에 대한 패널(이용자) 인식을 조사·분석

- 이용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지녀야 할 책무(투명성, 공정성)를 세부문항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 책무'에 대한 이용자 인식변화 분석('23년과 '24년 수치 비교)

* 추천 서비스에 대한 **알권리**(콘텐츠 선별기준 등 관련정보 공개), 다양한 **선택권**(정보 수정·삭제)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패널조사 개요

□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가구원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 (표본 수) 2,675 가구, 4,420 가구원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른 1:1 면접식 조사
□ (조사 주기) 1년
□ (조사 기간) '24년 9월 1주 ~ '24년 12월 4주(총 9주)

결과분석

추진성과

○ 패널(이용자) 대부분이 '23년 대비 '24년에 서비스 제공자 책무*가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됨

* 추천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의 선별기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콘텐츠 제작자가 인간 혹인 인공지능인지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제작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등 11가지

※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 알권리 및 선택권 비교 결과('23년-'24년)

(단위 : %)

구분	연도	전체
사례수(명)	**'23**	**4,581**
	'24	**4,420**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의 선별 기준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23	62.8
	'24	69.8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작자(생산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23	61.0
	'24	61.8

구분	연도	전체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3	56.9
	’24	58.6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추천 콘텐츠의 노출 정도를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55.4
	’24	58.5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개선된 추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	57.3
	’24	57.5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	59.9
	’24	61.8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23	60.3
	’24	61.9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기능적 오류, 오작동, 현행 법령 위반 등 부정적인 결과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23	60.3
	’24	60.5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3	61.4
	’24	63.7

○ ’23년 대비 ’24년도 추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변화 분석
-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며 이용자는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사용자 통제권, 책임성 요구
-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통제권 희망
- AI 추천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필요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지지도 증가
- AI 기술 확산과 함께 이용자가 해당 기술의 영향력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시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계획

○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장기적으로 분석(시계열 분석)
- ’25년도 패널조사 추진 시에도 ’인공지능 추천서비스 제공자 책무‘ 문항을 포함
- 인식 변화가 발생한 시점(변곡점)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맥락 조사를 통해 변화 원인 분석 실시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 · 팀명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목표	○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			
주요내용	○ 메타버스 기업 약관·가이드라인 등에 실천윤리 핵심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등 민간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 지원 ○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가능한 실천윤리 보급·확산			

관련예산

(방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VR·AR콘텐츠 산업육성 (VR·AR콘텐츠 개발지원)	180	150	△30	△16.67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이행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원칙을 구체화한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23.12.27)
- 기본조항 40조 및 공급·창작·이용 각 40조 등 총 160개 조항으로 구성

○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교육영상 15종 및 교육자료 13종을 비롯한 개발자와 운영자 교육자료 등 개발 및 보급·확산
- 실감교육 콘텐츠 현장 체험 운영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시청각 영상을 활용한 초중고·대학·학부모 대상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실시(3,500명)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특임장관 면담(4월),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 면담(6월), OECD 글로벌 기술포럼(6월), 스위스대사관 XR위크(9월) 등에서 윤리원칙 소개·공유
- 이노베이션스퀘어, SW·AI역량강화 등 19개 국내 유관사업, OECD 38개 공관(2월), 해외 9개국 539개 산·학·기관에 윤리원칙 배포
- 영역별 주체별 실천윤리 이슈별 경험 유무와 인식수준 조사 등 추진을 통해 실제 적용 및 준수 여부 등 검토

○ 메타버스 자율규제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 현황 공유 및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 이행방안 논의('23.10.25)

결과분석

추진성과	○ 메타버스 활용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메타버스 윤리 제시 및 보급·확산 -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 보급·확산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 문화를 활성화하고, 메타버스에서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 추진에 기여 -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정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 · 팀명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과제목표

○ 메타버스 서비스의 다방향적·입체적 소통 방식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해소를 통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주요내용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및 모니터링
-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 제시
- 메타버스 사업자 대상 기본원칙 이행 점검 추진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830	792	△38	△4.6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96	96	-	-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완료

'24년 이행실적

○ **(모니터링)** 메타버스 사업자 대상 기본원칙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6가지 원칙을 토대로 마련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이행 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

* 호라이즌(메타), 이프랜드(SKT)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해 콘텐츠 제한, 분쟁 적극 해결 노력 및 신고 절차 마련, 개인정보 등 정보 관리 및 처리 목적 안내 등 6가지 기본원칙*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음

* 공동체 가치 형성,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조정, 공정한 경제활동 보호,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가능 발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정 사업자의 경우 기본원칙 중 '공정한 경제활동'에 포함되는 '가상 거래'와 관련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하여 추후 마련 여부를 살펴볼 예정

향후추진계획

○ 완료 과제

5	Ⅳ-1-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 · 팀명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제목표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유형 및 침해요인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을 명확화하여,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

주요내용

○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이 추구할 윤리적 지향점과 구체화된 행동강령 안내
* 활동정보(접속시간, 관심사항, 활동내역), 생체정보(눈동자 움직임, 심장박동)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되어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227	380	153	40.3
표준개발(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표준)	227	380	153	40.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메타버스 환경에서 주로 수집되는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건강정보 등) 및 맞춤형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정보 등 관련 규율 명확화
- 메타버스 기술동향 분석, 국내외 서비스·규율사례 조사 등을 수행한 정책연구*('23.5.~12.)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 개선점 도출
* 메타버스 기술현황 및 윤리 이슈, 국내외 법·정책동향,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보호조치, 정책적 시사점 등
- 생체인식정보 관련 정보주체 기본권 보호 강화,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안 마련(~'25.3.)
- 온라인 행태정보보호 정책방안 발표('24.1.),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발간(~'25.3.)

○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 국제표준 개발, ITU-T, ISO/IEC 등 국제표준회의를 통한 국제표준 채택 추진 중('23~'25년)

결과분석

추진성과	○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 - 서비스 제공·운영·이용 과정별 개인정보 처리방안 및 준수사항 명확화 ○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자율성, 사생활 존중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권 보호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표준개발 추진('25.1.~12.)

○ 메타버스의 기술발전 및 대중화 동향, 개인정보 처리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필요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추진('26.~)
* 사업자·이용자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반영(기획·설계, 데이터 수집, 이용, 보관·파기 등 단계별 수칙)

6	Ⅳ-1-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주요내용

○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계속),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유도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80	72	△8	△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포털 뉴스·동영상 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 포털-언론사 간 뉴스제휴 심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언론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24.12월)

○ 디지털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24.6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플랫폼 자율규제의 목적과 법적 근거 규정, 정부가 자율규제 촉진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24.6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포털의 새로운 언론사 제휴방식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재검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제22대 국회에 재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4.6.28, 정부발의) 입법 지원(계속)

7	Ⅳ-1-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유엔 차원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주요내용	○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확대 - 2025년 상정 예정인 우리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인권이사회의 역량 강화 행사」 주최 -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SAPI), Universal Rights Group(URG)와 함께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정책대화’ 및 ‘신기술과 인권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행사 주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신기술과 인권’ 이슈에 있어 국제인권기구 내 리더십 발휘 기반 확대 ○ 국제사회 내 ‘신기술과 인권’ 관련 담론 형성 및 발전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상정 및 채택 추진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목표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 필요
  * (국정과제 78-6)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주요내용

○ 지역인프라 공간 활용을 기반으로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6개소를 신설하고, 파견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보편권·접근권 확립에 기여

< 지역별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운영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계
개소	4	2	2	2	2	2	1	1	6	1	2	1	2	3	3	2	**36**

-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교육 수요계층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방문교육을 제공할 3,700곳을 발굴하여 디지털배움터 강사 파견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
- 실생활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키오스크·앱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반복적으로 실습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에뮬레이터' 개발 및 보급(조회수 14.2만회)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역량강화교육	35,685	32,085	△3,600	△10.1
(디지털배움터 운영)	27,936	27,93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파견교육, 체험존,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하여 '24년 54.5만명 교육

- 교육 5대 주제인 실생활 디지털 활용, 금융피싱 예방, 인공지능-생성형 AI 윤리, 본인인증 공공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활동 등 총 11.7만개 교육과정 추진
- 민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 및 일상생활 주제에 대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교육 수요 발굴 및 추진으로 평균 교육만족도 97점 달성
- 전체 교육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고령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금융사기 예방, 가족소통 확대 등 실생활 편의성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및 파견교육을 통해 54.5만명의 국민께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제공 - 디지털 배움터 교육생의 교육전후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도*는 평균 18%로,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효과적인 교육 제공 * 2024년 역량향상도 산식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산식을 적용할 경우 '23년 실적 13.3%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6.9%('23년) → 77.5%('24년)로 증가했으며 디지털 배움터 운영 이후 매년 상승 추세* * ('20년) 72.7% → ('21년) 75.4% → ('22년) 76.2% → ('23년) 76.9% → ('24년) 77.5%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민의 디지털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추가 개소 등 교육 확대 필요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자체(경남)에 추가 개소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민관과 협력하여 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확대, 파견교육 수요 발굴 지속 - 복지관, 노인회관 등 디지털교육 수요 단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키오스크, 생성형 AI 교육 제공 - 민관의 인프라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효과 제고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과제목표	○ 가상 모형(digital twin)*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참여형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차세대 도서관 구축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국가 지식정보 서비스 향유 *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이 만든 물체, 또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			
	주요내용	○ (가상 모형 서고 구현) 이용자 접근 불가능한 서고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 서지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가상 모형 기술 기반 서고 구현 ○ (메타 큐레이션) 데이터 에셋 구축 및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도구 개발 제공으로 이용자 참여형 메타 큐레이션 구축 ○ (공간 구축 및 연계) 콘텐츠 창·제작 환경 마련 및 차세대 서비스 향유 공간 하이퍼포럼(콘텐츠 리딩룸, 가상서재, 소셜룸, 힐링룸) 제공 ○ (홍보 및 협력) 가상도서관 플랫폼 참여 및 홍보, 국제 회의 사례 발표 참여 등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문화기술 R&D 사업 종료('22년~'24년)			

'24년 이행실적	○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을 위한 시범콘텐츠 체험관 운영 - 융합콘텐츠 체험관 개관('24.3.) - '현장소통' 개최를 통한 체험관 및 콘텐츠 관련 의견수렴('24.3.) - 콘텐츠 업데이트 및 체험관 운영('24.3.~'24.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체험관 개관 및 융합콘텐츠 개발·구축을 통한 디지털 문화향유권 확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

8	Ⅳ-2-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해양수산부	과・팀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

과제목표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통신복지 증진

주요내용

○ 내항선 해상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 연안 100km 이내를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바다내비 단말기 등을 활용한 해상원격의료지원*

* 의료키트 보급, 의료지원 시범서비스 관련 교육 등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 바다내비 앱 및 단말기를 통해 연안선박에 바다날씨, 해양교통상황 등 안전운항 정보와 함께 선원 건강관리 정보 등을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3,109	2,668	△441	△14.2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484	48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24.1.18. / '24.10.23.)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협의회 개최('24.3.27.)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개선('24.2~12.)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선박 모집('24.4.15.~6.10.)
○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시범운영('24.7.23~), 정식운영('24.11.1.)

결과분석

추진성과

○ '24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시행
- 대상선박 : 110척 /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1,252건

○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개시
- 바다내비 앱과 단말기를 통해 연안 ~100km까지 바다날씨, 선상건강관리 등 안전정보 정기적 송출 및 해양사고 속보 등 돌발해양교통정보는 수시로 송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24. 110척 → '25. 130척 확대) 지속 추진

○ '25년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 정식운영 지속 추진

9	Ⅳ-2-②-㉮	디지털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원정책과
	과제목표	○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주요내용	○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을 위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영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포함한 중장기(’24~’27년) 교원수급계획 마련(4.25.) - 전문가, 관련 단체,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고, 관계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결과분석	추진성과	○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하여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 - 기존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 지표를 벗어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장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총 교사 정원은 감축 추세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9	Ⅳ-2-②-㉰	디지털 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산부	과・팀명	SW인재정책팀

과제목표

○ 전국 5대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거점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신기술 교육 및 빅테크 기업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 추진

- 국내 우수 인재의 글로벌 수준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구글, 엔비디아, 네이버 등) 협업채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주요내용

○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Data·N/W·IoT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인재 양성

* ①수도권(서울), ②동남권(부산·울산·경남), ③동북권(강원·경북·대구), ④호남권(광주·전주·전남·제주), ⑤충청권(충남·충북·세종)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3,816	28,002	△5,814	△17.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국 5대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거점으로 실무형 디지털 인재 7,370명 양성, '24년 목표 5,846명 대비 126.1% 초과 달성

- (수도권) 국내·외 빅테크기업(구글, 엔비디아, AWS, 인텔,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실무형 AI·SW 개발인력 1,854명 양성
- (지역거점)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된 제조, 관광, 농업 등 주력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전용하여 해당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지역 디지털 인재 5,516명* 양성

* 동남권 1,607명, 동북권 1,333명, 충청권 1,275명, 호남권 1,301명

○ 3D프린팅 전주기(플라스틱, 메탈) 공정 이해 및 핵심 공정별 심화 기술 학습 지원으로 473명 양성 (목표 436명 대비 8%p 초과) 및 청년창업·스타트업 기술지원 702건*

* 총 160여개 창업·스타트업에 기술 지원 702건, 시범 양산 서비스 2건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업·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기업협력 방식으로 빅테크기업 교육 및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

-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계 인력난 및 인재 수급 불균형 해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권역별 우수 프로그램 공유 등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교육 거점 역할 강화를 통한 AI·SW분야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지역 산업 고도화 도모

- 지역 특화 산업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 체계구축을 통한 권역 간 우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10	Ⅳ-2-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제목표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디지털을 보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정보접근성 제고

- 웹·앱·키오스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보급 추진

* (국정과제 78-6)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주요내용

○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공공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접근성 보장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 운영

*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품목을 고시로 우선 지정(「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22.5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 유형(시각·청각·지체 등)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제품·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신체·인지적 제약을 해소하는 지능정보제품 및 서비스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	5,063	3,830	△1,233	△24.3
(정보접근성제고)	2,116	1,861	△255	△1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24년 이행실적

○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험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시험평가 공정성,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해 전문 직무교육, 키오스크 검증 시뮬레이션 등 추진

- 디지털 접근성 컨퍼런스 및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협의체 등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 검증서 발급 기업의 접근성 개선 사례 및 기술 정보 제공
- 키오스크 제조·개발사,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H/W 및 S/W 개발 시 필요한 정보접근성 표준·접근성 검증 기준 등 전문교육 추진
- 접근성 검증된 키오스크를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구매·계약업무 및 장애인·복지총괄 담당자 대상 정보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설명회 개최
- 제도 활성화를 위해 키오스크 UI 플랫폼 등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대상 우선구매제도, 검증 통과 키오스크 현황 등을 안내·홍보 추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취약계층(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의 학습, 사회참여, 경제 활동 등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 유형의 143종의 보급제품 선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체험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체험전시회 개최 -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디지털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 등)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보급지원 추진('24년 5,300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우선구매제도 운영) 무인주문기(주문), 도서대출반납기(유통), 무인발권기(발권) 등 39종 검증 및 판매(도서관, 주민·복지센터, 병원 등)를 통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확산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 유형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143종) 총 6,168대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생활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촉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지능정보화기본법이 '24.3월 개정되어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나, 공공·민간에 즉각적인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유관부처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홍보 등 필요

향후추진계획	○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하여 키오스크 접근·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 마련 추진('25.3월) * 이용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의 범위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접근성 보장 미조치에 따른 시정명령의 방법·절차 등

11	Ⅳ-2-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노인정책과, 건강정책과
과제목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구에 발전된 정보통신장비(ICT)를 설치 운영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 구현 ○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주요내용	○ 신속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AI·IoT 기술 및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 5종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267	31,098	1,831	6.3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13,077	13,212	135	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국을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 신규 추가 발굴 및 설치(3차 10만가구, '22년~지속)
○ 서비스 만족도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 관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년 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 종사자 인력 대상 지침 및 역량강화 전국 17개 시·도 교육 및 의견수렴(1월~2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상·하반기 간담회 실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및 대상자 현장방문 실시(연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및 포상(11-12월)
- 응급관리요원 마음안심캠프 최초 실시('24.10월)
○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및 사업 운영보건소 확대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참여보건소 확대('24. 141개소 → 178개소(+37개소))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 및 배포(3월)
-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통해 대상자 확대, 응급상황 신속 대응 및 서비스 질적 관리 강화 -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하여 '24년 268,505대 설치('24.12월기준) - 응급호출, 화재발생,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 '24년 341,608건 조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만족도 조사 93.2점 달성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참여 보건소 확대 및 사업질적관리 강화 - 사업참여 보건소 확대(141개소 →178개소, 102,356명 서비스 이용) - (사업만족도 조사) 전체항목 평균 91.2점 달성 - (건강관리 현황) 신체활동 개선율 62%, 식생활 개선율 52%, 악력유지율 61%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웨어러블 장비, 케어콜 서비스 등 신규 장비 및 기능을 추가한 신규 사업을 설치·확산(4차 1.2만대, '25년)하여 대상자 단계적 확대 추진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7년)*
* ('25년) 200개소 → ('26년) 230개소→ ('27년) 261개소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데이터진흥과
과제목표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			
주요내용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 ○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컨퍼런스 등 홍보 추진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	3,810	3,81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제공·활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4건 발굴

- (생활밀착형 서비스[2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상 속 마이데이터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정보주체와 관련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본인정보를 활용·융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실증

○ 국민 누구나 마이데이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 공유·확산

- (컨퍼런스) 마이데이터 법·제도, 산업 동향, 정책 방향을 총망라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총 195명 참석(오프라인)
- (홍보) 영상 콘텐츠 제공,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홍보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보주체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4건 발굴 및 마이데이터 관련 지식·정보 확산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증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25.3월)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 필요

향후추진계획

○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해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25년 5건), 컨퍼런스 개최('25년 오프라인), 홍보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 지속 추진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행정정보공유과

과제목표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

주요내용

○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중심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10,351	8,610	△1,741	△16.82
(공공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9,070	6,502	△2,568	△28.3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 운영 및 지원)	1,258	2,085	827	165.7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23	23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확대**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묶음정보 서비스 34종 확대

※ ('23년) 누적 105종 → ('24년) 누적 139종

○ 국민의 수요가 많은 민간분야 서비스 개시

- 가족관계 증명서 연계를 통한 통신요금 가족할인, 군요금제 가입 및 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등
- 자동차 사고 보상청구, 증권계좌 한도해제 및 실손보험 청구 등

□ **인식 제고 활동**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용자(국민) 만족도 조사(3.25.)

○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커피차 이벤트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 대국민 홍보(11.13.)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누적 139종 제공 ○ '24년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량 4억7천건(누적) 돌파 ○ 국민의 전송 요구에 따라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약 8억1천여 건의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 추진

○ 공공 마이데이터 수혜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사업자)으로 확대하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를 통한 대국민 공공 마이데이터 인식 제고

12	Ⅳ-3-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팀명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과제목표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매년) ○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6,050	△1,600	△20.9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546	6,045	△1,501	△19.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전송 정보범위, 수신자 기준 등 마이데이터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 의료·통신 분야 등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발굴·지원 추진

○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한 데이터형식 고도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 추진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1차 구축('24.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25.3월)에 앞서, 법·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 ○ 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발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소통·협력 중

향후추진계획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25.3월)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2차 구축('25.12월)

13	Ⅳ-3-②	보안취약계층 역량지원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정보보호산업과
과제목표	○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여 자생적 보안역량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사이버위협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제품·서비스 도입 지원 - 특히, 별도의 보안전담 인력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모델인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지원 * SECaaS(Security as a Service) : 보안 전문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원격에서 보안 기능 전반을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5,800	2,636	△3,164	55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원규모 : 컨설팅·솔루션 246개社, SECaaS 607개社 지원

○ 지원결과:

- (컨설팅 및 솔루션) 246개社 지원, 보안솔루션 258개 도입 지원

※ ’24년 정보보호 수준 향상도 22.4% 달성

- (SECaaS) 607개社 지원, SECaaS 690개 도입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컨설팅 및 솔루션) 246개社 지원을 통해 ’24년 정보보호 수준 향상도 22.4% 달성 ○ (SECaaS) SECaaS 도입을 통해 347만 건의 보안 규칙에 어긋난 행위가 발생, 이 중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2만4천건 차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소기업 보안컨설팅, 솔루션, Secass 지원 등 지속 추진

14	Ⅳ-3-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제목표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추진			
	주요내용	○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계정보 일괄변환 제도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하위법령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 위원회 구성 시기에 따라 추진상황 변동 가능			

'24년 이행실적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4.1월 개정, 7월 시행) -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 ○ CI 일괄변환 규제체계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추진 - 시행령 개정안 마련(4월), 입법예고(4월~6월) - 법제처 사전 심사(4월),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6월), 국조실 규개위 본 심사(7월) ※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본래 '24.7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지연됨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터넷상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국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완료('24.1월) 및 시행(7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본래 '24.7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지연됨

향후추진계획	○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시행('25년 상반기) ○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입법 취지, 조문 해석, 법규준수 판단기준 등에 관한 해설서 발간('25 상반기)

15	Ⅳ-3-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제목표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주요내용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 사업자 자율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하고 전문가·이용자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강화 - ’23년도에 신규로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선 및 신설 검토 등 실효성 있는 평가방안 마련 및 평가(‘24.~)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376	1,376	-	-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운영지원)	336	33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

- 평가기준 현실화*, 법령 개정사항 및 방통위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평가지표 개선

* 통신판매사 등 자격증 취득 지원 대상을 대리점 직원에 한정, 고객응대근로자 근속기간 기준 완화하는 한편, 행정처분 내역 감점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하여 평가 강화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23.6.21.)를 반영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 지표 신설 등

- 서비스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등을 고려해 신규 평가대상 선정

※ 아이즈비전(알뜰폰), 알리익스프레스(쇼핑) 2개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서비스별 특성 및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순응도 및 이용자 편익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4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 의결·공개(’25년 3월) 및 ’25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계획 의결(’25년 3~4월)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25년 5~11월)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의결 및 공개(’25년 12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국제형사과
	과제목표	○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가입 추진 및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형사사법공조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가입 및 이행입법 추진 - 협약 가입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범정부 이행입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24. 10.), 조배숙 의원안으로 국회 발의(’24. 11.), 논의 중 ○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공조 국가들과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 * ’24. 7. 일본 도쿄, ’24. 8. 미국 워싱턴, ’24. 12. 중국 쿤밍 개최 -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담당자들 협의체(PC-OC) 등을 통해 협력 방안 논의* * 24. 11. PC-OC 사법공조 담당자 회의, ’25. 1. Eurojust 실무회의 개최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활용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중·일·미, 아세안 등 총 20개국으로 구성, 한국은 ’24. 8. 라오스에서 열린 제4회 연례총회 참석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관련 국제사법공조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장수사를 가능하도록 한「성폭력처벌법」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 예정(’25. 3. 31. ~ ’25. 5. 12. 입법예고)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주요내용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확대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24. 12. 3. 공포, ’25. 6. 4. 시행 예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장수사를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정비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제목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복귀 지원

주요내용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삭제,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예산

(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475	3,269	△206	△5.9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지원))	613	712	99	16.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딥페이크 성범죄 효과적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24.11.)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4.10. 공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지원현황 : (’23.) 27.6만 건 → (’24.) 33.2만 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NCMEC(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간 삭제지원 핫라인 구축 관련 업무협약 체결(’24.7.)
* 삭제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702건 삭제(’24.)

○ 디지털성범죄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의사항 논의 등 실무협의체 운영(분기별)
* (구성)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원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급속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관련 법 개정(’24.10.),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4.11.) 등 신속한 조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연중)

○ 디지털성범죄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의사항 논의 등 실무협의체 운영(분기별)

16	Ⅳ-4-①-㉮	‘디지털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대검찰청	과・팀명	형사4과
	과제목표	○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주요내용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개정 법률 반영 등으로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전담검사 확대 지정 **- 전국 18개 지검 23명 전담검사에서 ‘24. 하반기 31개청 43명 전담검사로 확대 지정** ○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및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전파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 강화 도모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송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및 전담검사 지정·운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등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수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제목표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확대 검토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시스템과도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시스템 연계하여 피해영상물의 해시값 등을 기준으로 피해자 식별,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 ○ 수사 중 확인되는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 연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운영	300	500	200	66.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 ’24. 12. 3. 개정, ’25. 6. 4. 시행 예정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심위-여가부 등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 보호 총 84,231건 연계(‘23년 대비 47.9% 증가)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지자체 피해지원시스템간 연계는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소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장수사 제도 개선으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대응력 강화 ○ 적극적인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속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위장수사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 등 검토,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형사사법시스템(KICS) 서식 개선 등

○ 여가부·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지속적으로 추진

○ 경찰이 온라인상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방심위 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도 삭제·차단 요청 등을 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24.12.20.) → 관련 업무 시행(’25.6.21.)에 준비하여 인력 선발 및 업무 매뉴얼 마련 등

16	Ⅳ-4-①-㉮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제목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주요내용	○ 정부·민간 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및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연도별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법안이 발의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논의를 요하는 안건이 선정될 경우 수시 개최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지원하는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관계기관 협의회) 방통위(주관)·법무부·여가부·검찰청·경찰청·방심위 참여 협력방안 논의(’24.6.28.) - (민관협의회) 방통위(주관)·관계부처(법무부·여가부 등 5개 부처), 인터넷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 논의(’24.12.18)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기관 확대 - 피해자를 대리하여 디지털성범죄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망법 시행령 개정(’24.3.19.) 및 대리 신고·삭제 요청 기관 지정·고시(’24.4.9.)

결과분석	추진성과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및 삭제지원, 제도개선 등 부처별 추진현황 및 협조필요사항 공유 ○ 전기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및 대리 신고·삭제 요청 기관 지정·고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계속(’25년)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기관 지정 고시 개정 추진(’25년) ○ 선차단 후심의,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입법 추진(’25년) -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속 차단 후 방심위 심의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태선의원, ’24.9.12.)

17	Ⅳ-4-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형사법제과
	과제목표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주요내용	○ 신종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입법 지원 -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정부안 제출 검토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23.)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모든 스토킹행위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24. 1.) ○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이버 범죄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민형배, 5468)의 입법 논의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모든 스토킹행위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스토킹처벌법」 시행('24. 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입법 논의 지원 계속

17	Ⅳ-4-②-㉰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사이버범죄수사과
과제목표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기존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주요내용	○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누리캅스의 '사이버 공간 불법 유해정보 클리닝 활동' 전개 등을 통한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새로운 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시스템 구축 검토 등 대응 및 입법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	361	361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이버수사 전문지식을 갖춘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105명을 선발 및 활용하여, '24. 1. 1. ~ 12. 31.(1년간) 사이버사기·도박·성폭력 분야, 총 2,363회(411,925명) 예방 교육 실시

○ 명예 사이버경찰인 누리캅스 769명을 운용,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상시 신고 활동을 통해 '24. 1. 1. ~ 12. 31.(1년간) 총 186,224건의 불법 유해정보(게임물·도박·자살유발 등)를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

○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대국민 홍보활동(예방 포스터·리플릿· 카드뉴스 배포 등) 추진을 통한 사이버범죄 피해확산 차단 및 경각심 제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국민 예방 홍보 및 불법 유해정보 신고 활동 전개로, 신종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등 불법 행위 발생 차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장애요인)**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AI·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 발생으로 추적 난이도 상승

향후추진계획

○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범죄는 물론, 사기 등 재산범죄와 사이버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및 예방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전반적인 체감치안 증진 도모

○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누리캅스 재정비를 통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화 교육 지속 추진 등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대상별, 지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공교육 기반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 미디어교육원 중심의 협업네트워크 강화로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마련

주요내용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년)제 등 확대를 통한 공교육 기반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23년~'25년)
○ 지역거점을 활용한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로 보편적 미디어 리터러시 구축
○ 유아 대상 놀이형 교육 및 청소년 교육과정·진로탐색 과정 연계교육 등
○ 미디어교육원 활성화, 미디어교육사 제도 운영 및 국가공인자격증 추진
○ 온라인 차별·비하표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
○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관련예산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미디어교육사업	3,085	4,312	1,227	39.8
▪ 신문윤리심의지원	2,680	2,900	120	8.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치원, 특수학급 맞춤형 과정 지원 등으로 아동·청소년 48,166명에게 미디어교육 지원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KBS,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협업해 일반 시민 28만 명에게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교육사 1·2급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 강사 육성으로 미디어교육 전문가 386명 양성
○ 심의기구 자율심의 활성화
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적 - 265개 매체, 3,757건 심의
②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실적 - 222개 매체, 11,904건 심의
③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적 - 883개 매체, 27,986건 심의
④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 인터넷신문자율공시 131개사 공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이수자를 전년대비 112.8%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혐오표현 예방 기반 강화('23년 22,633명, '24년 48,166명)
○ 사회 미디어교육을 위한 예산 삭감되었으나, 전략적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장년 및 노인 등에 차별 없는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충(누적 합격자 1급 104명, 2급 513명)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혐오표현 예방 등 늘어나는 미디어교육 수요 대응 기반 마련
○ 자율심의 건수 전년 대비 9.0% 향상 통해 언론계 자정활동 확대
- 3개 심의 단체 심의건수 전년 대비 9.0% 향상('23년 40,047건 → '24년 43,647건)
○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위반기사 권고 이행건수 목표 대비 41.6%달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연령별 미디어 노출 증가에 따라 교육 확대 필요하나, 지원 위한 인력 등 인프라 부족 상태
- 미디어교육의 교과과정 반영 및 미디어교육사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필요

향후추진계획

○ 미디어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교사 미디어 교육 직무역량 강화 및 미디어 전문 강사 육성
○ 학교 밖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토대 마련
○ 뉴스 심의 자동화 위한 AI모델 개발, 서약사 대상 윤리교육 강화, 자율심의 성과관리 활용 체계화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지속 실시(혐오·차별 표현 등) 및 시정권고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제목표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상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온라인 혐오·폭력 등 디지털 위험도 증가

○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복지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지원을 통한 국민 미디어 역량 함양

주요내용

○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개인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 교수자 양성의 전문성 확보,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연수,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 제도 운영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5,085	4,947	△138	△2.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유아·청소년·청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역량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배움의 현장에 방문하여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유아 50개 기관, 초중고 253개교, 대학 44개교 등)
-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운영(248개 강좌)
- 전국 12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상설 미디어교육·체험 제공(이용자수 116.4만명)

○ (디지털 격차없는 평생교육) 디지털 기술 고도화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118개 기관)
- 직접 센터로 찾아오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850회)

○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강사 공신력 및 교육의 질 제고 위한 신규 강사 양성과정 운영(전문 1회)
- 전문성을 갖춘 강사 양성을 위한 '미디어교육지도사' 전문과정 운영(수료 221명), 자격증 발급(12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국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 역량을 갖추고,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비대면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며 미디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원 한계 존재, 지역·계층별 미디어교육 격차 발생 우려 - '24년 교육 공모 접수 결과, 신청기관 1,048개 중 35.4%인 371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음

향후추진계획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지역민 대상 미디어교육 운영,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지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 운영 등(계속)

○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순기능 및 역기능(딥페이크 범죄,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미디어 이해·비평·권리책임 교육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18	Ⅳ-4-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제목표

○ 온라인 상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강화
-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등

주요내용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계속)

○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26년~)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통신심의 활동)	3,211	3,250	39	1.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온라인 상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 시정요구

- 차별·비하 정보 주요 유형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심 의	1,580	1,369	1,700	2,336	1,354	**8,339**
시정요구	473	308	1,222	1,644	852	**4,499**

결과분석

추진성과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을 통해 시정요구 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 강화
*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팀명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목표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함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분석·대응 방향 제시
- 인공지능 위험성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연구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위험성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안전장치 마련 및 국민의 생명·재산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확산 등 효과적인 위험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고위험영역 사업자에 대한 고지의무 및 신뢰성 확보조치 책무 부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표시의무, 인공지능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 등 규정

○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
-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헌법적 가치의 변화 방향성 검토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관련예산

(정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 감	%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AI신뢰성기반조성)	850	660	△190	△22.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5.1월)
- 인공지능기본법 마련 및 국회 본회의 의결('24.12월)
- 인공지능기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25.1월)

○ 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24.1월~12월)
- 위험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체계에 대비하여 분야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선별·연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과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명칭) 2024 고위험영역 가이드라인, EU인공지능법 안내서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 제정안 마련으로 균형있는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마련 - 산업 발전 지원과 함께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 포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공지능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AI윤리,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제도를 규율하는 하위법령의 신중한 마련 필요

향후추진계획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위해 Ai안전성, AI투명성, AI신뢰 확보를 위한 세부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국내외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폭넓은 의견 수렴

※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25.1월) 운영 중

○ 이를 통해 '26.1월 국가AI경쟁력 강화와 함께 AI오남용·부작용 담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강화

19	Ⅳ-4-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방송통신위원회	과·팀명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과제목표	○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 사이의 균형 있는 규제 마련			
주요내용	○ 인공지능 서비스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 추진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제 연구반* 구성·운영('24.6~12월)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출범('24.7월) 및 콘퍼런스 개최('24.9월)			
관련예산	(방송통신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830	792	△38	△4.6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184	184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 연구반)**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확산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이용자 보호 원칙, 권리·책임 내용, 의무 사항 등 체계화
- 연구반 구성·운영('24. 6~12월)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출범('24.7.19.)하고 AI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24.7, 11월)
- 국내외 AI 규제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AI 관련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적·제도적 추진 방안 논의('24.7.19.)
- AI 발전과 이용자보호 정책 간의 균형점 모색, 미래의 주요 AI 서비스인 'AI agent' 관련 이용자 보호 이슈 대응 방안 및 방통위 역할 논의('24.11.15.)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바람직한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의장 마련
- '인공지능 시대의 이용자 경험과 대응'을 주제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 논의('24.9.30.)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 연구반)** 인공지능서비스가 개발·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규범 체계 및 일반법 조문 도출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인공지능 관련 주요국 정책·기술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도출('24.7월, 11월)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AI서비스 이용자 이슈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24.9.3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 연구반)**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25.下)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민간협의회 개최('25.5월, 8월)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콘퍼런스 개최('25.11월)

20	Ⅳ-4-⑤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 · 재활 체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 · 팀명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제목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진단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치유서비스 지원

- 학령전환기(초1,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단계에 따른 수준별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공존질환(우울증, ADHD 등) 위험군 청소년에게 병원 치료비 지원
- 전담상담사 배치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지원기반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5,394	5,739	345	6.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749	3,056	307	11.2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2,645	2,683	38	1.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학령전환기(초1,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 과의존 위험군 발굴
- 초1 보호자 대상 진단조사를 '23년 시범실시, '24년부터 본조사 포함
- 다양한 매체 역기능에 대응하여 기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의 명칭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로 변경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병원 치료 연계, 치유캠프 운영, 부모교육, 상담사 양성교육 등 추진
* 치유서비스 지원 50,875명, 상담 187,624건, 추가심리검사 4,168명, 인터넷 · 스마트폰 치유캠프 총 4회 80명, 가족치유캠프 총 10회 196가족 지원, 부모교육 7,640명, 상담사 양성교육 1,476명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 기숙치유기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연중, 22회, 479명)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을 총괄하는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54명),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125만여명) 실시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발굴(4월)
* ('24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221,029명 발굴

○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진단조사 대상 초1(보호자 조사)까지 확대, 초1 대상 가족치유캠프 실시
* ('23년) 초1 보호자 대상 시범조사 실시 ('24년) 본조사 포함, 관심군 16,942명 발굴

		○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지원(연중) * ('24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187,624건, 치료비 570명 지원 ○ 초등생·보호자 대상 가족치유캠프, 중·고생 대상 인터넷치유캠프 운영 * ('24년)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4회 80명, 가족치유캠프 10회 196가족 지원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 치유프로그램 상시 운영(22회, 479명)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54명)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1,476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부모동의율을 높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치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응 필요 - 치유서비스 안내에 대한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부모대상 1회 발송하던 문자서비스의 추가발송으로 부모동의율 제고 필요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매년, 학령전화기 청소년 대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진단조사 결과 위험군 청소년의 부모동의율 제고를 위해 조사 목적, 치유서비스 상세 안내를 위한 영상 제작·배포, 주기적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치유서비스 참여율 제고 ○ 초등학생 미디어 과의존에 대응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가족치유캠프 확대('24년 10회 → '25년 12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내 초등학생 캠프 시범운영 등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1. 기업과 인권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11**	**0**	**10**	**1**	**-**
1. 기업과 인권	11	-	10	1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기업과 인권】			
		(1) 인권경영의 제도화	추진중
1	Ⅴ-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추진중
2	Ⅴ-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추진중
3	Ⅴ-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추진중
4	Ⅴ-1-(1)-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추진중
5	Ⅴ-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추진중
6	Ⅴ-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추진중
7	Ⅴ-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추진중
		(2) 고충처리	
8	Ⅴ-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추진중
9	Ⅴ-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추진중
10	Ⅴ-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추진중
11	Ⅴ-1-(2)-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지연**

과제별 이행상황

1	V-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한국국제협력단
	과제목표	○ 개발협력 사업 참여기관의 인권존중 책임강화 -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사업장 인권 책무성 제도 강화 및 인권 기반 평가 강화 - 파트너 인권경영 확산 지원 및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주요내용	○ 보이스코드 QR활용 확대를 통한 인권 친화적 정보 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강화 ○ 검토 방법 변경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객관성 제고 ○ ▲인권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인권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주요 간행물 제작 시 보이스코드 QR 활용(약 20건)하여 인권 친화적 정보 제공 등 정보 접근성 강화 ○ 검토 방법 변경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객관성 제고 - 내부 검토에서 외부 용역 검토로 전환하여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인권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및 개선 활동 추진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관 내부 인권 이슈에 대한 소통 기회 확대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권경영 책임 강화 및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 ○ 정보 접근성 및 인권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접근성 지속 확대 필요 - 인권경영 관련 사내 캠페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필요 ○ 인권경영 실효성 강화 및 내재화 강화 필요 - 일부 부서 중심 운영 탈피하여 인권경영의 전사적 문화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

향후추진계획	○ 파트너사 대상 인권경영 도입지원 지속 - 개발협력 사업 참여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지속 확대 ○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다양한 인권친화적 확산 활동 도입

1	V-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정책 환경 조성			
	주요내용	○ 법무부 발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 방안 연구 및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연구 실시 ○ 기업과 인권 관련 학술대회·포럼 주최를 통해 국내 정책추진 토대 마련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제기구, 기업,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추진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4.8.), 국가인권위원회('24.8., '24.11.)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발간물을 활용하여 기업 및 일반 국민 등 대상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별도 예산 없음 ○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 수립은 국내 시장 현실, 기업 환경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 간 지속 논의 필요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활동 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기업과 인권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및 일반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개최

1	V-1-1-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여성고용정책과
과제목표	○ 공정 임금체계 확립으로 차별 개선			
주요내용	○ AA 대상 사업체에서 제출하는 임금현황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개선 적극 유도 ○ AA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790	1,876	86	4.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127	1,002	△125	△1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데이터 감수 및 정합성 분석 등 실시
- AA 적용 사업장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통합지원서비스(컨설팅) 실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남녀 근로자 현황 등' 제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다소 완화 * '17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4.6%였으나, '23년에는 29.3%로 하락하며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AA 제도개선(인센티브 강화 등),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2	Ⅴ-1-(1)-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산업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이행

주요내용

○ 산업발전법 개정('17.12월)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5년 마다) 시행근거 마련·이행
○ EU 등 ESG 규범화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2,377	2,020	△357	△15.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개 업종(바이오/제약·디스플레이)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수출 기업 500개社에 대해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사업 추진

○ 업종별 네트워크 포럼 통해 업종별 ESG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실사 등 이슈에 공동 대응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제공 및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사업 통해 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 ESG 규범화에 대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 지속가능경영확산 사업 정상 추진 통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이행

3	Ⅴ-1-(1)-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조달청	과・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제목표	○ 공공조달부문에 참여하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여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			
	주요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약자지원, 고용창출, 고용환경 등의 분야에서 해당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공공조달 부문의 인권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준 개정 지속 확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비용 경감,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 지원 지속 확대 - 창업 초기 사회적 약자기업*에 종합쇼핑몰 납품실적 진입요건을 면제하여 공공시장 진입을 통한 성장 기반 제공('24.8월)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민간 대비 20% 이상 저렴한 계약보증, 저리 자금대여 등 금융서비스 제공('24.12월) ○ 조달청 종합쇼핑몰 인증몰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전용몰 운영(계속)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제품 등에 대하여 MAS 2단계 경쟁 평가 시 우대 *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결과분석		
	추진성과	○ 여성기업 지원실적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억원)	48,967	53,494	57,896	63,561	**67,332**

○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억원)	10,213	11,610	11,512	12,243	**12,331**

○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억원)	4,558	5,166	5,410	5,864	**6,201**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향후추진계획
○ MAS 사전심사의 납품실적 평가(배점20점) 시 사회적약자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기본가점(예시: 15점**)부여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 현재 납품실적 평점 범위가 0점 - 15점 - 17.5점 - 20점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단계 점수인 15점을 부여 ○ 물품 구매 적격심사, MAS 2단계경쟁 평가에서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관련 신인도 신설* * (저출생 대응)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탄소중립) 저탄소제품인증, 탄소중립 유공포상

4	Ⅴ-1-(1)-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팀명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제목표

○ 어린이 사고 예방,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정착

주요내용

○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사업*	1,606	-	△1,606	순감
(어린이제품시험인프라구축)	1,606	-	△1,606	순감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어린이제품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	288	288	-	-

* '24년 완료(장비구축 완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 시험·검사방법 효율화, 영세기업 인증지원 확대('23. 557개 기업 → '24. 599개 기업) 등 추진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0개교(유치원 20개, 초등학교 10개) 지정·운영(10,146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77개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50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경남안전체험관(합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충돌시험장비 구축 완료('24.12.)
  * 테스트벤치, 충격흡수시스템, 조명시스템, 속도 및 상해데이터 취득장치, 영상데이터취득장치 등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 완료('24.12.23.)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신종 어린이 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6,710명) 대비 약 288% 이상 성과(15,296명) 달성 *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수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시험장비 구축 완료(계획대비 진도율 100% 달성)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 완료(’24.12.23.)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신종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신종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정상 추진(’25.3월 완료 예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25~’27) *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 추진),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도입 등 ○ 오프라인 교육 위주의 교육방식을 교육인원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5	V-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의 근로권익 실현 및 보호			
	주요내용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방향 검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아동의 노동과 부당처우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포함) 및 결과 분석 - (조사결과 요약) 아르바이트 시 고용주 및 직원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 감소('18년 29.6% → '23년 13.3%) ○ 아동의 근로권익 실현 및 보호 조치(근로조건 개선,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 등)의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실시(「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23년)」 포함) 및 결과 분석 - (분석결과 요약)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지원체계 운영(근로보호센터 등) 및 상담('17. 17천 → '21. 90천건) 지원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노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개선의 기초자료 마련 ○ 아동의 근로권익 실현 및 보호를 위한 조치의 현황과 유효성 검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아동 근로권익 실현을 위한 관계 부처의 이행현황 모니터링(지속)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영향평가 방향 검토(지속)

5	V-1-(1)-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과제목표	○ 아동 근로권익 보호			
주요내용	○ 아동 근로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홍보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근로조건개선지원	11,896	10,402	△1,494	△12.6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613	933	△680	△42.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 청소년 상담, 교육, 홍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등
- 청소년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지속 실시

* 찾아가는 근로권익교육 실적: 2,262회·100,245명 대상 교육 실시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 실적: 상담 40,682건, 권리구제 1,132건

○ (자율개선 등 컨설팅 지원) 취약계층 다수 분포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청소년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7,691개소 지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 지속 강화 ○ 취약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강화를 통한 청소년 등 근로자의 근로권익 실현 - 노동관계법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법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기능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등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고용 사업장 등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속 운영

6	V-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기업 인권 증진을 위한 다자간 국제기구(유엔, WTO 등) 차원의 논의 및 노력 동참 ○ '기업과 인권' 이슈 관련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주요내용	○ '기업과 인권' 이슈 관련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및 결의안 참여 ○ 유엔 기구를 통해 제기되는 '기업과 인권' 이슈 관련 질의 대응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기업과 인권' 이슈 관련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및 결의안 참여 - 제10차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회의 참석(12월) ○ 유엔 기구를 통해 제기되는 '기업과 인권' 이슈 관련 질의 대응 - 관계부처・기관 협의 하에 특정 이슈 관련 답변서 송부

결과분석	추진성과	○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UNGPs)' 증진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유엔기구 질의에 답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기여하고 우리의 현황 및 입장 공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 및 우리 입장 적의 개진 ○ 유엔기구 질의에 답변 및 정보 제공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지속 기여

6	V-1-(1)-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기업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에 기본적으로 동참하여 관련 논의 참여 ○ 기업과 인권 이슈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주요내용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기구 질의 대응 - 카트만두 고속도로 사업 관련 특별절차 서한 답변('24.6.) ○ 국제회의 참여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24.11., 스위스 제네바), 유엔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제10차 회의('24.12. 스위스 제네바) 참석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질의에 답변·정보를 제공하여 인권메커니즘에 기여 ○ 국제사회에서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최신 동향 등 정보 수집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 적극 참여 ○ 기업과 인권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국제기구 질의 지속 대응

6	V-1-(1)-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개발협력팀
	과제목표	○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주요내용	○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112차 ILO 총회('24.6.)에서 산업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 개혁 추진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조연설 및 노사정 논의 참여* *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장관) 연설, 정이사국(6번째) 및 이사회 의장직(2번째) 진출, ILO 사무총장과 면담, 4개국(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네팔) 면담 등 ○ 제350차, 제351차, 제352차 ILO 이사회에 참여하여 디지털화의 도전과 기회, 생활임금 등 임금정책, ILO 거버넌스 민주화, ILO 이사회 기능개선, 결사의 자유 등 주요 의제 논의 참여 ○ '24년 OECD 고용노동분야 정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 대응 방안 공유 ○ UN 인권협약 심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권고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소개 *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고용 증진,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조치 등 추진계획 및 정책적 노력 설명 *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인신매매(강제노동) 퇴치, 직장 내 폭력 등 개선사항 적극 설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충격 및 피해가 예상되는 디지털 소외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 정책을 알림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제기구 회의 의제 발굴 시, 적극적 대응 ○ 수석대표 등 정부발언 시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7	Ⅴ-1-(1)-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팀명	국제개발협력팀
과제목표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인권경영 지원			
주요내용	○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활용가능한 노무관리 자료 발간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글로벌 노사관계 지원)	200	400	200	10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해외진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노무관리 안내서 등을 발간
-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미국, 말레이시아, EU)
- 인사노무 Q&A(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 해당국가 노동법령집 발간(우즈베키스탄)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매뉴얼 발간('24.12월)
- EU 실사지침 발효('24.7월)에 따라 노동·인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알아야 할 필요 사항 안내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이 가능토록 역량 강화 ○ EU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인권 대응 역량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외진출 기업 인사노무 지원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지속 발간('25년 베트남 등 8국 예정)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우리말 번역본 발간('25.2월) 및 EU 관련 기업 대상 노동인권 실사 대응 세미나 개최('25.5월)

8	Ⅰ-1-(2)-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환경부	과·팀명	환경피해구제과

과제목표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마련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극적인 피해구제 제도 운영
- 피해신청자의 신속한 건강피해 판정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속도 제고
- 생애주기별 건강모니터링, 법률구조사업, 의료상담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 신속한 국민 건강피해 구제 체계 마련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이행 기반 구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연착륙을 위한 피해구제 모의 운영 및 조사지침 마련

관련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계	환경부	위원회*	증△감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5,127	13,809	13,809	-	△1,318	△8.7
▪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개선(살생물제)	379	379	7	372	-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심의위·재심사위 운영)	27	0	0	0	△27	△100
(살생물피해구제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0	27	0	27	27	순증
(살생물제품 예비조사·본조사)	326	326	1	325	-	-
(살생물제품 구제계정 출연)	6	6	6	0	-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교육·홍보)	20	20	0	20	-	-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법 개정에 따라 피해 신청접수, 조사, 심의는 환경부에서 중조위로 기능 이관('25.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건강피해 인정 지속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 피해신청자 7,983명 중 5,828명에 대해 피해인정, 1,865억원의 구제급여* 지급('24. 12월 기준, 누적)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 가습기살균제(PHMG)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 연구를 통해 폐암 피해 구제계획을 마련('23.9월)하고, 폐암 피해구제 본격 실시('22년 1명, '24년 누적 35명)
- 구제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동영상 제작·배포, 개인별 피해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24년) 등 구제급여 신청편의 제공

○ 가습기살균제 추가분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안정적인 피해구제 지속 운영을 위해 피해구제자금 추계('24.11.~)하고 피해구제자금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개최(2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 법률상담·소송대리(525명),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4차, '24년 폐암·결핵) 발간 등으로 피해자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적극 지원
- 기존 건강관리 밀착상담(콜링유) 개선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적극 추진으로 만족 제고('24년 173명 지원)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12개소) 권역별 운영을 통해, 건강모니터링 대상자(5,202명) 중 2,749명 참여(52.8%) → 소아·청소년 등의 내분비내과 성장클리닉 진료 등 참여자의 호소질환에 대한 연계진료 적극 지원 - 관련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피해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학사·군지원) 피해학생출결, 군복무 진료 훈련 배려△(중·고학생) 온라인 수강권 지원('24년 94명) 등 - 피해자 편의를 위해 구제급여 서류(의무기록, 영수증 등) 발급대행('24년 474명), 심신안정 치유 프로그램 운영('24년 105명)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방안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24.5.8.~'24.11.27.)** - 연구용역(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방안 연구Ⅲ)을 통해 노출 시나리오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살생물제품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 기반 마련** - 한번의 신청으로 국민들이 신속·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관련 법률* 개정('24.3.) *「환경분쟁조정법」,「환경보건법」,「석면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 원스톱서비스 관계기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의체 참여를 통한 살생물제 피해의 신속한 구제 체계 마련('24.2.~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대부분 판정 완료*** * ('22.5.) 4,366명(판정률 58%) → ('24.12.) 6,681명(판정률 91%)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요양급여) 지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급소요기간 단축** ('22년41일→ '23년35일 → '24년23일) * 질병코드에 따른 요양급여 자동 분류 입력 시스템 구축('24.11.) 등 ○ **신속·공정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이행 기반 구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업무 지침 마련, 교육 등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구체화 및 업무역량 강화로 살생물제품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대법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 인정('24.6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피해문제 해결로 본격 전환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 증가에 따라, 지원사업 분야 확대 요구 - 관련부처 협업·연계를 바탕으로, 건강회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필요 ○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 발굴·보완 필요

향후추진계획	○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추진('25.下)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교육·보건분야 등)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차질없는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포럼 지속 참여 - 진행상황 공유, 협의사항 논의 등 미비점 발굴·보완 노력

9	Ⅰ-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제목표

○ 위해제품 리콜이행 점검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제품안전 경각심 제고 및 제품안전관리 확보

주요내용

○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 사업자별 전담 점검자를 지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리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 HelpDesk 운영을 통해 사업자의 리콜이행을 적극 지원
- 리콜 미이행 사업자는 형사 고발하고,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는 보완명령 및 추가 점검 실시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제품안전관리 확보
- (유통시장 감시) 소비자 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협력기관 : 6개 소비자단체
- (리콜제품 구매 차단) 국표원·환경부·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위해제품 판정 시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 협력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리콜제품 판매 중지) 리콜제품의 유통·판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사와 협력
  * 협력기관 : 온라인 유통업체

○ 리콜제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등 배포, 대학생 등 안전지킴이를 통한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7,211	4,364	△2,847	△39.5
(불법·불량제품 단속)	1,595	-	△1,595	이관
(리콜이행점검)	531	-	△531	이관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500	-	△500	이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	5,657	5,657	순증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	1,270	1,270	순증

* 불법·불량제품 단속, 리콜이행점검,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의 내역사업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25년 신규)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이관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위해제품 리콜이행점검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 사업자별 전담 점검자를 지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리콜 이행현황 1,598건 점검 - 리콜 이행 HelpDesk를 통해 1,468건 상담하여 사업자의 리콜이행 적극 지원 -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는 리콜이행 보완명령 및 후속점검 실시 - 소비자에 리콜의향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회수율 제고에 노력, 리콜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콜이행 애로사항 및 회수저조 사유 등을 검토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유통시장 감시)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리콜제품은 ①(온라인)통신판매중개업체 등에 판매중지 요청, ②(오프라인) 판매업체 현장점검 후 리콜사업자에 통보하여 판매 중지 * 협력기관: 6개 소비자단체 - (리콜제품 구매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중소 유통매장 확산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실시 * 협력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리콜제품 판매중지 요청)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16개 온라인 쇼핑몰社와의 간담회를 통해 리콜제품 회수 및 유통차단 협의, 소비자 대상 리콜의향 설문서 활용 및 협조요청 등 * 협력기관 : 온라인 유통업체 ○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즉각적으로 유통차단이 필요한 위해제품,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제품 등 위해제품 동향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주요 온라인 쇼핑몰사에 공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업체 이행점검건수 1,598건, 리콜이행 HelpDesk 상담 1,468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리콜업체 이행점검건수(건)	1,156	1,392	1,511	1,598
Help Desk 운영 상담(건)	1,034	1,315	1,385	1,468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유통시장 감시) 소비자단체를 통해 리콜제품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352건의 재유통 리콜의심제품 판매 차단 - (리콜제품 구매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사업 등을 통해 '24년말 기준 265,513개 매장에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용 중(전년 대비 17,035개 매장 증가) - (리콜제품 판매 중지) 연 2회(3월·11월)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리콜제품 회수 및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등 협력 강화 ○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온라인 쇼핑몰 16개사를 대상으로 위해제품 카드뉴스 연간 16회 공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리콜제품 구매 차단을 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지속 확산,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을 위한 리콜이행점검, 모니터링 지속 이행 및 HelpDesk 운영을 통한 리콜 사업자 적극 지원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몰사 등과 협력 강화 및 리콜제품 관련 정보 확산 등 홍보활동 지속 추진

9	V-1-(2)-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운용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토교통부	과・팀명	자동차정책과
과제목표	○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 제도 운용			
주요내용	○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 시정률 제고, 리콜 과징금 감경규정 신설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자동차 안전도 강화 (자동차제작결함조사)	7,773	8,950	1,177	15.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22.12.)하여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유도('23~)

-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착수 기준 도입('24.9.)
- 해외에서 결함 착수 시, 우리나라도 결함 조사 즉시 착수 등

○ 리콜 시정률 점검 및 자동차제작사에 리콜 재통지 명령(분기별, 계속)

○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현행화된 자동차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아 리콜 알림서비스 확대 추진('23.~)

○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규정* 신설 추진('24.1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자동차 리콜 시정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증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리콜 시정률 점검 및 자동차제작사에 리콜 재통지 명령(분기별, 계속)

○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현행화된 자동차소유자 정보를 제공받아 리콜 알림서비스 지속 추진

○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규정 신설 개정 완료('25.1분기)

10	Ⅴ-1-(2)-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팀명	해외투자과
과제목표	○ OECD 동료평가를 통해 NCP 운영개선,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실시			
주요내용	○ NCP(국내연락사무소)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채널 운영 ○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NCP 홍보 확대 ○ 해외진출기업 기업책임경영 인식 강화 및 정책일관성 확보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투자유치기반조성 - 투자유치활동비 (한국NCP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340	395	55	16.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한국NCP 운영을 통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지원
- 이의신청사건 처리(신규접수 4건, 1차평가 1건, 종결사건 후속조치 1건), 한국 NCP 위원회 개최(3회), OECD 보고(4회), 이의신청사건 당사자 면담(3회) 등

○ 이해관계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외 설명회 등 개최
-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세미나(7.8./11.20.), 공동학술대회 개최(9.20./12.20.), 국회 정책토론회 후원(10.29.)

○ 언론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
-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홍보 브로슈어 제작('24.2월) 및 NCP 소개 동영상 업데이트('24.6월), NCP 홍보 PPT 신규 제작('24.10월), 유튜브 동영상 광고 게재(11~12월, 69만회 조회수 기록), 가이드라인 주요 챕터별 전문 뉴스매체 광고('24.11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등 4개 전문 매체), 오프라인(지면) 광고(한국무역신문, 12.9./12.16.), NCP 홈페이지 관리(수시)

○ 자료발간 및 연구조사
- 2024년 각국 NCP 분쟁사례집 국·영문본 제작(총 13개 문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개정버전 번역 및 배포(12월), 당사자 설득을 위한 NCP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한국사회법학회)

결과분석

추진성과	○ OECD RBC 센터의 한국방문 면담, 기업책임경영 및 ESG 정부부처 라운드테이블 참석 등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NCP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개선 ○ 이의제기사건 분쟁사례집, OECD 발간물의 번역·발간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자발적 원칙과 기준 전파에 기여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 ○ 세미나, 포럼,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기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 및 일반대중의 국제적 기준 인식 제고 ○ 해외진출기업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촉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의신청사건 처리 시 최종성명서에 실질적인 권고를 포함하는 등 실효성 강화

○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및 동료평가 등 반영한 한국NCP 운영개선 지속

11	Ⅴ-1-(2)-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	과·팀명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제목표	○ 피해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및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 노력 지속 -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는 권익 보호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 -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절차의 중복과 지연 방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 추진중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1년 10월 정부 발의)이 '24년 4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됨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 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제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단체소송 활성화)이 폐기됨에 따라 법 개정 재추진 필요 - 다만 남소 우려 등으로 인한 업계 반발로 인하여 난항 우려

향후추진계획	○ 소비자기본법 개정 검토 ○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도 개선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2.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이행상황 총괄

< 총괄표 >

구 분	계	과제완료	추진중	추진지연	기타
합 계	31	2	29	0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4	-	14	-	-
2.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17	2	15	-	-

< 과제별 이행상황 >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	Ⅵ-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추진중
2	Ⅵ-1-(1)-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추진중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일부완료**
4	Ⅵ-1-(1)-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중
5	Ⅵ-1-(1)-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추진중
		(2)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추진중
6	Ⅵ-1-(2)-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추진중
7	Ⅵ-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추진중
8	Ⅵ-1-(2)-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추진중
9	Ⅵ-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중
10	Ⅵ-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추진중
		(3)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중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추진중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중
13	Ⅵ-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추진중
14	Ⅵ-1-(3)-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추진중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1)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추진중
15	Ⅵ-2-(1)-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추진중
16	Ⅵ-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추진중
		(2) 학교 교육	추진중
17	Ⅵ-2-(2)-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추진중
18	Ⅵ-2-(2)-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추진중
19	Ⅵ-2-(2)-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추진중
20	Ⅵ-2-(2)-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과제완료('23.)**
		(3)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추진중

연번	과제번호	추 진 과 제	추진상황
21	Ⅵ-2-(3)-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2	Ⅵ-2-(3)-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중
23	Ⅵ-2-(3)-③	군 장병 인권교육	추진중
24	Ⅵ-2-(3)-④	변호사 인권교육	추진중
25	Ⅵ-2-(3)-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추진중
26	Ⅵ-2-(3)-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추진중
		(4) 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교육	추진중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추진중
		(5) 인식 개선	추진중
28	Ⅵ-2-(5)-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29	Ⅵ-2-(5)-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추진중
30	Ⅵ-2-(5)-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과제완료('23.)**
31	Ⅵ-2-(5)-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추진중

과제별 이행상황

1	Ⅵ-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 비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 · 팀명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주요내용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가능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유네스코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회의 참가	200	2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관련 국내현황 및 예상쟁점 사항 검토('24.1.~12.)

○ 제 8회 SDG4-교육 2030 포럼 개최('24.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SDG4 중간점검을 통해 국내 교육 형평성 현황 점검 및 세부 현황 과제 발굴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협약이 비준을 통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권리, 의무 관련 분쟁 등의 발생 및 확대로 혼란을 야기할 우려

향후추진계획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가능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 검토(계속)

1	Ⅵ-1-(1)-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주요내용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가입·비준 가능성 연구 및 검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제인권증진	241	246	5	2.0
국제인권 역량강화	241	246	5	2.0
(인권정책 개선 연구)	35	3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관련 토론회 개최('24.11.)

- '23. 실시한 '유엔 사회권규약 개인진정 결정례 연구'를 활용,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실 등과 공동 주최)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인권조약의 추가 가입·비준은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법령 제·개정 필요성, 비준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향후추진계획

○ 국제인권조약 또는 선택의정서 가입·비준 관련 연구 지속 추진

2	Ⅵ-1-(1)-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제목표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를 통한 인권 보호·증진			
	주요내용	○ UN「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 제1항 (g)호(가족의 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에 대한 유보철회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민법 제781조 개정 후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검토 * 민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사항			

'24년 이행실적	○ 제9차 심의 최종견해 53번에서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계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협약 제16조 제1항 (g)호를 유보철회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 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위해서는 민법(법무부 소관)을 개정해야 하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신중한 추진 필요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 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민법 제781조 개정(법무부 소관) 여부에 따라 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철회 검토

3	Ⅵ-1-(1)-③-㉮	국제인권조약 상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 법무부, 여가부 공동 추진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및 특별절차 참여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노력 및 국제협력 강화			
	주요내용	○ 유엔 인권협약 등의 진정서 및 특별절차와 충실히 소통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준비 및 심의 참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엔 인권협약기구 앞 진정서 및 특별절차와 충실히 소통 - 관계부처・기관 협의 하에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송부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준비 및 심의 참여 - 각 조약 주무부처*와 소통하며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준비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등 * 외교부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주무부처이며, 이외 국제인권조약 국내 이행은 법무부, 보건부 등이 이행 주무부처 -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와 조율 하에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 일정 수립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및 특별절차 참여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 소개 및 국제인권 증진 노력 적극 동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4.29.-30.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메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제출·심의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정보의 활동과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강화 지속

주요내용

○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조사 시 협의 및 관계부처 면담 실시 등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제인권증진	241	246	5	0.2
국제인권 역량강화	241	246	5	0.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24.5.),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총괄('24.7.),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작성('24.~'25.)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절차 기준 마련
- 제2회 유엔 인권메커니즘 워크샵('24.4.)
-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대상 유엔 인권메커니즘 전반 및 당해 주요 업무 계획 설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부처·기관 대상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부처간 협업 체계화
○ 유엔 인권메커니즘 적극 참여를 통한 조약 이행 및 인권 증진에 기여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해당 없음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노력 소개 및 국제협력 강화 지속			
주요내용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독려 ○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정책조정 및 사업관리)	100	100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실시('24.12월)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독려(계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부처별 이행 현황을 점검 및 분석하여,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절차가 변경*되면서,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됨('26년 이후 예상) * < 변경 절차('23.9월) > (기존) 국가보고서 제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채택 → 추가보고서 제출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민간보고서 기반 사전쟁점목록 채택 → 국가보고서 제출

향후추진계획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상황 점검 및 독려(계속)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안내 일정에 따라,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응('26년 이후 예상)

3	Ⅵ-1-(1)-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과제목표	○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통한 인권 보호·증진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심의 준비 - ′18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사전질의 답변서 제출(′23.6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국내 이행 노력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완료과제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완료(‘24.5.14)

4	Ⅵ-1-(1)-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과제목표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주요내용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지원

※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활동 수행하며,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에서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4,102	3,903	△199	△4.9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2,040	2,055	15	0.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내)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 지원

- (교사 양성) 초·중등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전문가 양성 내실화

※ ('24. 선발) 제10기 중앙 선도교사 68명 및 시·도교육청 선도교사 620명 선발

- (진로 체험기회 제공)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을 활용한 국제기구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 (고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 및 대학원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 및 운영사례집 발간

※ ('24.) 대학(8개), 대학원(5개) 대상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발 지원(약455명 수강)

○ (국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선도

- (국제행사 개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사회 내 의제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선도

* 제9회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24.9.4.~5., 46개국 1,325여명 참석)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라운드테이블('24.10.16., 30개국 60여명 참석) 등

- (국가별 확산 추진) 국가별* 맞춤형 교육과정·교재 개발 지원, 개도국 대상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세계시민교육 협력센터 지정*** 등 해외 세계시민교육 확산 추진

* ('24.-'26.) 네팔,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22.-'24.) 가나,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부탄

** 세계시민교육 청년리더십 워크숍('24.5월) 및 교사교육가 국제연수('24.7월) 실시

*** ('23.)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 ('24.) 2개국 추가(네팔, 방글라데시)

○ (온라인 기반 마련)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ODA 대상국 '맞춤형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 온라인 확산 기반 마련

* 세계시민교육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언어 지원

** ('24.) 온라인 기본강좌 19종, 심화강좌 12종, 특강 34종 연중 운영

결과분석	추진성과	○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양성(688명), 원격교육 강좌 운영(2개 과정 신규개발 포함 32개 강좌 운영), 대학·대학원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지원(13개 강좌), 제9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9월, 46개국 1,325여명 참석),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라운드 테이블(10월, 30개국 60여명 참석) 개최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지속 지원 - (초중고) 교육자료 개발·보급*, 선도교사 선발,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기반 확대 지원 * 혐오발언 대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핸드북 동아시아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25. 중) - (대학) 대학(대학원 포함)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 및 학생활동·특강 지원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술 기반 강화 지원 - (국외) 세계시민교육 의제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고 개도국 교육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개발 등 지원(ODA)

5	Ⅵ-1-(1)-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협의 절차를 정례화하여 국가보고서 내용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			
주요내용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제인권기구의 견해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일반 대중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이행방안 검토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포럼 개최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제도화 추진을 위한 도서 발간·배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제인권증진	241	246	5	0.2
국제인권 역량강화	241	246	5	0.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협의
-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회의 개최('24.10.)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제도 심의 대응 실무간담회' 참석('24.11.), '유엔 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토론회' 참석('24.12.)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협조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최종견해 이행계획 수립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상정

○ 제2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24.)

○ 국제인권기구 견해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등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국문본 게시('24.3.), 개인진정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국문 번역본 홈페이지 게시('24.4.),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국문본 게시('24.10.)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가보고절차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보고서 내용의 질적 향상 도모 ○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기구 견해 등의 번역본 관보·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일반대중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 일정으로 학술회의·포럼 등 개최 어려움

향후추진계획

○ 국제인권조약 및 조약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6	Ⅵ-1-(2)-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유엔 상정 인권 결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타 회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권설적 권고 제시 ○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도 이슈 적극 추진 ○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건설적 역할 수행			
주요내용	○ 유엔 인권메커니즘 적극 참여 ○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우리나라 주도 이슈 적극 추진 ○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회의 지속 개최 등 국제사회 논의 기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844	3,751	△93	△2.4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211	202	△9	△4.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엔 인권메커니즘 적극 참여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국 인권 관련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18개국 대상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하여 해당국 인권상황에 대한 동료 평가·권고사항 제기
  * 아프가니스탄,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북한 등

○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등 우리나라 주도 이슈 적극 추진

- 제57차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관련 적극적인 아웃리치 노력* 및 우리 주도 결의안에 역대 최다 공동제안국(65개국) 동참 달성
  * 인권이사회 내 공동발언 주도(2회), 부대행사 개최(1회) 등
- 우리가 주도하는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인권이사회 역량 강화」 제하 부대행사 주최

○ '여성·평화·안보'의제 관련 국제회의 지속 개최

-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12.10.)하여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 활동가·전문가 및 청년 간 대화 계기 마련
-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공동서약그룹 약식회견 주도(1회) 및 동참(10회) 등 국제사회 논의 참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유엔 인권메커니즘 적극 참여를 통해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기여 ○ 우리나라 주도 이슈에서 의제 선도·국제협력 유도 등 리더십 발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5-27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지지하고, '신기술과 인권', 여성·여아 등 취약 계층 인권 보호 등을 우선순위로 활동 예정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상정 및 채택 추진

○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7	Ⅵ-1-(2)-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인권, 민주주의 관련 협의회 및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 강화 ○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 기여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 기여			
주요내용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방향성 논의에 있어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반 강화 ○ 여성·난민 등 취약계층 관련 국제인권기구 재정 기여 확대 ○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비롯한 우리 국민 및 정부 국제인권기구 진출 확대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844	3,751	△93	△2.4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211	202	△9	△4.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방향성 논의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및 우리나라 포함 ▲36명 정상급 인사 참여
- ▲젠더 ▲장애인 ▲언론 ▲청년 등을 주제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워크숍 및 부스 전시 운영

○ 여성·난민 등 취약계층 관련 국제인권기구 재정 기여 확대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180만 불) 신규 출연
  ※유엔 인구 기금(UNFPA), 여성·평화·인도주의 기금(WPHF) 등 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금 지원
- 유엔난민기구 비지정기여금(383만 불→1789만 불) 및 지정기여금(약 1830만 불→약 3500만 불) 증액

○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비롯한 우리 정부 및 국민의 국제인권기구 진출 확대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5-'27 임기) ▲ILO 이사회·IOM 총회 의장 ▲민주주의공동체 집행위원국('24-'26 임기)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위원국('25-'27 임기) 신규 진출
-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ICCPR) 위원 ▲국제이주기구(IOM) 운영개혁사무차장 우리 국민 진출
- 기존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24-'26 임기) ▲여성지위위원회('23-'27 임기)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집행이사국('23-'25 임기) ▲마약위원회 위원국('22-'25 임기) ▲경제적·사회적권리규약위원회(CESCR) 위원('23-'26 임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3-'26 임기)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2-'26 임기)으로서 활동 지속

결과분석

추진성과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반 강화 ○ 국제인권기구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 기여 ○ 국제인권기구 적극 진출을 통해 국제 인권 규범 형성에 리더십 발휘 기반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국제사회 내 민주주의 논의 증진 기여 차원에서 OECD 민주주의 분담금(46만불) 신규 편성
※ 우리 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민주주의 증진 지원 메커니즘 등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25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180만 불) 지원 지속
※ 유엔 인구 기금(UNFPA), 여성·평화·인도주의 기금(WPHF) 등 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금 지원

8	Ⅵ-1-(2)-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한국국제협력단
	과제목표	○ 인권기반 사업성과 관리체계 확립 ○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발굴 다각화 노력 ○ 개발협력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고도화함으로써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			
	주요내용	○ 인권분야 사업품질관리(Technical Assurance) 그룹 운영 및 인권기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 ○ 인권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강화 ○ 해외 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 구축 및 운영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권분야 사업품질관리(Technical Assurance) 그룹 운영 및 인권기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 - 국별협력사업 대상 조달, 건축, 분야별(보건, 교육 등) 전문가와 인권 전문관이 참여하는 인권위험예방 및 인권 주류화 목적 품질관리 회의 수행 - 모든 국별협력사업에서 인권분야 성과 프레임워크(인권지표) 적용 지속 강화 - ▲교육 ▲보건 ▲식수 ▲기후환경 등 중점분야별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인권 책무성·인권주류화 접근 강화를 위한 사업 요소 개발 및 관련 분야별 정책(기후주류화 전략 등)에 인권기준 반영 ○ 인권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강화 - 세계장애정상회의 아시아지역회의 참여 지원 등 장애포괄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단체 참여 도모 - 장애특정사업 및 장애인단체 참여 시민사회협력사업 수행시 자기분담금 기준 완화(20→10%) ○ 해외 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 구축 및 운영 - 영문 홈페이지 내 해외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 운영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 지속 정비 중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확대 ○ 국내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인권관련 정책 개발 시 이해관계자 협의 부족

향후추진계획	○ 이해관계자(사업수행기관)의 참여에 기초한 인권기반 개발협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지속 추진 ○ 해외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창구 개선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등)

9	Ⅵ-1-(2)-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민간협력과

과제목표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 기부 활성화 및 기부투명성 강화를 위한「기부금품법」개정 추진

주요내용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추진

- 자원봉사 영역 확대, 지역 자원봉사 인프라 개선, 자원봉사관리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 등

○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를 위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관련예산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27**	**13,321**	**966**	**7.7**
(자원봉사활동 참여·촉진 확산)	196	157	△39	△20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	2,579	2,579	-	-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103	869	766	744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166	1,201	35	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483	8,515	32	0.4
(2024 세계자원봉사대회 지원)	500	-	△500	순감
(자원봉사 가치 기념 및 교육 거점 조성)	500	-	△500	순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4차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24년 기관별(중앙부처, 지자체 등) 시행계획 수립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4.17.~8.13.) 및 전담반* 운영(8~9월)

* 행안부·지자체·유관기관·학계 등 10여명으로 구성

○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 및 시행('24.7.31.시행)

* (내용) 모집자정보 사전공개, 현장접수 장부기재·영수증 의무화,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문화 활성화 규정 신설 등

○ 개정 법률 위임사항 등 반영을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완료·시행('24.7.31.시행)

* (내용) 기부 목적사업 및 기부금품 범위 확대, 기부의날·주간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모집자 게시할 세부 정보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과 현장·전문가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자원봉사법 개정안 마련

○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안 발의('25.上) 및 개정안 통과 추진('25.下)

○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기부모집제도 편람 제작 및 시도 담당자 교육 실시('25.上)

10	Ⅵ-1-(2)-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행정안전부	과・팀명	민간협력과
과제목표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주요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929	3,604	△325	△8.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250	2,925	△325	△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운영 및 관리)	81	81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평가 및 교육)	196	196	-	-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402	40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심사·선정('24.1.~2.) : 124개 사업, 3,250백만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차 보조금 교부('24.4.~5.)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워크숍 실시('24.3, 5. 12.) : 3회*

* (1회차) 보조금 교부신청방법 및 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2회차) 사업평가계획 안내, 보조금 집행등록 가이드라인 설명
(3회차) 최종보고서 작성안내, 집행등록 유의사항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24. 6., 8., 10., 11.) : 4회*

* (1회차) 공익사업 예산 및 집행관리 운영 (2회차) 기획안 구상과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
(3회차)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4회차) 비영리조직이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24.5.~7.)

* 사업추진현황, 집행지침 준수여부, 증빙자료 구비현황 등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 실시('24.9.)

* (회계평가) 1차 보조금의 집행률, 집행등록률, 보완필요금액, (사업평가) 사업기획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24.9.~11.)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실시('25.2.)

*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등록 지연도, 사업홍보, 사업성과 등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미흡단체(60점 미만), 회계평가 미흡단체(50점 미만), 부적정 집행액 1백만원 이상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선정 배제
  · 평가결과 우수단체(상위 30%)에 다음연도 사업선정시 가점부여(상위 10% 3점, 차상위 10% 2점, 차차상위 10% 1점)
  · 전전년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자체 SNS(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미공개시 다음연도 사업선정시 감점부여(미공개시 △2점 감점, 공개 시 0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는 0점)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안전, 사회복지 등 70개 사업에 1,847백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의 인권향상에 기여 ○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권 등 공익활동 증진 ○ 회계・실무교육 마케팅 및 홍보, 성과관리 교육 등을 통한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공익활동 지원사업 전체 사업유형 中 인권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의 부족

향후 추진계획

○ 인권향상 유형에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강화

○ 보조금 지원 단체별 집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교육 등 실시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대북정책협력과 / 인권사회과
과제목표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주요내용	○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 논의 적극 참여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 외교 추진	647	647	-	-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148	14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가. 고위급 협의 결과문서

- (정상급) ▲루마니아(4.23.) ▲한일중(5.27.) ▲뉴질랜드(9.4.) ▲슬로바키아(9.30.) ▲필리핀(10.7.) ▲아세안(10.10.) ▲아세안+3(10.10.) ▲동아시아정상회의(10.11.) ▲폴란드(10.24.) ▲한미일(11.15) ▲페루(11.16.) ▲말레이시아(11.25.)
- (장차관급) ▲한-호주 2+2(5.1.) ▲한미일(5.31.) ▲한미일(10.16.) ▲ARF(7.27.) ▲영국(10.21.) ▲한미 2+2(10.31.) ▲한-캐나다 2+2(11.1.) ▲한미일 3자 협의 공동성명(10.18.)

나. 주요국과 북한인권 협의 개최

- ▲'23년에 이어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4.15.)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5.31.) ▲한미일 북한인권 협의 최초 개최(10.18.) 등

○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보리 내 북한인권 논의 적극 참여

- 북한인권 관련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 ▲제1주기 UPR('09.) 이후 15년 만에 서면질의 및 권고 발언 모두 진행** ▲유사입장국 공조 및 글로벌사우스 아웃리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메시지 발신 유도

  * 유엔 인권이사회가 4.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절차

  ** 제2주기('14.), 제3주기('19.) UPR시 권고 발언만 시행

-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79차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문안에 북한인권 관련 우리 입장 반영 및 컨센서스 채택
- '24.6월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시 북한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 북한인권과 평화·안보 문제간 연계성 강조

결과분석

추진성과	○ 정상·외교장관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교류 계기 주요 의제로 북한인권 논의 및 각종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의지 발신 ○ 북한인권 문제의 유엔 내 가시성 제고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고위급 협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지속

○ 주요국과 양자 북한 인권 협의 개최 추진

○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지속 참여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7) 수임 계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노력 강화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획과
과제목표	○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주요내용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북한인권정책 제안·소통의 장으로서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협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794	12,442	6,649	11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2년차, 19개 단체 18억원 지원

- 시민사회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 △국제협력 5건 4.2억원 △문화·예술 4건 6.7억원 △콘텐츠 개발 5건 4.4억원 △실상 알리기 4건 2.6억원 △학술행사 1건 0.1억원 등

○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크콘서트 개최, MZ세대의 접근성 제고

- 기존 북한인권 현안 토론회에서 '24년에는 행사 방식·시간·장소·주제 등을 변경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접근성 제고 및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토크콘서트로 진행

* '24년 북한인권 관련 토크콘서트 4회, 종합 평가회 워크숍 1회 개최

구 분	일정(안)	주 제
토크 콘서트	7.26.	클래식, 북한인권을 연주하다!
	8.27.	거부할 수 없는 상상의 자유, 쉿... 북한 내 한류 확산
	9.27.	2030 디자이너들의 북한 인권 형상화
	11.25.	북한인권, 두 개의 사선을 넘어 희망으로
워크숍	12.6.	평가회 워크숍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면담) △장관,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접견(2.21.) △장관, 북한자유연합 대표 면담(8.26.) △장관, 세계기독연대 대표단 접견(9.13.) △장관, 칼 거쉬만 NED 前 회장 접견(10.7.) △차관, 美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등 접견(10.10.) △장관, 올로프 스쿡 EU 인권특별대표 접견(10.14.) 등
- (각종 회의 등)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 관계자 대상 북한인권 정책 설명회(2.15.) △「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포럼(4.26.) △2024 북한인권보고서 (국문 및 영상) 발간 계기 언론설명회(6.27.)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7.22.~23., 美 워싱턴D.C.) △2024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계기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9.10.) △'세계 여아의 날' 계기 탈북민 모녀 및 주한 여성 외교관 초청 간담회(10.10.)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10.18.)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10.28.~29., 스위스 제네바)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11.15.) 등 - (기타) △북한인권 실상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1.3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일 계기 '남북여담(南北女談)' 토크콘서트(12.18.)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인권 문화공연 등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국민 관심 제고 ○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대화 토크콘서트를 통해 젊은 세대의 접근성 제고 ○ 국내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 관련 공감대 형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5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관리·평가 및 사업 홍보 적극 추진 ○ 청년세대 대상으로 북한인권 공감프로젝트(舊 북한인권 상호대화) 추진, 참석자와의 소통·공감대 형성에 주력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노력 경주

11	Ⅵ-1-(3)-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기록·보존·관리 - 북한인권 기록의 체계적 분석, 보존·관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록검증과 책임규명 준비 등에 필요한 국내외 북한인권 연구·분석자료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UN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78	286	8	2.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통일부 이관 자료 및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보존·관리
- 북한인권기록(문답서) 이관 자료 분석 완료, 인명카드 작성 및 자료분석평가회의 개최
-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관리
- 북한인권 사건카드 작성 매뉴얼 개정('24.3), 업무 규정집 개정('24.8), 북한인권 실무자료집 발간('24.9)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줄리터너 미 북한인권특사・법무실장 면담('24.2)
- 유엔 서울사무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0년' 컨퍼런스 참석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요 역할과 책임규명' 주제 발제('24.2)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살몬)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 관련 의견 작성('24.9)
-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미 워싱턴 DC, '24.4),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북한 UPR(스위스 제네바, '24.11) 참석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 유엔 등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 관련 공감대 형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체계적 북한인권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보존·관리 지속 추진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외교부	과·팀명	대북정책협력과
	과제목표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추진			
	주요내용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한미 북한인권 협의(4.15.)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5.31.) ▲한미일 북한인권 협의(10.18.) 등 주요국과의 북한인권 협의 시 문제 논의

- 고위급 협의 결과문서를 통해 문제 해결 촉구 메시지 발신

  *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9월 한-뉴질랜드 공동성명 ▲9월 한-슬로바키아 공동성명 ▲10월 한-필리핀 공동성명 ▲10월 한-아세안/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의장성명 ▲10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협의 ▲10월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공동성명 ▲11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11월 한-말레이시아 공동성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고위급 결과문서 및 주요국과 논의를 통해 동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 강조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공조 지속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관련 국제 관심 제고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인도지원과 이산가족과 납북자대책팀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남북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 문제 협의·해결 추진 및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주요내용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국내외 기반 구축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사업 확대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유도			

관련예산

(일반회계・남북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대비	
			증감	%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504	504	-	-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지원	406	601	195	48.0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416	383	△33	△7.9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19	1,479	60	4.2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164	131	△33	△20.1
▪ 구호지원	96,307	112,230	15,923	16.5
▪ 민생협력지원	475,314	475,885	571	0.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 수해 지원 제의 및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반 조성
- 북한 수해 지원 제의(8.1.) 및 수해지원 목적의 민간단체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8.30.~10.5., 10건)
- 국제기구 등과 북한 복귀 및 사업준비 동향 등 공유(19회)
-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4회)*
  * △취약계층 건강·영양 △민생경제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 분야
- 북한주민접촉·반출·UN 대북제재 면제 등 인도지원 사업 관리(37회)
- 전문가·민간단체·유관기관과 소통 지속(38회)

○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지속, 이산가족 위로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 「제2회 이산가족의날」('24.9.15.) 기념식 및 전국(서울, 인천, 춘천, 대전, 목포, 부산 등) 초청행사 개최
-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24.8월~12월)
- △영상편지 제작(1,002편) △유전자 검사(1,525명) 실시
-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 개최(6회) : △추석 계기, 고령 이산가족 위로방문(9.13.) △연말 계기, 고령·독거취약 이산가족 위로방문(12.16.~30.) △설·추석 계기 임진각 망배단 참배 지원 등
- 이산가족 단체 국고보조(8,200만원) 및 활동지원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 '세송이물망초' 상징 활용,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 확산 추진

<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활용한 공감대 확산 사업 성과 >

o 「2024 서울패션위크」 패션쇼 무대에서 '세송이물망초' 상징 공개(2.3.)

o 3.26.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 '세송이물망초' 배지 패용, 가정의 달인 5월을 계기로 범정부적 배지 패용 확대

o △英의회 북한문제 관련 초당적 의원 모임(3.27.) △아르헨티나 상원 외교위원장(4.15.)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5.3.) 등 국제사회에서도 '세송이물망초' 배지 패용 동참 확대

o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계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아픔을 예술작품으로 구현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전시·운영(5월~)

- 아울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무대로 월간 문화행사 개최(5·6·7·9월)*

* 박람회 기간인 5~10월 동안 약 780여만명의 관람객 방문

o 납북피해 현장인 선유도·홍도에 고교생납북자 송환기원비 설치(5·6월)*

* 선유도 송환기원비 제막식(5.24.)에 줄리 터너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각계각층 인사 참석

* 그 외,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 촉구 광고 영상 제작 및 홍보(6·11월) △전시납북자 이름이 수록된 「명부, 6.25전쟁 납북자 이름책」 'K-디자인 어워드 2024' 위너상 수상(8월) △통일부·문체부·캐나다대사관 공동 주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연말콘서트 개최(11.26.)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국제 무대에서 납북 피해자들의 증언 기회 확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추진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성과 >

o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계기, 억류자 가족 스위스 제네바 방문 및 국제무대 증언 지원(3월)

o 세계 강제실종의 날(8.30.) 계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 개최(8.29.)

* 필리핀·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콜롬비아·EU 대사 및 대사대리를 포함,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대사관 관계자 등 17개국에서 참석

o 김정욱 선교사 억류 4천일 계기, △통일부장관 △美국무부 △캐나다 외교부 △CSW(세계기독연대) '억류자 송환 촉구' 성명 공동발표(9.20.)

o 제4차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UPR 대비 억류자 가족 국제기구 방문 및 증언 지원(10월)

o 제4차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최초로 억류 선교사 3인을 서면질의·구두권고에 언급(11.7.)

- 미국 역시 처음으로 서면질의에 억류 선교사 3인의 이름 언급, 구두권고에서도 억류자 문제 해결 촉구

-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 역시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 표명 및 구두권고 동참

o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대변인 △「국제종교·신념자유 연대(IRFBA)」 의장 △英 의회 의원모임(APPG-NK)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 △美 연방상원 Coons 의원 억류자 송환 촉구 동시 발표(12.3.)

o 제4차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최초로 억류 선교사 3인을 서면질의·구두권고에 언급(11.7.)

o 통일부장관, 티모시 조 APPG-NK 사무국장 면담 및 억류자 송환 촉구(12.20.)

- △고령 귀환납북자 복지서비스 개선(2월) △미보상 납북피해자 가족 추가 발굴 및 피해위로금 지급(9월) 등을 통한 납북피해자 지원 확대,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 등 납북자 문제 대책을 위한 범정부적 공조 체계 강화

결과분석

추진성과

○ 향후 국제기구 북한 복귀 및 북한의 지원 수용 의사 확인 등 여건 조성 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이산가족 교류기반 조성 및 이산가족 문제 국민 공감대 확산

-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이산가족 정보 현행화 및 정책수요 파악
- 영상편지 제작·유전자 검사를 통한 향후 교류기반 강화
- 이산가족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위로사업 추진, 정책만족도 지속 상승

* 「2024년 이산가족 초청행사」 만족도 : 91.4%(전년대비 5% ↑)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 강화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계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전시기간(5~10월) 동안 약 780여만명 방문·관람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 결과, 제4차 북한 UPR에서 미국·유럽·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북한에 同 문제 해결 노력 촉구·권고 동참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지속, 북한의 미호응 등으로 인도주의 활동 재개 및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미진전

향후추진계획	○ 국제기구·전문가·유관기관·민간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향후 국제기구 복귀 등 여건 조성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 ○ 이산가족 교류기반 강화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지속 추진(해외 이산가족 포함) - 「이산가족의날」 행사,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 제고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자국민 보호'의 기본적 국가 책무임을 견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 강화 지속 추진 및 피해자·가족·단체와의 소통·지원 확대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과・팀명	농업경영정책과	
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 추진				
주요내용	○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협력 등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묘목생산 - 특용양묘장 운영	2,818	2,818	-	-
추진상황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 산림의 복구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자원비축·활용) 북한 기후에 적응할 나무의 종자 확보와 묘목을 생산*하여 남한 산림사업육성에 우선 활용
  * (종자) 현 38톤 비축, (묘목) 250만그루 규모
- (북한 동향 분석) 북한 산림 및 정책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등에 제공
  * '24년 산림분야 589건 수집, "북한산림 동향분석" 웹 발간(4회), 정기간행물 발간(1회)
- (민간단체 협력) "탄소중립 평화의숲 나무심기" 민간협력 캠페인 운영
  * 5개 단체 12회 개최 5,400명 참여, 묘목 65천 그루 식재
- (기술지원 방안) 북한 REDD+ 사업추진을 위한 4대 시행요건에 대한 북한역량 평가 연구('24.~'26.)

○ 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 (산림재해 대응) 정부 및 학계 등 협업으로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 (병해충)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8만마리)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및 남북산림협력 재개 대비 기반 구축 * 산림종자·묘목 비축, 산림협력센터 및 양묘장(파주, 철원, 고성) 운영 ○ 통일·남북산림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유도 *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12회), 남북산림협력센터 이용객(3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정세 및 경색된 남북관계로 업무추진 동력 상실 ○ 남북산림협력 부서 폐지 및 기능 축소로 국정과제 수행 어려움 * 남북산림협력팀(5명) → ('23.7.)임업수출교역팀(2명) → ('24.12.)임업수출교역팀(1명)

향후추진계획

○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고려하여 시설과 자원은 국내용으로 활용

- 조성·비축된 자원과 센터 등 기반시설을 국내 산림사업 활성화 및 산림교육 강화에 활용

○ 민간협력 및 국민소통 등으로 남북산림협력 지지기반 지속 유지

- 업무협약 단제(종교·민간)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국제협력담당관
	과제목표	○ 남북 간 보건복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달성			
	주요내용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상 건강권 차원에서 남북 간 감염병 대응 협력 필요			
	관련예산	○ '23년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 중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역량강화사업' 예산 편성되어 추진하였으나, '24년부터 전액 삭감되어 재단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 - ('24년) 57백만원, ('25년) 16백만원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최근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인도주의적 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20.6.16.) 이후 북한의 반복적 핵·미사일 도발('21.7.27.), 남북 통신선 차단('23.4.7.), 오물 풍선 살포('24.5~) 등으로 남북 소통 어려운 상황

- 이에 불구하고,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식 발표**('22.5.12.) 후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검토*** 했으나, **북측의 수용 거부로 불발**됨

* 북측 요청에 대비 백신 및 주사기·진단키트 등 지원 물품 확보방안, 전달방법 등 검토

○ 이에 **직접적 지원보다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제고에 주력 추진 중**

- **(인적 역량강화)** 국내 북한 보건의료 관심자 대상으로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기본, 심화)' 과정 진행
  - (주요내용) 통일의료 개념과 분석방법, 북한 보건의료 분야별 이해,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SDGs와 통일 의료, SDGs 협력과 한계 등 북한 보건의료 관련 교육
  - (주요대상) 의료인, 공무원, 대학생 등
  - ('24년 실적) 총 54명(기본 32명, 심화 22명) 수료 ※ 만족도 94.2점
- **(네트워크 구축)**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저변 확대
  -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세미나 참여(1회)
  - 북한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 업무협의(2회)
  - 유관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북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풀 지속 관리 및 업데이트

결과분석		
	추진성과	○ **(인력 역량강화)** 대상/수준별 교육 운영(기본,심화)을 통한 보건 의료인력 및 국민 대상 북한 보건·인도적 지원 관련 인재 양성 ○ **(네트워크 구축)** 북한 관련기관과 담당자 네트워킹 지속 유지 및 전문가 의견 공유 등을 통한 북한 관련 지식 정보 활성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남북 관계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인도주의적 협력 추진에 애로 ○ '24년 이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어려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 중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역량강화사업'

향후추진계획

○ 향후 남북 간 대화 재개가 본격화되면, 통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 방안 모색

12	Ⅵ-1-(3)-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산림청	과·팀명	임업수출교역팀

과제목표

○ 남북대화 재개 시,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 및 산림보호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주요내용

○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묘목생산 - 특용양묘장 운영	2,818	2,818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 산림의 복구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 (자원비축·활용) 북한 기후에 적응할 나무의 종자 확보와 묘목을 생산하여 남한 산림사업육성에 우선 활용
  * (종자) 현 38톤 비축, (묘목) 250만그루 규모
- (북한 동향 분석) 북한 산림 및 정책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등에 재공
  * '24년 산림분야 589건 수집, "북한산림 동향분석" 웹 발간(4회), 정기간행물 발간(1회)
- (민간단체 협력) "탄소중립 평화의숲 나무심기" 민간협력 캠페인 운영
  * 5개단체 12회 개최 5,400명 참여, 묘목 65천 그루 식재
- (기술지원 방안) 북한 REDD+ 사업추진을 위한 4대 시행요건에 대한 북한역량 평가 연구('24.~'26.)

○ 접경지역 산림재해 공동 대응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 (산림재해 대응) 정부 및 학계 등 협업으로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 (병해충)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8만마리)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및 남북산림협력 재개 대비 기반 구축
  * 산림종자·묘목 비축, 산림협력센터 및 양묘장(파주, 철원, 고성) 운영

○ 통일·남북산림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유도
  *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12회), 남북산림협력센터 이용객(3천명)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제정세 및 경색된 남북관계로 업무추진 동력 상실

○ 남북산림협력 부서 폐지 및 기능 축소로 국정과제 수행 어려움
  * 남북산림협력팀(5명) → ('23.7.)임업수출교역팀(2명) → ('24.12.)임업수출교역팀(1명)

향후추진계획

○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고려하여 시설과 자원은 국내용으로 활용
- 조성·비축된 자원과 센터 등 기반시설을 국내 산림사업 활성화 및 산림교육 강화에 활용

○ 민간협력 및 국민소통 등으로 남북 산림 협력 지지기반 지속 유지
- 업무협약 단체(종교·민간)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

13	Ⅵ-1-(3)-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기획과
과제목표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주요내용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정책의 비전, 목표, 주요과제를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발표 ○ 통일 대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구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794	12,442	6,649	114.7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8대 과제 이행

①(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책임규명)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지속(북한인권기록센터), 책임규명 관련 전문가·유관부처 회의 개최('24.4월, '24.9월)

②(정보접근권 강화) 민간 차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실태조사 △인력양성 등 지원

③(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24.7월~12월), 설날 망향경모제('24.2.10.) 등 계기시 이산가족 문제 관련 북한 당국의 호응 지속 촉구

④(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국·영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본격 착수('24.1월 부지매매계약 체결, '24.5월~ 건축 실시설계 진행)

⑤(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유엔 인권이사회·UPR 등 인권메커니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북한인권 국제대화('24.7월, 10월)」 개최를 통한 북한인권 국제담론 확산 지원

⑥(북한인권정책 추진기반 강화)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의 소통 지속

⑦(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대북 수해 관련 인도적 지원 제의('24.8.1.) 등 인도적 협력 모색

⑧(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북한 제4차 UPR('24.11월) 등 주요 계기시 북한 당국에 인권 침해 개선 지속 촉구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북한인권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이행 지속

13	Ⅵ-1-(3)-③-④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과제목표	○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주요내용	○ 통일 대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구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78	286	8	2.9

추진상황 :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분석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연구('24.9)」,「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반인도범죄 사례와 북한인권침해 분석('24.11)」용역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로마규정 반인도범죄 구성요건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확보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연구용역 성과 활용방안 논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북한인권 실태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전문적 연구를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 정책수립 기반 구축

14	Ⅵ-1-(3)-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북한인권기획과 북한인권증진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과제목표	○「북한인권법」이행 정상화			
주요내용	○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정부 내 북한인권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활성화 ○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북한인권증진위원회」(제2기) 구성·운영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 인권상황 파악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기록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북한인권재단 운영	475	475	-	-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60	964	104	12.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경주

- 국회 대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추천 요청 공문 발송('24.7.31., 11.18.) 등 대국회 협력 노력 지속

○ 정부 내 북한인권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

- (개최현황) △북한인권정책협의회('24.1.22., 8.29.) △실무협의회('24.5.17., 9.27.)

○「2024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국회 보고('24.8.30., 북한인권법 제15조)

○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방향 논의

- (개최현황) 총 4회 전체회의 개최(3.12., 6.11., 9.11., 12.10.)

○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24년 228명), 조사결과 기록(문답서 등) 원본 법무부 이관

○『2024 북한인권보고서』공개발간 (△한글판 6.27., 4,000부 △영문판 9.10., 2,000부)

- 국내외 관계기관에 배포 △정부기관 △주한외국공관 △주한국제기구 △주한NGO △재외공관 △미 국무부 △국내외 연구소 △국내외 인권단체 △관계기관 △기자단 등
- 보고서 발간 계기, 국내외 설명회·강연회 등 공론화 활동 실시

* △내·외신 대상 언론설명회(6.27.) △영상보고서 K-컬처스크린 표출(7.1~31.)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 강연(7.10.) △국군방송(7.12.)·K-TV 인터뷰 (7.17., 9.12) △북한인권 서울포럼(7.11.) △1차 '북한인권 국제대화'(7.22.~23., 미국) △유엔 인권담당 사무총장보 면담(7.25., 미국) △주한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대상 설명회(9.10.) △'세계기독연맹(CSW)' 대표단 대상 설명회(9.11.)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필요성 공론화 ○ 북한인권 정책 자문, 인터뷰, 기고,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사회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보고서」 연례 발간 등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전개,「북한인권보고서」가 유엔·주요국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24.11.7. 北 UPR 등)에 인용·반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미추천으로「북한인권법」 이행 장애 상황 지속

향후추진계획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 소통·협력 노력 지속 - 국회의 이사 추천 시 재단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및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개 보고서 지속 발간

15	Ⅵ-2-(1)-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교육 진흥 추진			
	주요내용	○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해당 없음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 없음
	미흡 또는 장애요인	○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논의 시 적극 협력

16	Ⅵ-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과・팀명	연수과, 스마트교육팀

과제목표

○ 원내 통일교육 과정 내 북한 인권 관련 과목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인권에 관한 이해도 제고

○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북한인권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국민에 전달

주요내용

○ 원내 교육과정에 북한 인권 관련 커리큘럼 확대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정례화
-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등 원내 주요 교육과정에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기초하여 「북한실상 알리기」 적극 전개

○ 기 양성한 북한이탈주민 전문강사를 통해 전국 각계 각층 대상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
-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및 민주평통 등 유관기관 대상 탈북민 우수강사를 「북한실상 알리기」 핵심 전달자로 지속적 활용

○ 탈북민 우수강사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실상 알리기' 활동을 적극 전개, 통일 공감대 확산

○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상 북한인권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북한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 등 SNS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695	2,490	△3,205	△56.3
▪ 통일교육자료 개발	-	2,288	2,288	순증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원내 장·단기 교육 과정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교육 확대 편성
- (북한이해)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및 북한인권 실상 영화 관람 등
- (인권교육)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통일부장관 특강,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북한인권 전문가' 특강 등 진행
- (현장견학) 캠프 험프리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통일 안보현장 견학 실시

○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상 북한인권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북한인권 문제와 향후 과제」 △「북한인사이드 : 북한 사회와 주민 이해」 등을 운영

○ 북한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 등 SNS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추진
- (이러닝) △「국제인권규범 및 북한인권법」(신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신규)
  △「증언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삶: 북한인권보고서」(신규)
- (유튜브) △「남한·북한MZ 소통 프로젝트」(2편) △「통일책방: 북한인권보고서」(2편)
  △「통일책방: 북한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3편)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인권보고서」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에게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부각 및 북한인권 개선 촉구 ○ △북한 인권 실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및 평가 등 이해하기 쉬운 북한인권 교육 콘텐츠 운영 및 개발
	미흡 또는 장애요인	

향후추진계획	
○ 원내 교육 시 북한인권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국내/외 「북한실상 알리기」 확대 전개 ○ 탈북민 우수강사 지속 발굴을 통해 탈북민 강사 풀(pool) 확대 및 통일안보 대표 강사로 육성 ○ 북한인권 관련 사이버 교육 콘텐츠 운영·개발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16	VI-2-(1)-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 교육 및 홍보 지속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와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증진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지속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국제인권증진	241	246	5	0.2
국제인권 역량강화	241	246	5	0.2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국제인권 책자·번역본 발간·배포
- 「2024 국제인권조약집」('23. 12.)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23.12.)

○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
- 유엔 인권메커니즘이란('24. 6.)
- 국제인권조약을 소개합니다!('24. 6.)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로 알아보는 국제인권('24. 6.)
-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 강제실종방지협약('24. 12.)
-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 강제실종방지와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24. 12.)
-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24. 12.)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국제인권 관련 책자 및 뉴스레터 발간·배포 등을 통하여 인권 의식 제고 및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이해 확산에 기여
미흡 또는 장애요인	○ 대국민 인권 인식 제고 및 인권 이슈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 모색 필요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및 국제인권 의식 증진 노력

17	Ⅳ-2-(2)-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육콘텐츠정책과
과제목표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주요내용	○ 교과용 도서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시, 인권 요소 내용 검토 및 반영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상시 점검 - 국·검정도서는 수정·보완 체제를 상시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 실시			
관련예산	(국고(일반회계), 지방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국고(일반회계))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사업)	975	975	-	-
▪ 교수학습 자료개발(지방비)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1,173	1,302	129	10.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24년 이행실적

○ 교과서 수정·보완 체제 운영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과용도서 질 관리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과용도서 사후관리
  *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제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통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인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환류

- 현장 교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교과서 모니터링단 중 양성평등·인권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여 교과용도서의 인권 내용 검토 및 인권 의식 함양 도모

- 양성평등, 인권·다문화·재외동포교육 전문가 중 공모를 통하여 위원으로 위촉('24년 15명)하고, 초등 국어·도덕·바·슬·즐 교과용도서의 양성평등·인권 분야 모니터링 시행 후 연 2회 보고 및 결과 환류

결과분석

추진성과	○ 2024년 검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7,489건 중 양성·평등 인권 전문가 의견에 따라 624건*의 교과서 및 지도서 수정 * (예)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삽화 정정(학생들 중 1명은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수정), 초등학교 바·슬·즐 삽화 정정(놀이 활동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문화 구성원이 등장하도록 권고) 등 ○ 2024년 교과서 모니터링단 중 양성평등, 인권 분야를 별도로 운영하여 본문*과 삽화**에 대하여 검토하여 총 1,187건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권고 * 본문 검토 : 편견과 왜곡, 고정관념과 획일화된 정체성, 다양성과 균형성 등 ** 삽화 검토 : 성별, 다문화, 장애, 노인, 가족, 지역 이미지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시스템을 활용한 교과서 질 관리(매월)

○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인권친화적 교과서 관리(중간보고회('25.8월), 최종보고회('25.12월))

18	Ⅵ-2-(2)-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교원양성연수과
	과제목표	○ 자격연수 교육과정 및 직무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교원·예비교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주요내용	○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포함 - 시도교육청에 자격연수 과정 및 직무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요청 ○ 예비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시 교원 자격별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인권 존중' 등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24.12월) ○ '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권고* 사항' 포함 안내('24.3월) * 인권(양성평등 포함) 교육 및 생명 존중(자살예방 포함) 교육('18년~), 예비교원의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20년~)

결과분석	추진성과	○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교원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시도교육청 안내 예정('25.12월)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권고('25.3월)

19	VI-2-(2)-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특수교육정책과
	과제목표	○ 지속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장애 인식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수**가 재학 중인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 ('14.) 87,278명 → ('24.) 115,610명, ** ('24.)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3.7%			
	주요내용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대상 확대 ○ 학교별 장애인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실시학교 비율 : ('24.) 94.4% ○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실시학교 비율 : ('24.) 78.5% ○ 민간과 협력하여 장애 인식 개선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24.) 초등학생용 팝업북 총 2,490권 배포("함께 걷는 길이라면 어디든 좋아", "비밀이야")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이해교육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라디오)* 송출 및 교원 및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공모전(백일장, 수업사례)**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장애이해교육 지원 * (유아) 애니매이션 "춤추는 민지", (초등) 동화·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영상물 "대한민국 1교시-손잡고 한 발짝 더", (중등)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자전거는 두 바퀴로 달린다" ** (백일장) 학교급별 시·산문 등 5개 부문 총 2,298명 수상 및 14개교(단체상) 수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없음

향후추진계획	○ 특수교육운영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전체 학교 대상 장애이해교육 지속 추진 ○ 민간과 협력하여 학교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자료 개발·보급

20	Ⅵ-2-(2)-④	인권친화적 대학·학교문화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교육부	과·팀명	인재양성지원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과제목표	○ 대학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통한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지원			
주요내용	○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22~'23)을 통해 센터 확산 및 우수사례 발굴 지원 * ('22) 7개교, 5억 원/ ('23) 10개교, 8억 원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 마련 ○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학교 규칙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 실시			
관련예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800	-	△800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3년 과제완료			

(참고) '23년 이행실적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인권센터의 조기 안착 지원 및 우수 모델 발굴 추진
* ('22) 500백만원, 3개 유형, 총 7개 대학 → ('23) 800백만원, 3개 권역, 총 10개 대학
-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통해 우수모델 발굴
※ 예시) 사건처리 핸드북 제작, 인권 공모전 개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마련 및 시도교육청 안내('23.11월)
○ 제17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23.3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대학인권센터 설치 현황 조사 결과, 대부분 인권센터를 기 설치 또는 설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23.11월 기준) ※ 총 392개교 중 357개교 설치(91.1%)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지원 ○ 제17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청 인권교육 주요 성과공유 및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대학인권센터 설치는 의무사항이나 여전히 미설치된 대학 존재 ○ 국고 지원을 통해서는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인권센터의 자생적·독립적 발전에 한계

향후추진계획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인권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제 구축
- 대학인권센터 현황 조사 실시('24.下)
-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책무성 제고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 정보공시 항목 반영 예정('25. 下)
○ 시도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상황 모니터링(상시)

21	Ⅵ-2-(3)-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원행정처	과·팀명	사법연수원
과제목표	○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교육 충실 ○ 법정언행 및 법정운영기술 개선을 위한 세미나 등 연수과정 실시			
주요내용	○ **경력별 연수 Ⅰ~Ⅳ** - 의무연수인 경력별 연수 과정에 법관의 성인지,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편성 ○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법원 전반의 장애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사법지원의 활성화 및 장애법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관그룹의 형성·유지 방안을 모색 ○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법 그리고 법원에서의 젠더에 따른 시각차이, 소수자 보호 등에 관하여 논의 ○ **법정언행컨설팅** -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대상 및 희망 법관 등을 대상으로 법정언행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책에 관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 PSRI 직무스트레스 검사 실시 ○ **법정운영기술 개선 연구 세미나** - 법정언행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정언행과 재판운영 개선방안 모색, 단독·합의 재판장의 바람직한 법정운영 기법 공유 및 토론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법관 연수(24년 75개 연수 전체금액) ▪ 법관 연수(25년 73개 연수 전체금액)	800.26	800.26	-	-
▪ 법정언행컨설팅	173	173	-	-

※ 법관연수 예산은 각 연수별로 예산이 특정되어 배정되어 있지 않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경력별 연수 Ⅰ~Ⅳ**
- 2024. 6. 17.(월) ~ 2024. 9. 27.(금)
- 각 경력별 연수 대상 법관 합계 393명 연수 참가

○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2024. 5. 20.(월) ~ 2024. 5. 21.(화)
- 전국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66명 연수 참가

○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연수**
- 2024. 6. 10.(월) ~ 2024. 6. 11.(화)
- 재판과정에서의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64명 연수 참가

○ **법정언행컨설팅**
- 2024. 7. ~ 2024. 12.
-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대상 및 희망 법관 등 171명 참가

○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 2024. 9. 30.(월)
- 희망 법관 27명 참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경력별 연수Ⅰ~Ⅳ** - 의무연수인 경력별 연수Ⅰ~Ⅳ 과정에 법관의 성인지,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함. '재판과 젠더', '국제인권과 젠더' 등 주제로 충실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 법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연수** - 연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장애법연구회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강의주제 선정, 강사 섭외 등을 진행하였는바,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당한 연구 성과를 얻은 성공적인 연수로 평가됨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연수** - '매체 속 젠더와 그 너머 사회적 성찰'이라는 부제 하에 연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사를 섭외하여 연수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학문적 전문가 또는 실무가들의 훌륭한 강의를 통해 연수법관들로 하여금 젠더 문제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법정언행컨설팅** -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및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법 정언행의 개선 ○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 법정언행 컨설턴트, 오랜 법관 경력이 있는 원로 법조인의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여러 직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종합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법정언행과 재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는 유익한 세미나였던 것으로 평가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법정언행컨설팅** - 사업규모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어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예산 현실화 필요함 (10년간 한 업체가 하다가 그만두어 2024년에는 두 차례 유찰 → 어렵게 사업체 구해 수의계약) - 앞으로 대상자의 다변화에 따라 컨설팅 내용도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고, 새로운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추진계획	○ **경력별 연수 Ⅰ~Ⅳ** - 2025. 6. 23. ~ 2025. 9. 19. 실시 예정 ○「**국제인권법과 법관**」**연수** - 2025. 5. 19. ~ 2025. 5. 20. 실시 예정(격년으로 홀수 해에 실시)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연수** - 2025. 6. 9. ~ 2025. 6. 10. 실시 예정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연수** - 2025. 6. 12. ~ 2025. 6. 12. 실시 예정 ○ **법정언행컨설팅** - 2025년에도 대상자 선정 후 진행 예정 ○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 2025. 9. 29. 실시 예정

21	Ⅵ-2-(3)-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인사혁신처	과·팀명	인재개발과
	과제목표	○ 국가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의식 제고			
	주요내용	○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25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24.11.15.) 시, 全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안내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해의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 및 통보

《 '25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中 발췌 》

□ **국정성과 창출 지원**

○ (국정철학 및 정책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철학·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정책대응 역량향상

○ (부처) 국정철학 및 공직가치, 주요 정책교육 등 교육계획 수립 및 직장교육 실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련 전문교육 참여 적극 지원

○ (교육훈련기관)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직무 전문교육 확대, 전문분야 강사풀 및 콘텐츠 등 교육자료 공유

○ (협조기관) 교재, 콘텐츠, 강사풀 등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여 타 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연간 교육 실적·결과 관리

□ **주요 정책교육**

구 분	주요 내용
인권의식	▸ **(내용)**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 **(협조)** 국가인권위원회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1개 기관 대상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 기관별 자체실적 작성·제출(1월) → 확인·점검, 기관인터뷰, 우수사례 평가(4~7월) → 종합평가 결과통보(9월)

-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인권·장애인·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과정 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를 평가

결과분석		
	추진성과	○ 全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인권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인권의식 제고 * 국가인재원, 경찰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관세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중앙경찰학교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6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을 반영하여 각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안내

○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22	Ⅵ-2-(3)-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정착지원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제고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보호담당관 대상 인권 교육 실시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인권보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과정) : 총 3회, 73명 교육

- (1기) △기간 : '24.3.20.~22. △대상 :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28명(거주지 6명 , 취업 7명 , 신변 15명(경찰 15))
- (2기) △기간 : '24.9.2.~4. △대상 :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23명(취업 7명, 신변 16명(경찰 12명, 방첩사 4명))
- (3기) △기간 : '24.9.11. △대상 : 탈북민 보호담당관 공무원 22명(경찰 22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인식개선 제고 등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에 공문 송부 등 협조 요청

- 보호담당관 과정 강의 목록 제시, 업무 관련 정보 공유 효과 등 적극 홍보

22	Ⅵ-2-(3)-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조사과
과제목표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주요내용	○ 법무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 직렬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교육	204	191	△13	△6.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인권감수성 훈련(19회/516명)*
* 교정 9회/276명, 보호 4회/99명, 출입국 3회/66명, 검찰 3회/75명

○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5회, 100명)*
* 교정 1회/28명, 보호 1회/11명, 출입국 1회/10명, 검찰 1회/10명, 통합 1회/41명

○ 외부 인권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9회/1,838명)*
* 교정 7회/273명, 보호 11회/303명, 출입국 7회/185명, 검찰 14회/1077

○ 검사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3회, 23명)

○ 검찰수사관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10회, 132명)

○ 신임 인권강사 5명 추가 양성

결과분석

추진성과	○ 법무행정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으로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도 인권교육 계획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훈련 19회(검찰 3회, 교정 9회, 보호 4회, 출입국 3회),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4회(직렬별 1회), 1: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12회(검사 2회, 검찰수사관 10회), 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1회

○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속 추진을 통한 인권교육 확대
-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인권침해진정사건 분석결과 및 주요 인권침해 사례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의식 증대 노력

○ 내부 인권강사 역량 강화
- 외부 강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기법 및 시민사회의 선진 인권의식, 최신 인권자료 공유 등 내부 인권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25년 신설된 국제 인권조약 교육 관련하여 7급 승진예정자 보호직·출입국관리직 대상 법무연수원 교육 실시

22	Ⅵ-2-(3)-②-㉮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경찰청	과·팀명	인권보호담당관실
과제목표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확립과 실시로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상 정립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 향상			
주요내용	○ 체계적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반 마련 확대 ○ 경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인권 교육의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인권교육	52	5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경찰인권보호규칙」*에 따라, 3개년 「제2차 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23~'25년) 수립('23. 10. 30), '24년 연도별 인권교육 종합계획 시행

同 규칙 제18조는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 이에 제1차 계획('18~'20)과 고도화 계획('21~'22)에 이은 2차 종합계획을 수립

○「'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24. 2월)에 인권교육을 적극 편성하고, 인권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와 협력·지원 체계* 구축

* '24년부터 △인권강사양성 공동운영 △「경찰인권교육협의회」에 참여·교육체계 지원 협의 완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경찰청 주도의 통합관리 강화)** 인권교육 시 폴넷「인권업무지원시스템」에 △관서명 △내·외부강사 △교육인원·시간 등을 입력, 본청(인권과)은 모니터링 이행력 확보

○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국가인권위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경찰인권교육협의회」* 운영(연 2회),「경찰인권보호규칙」제18조의3에 근거규정 마련('24. 11. 20.개정)

* (역할) 교육체계 설계, 내·외부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안 마련 등 자문

○ **(내·외부 인권강사단 인력풀 구축)** △인권강사 후보풀(110명) 중 경찰인재개발원 강사양성과정(2주) 평가통과자에 한해 인권동료강사 자격 부여(기존 11명 → 45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을 위해 외부인권강사단(78명 中 36명 선발) 신설·운영(6. 28.~)

* '24년부터 인권동료강사양성과정 신설·확대(1 → 4회)

○ **(인권교재 등 교육자료 제작 확대)** △국가인권위 경찰 진정·권고('18~'22년) 분석집(4월) 및 경찰 인권교육 기본서 개정판(10월) 발간 △국가인권위 사이버 콘텐츠 공동활용 및 자체 콘텐츠 제작·활용(총 6H, 4월~10월)

* '18~'22년 진정·권고 통계 및 권고 사례 분석, 진정 대응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인권문화 콘텐츠를 통한 인식개선)**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고양할 수 있는 △인권소식지 △인권아카데미 △인권문화제* 등 진행

* '23년부터 세계인권의 날(12. 10.) 전후로 1주일간 직원 관심을 끄는 인권 행사 집중 진행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예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의 한계

○ 교대근무 등 경찰의 불규칙한 직무특성에 따라, 경찰 교육 전반에서 대면 교육이 줄고 비대면 교육 활성화 추세로, 참여형 인권교육(대면 기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향후추진계획

○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교육 효과를 평가하고 교육내용을 보완·발전시켜, 경찰관의 인권교육 수용성 향상 노력

– 지속적으로 내·외부 인권강사 양성·관리 체계화와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업데이트를 통해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수용도 향상

23	Ⅵ-2-(3)-③	군 장병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국방부	과・팀명	군인권총괄담당관실
과제목표	○ 군 장병 인권교육을 통해 군 장병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향상			
주요내용	○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부대 인권교육, 인권교관 인권교육, 인권업무종사자 인권교육,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군인권교육	368	395	27	7.3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휘관 및 간부 대상 인권교육 운영(144명)
- 국방대 지휘관 인권과정 운영(3회/65명)
- 국방부·인권위 공동 지휘관 인권교육(5회/79명)

○ 부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 운영(606명)
- 국방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7회/219명), 국방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8회/387명)

○ 군인권업무종사자 인권교육과정 운영
- 의료, 수사, 교정, 법무, 상담, 훈육, 모니터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9회/310명)

○ 사이버교육 인권교육과정 운영(128,386명)
- 인터넷 나라배움터 인권의 이해과정(20회/8,115명), 군인 인권의 이해과정(20회/24,242명)
- M-MOOC 인권의 이해 특강과정(20회/46,875명), 군인 인권의 이해 특강과정(20회/34,733명), 인권교관을 위한 인권교육과정(20회/14,421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 부대 인권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인권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외부전문강사 지원(168회)

○ 장병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군 인권교관 인권교육 엘로우북 교재' 제작·배부
- '훈련소(신교대) 훈육업무종사자 인권교육 교안' 제작·배부
- 군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동영상 24편 제작·배부
- 군 인권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영상 및 웹툰 18점) 배포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군(진급자) 및 연·대대장 등 지휘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 ○ 인권교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향상 - 인권교관 인권교육 결과 인권의식 점수가 평균 20.8점 상승(교육 전 64.8점 → 교육 후 85.6점), 인권교육 평균 만족도 98.7점 ○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인권교육 이수 ○ 외부인권전문강사가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교관 및 부대의 인권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질높은 인권교육 제공 ○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부하고, 군인권지키미시스템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인권교육에 활용하도록 함 ○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부대 인권교관, 군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보호 의식 강화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부대 지휘관의 인권 친화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 고위정책결정자과정(장군진급선발자) 인권특강 실시
- 국방대 지휘관 인권교육과정(연대장·대대장) 운영(연 2회)
- 인권위와 협업을 통한 지휘관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연 4회)

○ 부대 인권교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연 12회)

○ 군 인권업무종사자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연 3회)

○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 인터넷 나라배움터 2개 과정, 인트라넷 M-MOOC 3개 과정
- 인트라넷 M-MOOC 2개 과정 콘텐츠 교체

○ 부대 인권교육에 민간인권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확대(연 400회)

○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화 콘텐츠 개발
- 인권교관이 쉽게 부대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안 4종 개발, 사이버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2편 제작
- 국가인권위와 협력하여 군인 직무별(법무, 수사, 상담, 정훈, 교도) 및 대상별(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24	Ⅵ-2-(3)-④	변호사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법무과
과제목표	○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제고			
주요내용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44	779	△35	4.7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지원)	232	23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하여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과정에서 윤리교육 확대 방안 개진 (1월, 5월, 9월)

○ 「법조윤리협의회」 회의 참석하여 법조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협의 (4월, 10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기존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윤리교육 지속적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의 강사 파견 및 윤리교육 지원

○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과 지속적 협의하여 변호사 윤리교육 강화 방안 검토

25	Ⅵ-2-(3)-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지역복지과
과제목표	○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교육을 통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주요내용	○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직무소진 해소, 이를 통한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과정, 직급별 교육 과정, 사회적 고립 대응 과정 등			

관련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62	462	-	-
(사회복지 교육훈련)	462	462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총 23과정 112회 5,328명 수료
-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8과정 73회 3,531명 수료
- (직급별 교육) 6과정 22회 443명 수료
- (지역사회보장계획) 4과정 6회 958명 수료
- (강사양성) 3과정 4회 91명 수료
- (소진해소) 2과정 7회 305명 수료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 공직 생애 전 주기적 역량 강화 교육 체계 강화 - 기본적인 복지 가치와 역할 인식을 통한 복지업무수행 기반 조성 ○ 지역사회 보장 및 민관협력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 현장감 있는 지역복지 발전 방향 모색 지원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新복지수요 적시 대응을 통해 안정적 정책 수행기반 마련

○ 교육의 현업 적용성 및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를 통해 현업 수행동력 확보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회복탄력성 강화

26	Ⅵ-2-(3)-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아동보호자립과

과제목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 시군구 드림스타트 실무자 교육

주요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인식개선 및 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인권 옹호역량 강화,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 아동인권 개념 이해, 인권 민감성 훈련(활동, 토론)
○ 개인정보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962	4,626	△336	△6.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3,172	3,244	72	2.3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 확산)	801	792	△9	△1.1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예방 교육 실시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예방 교육 실시(1,895회)
-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문(리플릿) 배포(경찰청, 지자체 등, 13,000부)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아동학대 바로알기 등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문화 교육 : 총 16회 435명 교육 실시('24.4~12월)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결과분석

추진성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시설종사자 인권교육으로 학대예방 및 보호 강화

○ 아동 권리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병행실시에 따른 아동 인권보호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속 운영

○ 인권지킴이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추진(권고)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인권(권리) 교육 실시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문화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교육 실시(사이버 교육)

26	Ⅵ-2-(3)-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다문화가족과
과제목표	○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의식 및 전문성 확보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관련예산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5,644	5,782,	138	2.4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상담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지원, 인권보호 방안 등

결과분석

추진성과	○ 사회적 약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 인권의식 및 전문성 향상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대상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종사자 교육추진(지속)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통일부	과・팀명	안전지원과 교육기획과
과제목표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 보호 교육 등 실시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인권분야 강사사례비	36	36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탈북민 양성평등·인권교육과 관련 △여성인권과 양성평등(3시간) △성범죄 예방교육(2시간) △가족분야 생애설계(4시간) △자유민주주의 이해(2시간) △준법교육(4시간) △알기쉬운 인권이해(2시간) △법률피해 구제사례(2시간) 등 총 19시간 교육 실시

- 준법교육 확대 개편(2시간→4시간)

○ 하나원 양성평등·인권교육 기본교재인『사회생활』개편 발간('24.7월)

- 자유민주주의, 생활 법률, 결혼과 가정생활 등 수정·보완

결과분석

추진성과	○ 탈북민 양성평등·인권 의식 함양 제고 - '24년 하나원 수료 탈북민 교육생 242명 전원 인권교육 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5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은 △법률 교육 △직업 교육 △정서안정·건강증진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 마약, 성폭력 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교육 시간 확대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보건복지부	과·팀명	아동정책과
	과제목표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향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진행, 아동권리 이슈 공론화			
	주요내용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향상에 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아동권리 이슈 공론화 ○ '아동권리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아동권리 향상에 대한 대국민 아동권리포럼 포럼 개최(온·오프라인 1회, 총162명 참석) * (주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결과분석	추진성과	○ 아동보호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 학계, 아동 및 시민단체 등의 포럼 참석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이슈를 공론화하여 아동정책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 마련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2025년 아동권리포럼 추진(1회, '25년 하반기 예정) ○ 2025년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추진('25년 하반기 예정)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고용노동부	과명	외국인력지원과
과제목표	○ 외국인 근로자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관련예산				

(고용보험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1,005	1,005	-	-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

* '24년 입국후 취업교육 E-9 64,504명, H-2 18,072명

결과분석

추진성과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근로조건 권리구제 강화 - 입국 후 취업교육을 통해 82,576명 대상으로 교육실시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입국 후 취업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 지속적 운영

27	Ⅵ-2-(4)-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폭력예방교육과
과제목표	○ 초·중·고등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대상별·내용별 추천 콘텐츠 발굴 및 보급			

관련예산

(일반회계, 양평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4,054	639	0.19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816	825	9	0..01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1,230	1,535	305	0.03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29	529	300	131

추진상황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023년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및 북한이탈여성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사업 종료

'24년 주요 이행 실적

○ 북한이탈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18회, 296명)

○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600회, 1,375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대학생·청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웹드라마, 1종), 일반국민 스토킹 예방교육(인포그래픽, 1종), 공공기관 신종폭력 포함 통합교육(이러닝 6종_총론1/성희롱/성폭력, 총론2/성매매/가정폭력) 개발
- 장애인, 외국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 : '주변인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2종)' 배리어프리(화면해설 자막·오디오, 수어),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결과 분석

추진성과	○ 대상별,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 추진 계획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속 추진

- 교육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추진('24.~)
-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디지털 성범죄 예방 분야)' 지원('24.~)
- 교제폭력 예방 분야를 신설하여 총 6개 분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25.~)

* ❶성폭력, ❷가정폭력, ❸성희롱, ❹성매매, ❺디지털 성범죄, ❻교제폭력 예방교육

○ 교제폭력, 신종범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12종) 개발·보급

28	Ⅵ-2-(5)-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지역 양성평등센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성별영향평가과

과제목표

○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지역 성 주류화,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 관련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 청년·학부모 등의 주민참여형 정책모니터링 실시
- 취업·주거·안전·맞돌봄(부모가 함께 아이돌봄) 문화 확산 등의 소통 프로그램 추진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
▪ 성인지정책분석평가운영	4,075	3,940	△135	△3.3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917	934	17	1.9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지역 양성평등센터(6개)를 중심으로 청년층 남녀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의제 발굴 등 추진

구분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	지역 정책 모니터링
인천	◦(일시/대상) 2024.5.30. / 지역 청년, 중장년 등 ◦(주제) 맞돌봄(세대 간 돌봄 인식, 돌봄 경험 등	◦(사업명) 지역정책 모니터링단 ◦(내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 조사,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 및 노후도
경북	◦(일시/대상) 2024.8.23. / 지역 청년, 중소기업 종사자 등 ◦(주제) 청년이 생각하는 일생활 균형	◦(사업명)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내용) 지역 문화시설 및 지역 소재 기업
대전·세종	◦(일시/대상) 2024.9.10 / 대전·세종 지역 연구기관 종사자 등 ◦(주제)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과학연구분야 일자리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사업명) 청년정책·지역정책 모니터링 ◦(내용) 지역 청년 정책, 지역 축제 홍보물, 도서관 공간 및 홍보물
부산	◦(일시/대상) 2024.10.11. / 지역 청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주제) 영상·애니메이션 분야 양성평등 관점의 조직문화 및 콘텐츠 제작 노력	◦(사업명)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 ◦(내용) 지자체 홍보물, 지역 축제, 성별영향평가 개선 과제
전남	◦(일시/대상) 2024.10.15. / 지역 청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등 ◦(주제) 청년과 기성세대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사업명) 전남 양성평등 정책 청년·도민 모니터단 ◦(내용) 전남 지역 돌봄 정책 관련 관광콘텐츠 및 홍보물
전북	◦(일시/대상) 2024.11.12. / 전북·전남 지역 청년, 중장년 등 ◦(주제) 청년이 원하는 정주환경과 일자리	◦(사업명)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 ◦(주요의제) 문화관광 콘텐츠

결과분석

추진성과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체감도 제고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 맞돌봄,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지역별 청년·중장년 소통·공감 간담회('25년 6회 예정) 실시 및 지역별 특색 있는 양성평등 의제 발굴
- 대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지속 추진

29	Ⅵ-2-(5)-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	과·팀명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과제목표

○ 생활 속 차별 언어 등 표현 개선과 평등 실천문화 확산

주요내용

○ 생활 속 차별 언어 등 표현 개선과 평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국어사전의 차별적 표현 개선 및 공공언어 진단 시에 차별 언어 사용 점검
- 사용자 의견 및 내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속담, 뜻풀이, 용례 등에 있는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정비하고 올바른 용법 제시
-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속 차별적 언어 표현 사용 사례를 조사하고 진단하며 공공언어 감수 시 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예산	'25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1,748	1,897	149	8.5
▪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918	1,726	△192	△10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평등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언어 속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진단 기준 마련 및 도입 필요성 논의(1회), 추진 계획 수립

* 소통성 평가 지표 예시

지표명	세부 내용
공공성	권위적, 차별적 표현
가독성	글씨체, 크기, 여백 등의 적절성
이해 용이성	제시 정보량과 문장 길이의 적절성, 텍스트 구성 등

- 공공언어 감수 시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점검(70건 대상)

○ 국어사전의 차별적 표현 정비
- 성차별적 용례 수정(10건), 직업 차별 관련 표제어 삭제 및 뜻풀이 수정(2건), 기타 연령 차별 등 뜻풀이 및 용례 수정(3건)

* 국어사전 정비 예시

표제어	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감성화	용례 삭제	여교사들의 모성 본능에 의한 어린이들의 감성화 대신 남교사들에 의한 극기 인내 교육의 강화는 국가적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노가다	표제어 삭제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가정 교육	용례 수정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자녀의 가정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다. 여러 전문가들은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분석	**추진성과**	○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 사용 진단 방안 도입 논의 및 관련 추진 계획 수립,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 점검 포함 보도자료 감수 70건 실시('24년 1~12월) ○ 장애, 여성 차별적 요인이 있는 뜻풀이, 용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평가 적용 가능성과 결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공공언어의 소통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실린 어휘나 용례는 경우에 따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는바,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향후추진계획	○ 공공언어에서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권고,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 진단 기준 수립 및 도입 추진 ○ 국어사전의 뜻풀이 용례 등에 있는 차별적 표현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30	Ⅵ-2-(5)-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여성가족부	과・팀명	가족친화기반과 가족정책과
과제목표	○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진행			
주요내용	○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맞돌봄 사진전 등 홍보 추진 ○ 가족정책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센터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관련예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24예산	전년대비	
			증△감	%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가족정책 홍보)	1,900	-	△1,900	순감

추진상황	(√) 과제완료 (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가족센터 홍보 사업은 부처 내 홍보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제 완료('23년)

〔참고〕'23년 이행실적

○ 가족센터 홍보 추진
- 가족센터·대표번호 홍보영상 집중 송출('23.3~11월)
  * TV(KBS1) ('23.3~9월), SNS광고(23.5,9,11월), 옥외광고(23.9월)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 진행
- 가족서비스 이용자 우수사례 및 주요 가족사업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등 SNS 콘텐츠 제작 등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자체 콘텐츠 제작
- 가족센터 이용독려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23.8~11월)

○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맞돌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23.6~11월)
  * 접수 1,740건, 시상 17건, 최종수상작 전시('23.11월)

결과분석

추진성과	○ 가족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 가족센터 및 대표번호 홍보영상 집중 송출, 주요 사업 관련 홍보콘텐츠 확산 * TV(KBS1) 평균시청률 3.65%('23.3~9월), SNS광고(유튜브, TVING, SMR) 누적 조회수 23.6백만회('23.5.1.~5.31., '23.9.1.~9.30.), 옥외광고(KTX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日 합계 396회 송출('23.9.1.~9.30.)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해당 없음

향후추진계획

*'24년 사업폐지로 향후 추진계획 없음

31	Ⅵ-2-(5)-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과제개요	추진부서	부처명	법무부	과·팀명	인권정책과
	과제목표	○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주요내용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관련예산	○ 해당 없음			
	추진상황	( ) 과제완료 (√) 추진중 ( ) 추진지연 ( ) 기타			
	비고				

'24년 이행실적	○ 해당 없음

결과분석	추진성과	○ 해당 없음
	미흡사항 또는 장애요인	○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24. 5.)

향후추진계획	○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논의 시 적극 협력